

#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13  
<http://sri.kostat.go.kr>

2013



## 『한국의 사회동향 2013』을 발간하며

통계청에서는 국민 생활의 수준을 가늠하고, 사회 각 분야별 주요 변화양상을 보여주는 보고서인 『한국의 사회동향』을 2008년에 이어 여섯 번째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3』은 인구, 가족과 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의 총 11개 영역의 주요변화와 주제(issues)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역별 주제는 우리 사회 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영역별 주요 쟁점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주제에 대해 가용한 사회지표와 승인통계를 주로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통계를 이야기 방식(story telling)으로 풀이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향(trends) 보고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능한 한 시계열비교는 물론 국제 및 인구집단별 비교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의 사회동향』은 우리사회가 각 분야별로 어떤 수준에 와있으며, 우리 삶의 질적 수준과 이를 높이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주요 정책 입안자에게는 우리사회 현황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 통계개발원과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협력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각 영역별 원고 작성을 맡은 집필자 여러분들과 편집위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통계개발원장 

## 한국의 사회동향 2013

###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편집자     석현호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김석호 (성균관대학교)  
              이희길 (통계개발원)  
              심수진 (통계개발원)  
              김대훈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집필자     김경근 (고려대학교)  
              김광기 (인제대학원대학교)  
              김두섭 (한양대학교)  
              김석호 (성균관대학교)  
              김정석 (동국대학교)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진영 (건국대학교)  
              김현식 (경희대학교)  
              민수홍 (경기대학교)  
              박정수 (서강대학교)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손경환 (국토연구원)  
              송유진 (동아대학교)  
              신용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민 (한국교통연구원)

              이재열 (서울대학교)  
              이정민 (서강대학교)  
              장세진 (연세대학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 (한신대학교)  
              정의철 (건국대학교)  
              조병희 (서울대학교)  
              조성일 (서울대학교)  
              조영탁 (한밭대학교)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차승은 (수원대학교)  
              한경혜 (서울대학교)  
              한 준 (연세대학교)  
              홍석철 (서강대학교)  
              황선환 (서울시립대학교)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목 차

<b>I</b>	<b>인구</b> Population	
01	인구 영역의 주요 변화 김두섭   한양대학교	2
02	인구고령화의 지역별 차이 김현식   경희대학교	15
03	이상적인 결혼연령과 이상자녀수 송유진   동아대학교	24
04	이혼의 확산과 이혼자들의 삶 김정석   동국대학교	31
<b>II</b>	<b>가족과 가구</b> Family & Household	
01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변화 한경혜   서울대학교	38
02	세대관계의 변화 한경혜   서울대학교	48
03	자녀돌봄 시간의 변화 차승은   수원대학교	52
<b>III</b>	<b>건강</b> Health	
01	건강 영역의 주요 변화 조병희   서울대학교	62
02	건강검진의 추이와 실천요인 조성일   서울대학교	73
03	음주수준과 건강과의 관계 김광기   인제대학원대학교	79
04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장세진   연세대학교	87
<b>IV</b>	<b>교육</b> Education	
01	교육 영역의 주요 변화 김경근   고려대학교	94
0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실태 김경근   고려대학교	104
03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12
04	학생들의 스트레스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20
<b>V</b>	<b>노동</b> Labor	
01	노동 영역의 주요 변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128
02	근로빈곤과 저소득층 소득지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135
03	최저임금의 준수와 상대적 수준 전병유   한신대학교	141



## **VI** 소득과 소비 Income & Consumption

- |                        |             |     |
|------------------------|-------------|-----|
| 01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변화    | 박정수   서강대학교 | 148 |
| 02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      | 김진영   건국대학교 | 159 |
| 03 소득분배의 지역적 양상        | 이정민   서강대학교 | 166 |
| 04 인구 고령화와 소득 및 소비 불평등 | 홍석철   서강대학교 | 173 |

## **VII** 문화와 여가 Culture & Leisure

- |                        |                 |     |
|------------------------|-----------------|-----|
| 01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변화    |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 184 |
| 02 청소년 여가              |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 193 |
| 03 생활체육 참여실태           | 황선환   서울시립대학교   | 198 |
| 04 노년층의 문화예술 관람 경험과 특성 |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5 |

## **VIII** 주거와 교통 Housing & Transportation

- |                     |               |     |
|---------------------|---------------|-----|
| 01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변화 | 손경환   국토연구원   | 214 |
| 02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복지 실태 | 손경환   국토연구원   | 223 |
| 03 가구특성과 주거소비       | 정의철   건국대학교   | 229 |
| 04 교통복지실태           | 이상민   한국교통연구원 | 236 |

## **IX** 환경 Environment

- |                            |                    |     |
|----------------------------|--------------------|-----|
| 01 환경 영역의 주요 변화            |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44 |
| 02 기후변화 대응행태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현황 | 조영탁   한밭대학교        | 252 |
| 03 화학물질 노출실태               | 신용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59 |

## **X** 안전 Safety

- |                    |                 |     |
|--------------------|-----------------|-----|
| 01 안전 영역의 주요 변화    | 이재열   서울대학교     | 268 |
| 02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추세  | 민수홍   경기대학교     | 276 |
| 03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과 특성 |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82 |

## **XI** 사회통합 Social Cohesion

- |                     |              |     |
|---------------------|--------------|-----|
| 01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변화   | 한 준   연세대학교  | 290 |
| 02 주관적 삶에 대한 만족도 격차 | 한 준   연세대학교  | 301 |
| 03 투표와 정치참여         | 김석호   성균관대학교 | 308 |

## **부록** 용어해설 318

## 표 목차

표 I-1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및 혼인상태별 인구구성, 1990-2010	4
표 I-2	한국과 세계 인구의 사망 관련 지표, 2005-2010	8
표 I-3	고령화 추세와 전망, 1960-2060	9
표 I-4	서울, 수도권 및 도시 인구, 1960-2010	11
표 I-5	고령사회 유형별 시군구 분포, 2005, 2010	18
표 I-6	기혼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평균 결혼연령, 2005-2012	24
표 I-7	평균초혼연령, 2005-2012	25
표 I-8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남성과 여성의 이상적인 평균 결혼연령, 2005-2012	27
표 I-9	기혼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자녀수, 2005, 2009	29
표 I-10	기혼여성의 출생자녀수별 평균 이상자녀수, 2005, 2009	29
표 I-11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이상자녀수, 2005, 2009	29
표 I-12	미혼남녀의 연령집단별 평균 이상자녀수, 2005, 2009	30
표 I-13	기혼여성 및 미혼남녀의 교육수준별 평균 이상자녀수, 2009	30
표 I-14	이혼건수, 이혼율 및 평균이혼연령, 2002-2012	32
표 I-15	성별 이혼자수와 비율, 2000-2010	33
표 I-16	이혼부부의 이혼연령, 2002-2012	34
표 I-17	이혼부부의 결혼유지기간 및 미성년자녀 유무별 구성비율, 2002-2012	34
표 I-18	유배우자와 이혼자의 성별 연령구성, 2010	35
표 I-19	유배우자와 이혼자의 성별 교육수준, 2010	35
표 I-20	유배우자와 이혼자의 성별 가구구성형태, 2010	36
표 I-21	유배우자와 이혼자의 성별 거주지역, 2010	36
표 I-22	유배우자와 이혼자의 성별 경제활동상태, 2010	36
표 II-1	일반가구의 평균가구원수와 가구형태별 구성비율, 1990-2010	39
표 II-2	여성가구의 혼인상태별 구성비율, 1990-2010	40
표 II-3	분거가구의 소득수준별 국내 및 국외 분거비율, 2012	41
표 II-4	이혼건수와 이혼율, 1990-2012	44
표 II-5	성인자녀와 노부모 간 접촉빈도, 2008-2012	50
표 II-6	주요 국가의 주당 자녀돌봄 시간	59
표 III-1	2주간 유병률, 2003-2012	64
표 III-2	사망원인별 사망률, 1995-2012	66
표 III-3	성인 흡연율과 음주율, 1995-2012	66
표 III-4	비만율과 신체활동 및 걷기실천율, 2005-2011	67
표 III-5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수, 2000-2012	68
표 III-6	의료기관수, 1995-2011	68
표 III-7	예방서비스 이용률, 2005-2011	69

표 III-8	성 및 연령별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 2006-2012	75
표 III-9	지역 및 직업별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 2006-2012	75
표 III-10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별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 2006-2012	76
표 III-11	인구학적 특성별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과 보정비, 2012	77
표 III-12	사회경제적 특성별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과 보정비, 2012	78
표 III-13	건강 관련 특성별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과 보정비, 2012	78
표 III-14	성인의 성 및 연령별 월간 음주자 비율, 2005-2011	81
표 III-15	성인의 성 및 연령별 고위험 음주자 비율, 2005-2011	82
표 III-16	연령별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비, 2003-2011	84
표 III-17	성별 알코올성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비, 2007-2011	84
표 III-18	음주자 유형 및 고위험음주 횟수별 비만 위험가능성, 2010	85
표 IV-1	IEA 학업성취도(TIMSS) 순위와 점수, 1995-2011	102
표 IV-2	교육수준별 월평균 임금액, 1995-2012	102
표 IV-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2010-2012	105
표 IV-4	전문대학 졸업자의 전공계열 및 성별 취업률, 2010-2012	106
표 IV-5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전공계열 및 성별 취업률, 2010-2012	106
표 IV-6	대학원 졸업자의 전공계열 및 성별 취업률, 2010-2012	107
표 IV-7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연령집단별 실업률, 2000-2012	108
표 IV-8	학교급별 학생들이 고민하는 문제, 2008-2012	122
표 V-1	성 및 연령집단별 고용률, 1990-2012	129
표 V-2	성별 비임금근로자 비율, 1990-2012	130
표 V-3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 구성, 2005-2012	131
표 V-4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별 구성비율, 2003-2012	132
표 V-5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노조가입률, 2005-2012	134
표 V-6	파업건수와 근로손실일수, 2000-2011	134
표 V-7	연령집단별 상대빈곤율, 2012	136
표 V-8	근로연령대(20-64세)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률, 2006-2012	138
표 V-9	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 수급률, 2008	138
표 V-10	근로장려세제 수혜율, 2009-2012	139
표 V-11	최저임금 영향률, 2001-2013	142
표 V-12	최저임금 미만율, 2001-2012	143
표 V-13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2008-2012	145
표 VI-1	시도별 상대소득지수, 2008-2012	167
표 VI-2	시도별 고졸자와 대졸자의 상대소득지수, 2008, 2010	168
표 VI-3	시도별 고졸자 대비 대졸자의 상대소득지수, 2008, 2010	169
표 VI-4	시도별 소득 5분위 분배율과 지니계수, 2008-2012	169

표 VI-5	시도별 고졸자와 대졸자의 소득 5분위 분배율, 2008, 2010	170
표 VI-6	노인빈곤율, 2003-2012	175
표 VI-7	소비지출 항목별 생애주기에 따른 월평균 지출액과 지출지니계수, 2006-2012년 평균	178
표 VI-8	가구특성별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 및 지출 지니계수, 2006-2012년 평균	178
표 VII-1	문화예술시설수, 2005-2012	185
표 VII-2	문화산업 분야별 매출액, 2009-2011	185
표 VII-3	청소년과 성인의 여가시간 및 여가비용, 2012	194
표 VII-4	청소년과 성인의 주말 및 휴일 여가활동, 2011	195
표 VII-5	청소년과 성인의 여가활동 동반자, 2011	196
표 VII-6	청소년과 성인의 여가활동 만족도, 2011	197
표 VII-7	청소년과 성인의 여가활동 불만족 사유, 2011	197
표 VII-8	연령, 성 및 소득수준별 생활체육 참여율, 2012	200
표 VII-9	연령, 성 및 소득수준별 생활체육 참여기간, 2012	200
표 VII-10	연령, 성 및 소득수준별 생활체육 월평균 지출액, 2012	201
표 VII-11	생활체육 참여종목 순위, 1986-2012	202
표 VIII-1	주택보급률과 인구 1,000명당 주택수, 1980-2012	215
표 VIII-2	공공 및 민간 부문 건설 주택수, 1980-2012	216
표 VIII-3	주택점유형태별 가구구성 비율, 1990-2010	219
표 VIII-4	주택점유형태별 주택만족도, 2008, 2012	219
표 VIII-5	거처종류별 주거환경만족도, 2008, 2012	220
표 VIII-6	자동차 등록대수, 1990-2012	220
표 VIII-7	도로연장 및 도로포장률과 교통사고건수, 1980-2012	221
표 VIII-8	주택보급률, 가구당 주거면적 및 자가점유율, 1980-2010	224
표 VIII-9	가구주 연령별 주요 주거복지지표, 2012	224
표 VIII-10	가구구성 유형별 주요 주거복지지표, 2012	225
표 VIII-11	연령별 주거 및 주거환경 만족도, 2012	226
표 VIII-12	가구주 연령별 주택점유형태, 2000, 2010	230
표 VIII-13	가구주 연령별 거처의 종류, 2000, 2010	231
표 VIII-14	주택유형별 재고, 2000, 2010	232
표 VIII-15	1인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주택점유형태, 2010	232
표 VIII-16	1인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거처종류, 2010	233
표 VIII-17	1인가구와 전체 가구의 거처종류 및 주택점유형태별 비율, 2010	233
표 VIII-18	가구주 연령별 주거면적, 자가 비율, 경상소득 및 순자산 지수, 2010	234
표 VIII-19	교통약자 유형별 인구와 증가율, 2007-2011	237
표 VIII-20	교통약자 유형별 인구추계, 2012-2030	237
표 VIII-21	교통복지의 대상과 서비스	238
표 VIII-22	저상버스 보급대수 및 보급률, 2004-2012	238



표 Ⅷ-23	시도별 특별교통수단 보급대수와 보급률, 2010	239
표 Ⅷ-24	도시유형별 평균 버스노선수와 노선 당 인구 및 면적, 2010	239
표 Ⅷ-25	벽지명령노선 개발계획(1~3차)에 따른 버스노선 개설실적, 1981~1995	240
표 Ⅸ-1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00~2010	245
표 Ⅸ-2	하수, 폐수 및 가축분뇨 발생량, 1990~2010	246
표 Ⅸ-3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1995~2010	246
표 Ⅸ-4	최종에너지소비량 및 전력소비량, 1990~2011	247
표 Ⅸ-5	수자원 용도별 이용량, 1990~2007	247
표 Ⅸ-6	거주지역 환경오염 수준 변화에 대한 체감, 1997~2012	249
표 Ⅸ-7	보호구역 지정 현황, 2012	250
표 Ⅸ-8	환경예산, 1995~2011	250
표 Ⅸ-9	환경보호지출, 2001~2010	251
표 Ⅸ-10	교육 및 소득수준별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2011	253
표 Ⅸ-11	소득수준,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탄소성적표지 인지도별 저탄소제품 구매 노력 정도, 2011	253
표 Ⅸ-12	한국과 OECD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종류별 구성비율, 2011	255
표 Ⅸ-13	신재생에너지 종류별 기술적 잠재량	257
표 Ⅸ-14	화학물질 배출량, 2000~2011	261
표 Ⅸ-15	2000년대 주요 화학물질 유출사고 및 인명피해	262
표 Ⅸ-16	환경성질환 진료환자수, 2002~2008	262
표 Ⅸ-17	국민 혈중 중금속 농도, 2005~2011	263
표 X-1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액, 사망실종자수 및 이재민수, 1995~2011	269
표 X-2	최근 10년간 월별 자연재해 발생건수와 인명 및 재산 피해, 2002~2011	270
표 X-3	OECD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1970~2011	272
표 X-4	주요 국가의 형법범죄율, 2007	273
표 X-5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08~2012	275
표 X-6	내·외국인별 형법범죄자수, 2000~2010	278
표 X-7	내·외국인별 형법범죄자 중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및 폭력범 비율, 2000~2010	280
표 X-8	합법 및 불법 체류 외국인 범죄자수와 범죄자율, 2005~2011	281
표 X-9	성폭력 피해자의 가해자와의 관계별 구성비율, 2002~2012	284
표 Ⅺ-1	대선, 총선 및 지방선거 투표율, 1992~2012	291
표 Ⅺ-2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사회단체참여율, 1999~2011	291
표 Ⅺ-3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후원활동참여율, 2006~2011	293
표 Ⅺ-4	불법폭력시위 발생건수와 부상 경찰관수, 1993~2011	295
표 Ⅺ-5	주관적 계층귀속감, 1999~2011	296
표 Ⅺ-6	주관적 계층별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2006~2011	297
표 Ⅺ-7	주관적 계층별 자식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2006~2011	297

## 그림 목차

그림 I-1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1990-2012	6
그림 I-2	어머니의 연령집단별 출산율, 1993-2012	7
그림 I-3	시군구별 65세 이상 인구와 80세 이상 인구, 2010	11
그림 I-4	출신국가별 외국인 여자배우자수, 1990-2012	13
그림 I-5	인구의 연령구조, 2000, 2005, 2010	16
그림 I-6	시도별 고령수준의 변화, 2000, 2005, 2010	17
그림 I-7	시군구별 고령수준의 변화, 2000, 2005, 2010	17
그림 I-8	시군구 노년구성비의 변화, 2005, 2010	19
그림 I-9	출산율과 노년구성비의 관계, 2010	20
그림 I-10	사망률과 노년구성비의 관계, 2010	21
그림 I-11	인구이동률과 노년구성비의 관계, 2010	22
그림 I-12	기혼여성이 생각하는 남성의 이상적 결혼연령대, 2005-2012	25
그림 I-13	기혼여성이 생각하는 여성의 이상적 결혼연령대, 2005-2012	26
그림 I-14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남성의 이상적인 평균 결혼연령, 2005, 2009	26
그림 I-15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여성의 이상적인 평균 결혼연령, 2005, 2009	26
그림 I-16	미혼남성이 생각하는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대, 2005-2012	27
그림 I-17	미혼여성이 생각하는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대, 2005-2012	28
그림 I-18	미혼남성이 생각하는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대, 2005-2012	28
그림 I-19	미혼여성이 생각하는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대, 2005-2012	28
그림 II-1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비율, 1990-2010	40
그림 II-2	조손가구수와 비율, 1995-2010	42
그림 II-3	성별 결혼에 대한 태도, 2012	44
그림 II-4	성별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1998-2012	46
그림 II-5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실태, 2002-2012	47
그림 II-6	노부모의 거주유형별 구성비율, 1998-2012	49
그림 II-7	노부모 경제적 부양자, 2002, 2012	50
그림 II-8	가족 내 노부모 경제적 부양 책임자에 대한 태도, 1998-2012	51
그림 II-9	노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1998-2012	51
그림 II-10	성 및 연령별 일평균 자녀돌봄 시간, 1999, 2009	53
그림 II-11	성인의 성 및 연령별 자녀돌봄 참여율, 1999, 2009	54
그림 II-12	자녀돌봄 참여자의 성 및 연령별 일평균 자녀돌봄 시간, 1999, 2009	54
그림 II-13	성인의 성 및 교육수준별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일평균 자녀돌봄 시간 추정치, 2009	56
그림 II-14	성인의 성 및 소득수준별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일평균 자녀돌봄 시간 추정치, 2009	56
그림 II-15	가족 및 보육기관 유형별 아동돌봄 시간대, 2012	57

그림 III-1	OECD 국가의 평균수명, 2011	63
그림 III-2	평균수명, 1970-2012	63
그림 III-3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률, 1998-2011	65
그림 III-4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1998-2011	65
그림 III-5	국민의료비, 1990-2011	70
그림 III-6	OECD 국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2011	70
그림 III-7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율, 1990-2011	70
그림 III-8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율, 2011	71
그림 III-9	OECD 국가의 제왕절개 분만율, 2010	71
그림 III-10	주요 국가의 의료체계, 의사 및 병원 만족도, 2011	72
그림 III-11	정기 건강검진과 규칙적 운동 실천율, 2006-2012	74
그림 III-12	규칙적 운동 실천여부별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 2008-2012	76
그림 III-13	OECD 국가의 성인 1인당 알코올 소비량, 2007	80
그림 III-14	청소년의 성별 월간 음주자 비율, 2005-2012	82
그림 III-15	성인의 성별 알코올 남용자 비율, 2005-2011	83
그림 III-16	성인의 성별 알코올 의존자 비율, 2005-2011	83
그림 III-17	알코올성 질환 진료자수, 2003-2011	84
그림 III-18	성별 알코올성 질환 사망률, 2001-2010	85
그림 III-19	스트레스 인지율, 1998-2011	88
그림 III-20	성별 직장생활 스트레스 경험률, 2008-2012	89
그림 III-21	성별 직무스트레스 경험률, 2011	89
그림 III-22	연령집단별 직무스트레스 경험률, 2011	89
그림 III-23	고용형태별 직무스트레스 경험률, 2011	90
그림 III-24	직업별 직무스트레스 경험률, 2011	90
그림 III-25	산업별 직무스트레스 경험률, 2011	90
그림 IV-1	학교급별 취학률, 1980-2012	95
그림 IV-2	교육단계별 진학률, 1980-2012	96
그림 IV-3	인구의 학력구성, 1995-2011	97
그림 IV-4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2007-2012	97
그림 IV-5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2007-2012	98
그림 IV-6	평생학습 참여율, 2007-2012	99
그림 IV-7	중학생의 부모 교육수준별 자기주도적 학습시간, 2004-2010	99
그림 IV-8	학교급별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도, 2004-2012	100
그림 IV-9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수, 2006-2012	101
그림 IV-10	청년층 NEET 비율, 2003-2011	108
그림 IV-11	비구직 NEET의 학력별 구성비율, 2003-2011	109
그림 IV-12	청년층 취업경험자의 학력별 전공-직업 일치에 대한 인식, 2012	109
그림 IV-13	OECD 주요국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고용률, 2011	110

그림 IV-14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2004-2012	113
그림 IV-15	재학생의 학교급별 학교교육의 지식·기술습득 효과에 대한 인식, 2012	114
그림 IV-16	졸업생의 성별 학교교육의 지식·기술습득 효과에 대한 인식, 2012	114
그림 IV-17	졸업생의 연령집단별 학교교육의 지식·기술습득 효과에 대한 인식, 2012	115
그림 IV-18	졸업생의 교육수준별 학교교육의 지식·기술습득 효과에 대한 인식, 2012	115
그림 IV-19	재학생의 학교급별 학교교육의 생활·직업·취업 활용 효과에 대한 인식, 2012	116
그림 IV-20	졸업생의 성별 학교교육의 생활·직업·취업 활용 효과에 대한 인식, 2012	117
그림 IV-21	졸업생의 연령집단별 학교교육의 생활·직업·취업 활용 효과에 대한 인식, 2012	117
그림 IV-22	졸업생의 교육수준별 학교교육의 생활·직업·취업 활용 효과에 대한 인식, 2012	117
그림 IV-23	OECD 주요국 학생의 졸업 후 성인으로서의 삶 준비에 대한 학교교육 효과 인식, 2009	118
그림 IV-24	OECD 주요국 학생의 직업 관련 지식획득에 대한 학교교육 효과 인식, 2009	119
그림 IV-25	학교급별 학생들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인지율, 2008-2012	121
그림 IV-26	성별 학생들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인지율, 2008-2012	122
그림 IV-27	학교급별 학생들의 가정생활 스트레스 인지율, 2008-2012	123
그림 IV-28	성별 학생들의 가정생활 스트레스 인지율, 2008-2012	124
그림 IV-29	학교급별 학생들의 학교생활 스트레스 인지율, 2008-2012	124
그림 IV-30	성별 학생들의 학교생활 스트레스 인지율, 2008-2012	125
그림 IV-31	주요국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 2010	125
그림 IV-32	주요국 고등학생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 2010	126
그림 V-1	OECD 주요국의 고용률, 1990-2012	129
그림 V-2	OECD 주요국의 실업률, 1990-2012	130
그림 V-3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자 비율, 1990-2012	131
그림 V-4	저임금 근로자 비율, 1990-2011	132
그림 V-5	OECD 주요국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 1990-2012	133
그림 V-6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수, 1990-2011	133
그림 V-7	20-64세 인구의 빈곤율, 2006-2012	136
그림 V-8	OECD 주요국 근로연령대(18-64세) 인구의 상대빈곤율, 2010	137
그림 V-9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2012	139
그림 V-10	명목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1989-2012	142
그림 V-11	저임금 근로자 비율, 1986-2010	143
그림 V-12	업종별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체 비율, 2010	144
그림 V-13	OECD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2011	146
그림 VI-1	가구 소득분위별 실질소득 증가율, 1992-2012	149
그림 VI-2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비, 1992-2012	150
그림 VI-3	소득 5분위 배율, 1992-2012	150
그림 VI-4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비, 1992-2012	151
그림 VI-5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비, 1992-2012	151

그림 VI-6	가구주 직업별 소득비, 2003-2012	152
그림 VI-7	1인가구의 가구주 연령집단별 구성비율, 2006-2012	153
그림 VI-8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원천구성, 2002	153
그림 VI-9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원천구성, 2012	154
그림 VI-10	가구 소득분위별 여성배우자의 소득기여도, 1992-2012	154
그림 VI-11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 1992-2012	155
그림 VI-12	가구 소득분위별 소비지출구성, 1992-2012	156
그림 VI-13	가구 소득분위별 의식주 지출비율, 1992-2012	156
그림 VI-14	가구 소득분위별 가계흑자비율, 1992-2012	157
그림 VI-15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1972-2011	160
그림 VI-16	국민부담금의 주요 원천별 구성비율, 1972-2011	161
그림 VI-17	가구의 소득분위별 조세부담률, 2002-2012	162
그림 VI-18	가구의 소득분위별 사회보장부담률, 2002-2012	162
그림 VI-19	OECD 국가의 국민부담률, 2010	162
그림 VI-20	OECD 국가의 국민부담률, 1972-2010	163
그림 VI-21	OECD 국가의 1인당 GDP와 국민부담률의 관계, 2010	164
그림 VI-22	OECD 국가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과 국민부담률의 관계, 2009	164
그림 VI-23	지도로 본 시도별 상대소득지수, 2010	167
그림 VI-24	지도로 본 시도별 소득 5분위 분배율, 2010	170
그림 VI-25	시도별 소득불만족도, 2009	171
그림 VI-26	시도별 상대소득지수와 소득불만족도의 관계, 2009	171
그림 VI-27	시도별 소득 5분위 분배율과 소득불만족도의 관계, 2009	172
그림 VI-28	시도별 소득 지니계수와 소득불만족도의 관계, 2009	172
그림 VI-29	OECD 국가의 노인빈곤율, 2010	174
그림 VI-30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가구소득과 소득지니계수, 2006-2012년 평균	176
그림 VI-31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가구지출과 지출지니계수, 2006-2012년 평균	177
그림 VI-32	가구주 평균연령과 소득지니계수, 1990-2012	179
그림 VI-33	30대 가구주 가구 대비 50대 가구주 가구의 소득지니계수 비 및 월평균 가구소득 비, 1990-2012	180
그림 VII-1	가구의 오락문화비 지출액, 2003-2012	186
그림 VII-2	가구의 오락문화비 주요 항목별 지출액, 2003-2012	187
그림 VII-3	주로 하는 여가활동과 희망 여가활동, 2011	187
그림 VII-4	문화예술 장르별 관람률, 1990-2011	188
그림 VII-5	문화자원봉사 및 문화동호회 참여율, 2008-2012	189
그림 VII-6	국내 및 해외 여행자 비율, 2000-2011	190
그림 VII-7	스포츠관람률, 2000-2011	191
그림 VII-8	신문구독률, 2000-2011	191
그림 VII-9	여가만족도, 1990-2011	192
그림 VII-10	청소년과 성인의 여가시간 및 여가비용 만족도, 2012	194

그림 Ⅶ-11	청소년과 성인의 희망 여가활동, 2011	196
그림 Ⅶ-12	생활체육 참여기간, 2008-2012	200
그림 Ⅶ-13	생활체육 월평균 지출액, 2006-2012	201
그림 Ⅶ-14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수와 동호인수, 2002-2011	203
그림 Ⅶ-15	OECD 주요국의 생활체육 참여율, 2010	203
그림 Ⅶ-16	연령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2011	206
그림 Ⅶ-17	노년층의 주된 여가활동, 2011	206
그림 Ⅶ-18	노년층의 희망 여가활동, 2011	206
그림 Ⅶ-19	노년층의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률, 2011	207
그림 Ⅶ-20	노년층의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횟수, 2011	207
그림 Ⅶ-21	연령별 문화예술 관람 증가율, 2000-2011	208
그림 Ⅶ-22	노년층의 거주지역별 문화예술 관람률, 2011	209
그림 Ⅶ-23	노년층의 성별 문화예술 관람률, 2011	209
그림 Ⅶ-24	노년층의 성별 주된 여가활동, 2011	210
그림 Ⅶ-25	노년층의 연령별 문화예술 관람률, 2011	210
그림 Ⅶ-26	노년층의 학력 및 직업별 문화예술 관람률, 2011	211
그림 Ⅷ-1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지수, 1990-2012	217
그림 Ⅷ-2	가구의 교통비 지출비율, 1985-2012	221
그림 Ⅷ-3	자가 및 차가 가구의 가구주 연령 및 소득분위별 가구당 주거면적, 2012	226
그림 Ⅷ-4	자가 및 차가 가구의 가구주 연령 및 소득분위별 주거비 부담, 2012	227
그림 Ⅷ-5	가구 소득분위별 교통비 지출 비율, 1995, 2007	240
그림 Ⅷ-6	가구 소득분위별 공공 및 개인 교통비 구성비율, 2010	240
그림 Ⅸ-1	부문별 온실가스배출량, 1990-2010	245
그림 Ⅸ-2	주요 도시의 아황산가스 농도, 1990-2011	248
그림 Ⅸ-3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 1995-2011	248
그림 Ⅸ-4	4대강의 수질오염도(BOD), 1991-2012	248
그림 Ⅸ-5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 1990-2011	251
그림 Ⅸ-6	신재생에너지 보급량과 보급률, 2000-2011	254
그림 Ⅸ-7	한국, OECD 및 EU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01-2011	254
그림 Ⅸ-8	신재생에너지 종류별 보급량, 2000-2011	255
그림 Ⅸ-9	OECD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종류별 보급률, 2000-2011	255
그림 Ⅸ-10	OECD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11	256
그림 Ⅸ-11	화학물질 유통량, 2002-2010	260
그림 Ⅸ-12	화학물질 중 유독물 유통량, 2002-2011	260
그림 Ⅸ-13	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건수, 2005-2011	261
그림 Ⅸ-14	연령별 환경성질환 진료환자 비율, 2008	263
그림 Ⅸ-15	화학물질 피해발생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2012	263
그림 Ⅸ-16	생활주변 화학물질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2002, 2012	264

그림 X-1	화재 발생건수, 1985-2012	270
그림 X-2	화재 사상자수와 재산피해액, 1985-2012	270
그림 X-3	산업재해율, 1965-2011	271
그림 X-4	형법 및 특별법 범죄율, 2002-2011	272
그림 X-5	범죄검거율, 2002-2011	273
그림 X-6	범죄피해율, 2008, 2010	274
그림 X-7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1970-2012	275
그림 X-8	국내체류 외국인수, 2001-2012	277
그림 X-9	합법 및 불법 체류 외국인수, 2005-2012	278
그림 X-10	내·외국인별 형법범죄자율, 2000-2010	278
그림 X-11	내·외국인별 형법범죄자 중 주요 범죄자 비율, 2000-2010	279
그림 X-12	국적별 외국인 범죄자율, 2011	280
그림 X-13	청소년 및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발생률, 2002-2011	283
그림 X-14	성폭력범죄 신고율, 1993-2010	284
그림 X-15	성인, 청소년 및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가해자와의 관계별 구성비율, 2012	285
그림 X-16	성폭력범죄자와 강력범죄자의 재범률, 2002-2011	286
그림 X-17	성폭력범죄자와 강력범죄자의 동종재범률, 2002-2011	286
그림 X-18	성폭력범죄와 강력범죄의 기소율 및 재판회부율, 2002-2011	287
그림 X-19	성폭력범죄와 강력범죄의 징역형 선고 비율, 2002-2011	287
그림 XI-1	연령별 자원봉사활동참여율, 1999-2011	292
그림 XI-2	공공질서 준수에 대한 평가, 2001-2012	294
그림 XI-3	OECD 국가의 대인신뢰도, 2010	295
그림 XI-4	기관신뢰도, 2003-2011	296
그림 XI-5	사회적 차별 경험률, 2011	298
그림 XI-6	한국과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 2000-2012	298
그림 XI-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와 수급률, 2003-2012	299
그림 XI-8	공적연금 수급률, 2000-2012	299
그림 XI-9	사회보장제도 여건 개선에 대한 인식, 2005-2011	300
그림 XI-10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2011	300
그림 XI-11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2012	302
그림 XI-12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 2003-2012	302
그림 XI-13	연령별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 2012	303
그림 XI-14	교육수준별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 2012	303
그림 XI-15	소득수준별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 2012	304
그림 XI-16	고용불안감에 따른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 2011	304
그림 XI-17	사회복지지 연결망 정도에 따른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 2011	305
그림 XI-18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 2011	306
그림 XI-19	삶의 주요 영역별 만족도, 2011	306

그림 XI-20	삶의 주요 영역별 만족도에 따른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 2011	306
그림 XI-21	OECD 국가의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 2012	307
그림 XI-22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 투표율, 1987-2012	310
그림 XI-23	선거 외 정치참여율, 2004, 2009	310
그림 XI-24	선거 외 정치참여 지수, 2004, 2009	311
그림 XI-25	시도별 투표율: 2012년 대선 및 총선, 2010년 지선	311
그림 XI-26	연령집단별 투표율: 2012년 대선 및 총선, 2010년 지선	312
그림 XI-27	소득수준별 선거 외 정치참여 지수, 2004, 2009	313
그림 XI-28	교육수준별 선거 외 정치참여 지수, 2004, 2009	313
그림 XI-29	연령집단별 선거 외 정치참여 지수, 2004, 2009	314
그림 XI-30	OECD 국가의 최근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314
그림 XI-31	OECD 국가의 투표율 변화, 1980년-최근 선거	314
그림 XI-32	OECD 국가의 시민참여 지수, 2010	315





## 머 리 말

『한국의 사회동향』은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일반 국민에게 삶의 질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2008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연차적 보고서이다. 국민의 삶의 질 상황은 계속해서 변한다. 따라서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회 상황과 변화를 잘 파악하지 않고서는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제대로 세울 수가 없다. 이 연차적 보고서는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회 상황과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하여 발간하는 통계청의 주요 간행물 중의 하나이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을 비롯한 주요 국가통계 산출기관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그 내용은 인구, 가족과 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 통합 등 사회의 주요 영역들을 모두 포함하는 11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해당 영역의 주요 변화를 개관하는 논문 1편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주제논문 2-3편을 수록하고 있다. 주요변화논문들은 해당 영역에서 일어나는 주요 변화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주제논문들은 선정된 이슈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준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3』에 수록된 주요변화논문들은 지난 보고서들의 구성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구조는 수년 사이에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제논문들에서 다루어진 주요 변화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주요변화논문에 반영되었다. 주제논문들은 매년 다른 이슈를 주제로 다루고 있으나 이들이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이슈들은 주요 변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제논문들은 주요변화논문들과는 달리 연차 보고서들 간에 내용 중복이 거의 없다. 매년 주제논문들의 이슈는 지난 보고서들의 이슈들과 중복되지 않게 선정되기 때문이다. 기존 보고서에 수록된 주제 논문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통계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자료는 이 보고서의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관련 사회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온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홈페이지([www.kossda.or.kr](http://www.kossda.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번 보고서를 위하여 지원 내지 협조해 주신 분들이 많다. 박형수 통계청장과 최연옥 통계개발원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32분의 원고 집필자들의 노력으로 이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논문들이 모두 표준화된 틀에 맞추어져 완성되기까지는 모든 원고들이 예외 없이 집필자와 편집자 간에 2-3차례 오갈 정도로 많은 노력이 들어갔다. 연구자를 대표하여 이 힘든 과정을 끝까지 인내하며 협력해 주신 집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연구책임자 **석현호**

#### 알려두기


1. 본 보고서에 실린 모든 내용은 해당 집필진의 견해이며, 통계청 혹은 통계개발원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2. 이 보고서는 통계개발원에서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3.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 또는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통계개발원에서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4. 이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통계개발원의 소유입니다.



# STATISTICS KOREA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 I 인 구 Population

- 01 인구 영역의 주요 변화 김두섭 | 한양대학교 2
  - 02 인구고령화의 지역별 차이 김현식 | 경희대학교 15
  - 03 이상적인 결혼연령과 이상자녀수 송유진 | 동아대학교 24
  - 04 이혼의 확산과 이혼자들의 삶 김정석 | 동국대학교 31
- 

## 01

인구 영역의  
주요 변화

김두섭(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요 약

- 지난 2000년대 진입 이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해 오던 한국 사회의 출산 수준은 2005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약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 사망률의 지속적인 저하로 기대수명이 선진국의 평균값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총인구는 2030년에, 그리고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에 이르러 서울의 인구는 약간씩 감소하는 단계로 반전되었으나,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은 인구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 한국인과 결혼하여 이주해 들어오는 외국인 남녀배우자의 규모 역시 2005년 정점에 도달한 후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가 관찰된다.

인구현상은 해당 사회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적 현상을 반영하거나 상호작용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동시에 인구현상은 사회 각 부문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가져온다. 최근 범세계적 경제불황은 결혼과 출산력뿐만 아니라 사망력, 인구이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생존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인구는 2030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래 한국인구의 이러한 감소 전망은 주로 초저출산에 기인한다. 한국 사회는 금세기 진입 이래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여 왔다.

또한, 저출산과 아울러 수명의 지속적인 연장으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연금이나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및 복지제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글에서는 한국인구의 성장과 구조의 최근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특히 지난 몇 년간의 출산율과 사망률의 동향 및 그 원인, 외국인 배우자의 변화추이, 고령화의 추세 및 지역 편차, 그리고 인구분포의 변화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대부분의 분석과 논의는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통계」, 「장래인구추계」 및 「UN의 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 인구성장과 구조의 변화

지난 20세기 초까지 고출산, 고사망의 전통적인 특성을 지니던 한국의 인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여 1970-1980년 동안에 제1차 인구변천을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출생률과 사망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졌던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한국 사회가 인구변천을 마치고 곧 새로운 인구안정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인구전문가들의 전망이었다.

그러나 출산력은 198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하하였으며, 2000년대 진입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사망력도 지속적으로 저하하였다. 그 결과, 이제 한국 사회는 인구와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를 걱정하고 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의 인구규모는 2013년 현재 5,022만 명으로 세계에서 25위에 해당되며,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4%의 수준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의 장기추계에 따르면, 한국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하여 2060년에 이르면 2013년 인구보다 626만 명이 줄어든 4,396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인구의 절대규모가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령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데 있다. 출산수준의 지속적인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2060년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유소년인구(0-14세)는 각각 2013년 규모의 59.6%와 60.7%에 불과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013년의 2.9배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2060년 한국인구의 연령구조가 전형적인 역삼각형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인구구조는 성, 연령, 혼인상태에 따른 인구학적 구성과 교육정도, 직업, 수입, 거주지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구분해 파악된다. <표 I-1>에는 1990년 이후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혼인상태별 인구구성의 변화 양상이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남녀 인구의 구성은 비교적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커다란 변화의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그 동안 남자 인구가 여자 인구보다 약간 많은 상태가 유지되어 왔으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남녀 인구가 각각 49.7%와 50.3%를 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 구성의 이러한 반전은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사망률의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여자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1990년대 중반 이후 남아선호의 약화로 인한 출생성비의 저하도 여자 인구의 비중 증가 추세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1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및 혼인상태별 인구 구성, 1990-2010 (%)

	1990	2000	2010
성			
남자	50.2	50.2	49.7
여자	49.8	49.8	50.3
연령			
0-14세	25.7	21.0	16.2
15-64세	69.4	71.7	72.5
65세 이상	5.0	7.3	11.3
거주지			
시(동)	74.4	79.7	82.0
읍	8.3	8.1	8.6
면	17.3	12.2	9.3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3.4	25.7	20.3
중학교	18.5	13.6	11.9
고등학교	34.0	34.6	31.2
대학 이상	14.1	26.1	36.6
혼인상태			
미혼	33.0	30.1	30.6
유배우	59.1	60.6	57.7
사별	7.2	7.4	7.6
이혼	0.8	1.9	4.0

주: 1) 인구는 내국인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교육수준별 인구와 혼인 상태별 인구는 각각 6세 이상,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연령 구성은 출산율과 사망률의 지속적인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1990년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표 I-1>에서 연령집단별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0-14세 유소년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5.7%에서 2000년 21.0%, 2010년 16.2%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한편, 15-64세 인구는 그 비중이 1990년 69.4%에서 2000년 71.7%, 2010년 72.5%로 약간씩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16년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후 감소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전체인구에 대한 비중은 1990년

비중의 2.3배에 해당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된 급속한 도시화의 결과, 1990년에 도시인구의 비중이 74.4% 수준에 도달하였다. 도시인구의 비중은 2010년에 82.0%로 더욱 높아졌으며, 여기에 읍 지역의 인구를 포함시키면 그 비중이 90.6%가 된다. 도시 인구 비중의 증가 추세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표 I-1>에서 읍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은 1990년 이후 커다란 변화의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한편, 농촌인구의 비중은 1990년 17.3%에서 2010년 9.3%로 현저하게 낮아졌다.

한국인구의 교육수준은 아직도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6세 이상 내국인 인구의 비중이 1990년 33.4%이었으나 2000년 25.7%, 2010년 20.3%로 낮아졌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0년 그 비중이 각각 11.9%와 31.2%로 집계되었다. 한편,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은 1990-2010년의 기간에 14.1%에서 36.6%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그리고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30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연수는 11.4년으로 집계되었다.

내국인 인구(15세 이상)의 혼인상태별 구성을 보면, 유배우자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I-1>에서는 미혼자의 비중이 1990년 이후 약간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는 연령구조의 변화에 기인하는 현상이다. 혼인상태의 변화를 연령집단별로 살펴



보면, 결혼 지연과 독신주의 경향으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연령집단에서 미혼자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그리고 30-39세 인구의 미혼자 비중은 2010년 29.2%에 이르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사별자의 비중은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혼자의 비중은 1990년 0.8%에 불과한 수준이었으나 2000년 1.9%, 2010년에 4.0%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연령집단별 이혼자의 비중은 45-54세에서 가장 높으며, 특히 50대 이상 인구의 이혼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

### 출산력의 변화

한국 사회의 출산수준은 1960년대 초부터 급속한 저하를 지속하여 1983년 합계출산율 2.1의 대체수준보다 낮은 단계로 진입하였다. 그 후 출산력이 대체수준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대부분 인구전문가들의 전망과는 달리 출산력 저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는 출산력의 저하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인구의 출산수준은 2000년대 진입 이후 홍콩과 마카오 등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출산력변천이 한국에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다. 최근 유럽의 동부 지역과 지중해 연안,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 등에서도 초저출산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한국인구의 출산력변천은 1960-1985년 기간의 제1단계와 198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2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제1차 출산력변천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대변되는 사회경제적 발전, 그리고 이에 따른 가치관과 사회규범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다. 사망력의 저하와 도시를 향한 대규모 인구이동도 출산력 저하에 필요한 조건들을 성숙시키고 저하의 속도를 높인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미국과 국제기구의 재정 및 기술지원을 받아 국가시책으로 강력하게 시행된 가족계획사업은 출산력변천을 크게 촉진시켰다. 초혼연령의 상승과 아울러 인공유산의 증가와 피임도구의 보급을 제1차 출산력변천의 3대 구성요소로 지적할 수 있다(Kim, 2005).

이와 대조적으로 제2차 출산력변천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경기침체와 노동시장의 불안정, 가족 형성의 지연과 약화, 그리고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제1차 출산력변천에서와는 달리 사망력 저하와 인구이동의 영향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계획사업 역시 1990년대에 들어와 유명무실해졌고, 출산억제를 위한 대부분의 규제와 보상제도가 사장되고 인구성장억제정책이 폐지되었다. 결국, 초저출산으로의 제2차 변천에서는 가치관과 태도의 역할이 강조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의 급격한 변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선택, 그리고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을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급격한 출산력 저하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김두섭, 2007).



[그림 I-1]을 보면, 1990년대 초에 약간의 상승 반전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출산력이 2005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2005년에 각각 43만 5천 명과 1.08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출산력 저하의 폭과 속도는 인구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 그림에서 2000년에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이 반짝 증가한 것은 '새천년 베이비 붐'에 기인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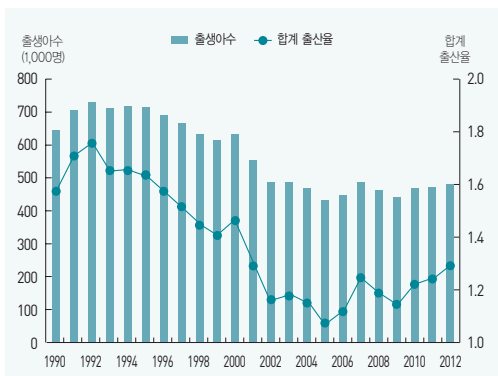
그런데 [그림 I-1]에서 주목할 것은, 출산수준이 2005년을 최저점으로 하여 반등의 조짐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출생아수는 2006년 44만 8천 명, 2007년 49만 3천 명으로 반등한 후, 2011년에 47만 1천 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2년에는 48만 4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합계출산율 역시 2006년 1.12, 2007년 1.25, 2011년 1.24, 그리고 2012년 1.30으로 집계되어, 2005년에 바

닥을 친 후 약간씩이나마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낸다. 물론, 2006년과 2007년에 출산수준이 오름세를 보인 것은 각각 쌍춘년, 황금돼지의 해 등의 구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구가 2000년대 진입 이후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하게 된 것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게 된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높은 실업률과 빈곤의 증대로 가족의 해체가 확대되고 장년층의 출산수준이 낮아진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통계청의 혼인신고 집계결과에 따르면,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은 1990년에 24.8세였으며, 이후 매년 0.1~0.4세씩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 29.4세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여자 초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첫째 자녀의 평균 출산연령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 30.5세에 이르렀다. 그리고 2012년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구성비는 18.7%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주 출산연령층이던 20대 여자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졌다. [그림 I-2]에서 여자 20~24세 및 25~29세 연령집단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5~29세 집단의 출산율은 아시아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불과 2년 기간에 8.9%, 그리고 2012년까지 무려 52.1%가 감소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30대 여자의 출산율은 상승추세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는 가장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는 연령층이 25~29세 집단에서 30~34세 집

그림 I-1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1990~2012



주: 1)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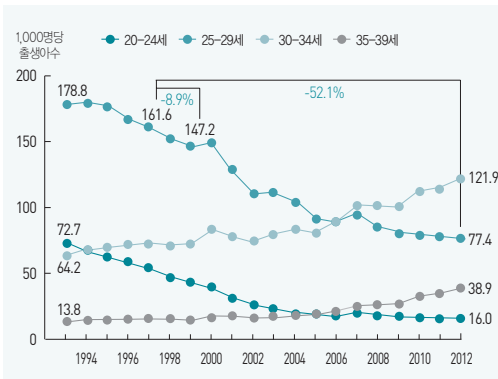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단으로 바뀌었다. 또한 35-39세 집단의 출산율 역시 2005년을 기점으로 하여 20-24세 집단의 출산율보다 높아졌으며,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림 1-2 어머니의 연령집단별 출산율, 1993-2012



주: 1) 연령집단별 출산율 = (산모의 연령집단별 출생아수 ÷ 해당 연령 집단의 여자 인구) × 1,000.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혼인 양상의 변화 역시 출산수준을 저하시킨 중요한 요인이다.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은 1996년에 각각 43만 5천 건과 1,000명당 9.4명의 수준을 기록한 이후 2003년에 이르기까지 급속한 감소가 지속되었다. 조혼인율은 그 후 황금돼지의 해였던 2007년에 일시적인 오름세가 관찰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1,000명당 6.4-6.6명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조이혼율은 1981년 1,000명당 0.6명에 불과한 낮은 수준에서 완만한 상승을 지속하다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그러나 2003년 1,000명당 3.4명의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는 점진적인 감소 추세가 관찰된다. 조혼인율

과 조이혼율은 2012년 현재 각각 1,000명당 6.5명과 2.3명이다.

앞으로 이미 확고하게 뿌리내린 소가족 지향의 태도와 규범들이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뚜렷한 경제적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젊은 세대가 결혼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급속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결혼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이혼율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앞으로 한국인구의 출산력이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반등을 지속하고 초저출산 상태를 탈피할 것인가의 여부는 경기침체, 실업률, 노동시장의 불안정 등 경제적 여건의 전개방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 사망률의 저하와 사망원인구조의 변화

지난 반세기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저하한 사망률은 선진국의 평균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조 사망률은 2004-2009년의 기간 동안 1,000명당 5.0명의 최저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부터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반전되었으며, 2012년 1,000명당 5.3명으로 집계되었다. 사망자수 역시 2006년 24만 2천 명의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 26만 7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참고로, 1983년의 조 사망률과 사망자수는 각각 1,000명당 6.4명과 25만 5천 명이었다.

조사망률과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최근의 추세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며,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의 2012년 사망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사망률이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고령인구의 사망이 증가함에 따라 남녀 인구 모두 80대 이상 연령집단의 사망률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국인구의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I-2>를 보면, 한국인구의 조사망률은 세계인구와 개발도상국,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선진국의 평균값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 만 0세 어린이의 영아사망률 역시 남녀 각각 선진국 평균값의 44%와 47%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일본, 스웨덴 다음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기대수명을 비교해 보아도 선진국의 평균값보다 남녀 모두 약 4년이 긴 것으로 확인된다.

표 I-2 한국과 세계 인구의 사망 관련 지표, 2005-2010

	조사망률 (1,000명당)	영아사망률 (1,000명당)		기대수명(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세계 인구	8.4	46.9	44.2	65.7	70.1
선진국	10.0	7.1	5.7	73.4	80.4
개발도상국	8.0	51.5	48.7	64.2	67.8
아시아	7.4	40.3	41.2	67.2	70.9
<b>한국</b>	<b>5.3</b>	<b>3.1</b>	<b>2.7</b>	<b>78.0</b>	<b>84.6</b>

주: 1) 한국은 2012년 수치임.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2013.

일반적으로 사망률은 성별, 연령을 비롯한 인구학적 조건에 따라서 편차를 나타낸다. 사망자

수는 2012년 남자 14만 7천 명, 여자 12만 명이었으며, 1,000명당 사망자수는 각각 5.9명과 4.8명으로 남자의 사망률이 현저하게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만 0세 영아의 사망률이 월등하게 높으며, 이는 한국인구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연령별 사망률은 1세 이후 10세 정도까지 낮아지며, 그 이후에는 연령이 높아지는 것에 비례하여 상승한다. 또한, 2012년 사망통계에서는 남녀 인구의 사망률 격차가 50세를 넘으면서 급격하게 확대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사망수준은 계절에 따라서도 편차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 2012년의 사망자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기록적인 한파를 기록했던 2월과 1월 및 3월의 사망자수가 많았으며, 6월과 7월의 사망자수가 적었다. 특히 65세 이상의 인구는 2월, 14세 이하 인구는 4월, 그리고 15-64세 인구는 3월에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망률의 수준은 거주하는 시도에 따라서도 편차를 나타낸다. 사망자수가 많은 지역은 2012년에 경기도(5만 1천 명), 서울(4만 2천 명)의 순이었으며,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의 사망자가 10만 5천 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9.4%를 차지하였다. 조사망률(1,000명당)은 전라남도(8.8명), 세종시(7.9명), 경상북도(7.7명)가 높고, 울산(4.0명)과 서울(4.1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각 지역의 연령구조를 2005년 전국인구 기준으로 표준화한 사망률은 전라남도가 가장 높고, 서울, 대전, 경기도, 제주



도의 순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망의 주요 요인은 사회경제적 발전수준, 의료시설의 개선과 건강보험 등 보건제도의 개혁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사망률이 높은 사회에서는 전염병, 기생충과 호흡기 관련 질환이 중요한 사망원인이다. 사망률이 낮은 선진사회에서는 심장병, 고혈압 등의 순환기 질환과 각종 신생물 질환(암), 사고 및 중독사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한국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소화기 질환에 의한 사망이 감소한 반면, 각종 암, 호흡기 질환, 자살에 의한 사망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한국인구의 2012년 3대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이다. 이들 3대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절반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원인구조는 성과 연령집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남자는 여자보다 자살, 운수사고, 추락사고 등 사고에 의한 사망이 월등하게 많다. 자살과 운수사고는 10대와 20대의 연령집단에서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이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폐암, 간암, 위암 등 암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하며,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매우 두드러진다.

## 고령화 추세

저출산과 수명연장의 결과로 최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부양비용이 늘어나고 연금, 의료보험과 같은 노인복지

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사회보장제도에 심각한 부담이 가해지면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젊은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의 추진력을 약화시키고, 개인수준에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가 어려워진다.

현재 한국인구의 고령화는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2040년대에 이르면 이 국가들을 추월하는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3>을 보면, 1960년에는 65세 이상과 8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각각 2.9%와 0.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3년 이 비중이 각각 12.2%와 2.4%로 상승하였으며, 2060년에는 각각 40.1%와 17.2%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3 고령화 추세와 전망, 1960-2060

연도	인구 (100만 명)	인구구성비율(%)		중위 연령 (세)	노년부양 인구비 (%)	고령화 지수 (%)
		65세 이상	80세 이상			
1960	25.0	2.9	0.2	19.0	5.3	6.9
1980	38.1	3.8	0.5	21.8	6.1	11.2
2000	47.0	7.2	1.0	31.8	10.1	34.3
2013	50.2	12.2	2.4	39.7	16.7	83.3
2020	51.4	15.7	3.7	43.4	22.1	119.1
2040	51.1	32.3	9.4	52.6	57.2	288.6
2060	44.0	40.1	17.2	57.9	80.6	394.0

주: 1) 노년부양인구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2) 고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고령화 현상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고령인구 내에서도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져 부양비용과 복지수요를 더욱 가중시킨다. <표 I-3>에서 보는 것처럼, 앞으로 80세 이상 인구의 규모와 비

중의 증가 속도가 65세 이상 인구보다 확연하게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60년에 이르면 80세 이상 인구가 754만 8천 명으로 증가하여 65세 이상 인구의 42.8%를 점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05년과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두 시점 사이에 전체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4%이었으며, 65세 이상 및 80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4%와 7.4%로 집계되었다.

중위연령은 인구의 변천단계나 고령화 수준을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중위연령이 25세 이하의 인구는 ‘어린 인구’로, 그리고 30세 이상인 인구는 ‘나이드인 인구’로 간주된다. <표 I-3>에서는 중위연령의 매우 빠른 상승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구는 1960년 중위연령이 19.0세에 불과한 ‘어린 인구’였으나 2000년대 진입 이전에 ‘나이드인 인구’가 되었다. 중위연령은 2013년 현재 39.7세로 추산되며, 2060년에는 무려 57.9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년부양 인구비와 고령화지수 역시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부양인구비는 1960년 5.3으로 집계되었으나 2013년에는 16.7로 3배 이상이 되었다. 그리고 2060년에 이르면 80.6 수준에 도달하여 15~64세 인구 1.2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지수는 노년부양인구비에 비해 지난 14년간의 저출산 추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

표이다. <표 I-3>에서 보는 것처럼, 고령화지수 역시 1960~2013년의 기간에 12.1배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60년에는 2013년 현재의 4.7배 수준인 394.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고령인구의 분포는 지역적으로 편차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고령인구는 먼 지역 거주자가 많고 동 지역 거주자는 적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점 심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고령인구는 사망률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령인구나 장수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조사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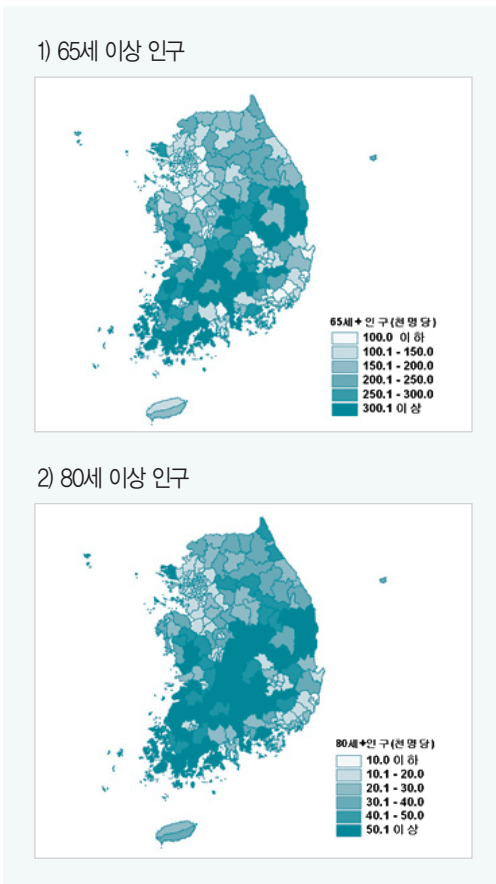
[그림 I-3]은 시군구 행정구역별로 65세 이상 및 8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지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 군위군과 의성군, 그리고 전라남도의 고흥군이었다. 또한 8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경상남도 남해군, 전라남도 고흥군, 그리고 전라북도 임실군의 순으로 높았다. 대체로 경상북도(군위군, 의성군, 예천군, 청도군) 및 경상남도 서부 지역(남해군, 의령군, 합천군)과 전라북도(임실군, 진안군, 순창군) 및 전라남도 남서해안(고흥군, 보성군, 신안군)을 대각선으로 연결한 지역에 위치한 시군구들이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인구가 많아 장수지역으로 알려진 지역들은 대체로 공기 좋고 물이 맑으며, 신선한 채소나 먹거리로 유명하고, 지형의 기복이 심하여 일상생활에서 운동량이 많거나 따뜻한 해안지역이



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반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울산, 오산, 구미, 시흥과 대전 유성구 등의 도시지역에서 고령인구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3 시군구별 65세 이상 인구와 80세 이상 인구, 201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 인구분포의 변화와 도시화

지난 반세기 동안 사회경제적 발전에 수반하여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의 결과, 도시인구의

비중이 2010년 현재 82.0%에 도달하였다. 읍 지역의 인구를 제외하면, 농촌인구의 비중은 9.4%에 불과한 수준이다. 도시인구의 증가 추세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젊은 연령층의 지속적인 이탈로 절대인구의 감소와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표 I-4〉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도시화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서울인구는 1990년 1,061만 3천 명을 기록한 이후 완만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0년 979만 4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1960년 서울인구의 네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서울의 면적은 605km<sup>2</sup>로 전 국토의 0.6%에 불과하지만 서울인구의 전국인구에 대한 비중은 20.2%에 달한다. 또한, 서울인구에 인천과 경기도 인구를 포괄하는 수도권에는 2010년 현재 전국인구의 49.1%에 해당하는 2,383만 6천 명이 집중되어 있다.

표 I-4 서울, 수도권 및 도시 인구, 1960-2010 (1,000명)

연도	서울	서울 대도시 권	수도권	권역별 5대 도시	시 (동) 부	군 (읍/면) 부	전국
1960	2,445	2,938	5,194	4,829	6,996	17,976	24,989
1970	5,433	6,327	8,730	9,239	12,709	18,172	30,882
1980	8,364	10,744	13,298	14,508	21,434	16,002	37,436
1990	10,613	16,508	18,586	18,828	32,308	11,101	43,411
2000	9,895	19,441	21,354	18,759	36,755	9,380	46,136
2005	9,820	20,960	22,767	18,669	38,515	8,764	47,279
2010	9,794	21,875	23,836	18,633	39,823	8,758	48,580

주: 1) 서울대도시권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내 시(동)부 인구를 포함함.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 인구를 포함함.

3) 권역별 5대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구를 포함함.

4) 각 인구는 외국인 인구를 포함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표 I-4〉를 보면, 서울과 서울대도시권, 수도권, 그리고 권역별 5대도시 인구의 증가 추세를 연대별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은 1960년대에 가장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960-1970년 기간 서울인구는 244만 5천 명에서 2.2배에 해당하는 543만 3천 명으로 폭증하였다. 같은 기간 전체 한국인구 증가의 50.7%가 서울에서 이루어진 셈이다. 이 기간에는 부산과 대구의 인구 역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서울과 아울러 3대 도시 위주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60년대에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중소도시들이 정체상태에 빠지거나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기도 하였다. 마산, 울산, 포항, 창원 등의 신흥공업도시가 만들어지고, 청주, 강릉, 진주, 천안 등의 중소도시에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진입한 이후였다.

서울의 인구성장은 1970년대에 들어와 점차 둔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서울을 향한 대규모 인구이동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주지가 서울 근교로 확산되고 서울로 유입되었던 인구가 성남, 부천, 안양 등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로 확산되면서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970-1980년 기간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5.3%와 4.2%에 달하였다. 포화상태에 이른 서울인구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은 그 후에도 지속되며, 1990-2010년

의 기간에 81만 9천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의 인구는 같은 기간에 각각 536만 7천 명과 525만 명이 증가하였다. 주변 산업단지의 조성 and 거주지의 교외화로 인한 인구의 확산으로 대도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1995년 이후 부산과 2000년 이후 대구에서도 관찰된다.

〈표 I-4〉에서 1960년과 2010년의 인구를 비교해보면,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는 4배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서울대도시권의 인구는 무려 7.4배가 되었다. 서울을 포함하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대도시의 인구도 같은 기간에 3.9배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699만 6천 명에 불과하던 시(동)부 인구는 2010년 3,982만 3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도시인구의 이러한 팽창은 기본적으로 농촌으로부터의 대규모 인구이동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읍·면)부 인구는 같은 기간에 1,797만 6천 명에서 절반 이하인 875만 8천 명으로 감소하였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어진 도시화의 특징은 도시인구의 성장이 모든 도시에서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울에 집중되는 인구와 산업이 각종 도시문제와 병리현상의 근원이라는 인식하에 1964년부터 수도권 인구 집중억제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1972년 이후에는 다양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하여 지방에 성장거점도시를 육성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산업의 집중현상은



지속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도시와 농촌 간,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앞으로도 농촌인구의 감소와 서울대도시권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당분간 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제결혼 추이와 외국인 배우자의 증가

전통적으로 민족적 동질성이 강조되던 한국 사회는 지난 사반세기 동안 외국인 배우자의 지속적 증가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1990~2012년에 외국인 배우자와 이루어진 혼인의 누적규모는 47만 4천 건에 달한다. 또한 2011년 현재 전체 혼인에 대한 외국 여자의 혼인 점유율이 20%가 넘는 시군구 지역이 25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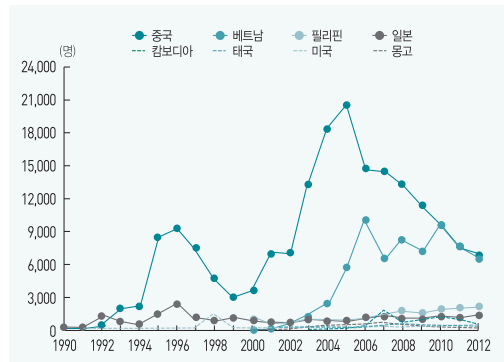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은 1990~2012년의 기간에 약 33만 8천 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체 국제결혼의 71.3%에 해당된다.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결혼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변화추세를 보이며, 국제결혼에 대한 점유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외국인 여자배우자의 혼인이주는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혼인 신고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는 외국인과의 결혼이 4,710건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 42,356건으로 최고점을 기록하였고 그 후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로 반전되어 2012년 28,325건으로 집

계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해에 신고된 전체 결혼건수에 대한 비율도 1990년 1.2%에서 2005년 13.5%로 높아졌으며, 2012년에는 8.7%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절대다수를 차지하던 중국 조선족 출신 여자배우자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여자배우자의 출신국가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로 다양해졌다. [그림 I-4]에서 중국인 여자배우자와의 결혼건수가 2005년 이후 감소 추세로 반전된 것은 중국 조선족이 친지방문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관련 법규를 개정함에 따라 한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여자배우자의 출신지역은 2012년 혼인신고 기준, 중국(7,036명) 다음으로 베트남(6,586명), 필리핀(2,216명), 일본(1,309명), 미국(526명), 캄보디아(525명), 우즈베키스탄(365명), 태국(323명), 네팔(255명), 몽골(217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I-4 출신국가별 외국인 여자배우자수, 1990~2012



출처: 김두섭, 「외국인 배우자의 다양성과 국제결혼의 안정성」, 2013.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 과정, 이주 후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 결혼안정성, 그리고 사회통합이 사회정책적 관심의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결혼의 기회는 더욱 확대되고 다인종, 다문화사회의 도래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문헌

김두섭. 2007. 「IMF 경제위기와 한국 출산력의 변화」. 집문당.

김두섭. 2013. 「외국인 배우자의 다양성과 국제결혼의 안정성」. 집문당.

Kim, Doo-Sub. 2005. "Theoretical Explanations of Rapid Fertility Decline in Korean."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3(1): 2-25.

UN. 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http://esa.un.org/wpp/unpp/panel\\_indicators.htm](http://esa.un.org/wpp/unpp/panel_indicators.htm).





# 02

## 인구고령화의 지역별 차이

김현식(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요 약

- 시군구별로 고령화의 양상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에 높은 고령화 수준을 기록한 곳은 2010년에도 높은 고령화 수준을 보이면서 고령화의 속도는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고령화가 가장 빠른 곳은 군 단위이고 이어서 시 그리고 구 단위인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에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이유는 이들 지역에서 젊은 층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어 유사한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가임기의 여성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 시군구별 고령인구의 사망률 차이는 고령화 차이와 커다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역 고령화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의 고령화가 지역별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균형 있는 발전을 기획하는 한편, 향후 전국 수준의 고령화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는 기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탐구한다. 첫째는 지역적으로 한국의 인구고령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이며, 둘째는 어떠한 요인들이 지역별 고령인구의 성장과 관련되었는가의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2000년과 2005년 및 201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통계청 웹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한 여러 자료, 예를 들어, 출산율, 사망률, 그리고 이동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문헌에서 고령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노년구성비인데, 이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흔히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를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지칭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기준을 따르고자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별 인구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최근 한국의 전반적인 고령화 현상의 특징을 짚어본다. 다음으로 지역별 고령화 현상의 차이와 흐름을 분석하고 지역별 고령화에 영향을 미친 인구학적 요인들을 출산율, 사망률, 그리고 이동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인구고령화의 지역별 차이가 가져올 사회적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 연령별 인구구조: 2000년, 2005년,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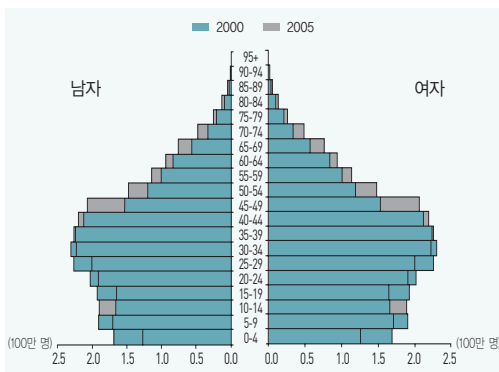
지역별 고령화의 차이에 대한 논의에 앞서 주민등록인구통계에서 나타나는 전국 수준의 고령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별 고령화에 관한 논의를 전국적 수준과 비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다. [그림 I-5]는 2000년, 2005년, 2010년의 연령별 인구구조 피라미드이다. 왼쪽 그림은 2000년과 2005년의 인구구조를 비교해 볼 수 있게 그렸고, 오른쪽 그림은 2005년과 2010년의 인구구조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렸다.

전체인구에서 청장년층인 20~50대의 인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와 낮은 연령대에서 인구가 적다. 이는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전개되는 사회에서 쉽게 발견되는 인구구조이다. 2000년, 2005년, 그리고 2010년 동안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40세 이상의 모든 연령층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15~19세를 제외한 39세 이하에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최근으로 올수록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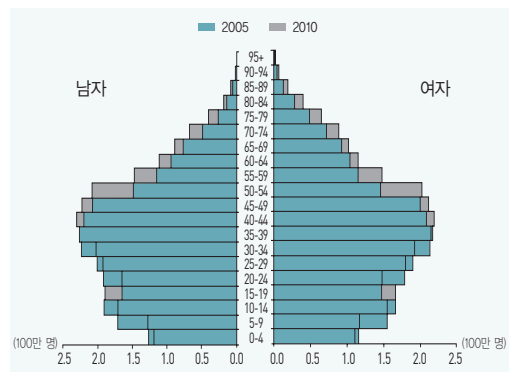
령화가 더 진전된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구해보면, 2000년 총인구는 4,773만 여 명이고 65세 이상 인구가 336만여 명으로 노년구성비는 7.0%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5년에는 총인구가 4,878만여 명이고 65세 이상 인구가 432만 명으로 노년구성비는 8.9%로 상승하였다. 2010년에는 총인구가 5,052만 명, 65세 이상 인구가 551만여 명으로 노년구성비는 10.9%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불과 10년 사이에 고령 인구 비율이 거의 4%p 증가하는 초고속고령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인구고령화는 여성의 고령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는 고령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 2000년, 2005년, 그리고 2010년에 65세 이상 여성 100명 당 65세 이상 남성의 수는 각각 60.0명, 64.7명, 그리고 68.6명을 기록하였다. 해당 연도의 총인구 성비가 각각 100.8명, 100.5명, 100.4명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여성의 고령화 현상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그림 I-5 인구의 연령구조, 2000, 2005, 2010



출처: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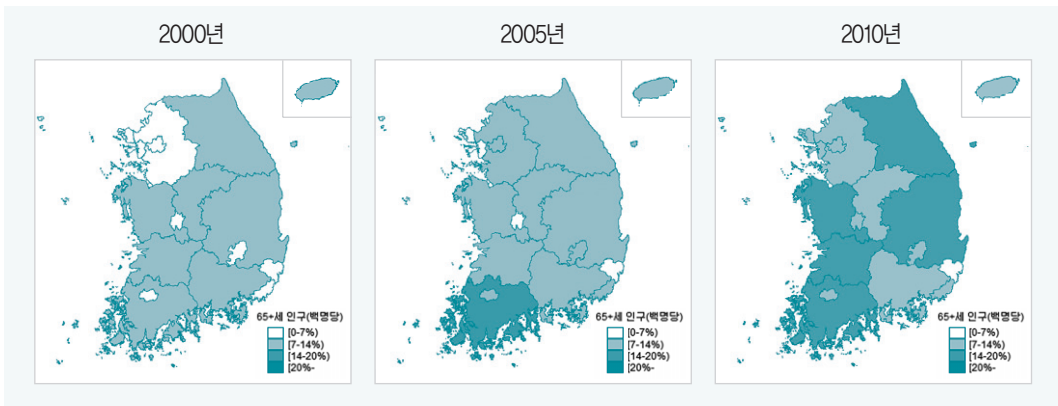
## 지역별 고령화의 전개 양상

[그림 I-6]과 [그림 I-7]은 2000년과 2005년, 그리고 2010년의 지역별 고령화 수준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I-6]은 광역시도별 고령화의 차이를, [그림 I-7]은 시군구별 고령화의 차이를 각각 보여준다. 이 두 그림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각 시군구를 일반사회, 고령화사

회, 고령사회, 그리고 초고령사회의 4가지 수준으로 분류한 후 짙은 색일수록 높은 고령화를 나타내도록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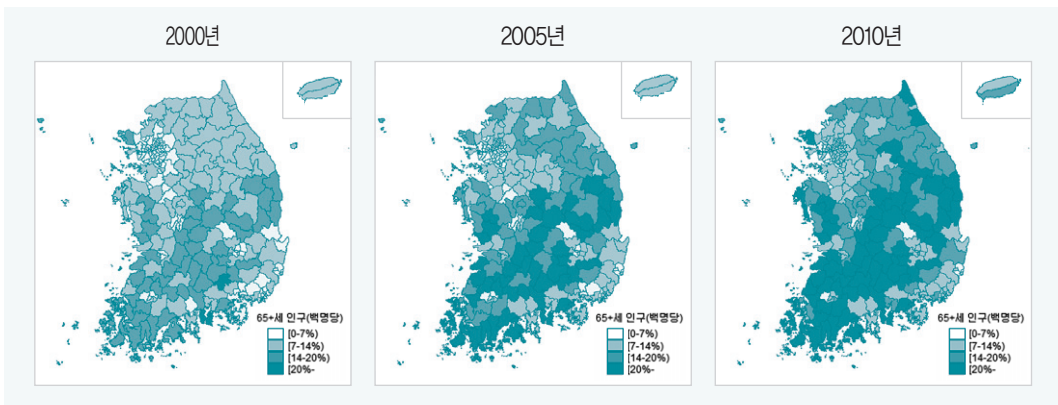
[그림 I-6]과 [그림 I-7]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의 고령화는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진행되고 있다. [그림 I-6]은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광역시들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이

그림 I-6 시도별 고령수준의 변화, 2000, 2005, 2010



출처: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그림 I-7 시군구별 고령수준의 변화, 2000, 2005, 2010



출처: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10년에는 울산을 제외한 모든 곳이 고령화사회 및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7]은 인구고령화가 시군구별로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0년 시군구별 노년구성비를 살펴보면, 울산 동구가 2.7%로 가장 낮으며 경상남도 남해군이 20.9%로 가장 높다. 2005년의 경우, 수원시 영통구가 3.7%로 가장 낮으며 경상남도 의령군이 27.4%로 가장 높다. 2010년이 되면 수원시 영통구가 4.4%로 가장 낮으며, 전라남도 고흥군이 32.0%로 가장 높다. 이는 고령화가 지역 간에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 준다.

[그림 I-6]과 [그림 I-7]을 통해서 본 고령화의 전개 양상 중 가장 두드러진 것 중의 하나는 한국의 고령화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하에서는 2005년과 2010년의 자료만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먼저 [그림 I-7]에서 2005년과 2010년의 그림을 비교해 보면, 가장 진한 색으로 표시된 초고령사회 단계에 해당하는 시군구가 2010년에 대폭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I-5>는 2005년과 2010년의 각 고령사회 범주에 속해 있는 시군구의 수를 보여준다.

여러 시군구가 2005년과 2010년 사이에 고령사회 단계로 빠르게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2005년에 일반사회에 속해 있던 60개 시군구 중 44개의 시군구가 2010년에 고령화

사회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2005년에 고령화사회로 분류된 97개 시군구 중 21개 시군구가 2010년에 고령사회로 변하였다. 2005년 고령사회로 분류되던 46개 시군구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2개 시군구가 2010년에는 초고령사회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하다.

표 I-5 고령사회 유형별 시군구 분포, 2005, 2010

	2010				계
	일반사회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2005					
일반사회	16	44	0	0	60
고령화사회	0	76	21	0	97
고령사회	0	0	24	22	46
초고령사회	0	0	0	45	45
계	16	120	45	67	248

출처: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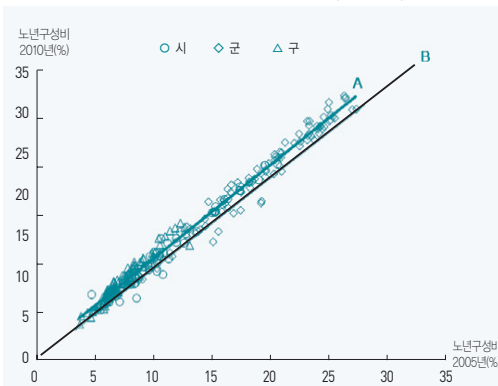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고령화가 낮은 수준이나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고령화 지도는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그 인접 지역에서만 낮은 고령화 수준을 보여주고 그 외의 지역들은 거의 모두 높은 고령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예외적인 지역이 있는데 이들은 강원도와 통합 창원시를 비롯한 남동부 해안 공업도시들로 이들의 고령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들 지역으로 젊은 층이 여전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속도가 더딘 것으로 판단된다.

한 시군구가 2005년과 2010년 사이에 고령화의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가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작성한 것이 [그림 I-8]이다.



이 그림에서 각 점은 개별 시군구를 나타내고, X축과 Y축은 각각 2005년과 2010년의 노년구성비를 나타낸다. 두 시점 사이의 노년구성비가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45° 각도에 해당하는 대각선을 그렸는데 이 대각선 아래에 있는 시군구는 2005년에 비해 2010년에 고령화의 정도가 떨어진 것을 나타내며, 대각선 위에 있으면 그 반대의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변화의 경향을 보여주는 회귀선(regression line)도 그림에 포함되었는데, 이 직선은 산점에 나타나는 경향을 하나의 직선으로 연결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시군구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시는 원으로, 군은 다이아몬드로, 구는 세모의 형태로 표시하였다.

그림 I-8 시군구 노년구성비의 변화, 2005, 2010



주: 1) 선A는 회귀선이고, 선B는 기울기가 45도인 대각선을 나타냄.  
출처: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거의 모든 원, 다이아몬드, 세모가 45° 선 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2005년에 비해 2010년 노년구성비가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경기도 화성시, 충청북도 청원군,

충청남도 아산시, 전라남도 무안군을 포함하는 4개의 시군구를 제외하면 모든 시군구에서 노년구성비가 상승하였으며, 이들 네 곳의 시군구에서의 하락 폭 또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 양상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시군구 전체에서 노년구성비는 평균 2.6%p 증가했으며 경상남도 합천군이 가장 많이 상승한 6.2%p의 상승을 기록하였다. 가장 많이 하락한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0.9%p가 하락하였다.

회귀선의 기울기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선의 기울기가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45° 대각선보다 큰 값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2005년 노년구성비가 높았던 지역에서 2010년 노년구성비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미 고령화가 높은 곳에서 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회귀선의 기울기 값을 구해보면 1.13정도가 나오는데, 이는 2005년 노년구성비가 1% 정도 높은 시군구는 2010년 1.13% 정도 되는 노년구성비, 혹은 0.13% 정도 가중된 노년구성비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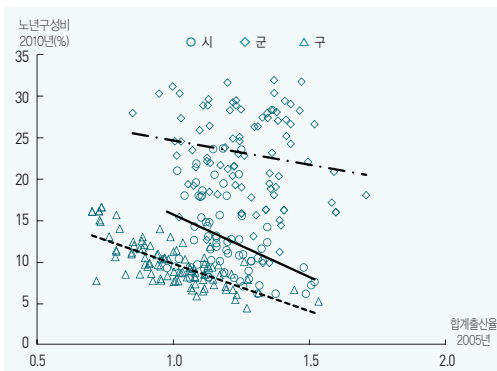
[그림 I-8]에서 다이아몬드(군부)는 오른쪽 위 부분에 몰려 있는 반면, 원(시부)과 세모(광역시)의 구)는 왼쪽 아래 부분에 많이 몰려있다. 군지역에서는 노년구성비와 증가율이 높은 반면, 시내 구 지역에서는 노년구성비와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즉 농어촌에서 고령화의 정도가 높은 반면, 도시지역에서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 지역별 고령화 관련 요인들

인구학적 관점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고령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여전히 논쟁적인 영역으로 남아있다. 이에 대한 연구들은 인구변동이 출산, 사망, 그리고 인구이동에 의해 발생한다는 기본적인 인구학적 공식에 기초하여, 이들 중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를 탐구한다. 물론 어떠한 요인이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거나 전체인구에 비해 고령인구의 사망률이 더 급속히 하락하는 경우 인구고령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제적 인구이동은 한 국가의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 진행된 지역별 고령화와 관련된 연구들 또한 다양한 요인들을 지적한다. 여기에서는 출산율, 사망률, 그리고 국내 인구이동이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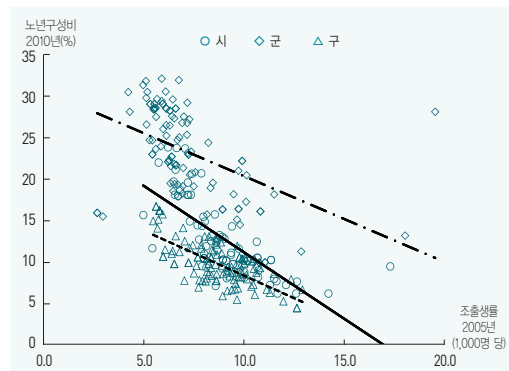
그림 I-9 출산율과 노년구성비의 관계, 2010



주: 1) ---선은 군, —선은 시, ---선은 구 지역에 대한 회귀선임.  
출처: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그림 I-9]는 2005년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이 2010년 노년구성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의 경우 2005년의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이들이 연령별 인구구조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적어도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그림에서 노년구성비의 시군구 간 차이를 보여주기 위하여 모든 산포도 및 회귀선은 시군구별로 다르게 나타내었다.

[그림 I-9]의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시군구 모든 단위에서 합계출산율이 높은 경우 노년구성비가 떨어지고 있다. 이는 합계출산율이 높으면 노년구성비가 떨어지는 경향을 의미하며, 이는 군 단위에 비해 시구 단위에서 더 잘 드러난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시군구 모든 곳에서 조출생률은 노년구성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조출생률이 상승하면 노년구성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오른쪽 그림에 있는 회귀선의 기울기가 왼쪽 그림의







기율기보다 가파르다. 이는 가임기 여성 1명당 출생한 자녀수를 보여주는 합계출산율뿐만 아니라 전체인구 1,000명당 새로 태어난 아이의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 또한 인구고령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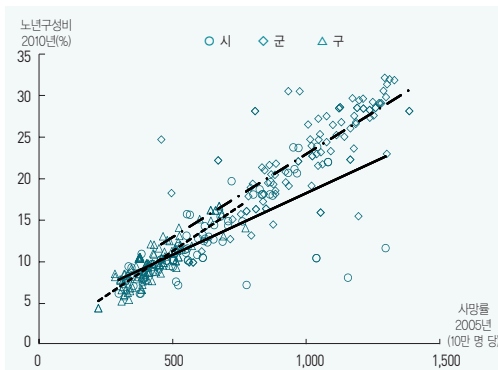
특히 조출생률의 기율기가 더 크다는 것은 개인당 출산력이 아니라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이 얼마나 많이 거주하고 있는지가 지역별 고령화에 더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많은 시군구에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은 개인당 출산력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출산 연령의 여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견은 전통적으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이 높은 출산력을 보이지만 실제 인구고령화는 농어촌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모순적인 상황을 설명해 준다. 하지만 역으로, 이를 인구고령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출생률이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즉, 2005년에 이미 인구고령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적고, 이는 낮은 조출생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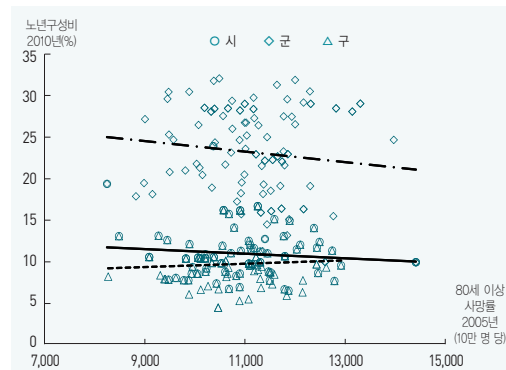
[그림 I-10]은 2005년 전체인구의 사망률과 80세 이상 인구의 사망률에 따라 2010년 노년구성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준다.

만약, 노년인구 사망률의 급속한 하락이 인구고령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림 I-10]에서 사망률이 내려갈수록 노년구성비가 올라가는 음의 관계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전체인구의 사망률과 노년구성비의 관계를 나타내는 왼쪽의 그림은 오히려 예상과 반대되는 관계를 보여준다. 이렇게 반대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에는, 조출생률과 인구고령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05년 노년구성비가 높은 곳에서 고령층이 많고, 고령층은 젊은 층에 비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전체 사망률이 높은 것이다. 2005년과 2010년의 노년구성비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림 I-10]에서 2005년의 전

그림 I-10 사망률과 노년구성비의 관계, 2010



주: 1) ---선은 군, —선은 시, ---선은 구 지역에 대한 회귀선임.  
출처: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체 사망률과 2010년의 노년구성비가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측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80세 이상 고령층의 사망률과 노년구성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보면 군 단위에서는 고령층의 사망률과 노년구성비 사이에 약한 음의 관계가 있어 고령층 사망률이 떨어질수록 인구고령화가 진행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그러나 시와 구 단위에서는 어떤 뚜렷한 관계가 없어 고령층 사망률 하락의 지역별 차이가 고령화의 지역별 차이로 이어진다는 가설을 뒷받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11]에서는 2005년 이동률과 2010년 노년구성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의 인구이동률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64세 이하 인구의 인구이동률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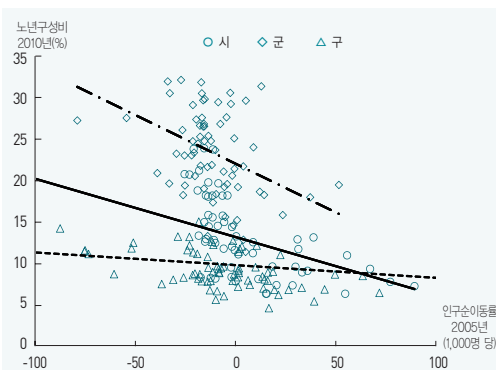
우선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거의 모든 군에서 전입률보다 전출률이 높아 순이동률은 음

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군에서는 노년구성비의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시군구를 분류한 후 회귀선을 보면, 시군구 단위 모두에서 순이동률이 양의 방향으로 증가할수록 노년구성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울기의 경사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 군과 시에서의 기울기는 매우 가파르지만 구 단위에서는 기울기가 비교적 완만하다. 이러한 유형의 관계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동률이 노년구성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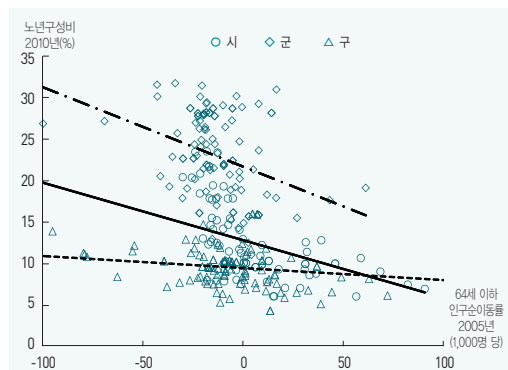
### 맺음말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드러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농어촌 지역에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화가 진행되는 곳에서 여성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

그림 I-11 인구이동률과 노년구성비의 관계, 2010



주: 1) --- 선은 군, — 선은 시, --- 선은 구 지역에 대한 회귀선임.  
출처: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악하고 병원이 부족하여 의료서비스가 제한적이며 새로운 의학의 파급이 더딜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곳에서 고령인구를 돌볼 수 있는 젊은 층의 지속적인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급속한 고령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사회경제

적 지위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향후 여성의 고령화가 진척될수록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요즘 이러한 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절실히 보인다.

#### 참고문헌

- 권태환 · 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최재현 · 윤현위, 2012. “한국 인구고령화의 지역적 전개 양상.” 「대한지리학회지」 47(3): 359-374.  
Uhlenberg, P. 2006. “Demography of Aging.” *Handbook of Population*.



## 03

이상적인 결혼연령과  
이상자녀수

송유진(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요 약

- 기혼여성과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이상적 결혼연령은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 중에서 미혼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이 가장 높다.
- 이상자녀수는 감소하고 있다. 미혼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자녀수가 가장 적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상자녀수가 적어진다.
-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높아지고 이상자녀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3을 밑돌아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렇듯 초저출산 현상을 가져오게 한 초혼연령과 이상자녀수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다. 시기별로 이상적인 결혼연령과 이상적인 자녀수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혼인상태, 성,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혼여성과 미혼남녀의 응답을 활용하였다. 기혼남성의 응답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조사에서 대부분 기혼여성이 응답자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결혼연령과 자녀수에 변화가 있다면 이는 행동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다. 또한 이상과 현실에 차이가 있다면 간극을 야기하는 원인을 찾아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기혼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적 결혼연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 의하면 최근 수년간 기혼여성들이 생각하는 남성과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꾸준히 높아졌다(표 I-6).

표 I-6 기혼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평균 결혼연령, 2005-2012 (세)

연도	남자	여자	차이
2005	30.64	27.58	3.06
2009	31.06	28.56	2.50
2012	31.40	29.04	2.36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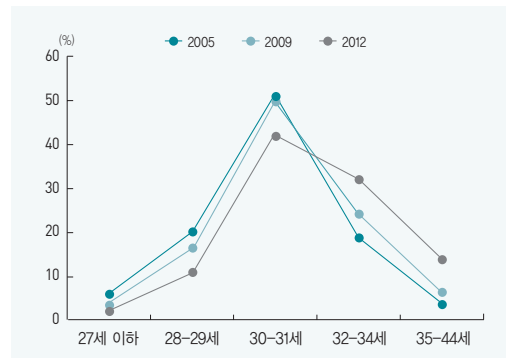
기혼여성이 생각하는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2005년에는 평균 30.64세였다. 이는 2012년에 평균 31.4세로 0.76세 높아졌다.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 역시 2005년 평균 27.58세에서 2012년 평균 29.04세로 1.46세 높아졌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녀 결혼연령의 상승폭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성과 여성의 결혼연령 차이는 2005년 3.06세에서 2012년 2.36세로 약간 줄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각 연도별 평균초혼연령을 살펴보면, 이상적인 결혼연령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05년 혼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균초혼연령을 구한 결과 남성은 30.87세, 여성은 27.72세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에 남성 32.13세, 여성 29.41세로 각각 높아졌다(표 I-7). 평균초혼연령의 전반적인 상승과 남성과 여성의 초혼연령 차이의 감소는 <표 I-6>에서 살펴본 이상적인 결혼연령 추세와 유사하다.

기혼여성들 가운데에는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30-31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한 여성의 비율은 2005년과 2009년 조사에서는 50% 정도였으나 2012

년에는 40% 정도로 낮아졌다(그림 I-12).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32-34세와 35-44세로 생각하는 비율은 2005년에 비해 2009년과 2012년에 높아졌으며, 특히 2012년에 더욱 두드러진다. 즉 2012년 조사에서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으로 32-34세를 꼽은 비율은 30%를 넘으며 35-44세의 비율도 10%를 웃돈다.

그림 I-12 기혼여성이 생각하는 남성의 이상적 결혼연령대, 2005-2012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각 연도.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에 대한 응답은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에 대한 응답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그림 I-13). 2005년 조사에서는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으로 27세 이하를 꼽은 비율이 50%에 가까웠으나, 2009년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35% 정도로 낮아지며, 2012년 조사에서는 20%대로 낮아진다. 2012년 조사에서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으로 28-29세를 꼽은 비율은 30%, 30-31세가 40%, 32-34세는 10% 미만이다.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응답비율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조사연도와 관계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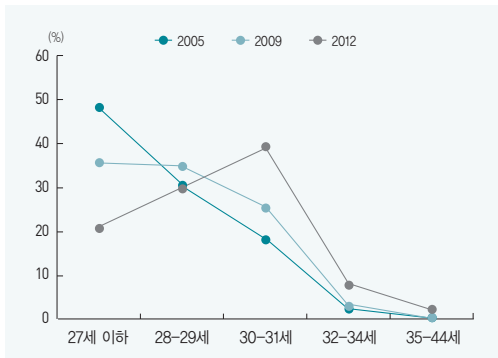
표 I-7 평균초혼연령, 2005-2012

연도	남자	여자	차이
2005	30.87	27.72	3.15
2009	31.61	28.71	2.90
2012	32.13	29.41	2.72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30-31세가 가장 많은 반면,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2005년과 2009년 27세 이하에서 2012년에는 30-31세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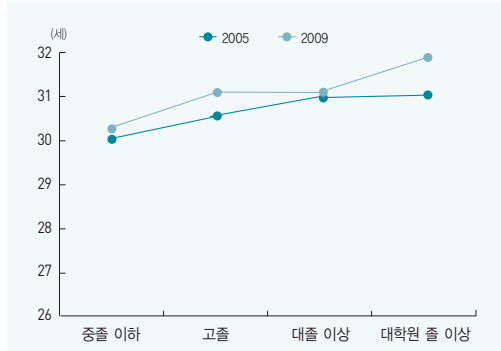
**그림 I-13** 기혼여성이 생각하는 여성의 이상적 결혼연령대, 2005-2012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각 년도.

기혼여성들의 교육수준에 따라 남녀의 이상적 결혼연령에 대한 생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상적 결혼연령을 높게 보는 경향이 관찰된다. 2009년 조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에 대한 생각이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반면 2005년 조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에 대한 생각은 완만하게 변화하지만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에 대한 생각은 지속적으로 높아진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높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의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추세와 일관된다. 교육수준에 따른 이상적인 결혼연령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2005년에 비해 2009년에 두드러진다(그림 I-14, 그림 I-15).

**그림 I-14**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남성의 이상적인 평균 결혼연령, 2005, 2009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각 년도.

**그림 I-15**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여성의 이상적인 평균 결혼연령, 2005, 2009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각 년도.

###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이상적 결혼연령

이 절에서는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연령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미혼남성이 생각하는 남성과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살펴보면, 2005년에 비하여 2012년에 모두 높아졌다. 남성의 이상적 평균 결혼연령은 30.57세에서 31.50세로, 여성의 이상적 평균 결혼연령은 27.60세에서 28.76세로 나타난다. 다



만 남성과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의 차이는 2005년 2.97세에서 2012년 2.74세로 낮아졌다.

미혼여성이 생각하는 남성과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도 2005년에 비해 2012년에 높다.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31.34세에서 31.94세로 높아졌고,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28.94세에서 29.60세로 높아졌다. 남성과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의 차이는 2005년 2.40세에서 2012년 2.34세로 낮아졌다. 기혼여성 및 미혼남성의 응답과 비교하면 미혼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평균 결혼연령이 가장 높다. 이는 미혼여성이 결혼에 대한 당위적 태도에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던 2009년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표 I-8**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남성과 여성의 이상적인 평균 결혼연령, 2005-2012 (세)

연도	남자	여자	차이
<b>미혼남성</b>			
2005	30.57	27.60	2.97
2009	31.76	28.94	2.82
2012	31.50	28.76	2.74
<b>미혼여성</b>			
2005	31.34	28.94	2.40
2009	31.92	29.45	2.47
2012	31.94	29.60	2.34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각 년도.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성의 결혼연령을 연령구간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경향은 비슷하지만 남녀 간에 약간의 차이가 관찰된다. 먼저, 미혼남성의 경우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으로 27세 이하를 꼽은 비율이 2005년에 8%

정도였으나 2009년과 2012년에는 그 비율이 절반 정도로 낮아졌다. 기혼여성과 마찬가지로 30-31세를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이러한 비율은 점차 낮아진다. 반면, 32-34세의 비율은 2005년에 20%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과 2012년에는 30%를 넘는다. 35세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2005년에는 4%였다가 2009년 11%, 2012년 17%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그림 I-16).

**그림 I-16** 미혼남성이 생각하는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대, 2005-2012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각 년도.

미혼여성이 생각하는 남성의 이상적 결혼연령 구간은 미혼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높다. 가령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으로 27세 이하를 꼽은 비율은 연도에 관계없이 모두 1-2%에 불과하다. 2005년과 2009년에는 30-31세를 이상적인 남성의 결혼연령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45%와 40% 정도로 가장 높았으나 2012년에는 32-34세가 41%로 가장 높다(그림 I-17).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미혼여성이 생각

그림 I-17 미혼여성이 생각하는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대, 2005-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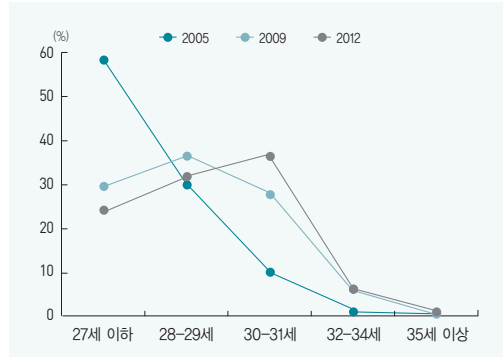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각 년도.

하는 남성의 이상적인 평균 결혼연령이 기혼여성이나 미혼남성에 비해 높았던 것과 비슷하다.

미혼남성이 생각하는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연령구간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기혼여성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2005년에 여성의 이상적 결혼연령을 27세 이하로 생각하는 비율이 60% 정도로 기혼여성보다 높다. 27세 이하의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2009년에는 29.4%, 2012년에는 24%로 낮아졌다. 2012년에는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30-31세라고 응답한 비율이 36.5%로 가장 높다. 반면, 35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조사연도에 관계없이 1% 내외로 매우 낮다(그림 I-18). 이는 2012년에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으로 35세 이상이라고 응답된 비율이 20%에 가깝게 나타난 점과 대비된다. 즉 여전히 여성에게는 결혼적령기라는 사회적 통념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가임능력과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혼여성이 생각하는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기혼여성이나 미혼남성의 경우와 달리 급

그림 I-18 미혼남성이 생각하는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대, 2005-2012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각 년도.

격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가령 27세 이하를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2005년에 30.6%였다가 2009년과 2012년에 각각 21.2%와 13.1%로 낮아진다. 2005년에는 28-29세를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으로 응답한 비율이 36.3%로 가장 높았으나 2009년에는 28-29세와 30-31세의 비율이 35%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2년에는 30-31세가 40%에 근접하여 가장 높다. 35세 이상은 2012년에 4.5%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그림 I-19).

그림 I-19 미혼여성이 생각하는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대, 2005-2012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각 년도.



## 기혼여성과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이상자녀수

여기에서는 기혼여성과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기혼여성이 생각하는 평균 이상자녀수는 2005년 2.30명에서 2009년 1.98명으로 낮아졌다. 조사연도에 관계없이 2명을 이상적인 자녀의 수로 꼽는 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가장 높다. 그러나 자녀가 없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05년 0.5%에서 2009년에 1.1%로 높아졌고, 이상적인 자녀수로 1명을 꼽은 비율도 2005년 8.4%에서 2009년에 16.5%로 2배 정도 높아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불과 4년 만에 이상적인 자녀수가 0-1명이라는 비율이 급속히 늘어난 것이다(표 I-9).

표 I-9 기혼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자녀수, 2005, 2009

연도	응답 비율(%)					평균 (명)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2005	0.5	8.4	58.8	25.6	6.7	2.30
2009	1.1	16.5	68.4	11.5	2.4	1.98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각 년도.

기혼여성의 출생자녀수에 따른 이상자녀수를 살펴보면, 조사연도에 관계없이 출생자녀수가 많을수록 이상자녀수도 늘어난다. 그러나 2005년과 비교할 때 2009년에는 평균 이상자녀수가 적어졌다(표 I-10).

표 I-10 기혼여성의 출생자녀수별 평균 이상자녀수, 2005, 2009  
(명)

연도	0명	1명	2명	3명
2005	2.00	2.14	2.34	2.57
2009	1.69	1.85	2.03	2.32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각 년도.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평균 이상자녀수는 2005년에 비해 2009년에 약간 적어졌고, 이상적인 자녀수로 0명이나 1명을 응답한 경우가 늘어났다. 이상적인 결혼연령과 마찬가지로, 기혼여성과 미혼남녀 중 미혼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11). 미혼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이 가장 높고 이상적인 자녀수가 가장 적다는 것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표 I-11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이상자녀수, 2005, 2009

연도	응답 비율(%)				평균 (명)
	0명	1명	2명	3명 이상	
미혼남성					
2005	1.2	12.2	68.2	18.5	2.06
2009	1.4	22.8	58.8	12.0	1.87
미혼여성					
2005	1.4	14.7	64.6	19.2	2.05
2009	2.5	26.9	54.2	10.5	1.79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각 년도.

미혼남녀의 연령대별 이상자녀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05년에 비해 2009년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가 적어진 것은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관찰된다. 가령 여성은 조사연도에 관계없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상자녀수가 적어지는 반면, 남성은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미혼남성의 경우 2005년에는 35-44세의 이상자녀수가 2.1명으로 가장 많고 25-29세 2.07명, 30-34세 1.98명의 순이었다. 반면 2009년



에는 30-34세의 이상자녀수가 1.94명으로 가장 많고 25-29세 1.87명, 35-44세 1.7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은 조사연도에 관계없이 25-29세의 이상자녀수가 가장 많았는데, 이 연령대의 이상자녀수는 2005년과 2009년에 각각 2명과 1.78명으로 나타났다(표 I-12). 여성은 이상자녀수의 경우에도 자신의 연령에 비추어 가임능력을 고려하기 때문에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12 미혼남녀의 연령집단별 평균 이상자녀수, 2005, 2009 (명)

연도	25-29세	30-34세	35-44세
미혼남성			
2005	2.07	1.98	2.10
2009	1.87	1.94	1.72
미혼여성			
2005	2.00	1.95	1.76
2009	1.78	1.69	1.4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각 연도.

교육수준에 따라 이상자녀수를 비교해 보면, 혼인상태 및 성별에 관계없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상자녀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기혼여성에 비해 미혼남녀의 이상자녀수가 적고, 특히 미혼여성의 이상자녀수가 가장 적다. 또한 미미한 차이이긴 하지만 중졸 이하의 저학력을 제외하고는 미혼남성의 이상자녀수가 미혼여성에 비해 많다(표 I-13). 이는 미혼여성들이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담

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I-13 기혼여성 및 미혼남녀의 교육수준별 평균 이상자녀수, 2009 (명)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기혼여성	2.01	1.99	1.90
미혼남성	1.90	1.87	1.88
미혼여성	1.96	1.84	1.74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2009.

이상적인 결혼연령이 낮아지고 이상자녀수가 적어지는 추세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현실을 단언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결혼연령과 자녀수는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현실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함의를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기혼여성 및 미혼남성과 비교하였을 때 미혼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적 결혼연령이 가장 높고 이상자녀수가 가장 적다는 사실은 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결혼과 출산이 여전히 여성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희생을 요구하는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부담과 희생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 04

## 이혼의 확산과 이혼자들의 삶

김정석(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요약

- 그 동안 급격하게 증가해 오던 이혼건수와 이혼율은 2003년을 기점으로 다소 완화된 것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이혼자수와 비율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 지난 10년간 이혼자들의 연령이 중·장년층과 노년층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한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 현재 이혼자들은 유배우자들보다 중·장년층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으며, 학력이 낮고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 이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유배우여성보다 더 높고 이혼여성이 2세대 가구에 속할 비율은 이혼남성보다 훨씬 높다.

최근 만혼, 비혼 현상과 더불어 이혼 또한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70년에 1만 1천여 건이었던 이혼건수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IMF 위기'라고 통칭되는 1990년대 후반에 한 해당 10만여 건을 넘긴 이후, 2003년에 16만여 건에 이르게 된다. 이후 다소 감소하였지만 2012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년 11만 건 이상의 이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혼사례의 급격한 증가 및 지속과 더불어, 이혼의 주요 연령층, 이혼사유 및 재판이혼비율의 변동을 포함해 이혼의 양상과 성격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이혼은 당사자들에게는 결혼관계의 법적인 해체라는 개인적 사건이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이혼 당사자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사회에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과제를 남기게 된다. 여기에서는 최근 이혼의 개괄적인 추이와 이혼 당시 부부의 생애주기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이혼 양상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현재 이혼한 남성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유배우 남녀의 특성과 비교해 파악하기로 한다. 여기서 고려하는 이혼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가구구성형태, 거주지역, 경제활동상태 등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이혼자들의 삶의 조건과 현황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지표들이다.

### 이혼의 추이

〈표 I-14〉는 지난 10년간 이혼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혼건수는 2003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매년 10만 건 이상 보고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인구 1,000



명당 이혼발생건수를 보여주는 조이혼율과 1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이혼발생건수를 보여주는 일반이혼율 또한 2003년을 기점으로 다소 완화되고 있다. 일반이혼율을 보면, 2012년 현재 남성의 경우는 1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5.4건, 여성의 경우는 1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5.3건의 이혼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혼건수가 다소 적어지는 현상은 결혼상태에 있는 남녀의 숫자와도 관계된다. 우선 만혼과 비혼의 증가로 인해 미혼이 증가한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과는 무관하며, 이들의 증가는 한편으로는 이혼발생의 사례를 낮추는 효과를 가진다. 다음으로 이미 이혼을 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누적됨으로써 이혼발생 건수가 점차 낮아진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건수가 매년 10만

여 건을 넘고 있는 것은 이혼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수용적으로 변하고 이혼의 실행도 이전보다 용이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혼 당시 남편과 아내의 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혼 시 평균연령은 2002년과 2012년 사이에 남편이 40.6세에서 45.9세로, 아내가 37.1세에서 42.0세로 높아졌다. 이혼한 남편과 아내 간의 평균연령차는 결혼당시의 연령차를 반영한다. 평균이혼연령의 증가는 만혼으로 인해 결혼연령자체가 상승한 탓도 있을 수 있으나, 결혼생활을 오래 유지한 중·장년층 이상에서 이혼이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혼남녀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관련해서 이후에 다시 살펴볼 것이다.

〈표 I-14〉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혼의 성격 또한 변하고 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전부터 지금까지 협의이혼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왔다. 2012년 현재 전체 이혼의 76.0%가 협의이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협의이혼의 비율은 다소 감소되어 온 반면, 재판이혼의 비율은 증가해 왔다. 재판이혼은 2005년에 12.8% 정도였으나 2007년에 15.2% 그리고 다음해에 22.1%로 증가하고 그 이후로는 20% 이상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재판이혼의 증가는 최근 이혼 시 재산과 양육을 둘러싼 대립이 증가하고 여성의 재산분할권을 인정하는 사회와 법조계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I-14 이혼건수, 이혼율 및 평균이혼연령, 2002-2012

연도	이혼건수 (건)	조이혼율 (%)	일반이혼율(%)		평균이혼연령(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02	144,910	3.0	7.6	7.5	40.6	37.1
2003	166,617	3.4	8.7	8.5	41.3	37.9
2004	138,932	2.9	7.2	7.1	41.7	38.2
2005	128,035	2.6	6.6	6.5	42.1	38.6
2006	124,524	2.5	6.3	6.2	42.6	39.0
2007	124,072	2.5	6.2	6.1	43.2	39.5
2008	116,535	2.4	5.8	5.7	44.3	40.5
2009	123,999	2.5	6.0	6.0	44.5	40.7
2010	116,858	2.3	5.6	5.6	45.0	41.1
2011	114,284	2.3	5.4	5.4	45.4	41.5
2012	114,316	2.3	5.4	5.3	45.9	42.0

주: 1)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발생건수임.

2) 일반이혼율은 15세 이상 남자 또는 여자 인구 1,000명당 이혼발생건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이혼사유로 배우자부정, 가족의 확대, 가족 간 불화 등 가족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이 중에서 가족 간 불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은 2003년 이후 다소 낮아지면서 최근 들어서는 12-13% 정도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2002년에 이미 44.8%를 차지한 이후 꾸준히 그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혼건수, 조이혼율, 일반이혼율 등이 그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으나 이러한 지표들은 주어진 기간의 발생건수를 의미한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혼율에 비해 재혼율이 낮고 매해 10만여 건 이상의 이혼이 유지된다면, 주어진 시점의 이혼자수와 비율은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I-15>는 2000년, 2005년, 그리고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산출된 이혼자수와 이들이 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남녀별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이혼자의 수와 비율은 각각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앞서 살펴본 <표 I-14>의 이혼건수, 조이혼율, 일반이혼율과는 달리 이혼자들이 꾸준히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현재 남성이혼자는 모두 72만여 명으로 15세 이상 남성 중 3.6%를, 여성이혼자는 모두 89만여 명으로 15세 이상 여성 중 4.4%를 차지한다. 이는 15세 이상 인구 100명당 4명 정도가 이혼한 남자 혹은 여자라는 의미이다. 남성이혼자에 비해 여성이혼

자가 더 많고 그 비율이 높은 것은 남성의 재혼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표 I-15 성별 이혼자수와 비율, 2000-2010

연도	남자		여자	
	이혼자수 (명)	비율 (%)	이혼자수 (명)	비율 (%)
2000	324,191	1.8	380,525	2.1
2005	522,516	2.8	617,677	3.2
2010	720,479	3.6	889,108	4.4

주: 1) 이혼자 비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이혼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삶의 단계에 따른 이혼 양상의 변화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 출산, 양육과 같은 가족 단위의 생애주기를 밟는다. 이혼은 가족생애주기의 특정 단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적으로 이혼은 아직 자녀를 두지 않은 결혼초기단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는 이혼 시 남편과 아내의 연령, 결혼유지기간, 그리고 미성년자녀유무 등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생활주기(혹은 생활단계)에 접근하여 지난 10년간 이혼 양상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I-16>은 이혼 당시 연령을 44세 이하, 45-59세, 60세 이상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이혼 시 남편과 아내의 연령분포와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남녀에 관계없이, 이혼 당시 44세 이하였던 비율은 지난 10년간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45-59세의 비율은 남성의 경우 24.3%에서 42.6%로, 여성의 경우 15.0%에서 33.0%로 거의

두 배 증가하였다. 노년층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비율은 그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는데, 남성의 경우 3.1%에서 8.5%, 여성의 경우 1.2%에서 4.1%로 세 배 정도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본 평균이혼연령의 증가는 결국 중·장년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I-16 이혼부부의 이혼연령, 2002-2012

(%)

이혼연령	남자			여자		
	2002	2007	2012	2002	2007	2012
15-44세	72.7	60.7	49.0	83.8	73.7	62.9
45-59세	24.3	33.4	42.6	15.0	23.6	33.0
60세 이상	3.1	5.9	8.5	1.2	2.8	4.1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이혼한 부부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결혼을 유지한 후에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가와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가 있었는가는 <표 I-17>에 제시되어 있다. 이혼 당시 부부의 결혼유지기간이 5년 미만(1년 미만 포함)인 비율은 지난 10년간 25% 내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결혼 후 배우자와 결혼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눈에 띄는 현상은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이후에 이혼을 한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 비율은 2002년에 이미 15.7%였으며, 2012년에는 26.4%에 이르렀다. 따라서 최근에 이혼한 부부 4쌍 중의 한 쌍은 적어도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유지한 부부들이며, 이들은 결혼초기에 이혼한 부부의 수를 넘어서고 있다.

앞서 살펴본 이혼부부의 연령분포와 연관시켜보면, 장기간의 결혼생활을 해 오던 중·장년 이상 연령층에서의 이혼이 결혼초기의 이혼과 함께 오늘날 이혼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17 이혼부부의 결혼유지기간 및 미성년자녀 유무별 구성비율, 2002-2012

(%)

	2002	2007	2012
결혼유지기간			
1년 미만	5.1	5.9	4.6
1-5년 미만	21.8	21.3	20.1
5-10년 미만	23.3	20.5	18.9
10-15년 미만	19.4	17.5	15.5
15-20년 미만	14.7	14.7	14.6
20년 이상	15.7	20.1	26.4
미성년자녀 유무			
있었음	71.2	59.0	53.0
없었음	28.8	41.0	47.0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자녀, 특히 어린 자녀의 존재는 이혼을 결정하는 데 주요 장애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고민은 부부 간의 문제나 불화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다. <표 I-17>을 통해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의 유무를 살펴보면, 미성년자녀가 없는 비율이 2002년 28.8%에서 2012년 47.0%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는 대체로 아직 자녀를 갖지 않은 결혼초기단계의 부부와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이미 성장한 부부로 구분된다. 장기간의 결혼생활을 한 중·장년 이상 연령층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점을 감안한다면 미성년자녀 유무의 비율 변화 또한 성인자녀를 둔 부부에게서 발생한 이혼의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 이혼자들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

이혼 추이와 이혼 당시 부부의 생애주기적 단계를 살펴본 데 이어, 이혼자들의 주요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I-18>을 통해 이혼자들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이혼자들이 남녀에 관계없이 대체로 45-59세의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혼 시 평균연령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다. 또한 젊은 나이에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을 통해 유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5-44세의 이혼자 비율이 낮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혼자들이 집중된 45-59세 연령대, 특히 50대 연령층의 남성들은 퇴직을 앞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해당 연령층의 여성들은 대체로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제적 압박이나 위기감과 더불어 이 연령층에서는 재혼의 가능성이 그 아래 연령층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이혼상태가 노년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표 I-18 유배우자와 이혼자의 성별 연령구성, 2010 (%)

이혼연령	남자		여자	
	유배우자	이혼자	유배우자	이혼자
15-44세	36.8	29.4	45.1	36.3
45-59세	39.1	55.6	37.2	52.0
60세 이상	24.1	14.9	17.8	11.7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이혼자들의 교육수준 또한 유배우자들의 교육수준과 차이를 보인다. 남녀에 관계없이, 이혼자들은 유배우자에 비해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다. 이혼자들의 대부분은 남녀 관계없이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다(표 I-19). 이 현상은 이혼자들의 연령이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그 동안 한국 사회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에도 현재의 중·장년층은 젊은 층에 비해 대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 이혼자들의 교육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즉 현재 한국의 이혼자들은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들의 교육수준 또한 유배우자들에 비해 낮다.

표 I-19 유배우자와 이혼자의 성별 교육수준, 2010 (%)

교육수준	남자		여자	
	유배우자	이혼자	유배우자	이혼자
중학교 이하	21.1	29.8	27.6	30.6
고등학교	35.6	46.7	39.8	50.2
대학 이상	43.3	23.5	32.7	19.1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이혼자들의 가구구성형태는 유배우자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표 I-20>에 의하면, 이혼자들은 대체로 1인가구나 2세대 가구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남성과 이혼여성 간에는 차이가 발견된다. 이혼남성의 경우 1인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이혼여성의 경우에는 2세대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다. 대체로 남성들은 이혼 후에 혼자 사는 경우가 많지만, 이혼여성은 이혼 후 미혼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 I-20** 유배우자와 이혼자의 성별 가구구성형태, 2010 (%)

가구구성형태	남자		여자	
	유배우자	이혼자	유배우자	이혼자
1세대 가구	24.0	3.1	23.7	2.9
2세대 가구	62.7	39.4	64.0	54.7
3세대 이상 가구	9.9	15.0	10.5	9.5
1인가구	2.9	40.1	1.7	31.2
비친족 가구	0.5	2.4	0.1	1.7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이혼자들의 거주지역은 <표 I-21>을 통해 알 수 있다. 유배우자들의 80% 정도가 도시지역이라 할 수 있는 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배우자들에 비해 이혼자들이 동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은 다소 높다. 특히 여성이혼자들의 경우, 동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은 89.0%에 이른다. 여성이혼자들이 도시지역에 더욱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들의 취업기회와 자녀양육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I-21** 유배우자와 이혼자의 성별 거주지역, 2010 (%)

거주지역	남자		여자	
	유배우자	이혼자	유배우자	이혼자
동부	80.1	83.0	81.1	89.0
읍부	9.2	7.8	8.9	6.3
면부	10.7	9.2	10.1	4.7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표 I-2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혼자들의 경제활동상태는 남녀 간에 차이가 발견된다. 남성의 경우, 유배우자들에 비해 이혼자들의 경제활동 비율이 낮는데 남성이혼자의 30.6%가 경

**표 I-22** 유배우자와 이혼자의 성별 경제활동상태, 2010 (%)

경제활동상태	남자		여자	
	유배우자	이혼자	유배우자	이혼자
미취업	20.2	30.6	50.6	38.3
취업	79.8	69.4	49.4	61.7
전일제	77.2	65.1	41.3	55.7
시간제	1.0	1.4	5.9	3.1
일시휴직	1.5	2.9	2.2	2.8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체로 남성이 주 생계자가 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낮은 남편들에서 이혼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여성들의 경우는 유배우자에 비해 이혼자들의 경제활동 비율이 오히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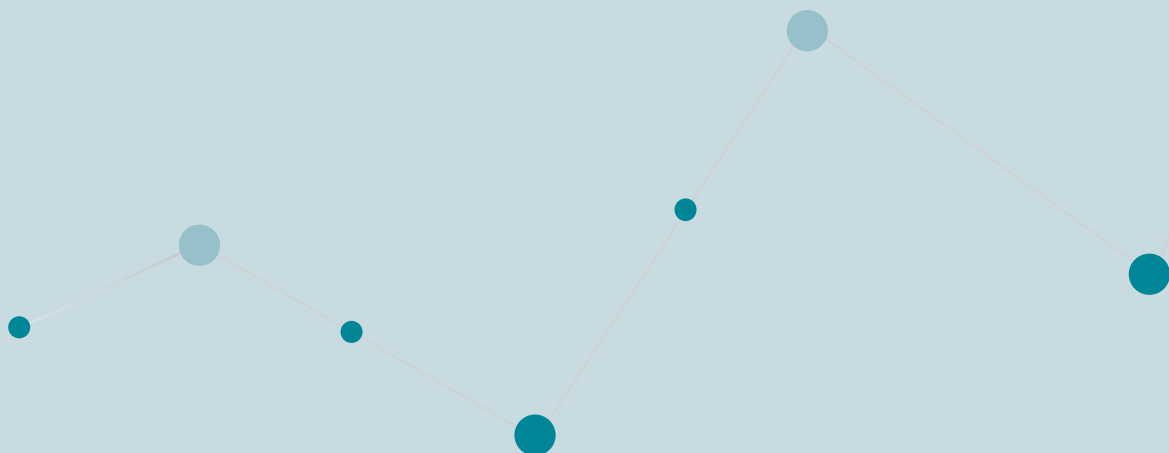
이는 유배우여성들의 상당수가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혼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61.7%에 이르는 점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여성이 이혼을 한 사례와 이혼 후 생활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사례가 혼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학력의 중·장년층 여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혼 후 생계를 위한 취업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능성은 이혼여성의 전일제취업 비율이 유배우 여성들의 전일제취업 비율보다 높다는 점과도 연관된다. 즉 유배우 여성들은 남편의 별이를 보조하는 수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지만, 이혼여성은 대다수가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

## 가족과 가구

### Family & Household

- 01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변화 한경혜 | 서울대학교 [38](#)
- 02 세대관계의 변화 한경혜 | 서울대학교 [48](#)
- 03 자녀돌봄 시간의 변화 차승은 | 수원대학교 [52](#)





## 01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변화

한경혜(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요 약

-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가구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노인의 자녀동거 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독거가구의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초혼연령이 증가하고 조혼인율이 감소하면서 결혼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보는 태도가 일반화되었다.
- 이혼은 IMF 사태 이후 급증했다가 최근 다시 감소세에 있으며, 이혼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 국제결혼의 증가로 한국 사회는 인구학적으로 다인종·다민족화 되어가고 있다.
- 여성가구주 가구, 조손가구와 분거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가족관계만족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 가사노동이 여성만의 몫이 아닌 남녀 모두의 몫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으나, 실제 행동의 변화는 인식 변화보다 느리게 일어나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화와 함께 한국 가족은 그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에 있어 광범위하고도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가족의 주요 변화 추이를 가족구조, 가족형성, 가족관계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구조에서는 가구규모의 축소와 1인가구의 증가, 분거가족 증가, 노인 단독가구 및 조손가구의 증가와 같은 변화를 살펴보고, 가족형성 부분에서는 만혼화 현상과 입양, 국제결혼의 증가 추세와 함께 이들 변화가 야기한 결혼 및 가족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살펴본다. 가족관계의 질적 측면의 변화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만족도 및 가사분담 현황과 태도를 살펴볼 것이다.

## 가족구조의 변화

한국 가족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다. 특히 가구구성의 변화가 두드러져서, 가구의 소규모화, 1인가구의 증가, 노인가구의 증가, 조손가구의 증가, 분거가구의 증가 등으로 표출되는 ‘구조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 가구구성의 변화

한국 가족은 가구구성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그 다양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가구규모의 축소경향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평균 가구원수가 1985년 4.1명에서 2010년 2.8명으로 감소하였다. 가구규모의 축소는 3세대 이상 확대가족의 비율이 줄고 2세대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 그리고 1인가구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현상과 관련된다. 3세대 이상 가구는





1990년 12.5%에서 꾸준히 줄어들어 2010년에는 6.1%로 감소하였다. 한편, 1인가구의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10년 23.8%로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 1인가구의 증가는 젊은 연령층에서 미혼율이 높아지고 노년층에서는 노인독거가구가 늘어났으며, 전반적으로 이혼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인가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2035년에는 전체 가구의 34.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과거 30여 년간 68%대를 유지해 오던 핵가족가구(부부, 부부+자녀, 부+자녀, 모+자녀)의 비율이 2010년에는 61.6%까지 감소하였다. 2세대 가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가족 형태인 ‘부부+자녀’ 가구가 2010년에는 641만 6천 가구로 2000년의 689만 2천 가구에 비해 7%가량 감소한 반면, ‘한부모+자녀’ 가구는 112만 4천 가구에서 159만 4천 가구로 약 41.8%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II-1 일반가구의 평균가구원수와 가구형태별 구성 비율, 1990-2010**

	1990	1995	2000	2005	2010
평균가구원수(명)	3.7	3.3	3.1	3.0	2.8
가구형태별 구성비율(%)					
1세대 가구	10.7	12.7	14.2	16.2	17.4
2세대 가구	66.3	63.3	60.8	55.4	51.2
3세대 이상 가구	12.5	10.0	8.4	6.9	6.1
비혈연가구	1.5	1.4	1.1	1.4	1.1
1인가구	9.0	12.7	15.5	19.9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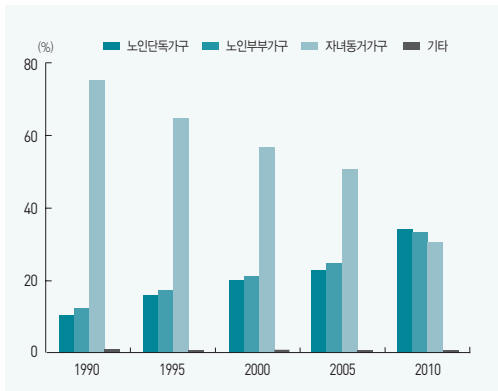
주: 1) 일반가구는 혈연가구, 5인 이하 비혈연가구, 1인가구 등을 포함함.  
 2) 1세대 가구는 부부, 부부+기타 친인척 등 동일세대로 구성된 가구임.  
 3) 2세대 가구는 부부+자녀, 부부+부모, 조부모+손자녀 등 2개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임.  
 4) 3세대 이상 가구는 부부+자녀+양친 등 3개 이상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이렇게 핵가족이 감소하고 가족유형의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가족제도의 해체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반응이자 적응으로써, 한국 가족이 전통적 형태에서 벗어나 재구조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노인가구의 증가

한국의 가구구성 변화에는 노인인구의 거주 유형 변화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노인 혼자 사는 노인독거가구나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이것이 1인가구의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199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75.3%가 자녀와 함께 살았지만 2010년에는 30.8%로 절반 이상 크게 감소하였다. 노인독거가구의 증가는 노인부부가 함께 살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기보다는 계속 독립주거를 선택하는 노인이 증가한 것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젊은 층이 노부모와의 별거를 선호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노인들의 태도 또한 변화하여 자발적 별거가 증가한 것이다.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자녀와 가까운 거리에 살되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주유형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독립주거를 하더라도 노부모와 자녀세대간 접촉 및 다양한 지원 교환을 통하여 가구단위를 뛰어넘는 상호작용을 유지한다는 면에서, 3세대가족의 규범 및 특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1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비율, 1990-2010



주: 1) 노인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일반가구임.

2) 기타 가구는 노인부부가구를 제외한 1세대 가구, 비친족가구, 미상 등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그런가하면, 독립 주거에 필요한 건강과 자원을 가지지 못한 노인들의 비자발적 별거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빈곤의 대물림으로 인하여 자녀세대 또한 노부모를 부양할 충분한 자원을 가지지 못한 빈곤계층의 경우에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진다. 사회·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취약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노인 혼자 거주하는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돌봄의 공백과 경제적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독거가구는 총 가구의 6.0%를 차지한다. 이는 2006년에 비해 25%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20년 후인 2030년에는 10가구 중 1가구(11.8%)가 노인독거가구일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43.6%)인 것으로 보고되며, 전체 노인인구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 4명 중 3명은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자녀에게 의탁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다.

## 여성가구의 증가

총 가구 중 여성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8.5%에서 2002년 20%를 넘은 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3년 현재 22.4%에 달한다. 여성가구는 2013년 현재 398만 8천 가구로 2000년의 268만 3천 가구와 비교하여 약 49% 증가하였다.

여성가구주 비율의 상승은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특별히 중요한 원인으로는 초혼연령 상승으로 인해 미혼여성이 1인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1990년 이후 높아진 이혼율의 영향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 빈번해지는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여성가구의 혼인상태별 구성비율을 살펴본 <표 II-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 20년 동안 이혼여성의 가구주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II-2 여성가구의 혼인상태별 구성비율, 1990-2010 (%)

연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1990	20.4	17.7	56.3	5.6
1995	21.1	15.7	56.1	7.1
2000	21.4	16.6	50.5	11.6
2005	23.3	17.9	44.4	14.4
2010	22.3	24.0	37.7	16.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분거가구의 증가

가족원 중 일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분거가구의 증가 또한 최근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의하면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가구주는 2006년 전체 가족의 21.6%에서 2008년 16.5%, 2010년 15.1%로 최근 들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2년 19.6%로 다시 증가하였다.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따로 살고 있는 이유는 주로 직장과 학업 때문이다.

2012년 현재 분거가구의 11.2%는 해당 가구원이 국외에 있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원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분거가족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하여, '기러기 가족'이라는 신조어를 낳으면서 확연한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배우자가 따로 외국에 사는 경우는 직장이 주된 이유이고, 미혼자녀가 따로 살고 있는 이유는 학업이 가장 많다. 이 시기에 국외유학을 선택하는 가족이 증가한 것은 경제 발전으로 가구당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국외거주 분거가족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하는데,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국외거주 분거 비율이 특히 높다(표 II-3). 그런가 하면, 특별히 높은 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소득계층에서도 기러기 가족의 분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자녀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조기유학에 가족자원을 집중 투자하는 현상이 고소득층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

다. 또한 이는 한국 가족이 정서적 유대를 중시하는 부부중심적 핵가족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중심적이며 계층 상승을 목표로 하는 도구적 가족주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3 분거가구의 소득수준별 국내 및 국외 분거비율, 2012 (%)

월평균 가구소득	국내	국외
전체	91.3	11.2
100만 원 미만	93.6	7.3
100-200만 원 미만	93.2	9.0
200-300만 원 미만	93.3	9.5
300-400만 원 미만	89.9	12.5
400-500만 원 미만	89.0	14.6
500-600만 원 미만	88.5	13.9
600만 원 이상	80.5	26.1

주: 1) 분거비율은 전체 분거가구 중 분거가구원의 거주지역이 국내 또는 국외인 분거가구의 비율임. 한 가구에 여러 명의 가구원이 분거한 경우가 있으므로 합계는 100%를 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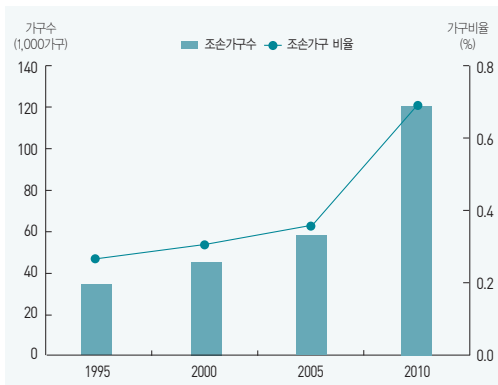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2.

## 조손가족가구의 증가

노인이 중간의 자녀세대 없이 손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면서 함께 거주하는 조손가족가구의 증가 또한 최근 한국 가족구조의 두드러지는 변화이며, 이 또한 지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2010년 현재 조손가족가구는 지난 10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체 가구에서 조손가족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0.7%도 되지 않으나, 그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점과 최근 한국 가족 변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조손가족 형성의 원인으로는 자녀

세대의 이혼 및 재혼이 전체의 53.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한부모 가족이나 재혼 가족이 자녀를 양육하기 쉽지 않은 한국의 사회적 환경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농촌지역의 조손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해체의 결과, 자녀양육을 시골의 노부모에게 이양하게 되면서 농촌지역에 조손가구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는 도시빈곤가족의 문제가 농촌지역으로 전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의 조손가족은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아동의 또래집단 부족, 부모와의 낮은 접근성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림 II-2 조손가구수와 비율, 1995-2010



주: 1) 조손가구는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임.  
2) 조손가구 비율은 일반가구 중 조손가구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한편, 2007년에 수행된 여성가족부의 「조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조손가족 형성 원인에 계층별 차이가 존재한다. 조손가족의 손자녀 양육 사유를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은 조손가구에서

는 양육 손자녀의 부모가 이혼이나 재혼 등으로 인한 양육 포기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에서는 부모의 가출과 실종 등 자녀 방임으로 인한 양육 포기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조손가족은 한국 사회의 문제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으나, 시설에 보내졌을 아동 청소년을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지켜준다는 긍정적 측면 또한 있음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 가족형성의 변화

한국인의 가족형성과 관련된 행동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기서는 결혼이 뒤로 미루어지는 만혼화 경향과 국내입양 및 국제결혼의 증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만혼화 경향과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초혼연령의 증가는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다. 초혼연령은 2000년에 남성 29.3세, 여성은 26.5세에서 2010년에는 남녀 각각 31.8세, 28.9세로 증가하였다. 10년 사이에 남성은 2.5세, 여성은 2.4세 정도 늦춰진 것이다. 1990-2000년 사이에 남성이 1.5세, 여성이 1.7세 늦춰졌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직전 10년에 비하여 더욱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현재 초혼연령은 남성 32.1세, 여성 29.4세로 2년 사이에도 각각 0.3세, 0.5세 높아져 만혼화 경향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OECD 국가들 대부분의 2000년대 초 평균 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30대 초반이다.

초혼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곧 미혼으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20-24세 여성의 경우 2000년에는 89%, 2010년에는 96%가 미혼상태에 있다. 25-29세 여성의 미혼율도 2000년 40%에서 2010년에 69.3%로 크게 상승하였다. 2000년 이후부터는 30대 초반의 미혼율은 2000년 남성 28.1%, 여성은 10.7%에서 2010년 남성 50.2%, 여성 29.1%로 10년 사이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30대 후반 미혼율도 남성의 경우 2000년 10.6%에서 2010년에는 26.7%로 증가하였고, 여성은 같은 기간에 4.3%에서 12.6%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만혼의 경향이 평생 미혼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아직 그리 높지 않다. 50대 후반(55-59세)이면서 미혼으로 남아있는 비율이 2010년 현재 남성의 2.32%, 여성은 1.75%에 불과하여 결국 거의 모두 결혼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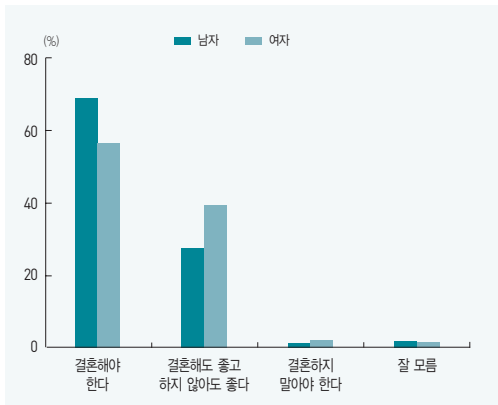
결혼 형성이 지연되고 있는 경향은 인구 1,000명당 연간 혼인자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혼인율은 1990년 9.3명에서 10년 후인 2010년에 6.5명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2012년에도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조혼인율이 하락하고 초혼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현상이지만, 특히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

한 청년실업의 증가와 취업난으로 결혼의 경제적 여건 확보의 어려움이 최근 미혼율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로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감소한 반면, 결혼과 함께 여성들이 짊어지게 될 출산과 양육, 가사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 또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겠다. 결혼하지 않는 미혼인구가 늘어나고 결혼시기가 뒤로 늦추어지는 현상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직결되며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는 요소이다.

이러한 만혼화 경향은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함께 진행되었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가치관은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결혼에 대한 선택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2002년 69.1%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10년 후인 2012년에는 그 비율이 62.7%로 줄어들었고, 결혼을 선택사항이라고 보는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27.2%에서 33.6%로 증가하였다. 제도로서의 결혼에 대한 규범이 약화되고, 결혼이 개인의 선택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태도는 남녀 간에 차이가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2012년 현재 남성의 69.0%, 여성의 56.6%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II-3).



그림 II-3 성별 결혼에 대한 태도, 2012



주: 1) 설문문항은 전국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조사되었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2.

### 이혼율의 변화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의미하는 조이혼율은 1990년대 중반, 특히 IMF 사태로 일컬어지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표 II-4>를 보면 조이혼율은 1990년 1.1건에서 2003년에 3배 이상 증가한 3.4건에 달하게 된다. 조이혼율에 비하여 조금 더 정확한 지표로 여겨지는 유배우 이혼율(유배우자 1,000명당 이혼건수)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상승폭이 매우 커져서 2003년에는 7.2건으로 급증하였다.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던 이혼율은 2004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2004년의 전년 대비 이혼건수는 이혼통계를 공식적으로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고,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모두 2004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표 II-4>에서 보듯이 2012년 한 해 동안 이혼은 114,316건

으로 2009년의 123,999건에 비해 9,683건(-7.8%) 감소하였다. 2012년 조이혼율은 2.3건으로 2009년보다 0.2건 감소하였으며, 유배우 이혼율 역시 0.5건 감소한 4.7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에는 2008년부터 도입된 이혼숙려기간 의무화 및 이혼 전 상담 제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혼숙려제도는 합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기간을 거친 후에 이혼이 가능하게 한 제도이다.

표 II-4 이혼건수와 이혼율, 1990-2012

연도	이혼건수 (1,000건)	조이혼율 (%)	유배우 이혼율 (%)
1990	45.7	1.1	2.4
1995	68.3	1.5	3.2
2000	120.0	2.5	5.3
2001	135.0	2.8	5.9
2002	144.9	3.0	6.3
2003	166.6	3.4	7.2
2004	138.9	2.9	6.0
2005	128.0	2.6	5.5
2006	124.5	2.5	5.3
2007	124.1	2.5	5.2
2008	116.5	2.4	4.9
2009	124.0	2.5	5.2
2010	116.9	2.3	4.8
2011	114.3	2.3	4.7
2012	114.3	2.3	4.7

주: 1)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2) 유배우 이혼율은 유배우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연령별 이혼율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20-30대 연령층에 이혼이 집중되었다면 점차 다양한 연령층으로 이혼이 확산되어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장년층의 이혼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 및 연령별 이혼율을 살펴보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40대 남성의 이혼율이 급상승하여 2012년에는 40대 후반의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 역시 2012년 40대 초반 이혼율이 30대 후반 이혼율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추세는 동거기간별 이혼구성비 추이를 살펴봐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혼이 결혼 후 5년 이내의 부부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결혼 후 15년 이상 된 부부들의 이혼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혼한 부부 중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1990년에는 3.9%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 15.7%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2012년에는 전체 이혼 중 26.4%를 차지하게 되었다. 중년 세대의 이혼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은 부부사이의 결속을 유지시키는 대표적 요인으로 알려진 자녀들이 독립하는 시기라는 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년기 이후의 이혼 증가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맞물려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한편, 감소세를 보이던 5년 미만 동거부부의 이혼 구성비는 2003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 28.4%의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주로 외국인과의 이혼 증가분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 후로는 다시 감소 추세를 보여 2012년 24.6%로 2003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5년 미만 동거부부의 이혼 중 한국인 부부의 구성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한편,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각 또한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2년 실시된 「사회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10%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조사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다. 성별 차이를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이혼에 대해 더 보수적이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이혼을 불행한 결혼에 대한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결혼의 증가

가족형성과 관련하여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괄목할 변화가 바로 국제결혼의 증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전체 혼인의 8.7%가 외국인과의 혼인이며, 이 중 72.9%는 외국 여성과의 혼인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의 소개로 성사되는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결혼이민자의 국적이 더욱 다양해졌다. 특히 농촌총각과 외국여성의 결혼이 증가하면서 농촌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2012년 농림어업종사자의 혼인 중 25.9%가 외국여성과의 혼인이다. 농촌총각들의 혼인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중국,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지의 여성들과 국제결혼을 장려함으로써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국제결혼이 농촌지역에서 급증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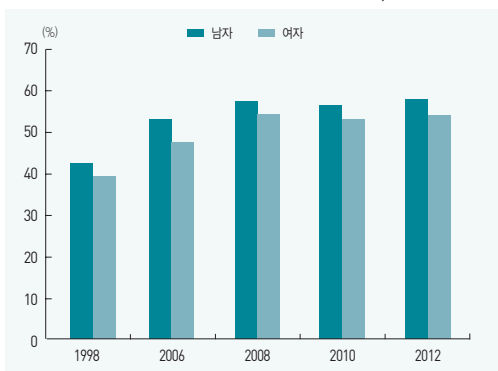
국제결혼의 증가로 한국 사회는 인구학적으로 다인종·다민족화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 가족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생활문화의 차이, 결혼 상대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한국 사회에 대한 오해나 과도한 기대, 빠르게 진행되는 혼인 절차 등에서 야기되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이 증가하여 총 이혼건수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 가족관계의 변화

###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

가족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 10여 년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특기할만한 것은 남성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여성보다 일관되게 높다는 점이다(그림 II-4).

그림 II-4 성별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1998-2012



주: 1) 가족관계 만족도는 전체 조사대상자(전국 15세 이상 가구원) 중 전반적인 가족관계(가족생활 전반)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또는 '약간 만족한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2012년 자료는 전국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가족관계를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이들 모든 관계에서 지난 10년간 '매우 만족' 하는 사람의 비율은 낮아졌지만 '매우 만족' 과 '약간 만족' 을 합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여성의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며느리와 시부모님의 관계)만 제외하고는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 '매우 만족' 하는 사람은 남성 28.8%, 여성 21.0%였으나, 2012년에는 남성 24.6%, 여성 15.3%로 특히 여성의 감소율이 크다.

2012년 「사회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남성의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 및 자녀관계에 '매우 만족' 하는 비율이 모두 36% 내외로 가장 높았다. 반면 여성은 자녀와의 관계에 '매우 만족' 하는 사람이 33.6%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와의 관계에 '매우 만족' 하는 비율은 24.0%로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 '매우 만족'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5.3%로 가장 낮았다.

가족관계 만족도를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부모와의 관계, 전반적 가족관계 모두 나이가 어릴수록 '매우 만족' 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지만, '보통' 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나이가 많을수록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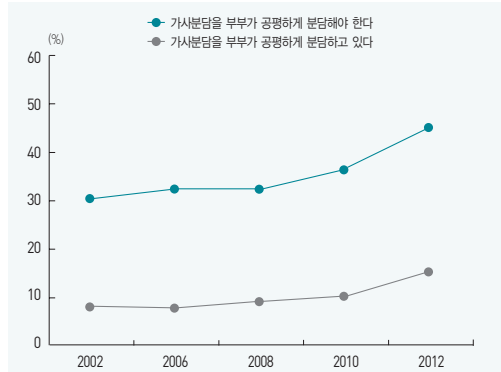


## 가사분담 태도 및 양상의 변화

성역할 분업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변화되고 있어서, 가사를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지난 10년간 남녀 모두 꾸준히 증가하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정도가 높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2002년에 30%를 넘어선 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46%에 육박하고 있다(그림 II-5). 아직도 부인이 가사를 맡아야 한다는 규범이 강하지만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태도도 상당히 일반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실제 가사분담 행동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 실제로 가사를 부부 간에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은 2012년 현재 15.5%에 그치고 약 30%의 가정에서 부인이 전적으로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5]에서는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실제 행동 사이의 간극이 2000년대 후반에

그림 II-5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실태, 2002-2012



주: 1)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는 전체 조사대상자(전국 15세 이상 가구원) 중 부부간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012년 자료는 전국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  
2)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는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부부 중 부인이 응답한 결과로, 이들 중 평소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들어서면서 오히려 커지는 추세를 보여준다. 그렇지만 부인이 전적으로 가사를 맡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15%p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부부 간 가사의 공평한 분담은 태도 변화만큼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남성의 가사 참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2

## 세대관계의 변화

한경혜(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요 약

- 수명연장으로 노부모의 생존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초고령의 노부모를 가진 중·노년 자녀의 비율이 높아졌다.
- 주거선택, 노부모 부양, 경제적 지원제공에 있어서 아들, 장남을 중시하는 직계가족 규범이 약화되었다.
- 전화통화와 대면접촉을 통한 노부모와의 교류는 늘어나고 있으며,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세대 간 교류가 활발하다.
- 노부모와의 관계의 질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세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한 사회의 성인자녀와 노부모 간 세대관계는 일반적으로 거주공간의 공유 여부, 접촉 빈도, 세대 간 교환되는 지원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관계만족도로 파악된다. 수명연장, 지리적 이동성의 증가, 가족규범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에서 성인자녀와 노부모 간 세대관계가 크게 변하였다. 무엇보다도, 수명의 연장으로 자녀세대의 연령이 상당히 높을 때까지 노부모가 생존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2년 현재 30대의 95%, 40대의 82%, 50대의 절반 이상이 생존한 노부모가 있다. 60대의 경우도 열 명 중 한 명은 노부모가 생존해 있다. 수명연장으로 세대 간 '관계수명'이 연장되었음을 의미한다. 관계수명의 연장은 중년기 및 노년기의 자녀 세대에게는 노부모 부양의 부담을 초래하고 노부모에게는 자녀세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라는 문제를 유발한다. 물론 관계수명의 연장을 상호유대와 지지교환 기회의 확장으로 보는 낙관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 세대관계 변화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가구구성 또는 세대 간 거주공간의 공유, 세대 간 지원교환,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 및 부모자녀관계 만족도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통계청 「사회조사」의 1998-2012년 자료를 사용하여 미혼이 아닌, 즉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기혼자, 사별자, 이혼자)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사회조사」는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지만 부모의 생존이나 부모거주유형 등에 대한 질문은 가구주와 그 배우자만 응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구주 혹은 가구의 배우자에 대한 자료만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 거주공간의 공유

먼저 노부모와 자녀 세대의 거주공간의 공유, 즉 가구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노인부부가구나 노인독거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바 있다.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들의 경우에도 함께 사는 자녀가 누구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발견된다. 장남과 동거하는 노부모의 비율이 지난 10년간 약 50% 이상 감소한 반면, 딸과의 동거는 약간 증가하였다. 장남 이외의 아들과의 동거도 감소하였지만 그 폭이 장남과의 동거만큼 크지는 않다(그림 II-6).

노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자녀의 연령집단 간 거주공간 공유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장남, 혹은 차남 이하의 아들과 동거하는 비율이 높고 부모만 따로 사는 비율은 낮다. 이러한 경향은 1998년에서 2012년까지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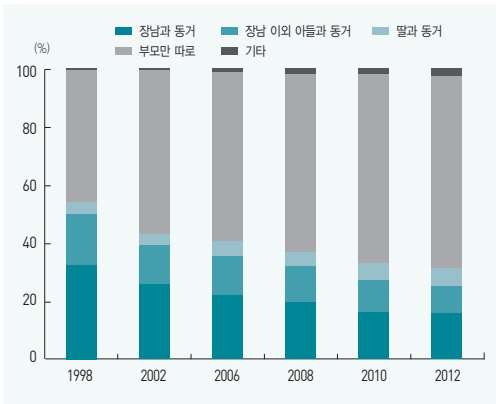
의 유사하다. 특기할 만한 것은 최근 5년 동안에 자녀의 연령이 높은 경우 부모가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과 거주하거나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자녀들도 나이가 들면서 간병이나 요양 수발을 들기가 어려워 다른 대안을 찾은 결과로 보인다.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부모들이 장남이나 차남 이하의 아들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낮고 부모만 따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경향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일관되게 관찰된다.

## 성인자녀와 노부모 간 지원교환

성인자녀와 부모 간 지원교환은 정서적 지원교환과 경제적 지원교환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정서적 지원교환 수준을 전화접촉 및 대면접촉을 통해 살펴보면,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생존해 있고 부모와 현재 동거하지 않는 성인자녀들의 경우, ‘거의 매일’ 혹은 ‘1주일에 한두 번’ 전화통화를 하는 비율이 2008년, 2010년, 2012년 모두에서 50-60%로 높은 편이며, 이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편, 부모와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만나는 비교적 잦은 대면접촉의 비율(거의 매일, 1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은 2008년 57.8%에서 2010년 61.8%, 2012년 63.4%로 그 변화 폭은 크지 않으나 증가 추세에 있다(표 II-5).

그림 II-6 노부모의 거주유형별 구성비율, 1998-2012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표 II-5 성인자녀와 노부모 간 접촉빈도, 2008-2012 (%)

	거의 매일	1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년에 몇 번	거의 하지 않음
<b>전화통화</b>					
2008	13.9	43.3	35.0	5.3	2.4
2010	15.9	44.7	32.0	4.8	2.6
2012	17.1	45.9	29.1	4.9	3.0
<b>대면접촉</b>					
2008	5.2	14.8	37.8	40.4	1.8
2010	5.6	17.3	38.9	36.0	2.2
2012	6.0	18.2	39.2	34.3	2.3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부모와의 전화 접촉이 더 많아진다.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부모와 전화통화를 ‘거의 매일’ 혹은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자주 하는 비율은 높고, ‘1년에 몇 번’ 혹은 ‘거의 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다. 교육수준이 높은 자녀들이 부모와의 대면 접촉도 더 빈번하게 하고 있다.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1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비율은 높은 반면, ‘1년에 몇 번’ 만나는 비율은 낮다.

다음으로 자녀와 부모 세대 간 경제적 지원교환에 대해 살펴보자. 2012년 현재 부모 세대의 절반이 스스로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아들이나 딸 등 자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부모 스스로 생활비를 책임지는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다(그림 II-7).

아들이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낮아지는 반면, 아들과 딸들이 함께 부양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2012년만을 따로 살펴보면 부모부양을 자녀가 책임

그림 II-7 노부모 경제적 부양자, 2002, 2012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지는 경우, 모든 자녀들이 책임지는 비율이 가장 높는데 이는 장남과 아들이 책임지는 비율을 합한 것보다 더 높다.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이 아들 의존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자녀의 연령에 따라 노부모 생활비 부담 주체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관찰된다.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들이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비율이 높아지며, 그 중에서도 장남을 포함한 아들이 책임지는 비율이 높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연령이 높을수록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생계비를 부담하는 공동책임의 비율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노부모가 고연령에 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비나 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늘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수준별로 노부모 생활비 부담 주체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부모 생활비를 부모 스스로 책임지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자녀들이 책임지거나 장남 및 다른 아들이 책임지는 비율은 낮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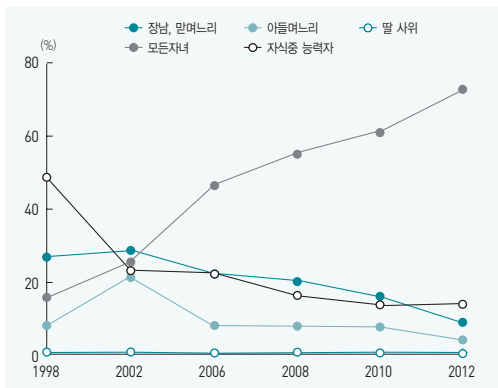


##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과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부모의 노후 생계는 주로 누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가족의 단독 책임보다는 가족, 정부, 사회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2년에는 가족의 책임이라는 응답과 가족, 정부,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응답이 각각 72.3%와 16.4%이던 것에 비해, 2012년에는 가족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31.7%로 40%p 이상 감소하였고 가족, 정부, 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47.5%로 30%p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II-8]은 노부모의 생계는 가족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족구성원 중 누구의 책임인지를 질문한 조사결과를 보여 준다. 장남이나 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

그림 II-8 가족 내 노부모 경제적 부양 책임자에 대한 태도, 1998-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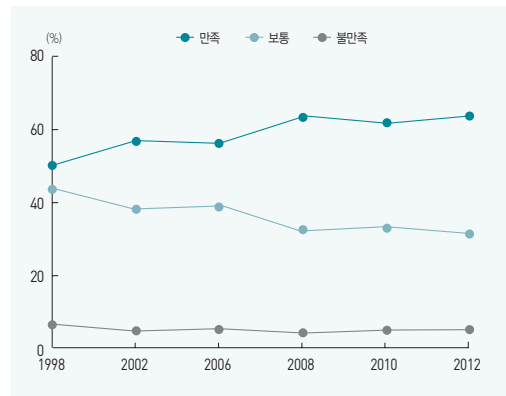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는 비율은 감소하였고, 모든 자녀들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증가하였다. 전통적 가족규범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입장에서 노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매우 만족 + 약간 만족)는 응답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그림 II-9).

그림 II-9 노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1998-2012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자녀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다.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일관되게 관찰되는 경향이다. 한편, 부모자녀관계 만족도는 자녀의 교육수준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에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 03

## 자녀돌봄 시간의 변화

차승은(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 요 약

- 한국에서 자녀를 둔 부모가 1주일 동안 자녀 돌봄에 투여하는 시간은 1999년에 5.5시간, 2009년에 6.6시간이었다. 같은 기간 출산율은 떨어졌지만 부모가 자녀돌봄에 투입한 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자녀양육기인 30~40대 연령층에서는 지난 10년간 자녀돌봄 시간이 증가하였지만, 50대 이후 중·고령층이 18세 이하 가구원 혹은 손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은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녀돌봄에 투입하는 시간이 더 많다.
- 취업모와 전업주부 간 자녀돌봄 시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시기는 자녀가 영유아기일 때이다. 자녀를 보육 기관에 맡길 수 있는 연령 이후에는 취업모와 전업주부의 자녀에 대한 감독(supervise)과 돌봄(care)을 수행하는 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
- 한국 부모의 주당 자녀돌봄 시간은 선진국에 비해 평균 2~3시간 정도 짧다. 최근으로 오면서 자녀돌보기를 수행하는 아버지들이 많아지기는 하였으나, 남성의 자녀돌봄 시간은 여성의 1/5 수준이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큰 편이다.

우리는 성인 두 명이 한 명의 자녀를 낳는 것이 보편화 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성인의 삶에서 어린 자녀를 돌보면서 부모역할을 하게 되는 기간이 자녀를 여러 명 낳을 때 보다 짧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성인의 생애에서 부모역할의 의미와 비중은 감소하고 있을까? 짧아진 자녀양육 기간에도 불구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여전히 매우 높다. 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과 센터의 역할이 커진 상황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해 갖는 부담은 줄지 않았다. 한편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녀의 곁에서 맴도는 ‘헬리콥터 부모’, 그리고 그러한 부모 옆에서 부모에 의존적인 ‘갱거루 자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 글에서는 초저출산 경향이 자리 잡기 시작한 1990년대 말부터 2009년까지 한국의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자녀(혹은 손자녀)를 돌보는 데 투입한 정성과 노력을 시간사용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이 수행한 1999년과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자료에 포함된 표본들 중에서 18세 미만의 자녀 혹은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응답자가 작성한 시간일지 자료가 분석 대상이다. 이 글에서 자녀란 가구주 입장에서 18세 미만 자녀이거나 혹은 시간일지를 작성한 응답자가 돌본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을 뜻한다. 자녀돌봄 시간이란 응답자의 시간일지 상에 미취학자녀와 초·중·고등학생의 돌보기 시간의 총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미취학자녀의 경우 신체돌보기(씻기기, 먹이기 등),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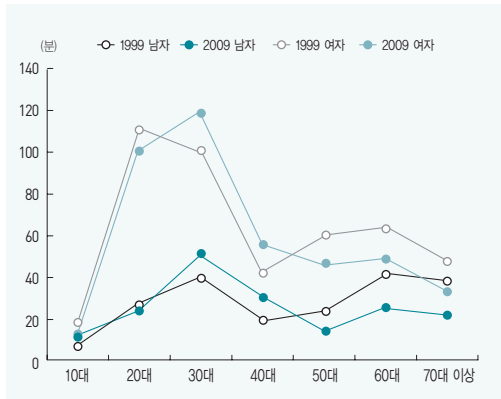


읽어주기 및 놀아주기, 공부봐주기, 학교행사참여 및 상담시간의 총합을 산출하였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등·하교 도와주기, 간호, 공부봐주기, 학교행사참여 및 상담, 기타 자녀 관련 돌봄 행동 시간의 총합으로 산출하였다.

### 자녀돌봄 시간의 변화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따르면, 10세 이상 가구원이 하루 평균 소요한 자녀돌봄 시간은 1999년에는 20.91분, 2009년에는 22.21분으로, 연도에 따른 증가분은 약 2분여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성이나 연령 집단 간 차이를 구분하지 않은 수치이다. [그림 II-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과 연령별로 하루 평균 자녀돌봄 시간을 살펴보면, 여성은 자녀돌봄 시간이 상승하는 30대 연령층에서 자녀돌봄 시간이 지난 10년간 100분에서 120분으로 약 20분가량 증가하였다. 남성 역시 30대 연령층의 자녀돌봄 시간이 1999년에는 평균 38분에서 2009년에는 50분으로 얼마간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30대에 나타나는 증가 경향성과는 달리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남녀 모두 하루 평균 자녀돌봄 시간이 지난 10년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1999년에는 남녀 모두 연령별 자녀돌봄 시간이 느슨한 M자형에 가까운 변화를 나타낸 것과 비교해서, 2009년 자료에서는 30대에만 자녀돌봄 시간이 높게 솟구치고 이후 급격히 낮아지는 U형태가 더 명료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10 성 및 연령별 일평균 자녀돌봄 시간, 1999, 2009



주: 1) 10세 이상을 분석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각 년도.

이렇듯 30-40대 자녀양육기에 하루 평균 자녀돌봄 시간이 늘어난 이유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실제로 부모들이 자녀돌보기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자녀를 직접 돌보는 부모의 수(비율)가 많아져서 즉, 자녀돌보기 참여율이 높아져서 전체적으로 자녀돌봄 시간이 길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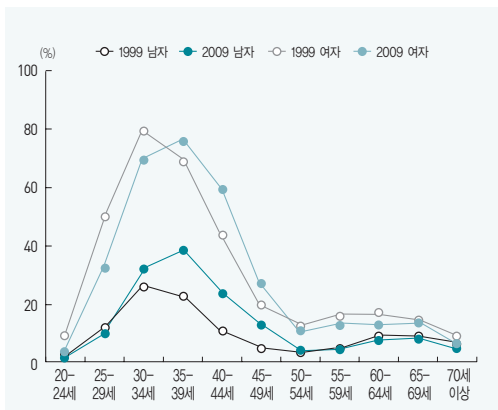
[그림 II-11]에서는 실제로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증가 혹은 감소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대를 20대 이상으로 한정하고, 시간일지를 작성한 당일 응답자가 적어도 10분 이상 해당 자녀돌보기를 했는지의 여부(행위자 비율)를 파악하여, 이를 성 및 연령별로 제시하였다.

남성의 경우, 1999년과 비교해서 2009년에 30-40대 남성의 자녀돌봄 수행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예전에 비해 더 많은 젊은 아빠들이 직접 자녀를 돌보는 행위에 참여하



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50~60대 중·고령 남성의 경우, 자녀돌봄 참여율에서는 시기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II-11]에 나타나는 여성의 참여율을 보게 되면, 앞서 살펴본 남성의 경우와 유사하다. 30대 중반에서 40대에서는 자녀돌보기를 수행하는 여성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50~60대 연령층의 여성이 어린 가구원을 돌보는 비율은 2009년에 크게 낮아졌다.

그림 II-11 성인의 성 및 연령별 자녀돌봄 참여율, 1999, 2009



주: 1) 자녀돌봄 참여율은 20세 이상 성인 중 1일 10분 이상 자녀돌보기를 한 성인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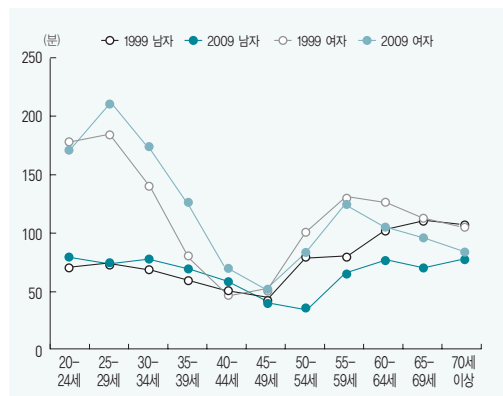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각 년도.

[그림 II-12]에서는 실제 자녀돌봄 투입시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시간일지를 작성한 당일 적어도 10분 이상 자녀돌보기를 수행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하루 평균 돌봄시간을 산출하였다. 이때, 자녀가 있어도 당일 자녀를 돌보지 않은 사람들은 제외하였다.

분석결과, 30~40대 남녀의 경우 하루 평균 자

녀돌봄 시간은 1999년에 비해 2009년에 증가하였다. 특히 자녀돌보기를 하는 여성의 경우, 1999년의 30~34세 여성보다 2009년에 동일 연령대의 여성이 자녀 돌보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다. 자녀돌봄 행위를 수행한 남성들이 투여한 자녀돌봄 시간을 보게 되면, 양육기 자녀를 둔 30대 남성이 자녀를 돌보는데 투여한 시간은 지난 10년간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율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자녀돌보기를 실제로 수행하는 남성들이 투여한 시간은 거의 늘어나지 못했음을 말한다. 한편 고령자 집단에서는 남녀 모두 1999년에 비해 2009년에 이르면 자녀돌봄 행위시간이 감소하였다. 행위비율과 연결해서 해석한다면, 50대 이상 고령층은 지난 10년간 어린 자녀를 돌보는 비율도 낮아졌고, 실제로 투여한 자녀돌봄 시간도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12 자녀돌봄 참여자의 성 및 연령별 일평균 자녀돌봄 시간, 1999, 2009



주: 1) 20세 이상 성인 중 당일 10분 이상 자녀돌보기를 수행한 응답자의 평균시간임.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각 년도.





[그림 Ⅱ-11]과 [그림 Ⅱ-12]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30-40대 여성집단에서는 지난 10년간 자녀돌보기를 수행한 사람과 돌봄시간이 모두 증가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30-40대 남성은 자녀돌봄 참여율은 높아졌으나 자녀돌보기에 사용한 시간은 지난 10년간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지난 1999년에 합계출산율이 이미 1.72명으로 대체출산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나, 2009년에는 그 수치가 더 떨어져서 1.22명의 수준을 기록하였다. 지난 1999년과 비교해 볼 때, 출산시기도 늦어졌고 더 적은 수의 자녀를 돌보고 있으며 자녀돌보기를 직접 수행하는 부모의 비율이 높아졌음을 말해준다. 이는 1999년 이후 점진적으로 시행된 주5일제로 인해 여가시간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주말 개념이 명확해지고, 캠핑이나 여행문화가 성황을 이루듯 가족여가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1999년과 비교해 볼 때 2009년에는 중·고령 남성과 여성 모두 어린 가구원을 돌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많아져 어린 가구원과 동거하는 경우가 적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어린 자녀 혹은 어린 가구원의 돌봄시간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출산율 하락으로 노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를 보게 되면,

어린자녀를 돌보는 행위나 시간은 생애과정 어느 한 시기(30-40대)에 집중되고, 그 이후에는 사라지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자녀돌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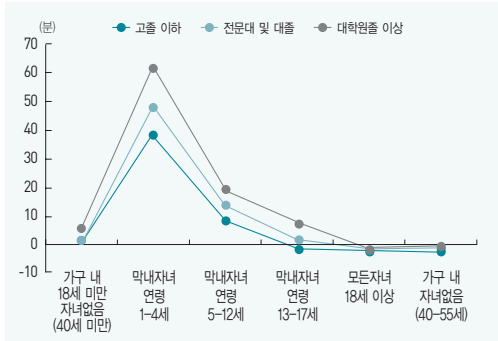
그렇다면, 어떤 부모가 자녀돌보기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입할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연령별 시간사용 분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자녀돌보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20세에서 55세 사이의 남녀로 한정된 후, 이들의 자녀돌봄 시간을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그림 Ⅱ-13]은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남녀의 교육수준별 하루 평균 자녀돌봄 시간을 추정한 결과이다.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돌봄 시간도 늘어나는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남성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남성의 자녀돌봄 시간은 급격히 줄어들지만,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들은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어도 다른 집단들에 비해 여전히 자녀돌봄 시간이 많은 편이다.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남성만큼 두드러지지는 않았으나, 대학원 이상 고학력 여성들의 자녀돌봄 시간이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길고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시기까지 지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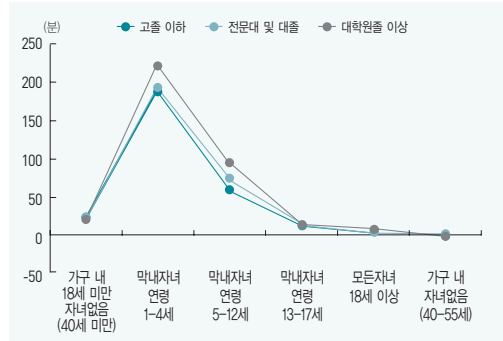
남녀 모두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더 오랜 기간 동안 자녀돌봄에 투입

그림 II-13 성인의 성 및 교육수준별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일평균 자녀돌봄 시간 추정치, 2009

1) 남자



2) 여자



주: 1) 20-55세 이상 성인을 분석대상으로 함. 일평균 자녀돌봄 시간은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값임.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2009.

하고 있는 것이다. 자녀돌보기에서 이렇듯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경제학 용어를 빌리자면, 자녀돌봄이 교육계층 상으로 사치재(luxury goods)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일정한 계층 이상만 획득할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행위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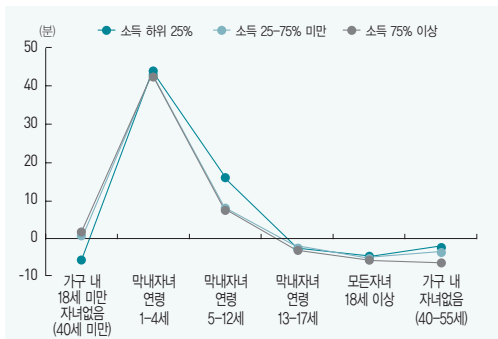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보다는 복잡한 양상을 띤다. 남성의 경우 소

득수준 집단별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자녀의 나이가 5-12세일 때 중상층에 속하는 남성들의 자녀돌봄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경우, 고소득층 여성의 자녀돌봄 시간이 다른 소득계층 여성들보다 오히려 짧다(그림 II-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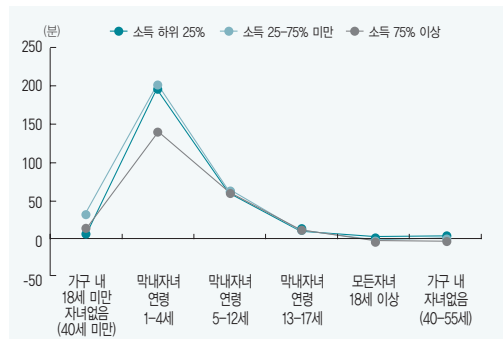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자녀돌봄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이들이 자녀가 어린 시

그림 II-14 성인의 성 및 소득수준별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일평균 자녀돌봄 시간 추정치, 2009

1) 남자



2) 여자



주: 1) 20-55세 이상 성인을 분석대상으로 함. 일평균 자녀돌봄 시간은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값임.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2009.



기에 자녀돌봄에 있어 대안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즉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소득층에서만 어린 자녀의 양육을 아웃소싱하고 있다는 것은 자녀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데 필요한 비용이 중하층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녀가 5세 이상의 학동기에 접어들면, 소득계층별 어머니들의 자녀돌봄 시간 격차가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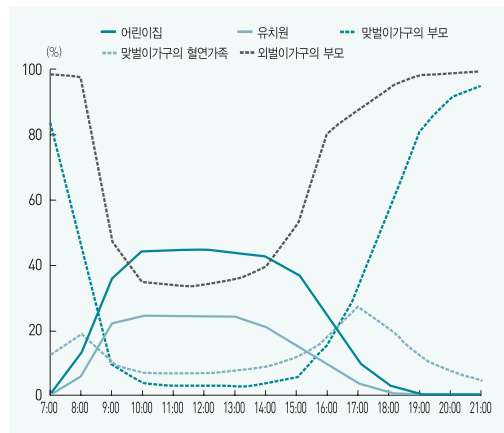
### 가족과 보육기관의 자녀돌봄 시간

지난 1990년대와 2000년에 들어서 나타난 돌봄 환경의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아동을 돌보는 기관과 센터가 급격히 증가한 점일 것이다. 그리고 돌봄의 탈가족화 과정은 여성의 취업과 가장 강한 관련성을 갖는다. 이에 여기에서는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녀돌봄 시간을 살펴보았다.

지난 2000년 이후 보육 관련 기관과 시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혹은 사설교육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림 II-15]는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보육시간대에 관한 내용을 그래프로 재구성한 것이다. 2012년에 전체 아동(0-5세)의 70%가량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혹은 사설기관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이 보내는 시간을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이 평균 8-9시간이며, 유치원은 어린이집보다 적은 5-6시간 정도이다. 취업모의 아동은 어린이집 돌봄시간과 가족 돌봄

시간이 밀접하게 연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아동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 자녀돌봄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출근 전 1시간 남짓 그리고 퇴근(어린이집 하원) 후 3-4시간 정도이다. 반면, 외벌이 가구 중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30%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기관보육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외벌이 가구의 아동들은 종일반 보다는 반일반이나 2-3시경에 하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II-15 가족 및 보육기관 유형별 아동돌봄 시간대, 2012



주: 1) 아동은 0-5세 기준임.

출처: 보건복지부,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 2012.

그렇다면, 자녀돌봄은 모두 부모의 몫인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육기관과 어머니의 출퇴근 시간을 연결하는 혈연집단의 도움(아동의 조부모나 기타 혈연)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부모의 출퇴근 시간 전후로 아동을 돌보는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간제 학원에 다니는 아동이 5세의 경우 거의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 비율은 급격히 늘어난다. 이러한 시간제 학원은 기관보육이 끝나는 2-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며, 일부에서는 보육기관을 대신하여 시간제 학원이 종일보육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벌이 가족에서는 반일제 보육 및 교육이 끝나고 2시 이후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취업모 아이들이 반일제 이상 보육기관 및 교육기관까지 합하여 다니는 시간은 평일 하루 평균 6시간 34분, 전업주부나 휴직상태에 있는 여성의 자녀는 평일 하루 평균 6시간 20분으로 실제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취업모가 전업주부에 비해 자녀돌봄 시간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시기는 영유아기에 두드러진다. 그러나 자녀를 보육기관에 맡길 수 있는 연령 이후에는 자녀가 보육 및 교육 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취업모와 전업주부의 자녀돌봄 시간의 차이가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자녀돌봄 시간 국제비교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돌봄에 투여하는 시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긴 것일까? 혹은 더 짧은 것일까? <표 II-6>은 국가별 자녀돌봄 시간을 비교한 결과이다. 여기에서는 주당 평균 자녀돌봄 시간을 산출하였다. 이 표에 나타난 자녀돌

봄 시간의 수치들은 Guryan 등(2008)이 발표한 국가별 자녀돌봄 시간에 대한 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들이 사용한 자료는 Multination Time Use Study(MTUS)이다. 이 자료는 각국의 시간일지 자료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구조로 재구성한 것이다. Guryan 등(2008)의 연구에서는 자녀돌봄이 이루어지는 21-55세로 연령을 한정하였고, 교육수준, 소득, 요일, 취업여부 등이 통제된 상태에서 각국 부모들의 하루 평균 자녀돌봄 시간을 추정하였다. 제시된 주당 자녀돌봄 시간은 하루 평균 자녀돌봄 시간을 산출한 후 7을 곱한 결과이다. 한국 부모의 자녀돌봄 시간도 동일한 방법을 통해 하루 평균 돌봄시간을 추정하였고, 이용된 자료는 1999년과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이다.<sup>1)</sup>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부모만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사이에 자녀돌봄 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난 국가는 미국(8.93시간)이며, 그 다음이 노르웨이(8.88시간)로 모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국가들이다. 국민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들은 주당 평균 9시간 가까이를 자녀돌봄에 할애하고 있었고, 그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캐나다나 오스트리아 부모도 자녀를 돌보는 데 8시간 이

1) 앞서 부모의 하루 평균 자녀돌봄시간은 1999년에 20분, 그리고 2009년에는 약 22분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10세 이상 모든 연령이 가구 내 18세 미만 아동을 돌본 시간을 대략적으로 제시한 수치이다. 부모의 연령을 21-55세로 한정하고, 성이나 연령을 비롯한 주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요일을 통제한 후의 자녀돌봄 시간은 1999년에 47분, 그리고 2009년에는 56분으로 나타났다. 국제비교에서는 이렇게 관련 요인들을 통제한 후 추정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상을 쓰고 있었다. 다만, 여러 나라들 가운데 프랑스만은 유독 부모들의 자녀돌봄 시간이 적었다. 1999년에 한국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주당 평균 5.5시간이었고, 한국과 유사한 수준인 국가로는 1999년 당시 1인당 국민소득 상으로 중진국이었던 슬로바니아가 있다(표 II-6). 2009년에 이르면 한국도 주당 자녀돌봄

시간이 6.6시간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1인당 국민 소득으로 볼 때 2만 달러 안팎인 에스토니아나 네덜란드와 유사한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1999년에 자녀들 둔 남성이 자녀 돌봄에 사용한 시간은 주당 1.5시간, 여성은 주당 9.1시간으로 남녀 격차가 1:6의 비율로 나타났다. 2009년에 이르렀을 때, 남녀 모두 자녀돌봄에 투여하는 시간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성별 돌봄시간의 비율은 1:5 정도로 나타났다. 주당 자녀돌봄 시간이 남녀 합하여 평균 5시간으로 한국과 유사 수준을 나타낸 중진국(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수준)에서 성별 돌봄시간 격차가 1:3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볼 때, 한국 사회에서 관찰되는 성별 자녀돌봄 시간의 간극(1:5)은 그 차이가 다소 큰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득수준이 우리보다 높은 미국이나 노르웨이의 경우를 보게 되면, 남녀의 자녀돌봄 시간 비율이 1:2의 수준으로 나타난다.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남성이 자녀돌보기를 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제 비교 결과는, 한국의 소득수준이 앞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자녀돌봄에서 남녀 격차가 줄어들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II-6 주요 국가의 주당 자녀돌봄 시간

국가	1인당 국민소득 (달러)	주당 자녀돌봄 시간		
		전체	남자	여자
미국 (2003-2006)	34,300	8.93	5.62	11.64
노르웨이 (1990-1992)	37,200	8.88	5.68	11.70
캐나다 (1998-2005)	23,600	8.56	5.61	11.20
오스트리아 (1992)	23,900	8.33	3.57	12.27
이탈리아 (2002-2003)	19,000	7.32	4.03	10.37
독일 (1991-1992)	23,100	7.25	3.87	10.49
영국 (2000-2001)	24,500	7.23	4.17	9.83
네덜란드 (2000)	24,200	6.83	4.36	8.91
에스토니아 (1999-2000)	4,100	6.64	2.97	9.37
<b>한국 (2009)</b>	<b>19,000</b>	<b>6.60</b>	<b>2.47</b>	<b>10.37</b>
팔레스타인 (1999)	1,200	6.38	2.09	12.35
칠레 (1999)	4,900	5.65	2.69	7.90
<b>한국 (1999)</b>	<b>9,700</b>	<b>5.53</b>	<b>1.54</b>	<b>9.10</b>
슬로바니아 (1999)	9,700	5.03	2.75	7.21
프랑스 (1998-1999)	21,800	4.43	1.82	6.83
남아프리카 (2000)	2,900	4.03	0.60	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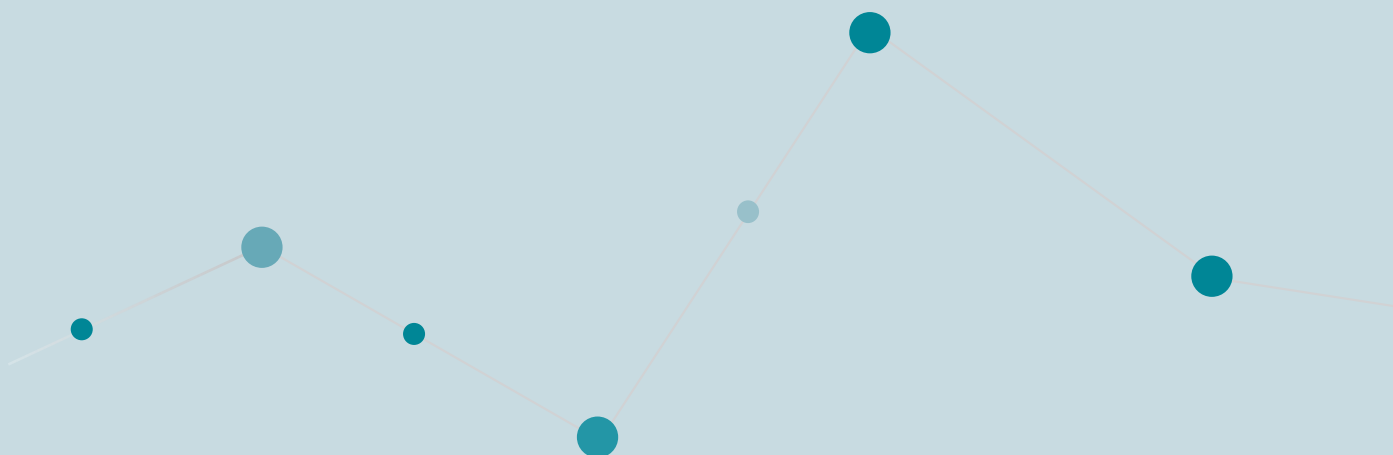
주: 1) 자녀가 있는 21-55세의 부모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각 년도; Guryan 외(2008).

## 참고문헌

Guryan, Jonathan, Erik Hurst, and Melissa Kearney. 2008. "Parental Education and Parental Time with Childre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 [ KOREAN SOCIAL TRENDS 2013

## 한국의 사회동향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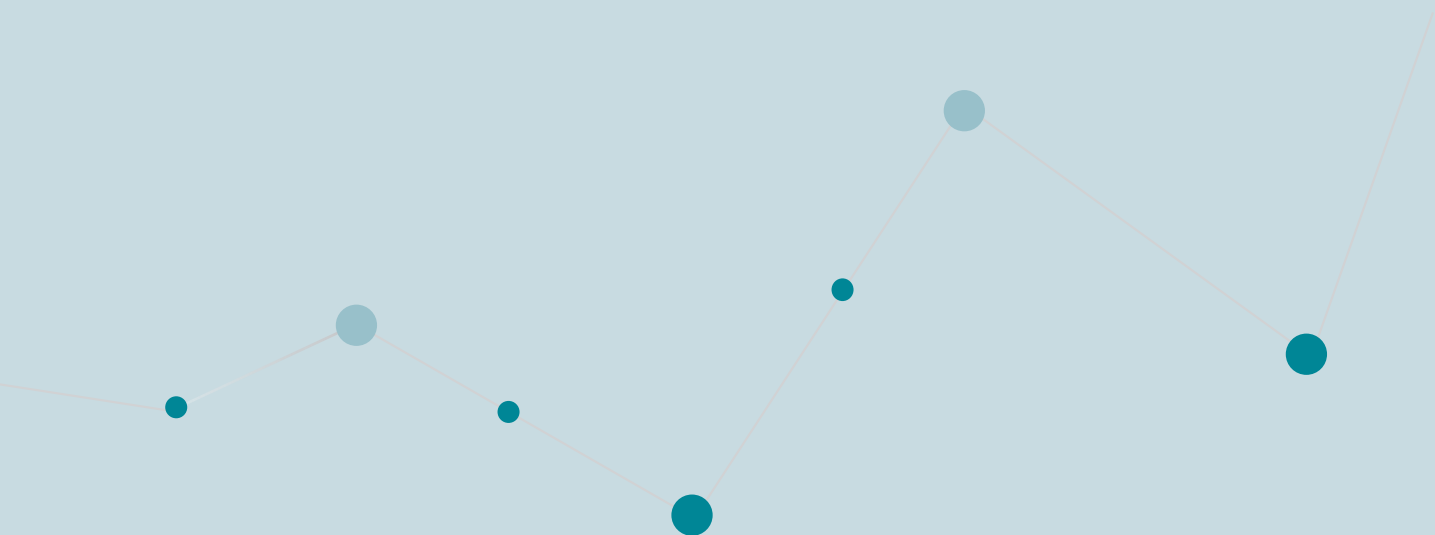


# STATISTICS KOREA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 Ⅲ 건강 Health

- |                   |                |           |
|-------------------|----------------|-----------|
| 01 건강 영역의 주요 변화   | 조병희   서울대학교    | <u>62</u> |
| 02 건강검진의 추이와 실천요인 | 조성일   서울대학교    | <u>73</u> |
| 03 음주수준과 건강과의 관계  | 김광기   인제대학원대학교 | <u>79</u> |
| 04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 장세진   연세대학교    | <u>87</u> |





## 01

건강 영역의  
주요 변화

조병희(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요 약

-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OECD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주관적 건강상태는 크게 미달된다.
- 흡연율과 음주율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며 비만율도 높아지고 있다.
- 한국인의 의료이용 수준은 높고 국민의료비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체계 성과가 낮고 의료만족도도 낮다.

건강 영역의 주요 변화는 국민의 건강상태, 건강결정요인 및 보건의료체제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건강상태 영역에서는 국민의 건강 수준을 살펴볼 것이다. 평균수명, 주관적 건강인식, 주요 질환의 유병률 및 사망률 등이 주요 지표가 된다.

둘째, 건강결정요인 영역에서는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만성질환이 주요 건강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만성질환에 큰 영향을 주는 흡연, 음주, 비만, 운동실천 등의 행태가 주요 지표 항목이 된다.

셋째, 보건의료체계 영역에서는 건강관리와 질병치료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요소들을 다룬다. 의료인력과 시설, 의료비지출의 규모와 재원, 예방서비스 이용, 의료서비스 만족도 등이 주요 지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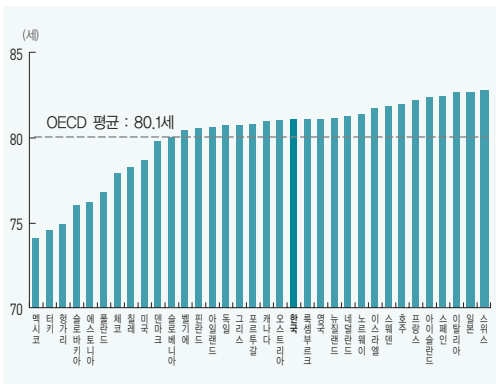
## 건강과 질병

반세기 전만 하여도 전염병 발생이 주요 건강 문제였고 질병(전염병)의 치료는 곧 건강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제 만성질환이 주요 건강문제가 되고 있고, 만성질환은 근본적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건강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흡연이나 비만과 같은 건강 위험 요인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또한 우리의 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까지 달성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즉 신체와 정신과 이를 둘러싼 사회 환경이 모두 다 '웰빙(well-being) 상태'에 있는 것이 건강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기본적 지표는 평균수명 또는 기대수명을 들 수 있다. 건강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이라고 할 때 평균수명이 길고 짧음은 인구집단의 사회적 역능성의 기본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균수명은 1971년에 62.3세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89년에 70세를 넘어섰고, 2012년에는 81.4세가 되었다. 2011년 OECD 국가들의 평균치 80.1세보다 약 1세가 높은 것이다.

그림 Ⅲ-1 OECD 국가의 평균수명,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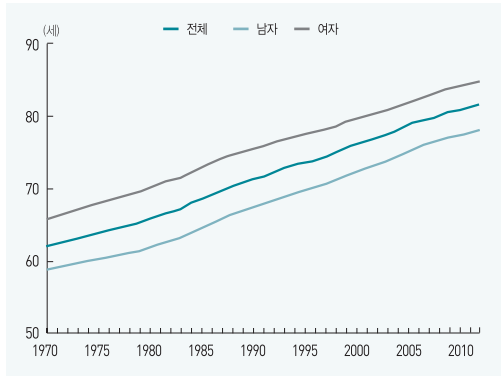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13, 2013.

성별로는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길다. 1971년에 남자 58.9세, 여자 66.0세로 남녀 간에 7.0세 격차가 났고, 이후 매년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에는 남자 78.0세, 여자 84.6세로 증가하여 남녀 간 수명 차이는 6.6세가 되었다. 여자의 수명이 여전히 길지만 그 격차는 약간 감소한 것이다(그림 Ⅲ-2).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긴 것은 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출산율이 감

그림 Ⅲ-2 평균수명, 1970-2012



출처: 통계청, 「생명표」, 각년도.

소하고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가 개선되면서 모성 사망의 위험이 크게 감소한 점이나, 산업화 이후 남자들이 위험한 일이나 장소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이 남녀 간 수명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평균수명은 단순히 기대수명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의 질적 측면을 충분히 표현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노령화에 따라 일상적 활동의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인구가 많아 지거나 또는 만성질환으로 신체적 기능의 제한을 받거나 외병상태에 있는 인구집단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인구집단의 건강상태의 질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표가 건강수명이다. 건강수명은 평균수명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하는 World Health Statistics 2009에 의하면 2007년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71세로 평균수명과 약 8세 차이가 난다. 같은 해에 일본의 경우 평균수명은 83세이고 건강수명은 76세로 약 7세의 차이가

난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도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차이는 대략 7-8세이다.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는 '주관적 건강상태'이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는 만큼 건강구조 또한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고, 이를 객관적 지표로 다 담아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총체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건강상태에 대한 더 정확한 측정일 수도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03년에 42.9%, 2006년 44.6%, 2008년 51.5%, 2010년 46.8%, 2012년 44.3%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다소 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50%를 넘지 못한다. 이 수치는 2010년 OECD 평균 주관적 건강 인식 69.8%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평균수명은 선진국 수준이 되었지만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는 선진국 평균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즉, 많은 한국인들은 건강불안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질병상태의 총괄지표는 유병률인데 대개 조사시점 이전 2주 동안 질병상태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로 측정되는 '2주간 유병률'을 사용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2주간 유병률은 20% 내

외이고 남자보다는 여자의 유병률이 일관되게 높다(표 Ⅲ-1).

사망률은 남자가 높지만 유병률은 여자가 높은 것은 선진 산업사회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리고 2011년에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은 비율인 '활동제한율'은 9.1%이었다.

다음으로 주요 질환의 유병률을 살펴보자. 만성질환 중 대사성 질환인 당뇨병과 고혈압 유병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당뇨병 유병률은 만 30세 이상으로 공복혈당이 126mg/DL이거나 의사의 진단 또는 혈당강하제를 복용하는 경우의 백분율로 측정되는 데, 2005년 9.1%에서 매년 약간씩 상승하여 2011년 9.8%에 이르고 있다. 고혈압 유병률은 만 30세 이상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혈압강하제를 복용하는 경우의 백분율로 2005년 28.0%에서 2007년 24.6%로 낮아졌다가 이후 계속 상승하여 2011년 28.5%가 되었다. 30세 이상 성인의 약 1/3이상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갖고 있는 것이다(그림 Ⅲ-3).

당뇨병 유병률의 증가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11년 OECD 보건통계에 의하면, 2010년에 EU 국가들의 20-79세 성인 인구의 약 6%가 당뇨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평균은 6.5%였다. 한국은 7.9%로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또한 2009년 OECD 보건통계에 의하면, 1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고혈압으로 인한 입원자수는

표 Ⅲ-1 2주간 유병률, 2003-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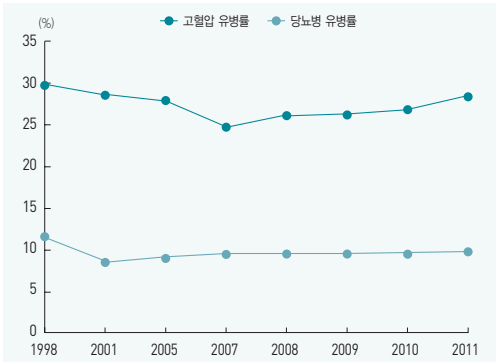
	2003	2006	2008	2010	2012
전체	20.8	19.5	17.5	20.7	24.1
남자	17.1	16.5	14.9	17.1	21.2
여자	24.5	22.4	20.0	24.2	26.9

주: 1) 유병률은 0세 이상 인구 중 조사시점 기준 지난 2주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적이 있었던 인구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Ⅲ-3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률, 1998-2011



주: 1) 고혈압 유병률은 만 30세 이상 인구 중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임.  
 2) 당뇨병 유병률은 만 30세 이상 인구 중 공복혈당치가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 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 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임.  
 3) 각 유병률은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1 국민건강통계」,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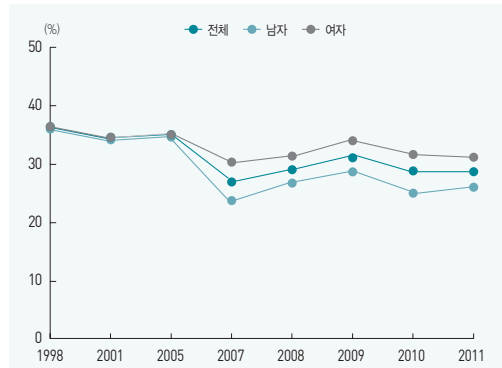
OECD 평균이 84명이었는데 한국은 191명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OECD에서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간주한다. 즉 평소 개인의 건강증진 노력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의 적절한 질병관리를 통해 유병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기초적인 보건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암 발생의 증가도 주목할 만하다. 국립암센터의 2010년 국가암 등록통계에 의하면, 전체 암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새로 보고된 환자수 지표인 조발생률이 1999년 214.2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 405.1명이 되었다. 2000년 주민등록 연앙인구로 보정한 2010년 연령표준화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304.8명이고 남자는 333.6명, 여자는 297.0명이었다. 한 시점에서 총

인구대비 암 환자수 비율인 암 유병률은 2010년 현재 1.9%이다. 국제비교를 위하여 피부암 등을 제외하고 다시 계산하면, 2010년 OECD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256.5명인데 한국은 282.3명으로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높다.

정신건강의 지표로 스트레스 인지율을 살펴보면,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비율이 1998년 36.5%, 2001년 34.6%, 2005년 35.1%로 높은 편이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07년 이후에는 약 28%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Ⅲ-4).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4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1998-2011



주: 1) 스트레스 인지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로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1 국민건강통계」, 2012.

유병과 함께 사망은 건강상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표 Ⅲ-2>는 사망원인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를 보여주고 있다. 1995년에서 2012년까지 총사망률은 532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0년대 후반에는 500명 이하로 떨어

졌으나 2010년 512명, 2012년 530.8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사인은 암이 1위이고,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 같은 순환기계 질환이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암에 의한 사망은 110.5명에서 146.5명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은 138.9명에서 2009년에 109.2명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2년에 117.1명이 되었다. 순환기계 질환은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으로 대별되는데, 뇌혈관질환 사망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심장질환 사망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소화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인구 10만 명당 39.2명에서 22.4명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질병 이외의 사망원인으로는 운수사고 사망이 38.7명에서 12.9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자살은 10.8명에서 2011년 31.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12년에 28.1명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OECD 보건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암과 뇌졸중 사망이 OECD 평균보다 높고, 허혈성심장질환 사망은 평균보다 낮다. 또한 교통사고, 추락, 자살과 같은 외인에 의한 사망도 OECD 평균보다 높다.

표 III-2 사망원인별 사망률, 1995-2012

	1995	2000	2005	2012
전체	532.1	517.9	501.0	530.8
신생물(암)	110.5	121.4	133.8	146.5
내분비질환	18.8	24.8	25.5	24.9
순환기질환	138.9	122.7	115.6	117.1
호흡기질환	24.4	33.8	29.2	45.2
소화기질환	39.2	31.2	23.0	22.4
운수사고	38.7	25.3	16.3	12.9
자살	10.8	13.6	24.7	28.1

주: 1)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 건강결정요인

만성질환은 흔히 '생활습관 병'이라고 간주할 만큼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습관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인의 흡연율은 1995년에 38.4%이던 것이 점차 감소하여 2012년에 24.0%가 되었다(표 III-3). 2010년 OECD 평균 21.4%와 비교하여 성인 흡연율은 큰 차이가 없으나 성별로 구분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남성 흡연율은 OECD 평균이 26.0%인데 한국은 40.8%이고, 여성 흡연율은 OECD 평균이 17.2%인데 한국은 5.2%였다. 한국에서 남녀 간 흡연율 차이가 매우 큰 이유는 남성의 흡연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여성 흡연자들이 과소보고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최근에 와서 남성의 흡연율이 다소 낮아지는 추세도 보인다.

성인 음주율은 큰 변화가 없이 약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성별로 볼 때 흡연과는 달리 여성들도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 2012년에 남성과 여성의 음주율은 각각 81.9%와 57.2%에 달하였다(표 III-3).

표 III-3 성인 흡연율과 음주율, 1995-2012 (%)

	1995	1999	2003	2006	2008	2010	2012
흡연율							
전체	38.4	35.1	29.2	27.3	26.3	24.7	24.0
남자	73.0	67.8	56.3	52.2	50.8	47.3	44.9
여자	6.0	4.6	3.8	3.9	3.2	3.1	4.0
음주율							
전체	63.1	64.6	64.3	73.2	68.6	68.4	69.3
남자	83.0	82.9	80.7	85.9	82.7	81.8	81.9
여자	44.6	47.6	49.0	61.2	55.3	55.5	57.2

주: 1) 흡연율은 20세 이상 인구 중 현재 담배를 파우고 있는 인구의 비율임.

2) 음주율은 20세 이상 인구 중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 동안 술을 한 잔 이상 마신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거의 매일 음주자’의 경우, 1995년 8.4%에서 2012년 5.5%로 약간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음주로 인한 건강위험은 음주횟수와 음주량을 모두 고려하여 측정하게 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1회 음주량이 7잔(소주 1병 분량) 이상이고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를 ‘고위험 음주’로 규정하는데, 2009년 이후 고위험 음주는 17.2%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한국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12.1리터였는데, 이는 OECD 국가들 중 7번째로 술 소비량이 많은 것이었다.

비만은 심장질환이나 당뇨병 등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비만은 보통 키와 몸무게의 비인 체질량지수(BMI)로 측정하는데 BMI가 25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된다. 한국의 비만율은 1998년에 26.0%이던 것이 계속 증가하여 2005년에 31.3%가 되었고 이후 31% 준이 유지되고 있다(표 III-4). 성별로는 남자 35.1%, 여자 27.1%로 남자의 비만율이 더 높다. 2012년 OECD 보건통계에 의하면, 2010년 OECD 평균은 56.7%이고 한국은 30.2%로 상대적으로 비만율이 낮은 편이다.

비만 문제는 영양섭취의 과다 또는 불균형과 함께 신체활동의 부족에 기인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20분, 주 3일 이상 실천한 사람들의 비율로 측정하는 신체활동 실천율이 2005년에 29.6%였는데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2011년에는 19.3%였다(표 III-4). 그런데 「사회조사」에서 나타난 규칙

적 운동 실천율은 2003년 26.9%, 2006년 28.3%, 2008년 32.1%, 2012년 34.5%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III-4 비만율과 신체활동 및 걷기실천율, 2005-2011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비만율	31.3	31.7	30.7	31.3	30.9	31.4
신체활동 실천율	29.6	21.1	25.9	26.3	22.4	19.3
걷기실천율	60.7	45.7	46.9	46.1	41.1	38.0

- 주: 1) 비만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BMI) 25kg/m<sup>2</sup> 이상인 인구의 비율임.  
2) 신체활동실천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10분이상, 1일 총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 또는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인구의 비율임.  
3) 걷기실천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인구의 비율임.  
4) 비만율과 각 실천율은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1 국민건강통계」, 2012.

스포츠가 아닌 일상의 걷기도 건강증진에 좋은 실천방법이 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최근 1주일간 1회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걷기를 실천한 사람들의 비율인 걷기 실천율을 산출하고 있는데 2005년에 60.7%이던 것이 계속 감소하여 2011년에는 38.0%로 낮아졌다(표 III-4).

##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체계는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 그리고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료비로 구성된다. 경제성장과 함께 의료공급도 확대되었고, 의사와 병상 수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수는 2000년에 154명이던 것이 2012년에 214명이 되었다.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26명에서 54명으



로, 간호사는 341명에서 591명으로 증가하였다(표 Ⅲ-5).

표 Ⅲ-5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수, 2000-2012

	2000	2005	2010	2012
전체 의료인	578	711	860	917
의사	154	177	205	214
치과의사	26	32	51	54
간호사	341	444	547	591

주: 1)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을 포함함.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의사 인력의 증가는 그 자체로 의료복지의 증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09년 OECD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3.1명인데 한국은 1.9명에 불과하였다. 그 만큼 의사들의 노동 강도가 매우 높고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의료에서 환자와의 교감이나 상담 및 교육 기능도 취약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간호사는 의사보다 그 수가 상대적으로 더 적다. 2009년의 OECD의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수가 8.4명인데 한국은 4.5명에 불과하였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간호서비스가 부족하여 환자간호의 상당 부분을 보호자가 직접 감당하거나 자기비용을 들여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의료시설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의료기관수와 병상수가 있다.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병상규모로 구분하는데 100병상 이상일 경우 종합병원,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일 경우 병원, 그리고 30병상 미만을 의원으로 분류한다. 종합병원은 1995년 266개소에서 2011년에 319개소로

증가하였고 병원은 398개소에서 1,245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의원은 14,343개소에서 27,909개소로 증가하였다(표 Ⅲ-6).

표 Ⅲ-6 의료기관수, 1995-2011

	1995	2000	2005	2010	2011
종합병원	266	285	290	312	319
병원	398	581	794	1,154	1,245
의원	14,343	19,472	25,412	27,334	27,909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병원수의 증가와 함께 병상수도 최근 10년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2003년에 7.1개에서 2012년에 11.5개가 되어 10년 사이에 62%가 증가하였다. OECD의 2010년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4.9개이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병상수가 7개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또한 병상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에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정부가 불필요한 입원을 억제하면서 병상수가 감소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의료비 증가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고 많은 민간병원들이 규모를 키워 경쟁하기 때문에 병상수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억제하려고 하나 아직까지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병상수의 증가는 고가의 고급 의료장비의 증가와도 관련성이 높다. 한국은 OECD 국가들보다 의료장비의 보유율이 더 높다. OECD 보건통





계에 의하면, 2011년 인구 100만 명당 MRI 보유는 OECD 평균이 13.3대인데 한국은 21.3대이고, CT 스캐너의 경우 OECD 평균이 23.2대인데 한국은 35.9대였다. 한국의 의료기관들은 병상이 많고 고급 의료장비도 많아 의료이용이 편리한 점도 있지만 의료서비스가 지나치게 고급화되는 추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의료공급의 증가는 의료이용의 증가와 맞물려 있다. 국민의 의료이용 수준은 연평균 1인당 내원일수로 계산할 수 있는데, 1990년에 7.9일이던 것이 2000년에 11.6일이 되었고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1년에는 18.8일이 되었다. 즉 국민 1인당 연 2.2일 입원하고 16.6일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다. 2011년 OECD 평균 의사상담횟수가 6.6회인데 한국은 13.2회로 OECD 최고 수준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국민의 유병률이 더 높아서라기보다는 시장지향성이 강한 의료공급 구조가 더 크기 때문이다.

공중보건 개념이 발전하면서 질병이 발생한 이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관념이 생겼다. 특히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일단 발병하면 완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는 어린 시절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예방사업의 중심이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건강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생활규범화되고 있다. 아울러 예방접종이 노년층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건강검진은 현재 개인이 자비로 민간의료기관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건강보험제도에 의하여 필수 항목들에 대해서는 2년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1년 51.8%로 절반에 불과하다. 암검진 수검률도 증가 추세에 있지만, 2011년 현재 44.3%로 아직 낮은 수준이다. 독감 예방주사도 2011년에 31.0%만 접종하였다(표 Ⅲ-7).

표 Ⅲ-7 예방서비스 이용률, 2005-2011 (%)

	2005	2007	2009	2011
건강검진 수진율	47.4	47.9	50.1	51.8
암검진 수진율	-	35.6	44.7	44.3
독감 예방접종률	35.0	28.3	26.3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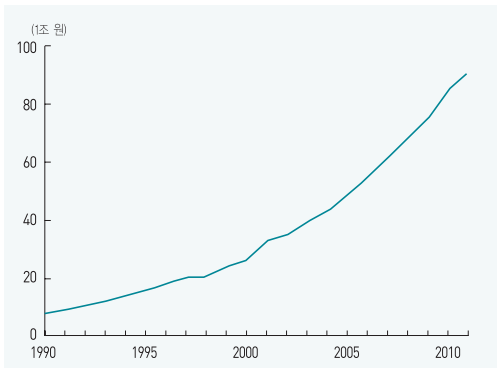
- 주: 1) 건강검진 수진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임.  
 2) 암검진 수진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2년 동안 암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임.  
 3) 독감 예방접종률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년 동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임.  
 4) 각 수진율과 예방접종률은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1 국민건강통계」, 2012.

의료공급과 의료이용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 국민의료비는 1990년에 7조 4천억 원이었는데 계속 증가하여 2006년에 55조 5천억 원에 달하였다. 이후 5년이 지난 2011년에 91조 2천억 원이 되었다(그림 Ⅲ-5). 2000년에서 2009년까지 10년간 의료비 증가율은 OECD 평균이 4.0%인데 한국은 9.3%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소득 향상에 따른 의료소비의 고급화와 의료이용의 증가 등이 주 원인이다. 특히 고령화와 함께 노인의료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 현재 총

그림 III-5 국민의료비, 199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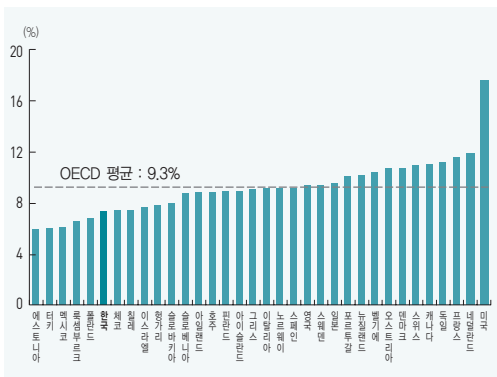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2011년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보건계정」, 2013.

인구 대비 노인인구는 11.4%인데, 건강보험의 총 진료비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의료비 지출 비중은 33.3%로 인구에 비해 의료비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OECD 보건통계에 의하면,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한국이 7.4%이고 OECD 평균은 9.3%였다(그림 III-6).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아직 서구 국가들에 비하여 적은 편이지만 의료비

그림 III-6 OECD 국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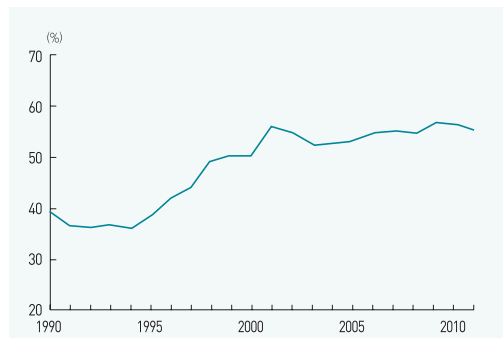


주: 1) 호주, 일본, 멕시코는 2010년 자료, 터키는 2008년 자료임.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13, 2013.

지출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료비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재원 염출 방식이다. 복지국가는 의료비 재원의 공공부담을 최대화하고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건강보험제도가 의료비의 공적 조달을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제도의 실시와 함께 의료비의 공공 부담이 확대되어 왔다. 전 국민이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 1990년에 국민 의료비에서 공공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39.5%였으나 계속 확대되어 2011년에는 55.3%에 달하게 되었다(그림 III-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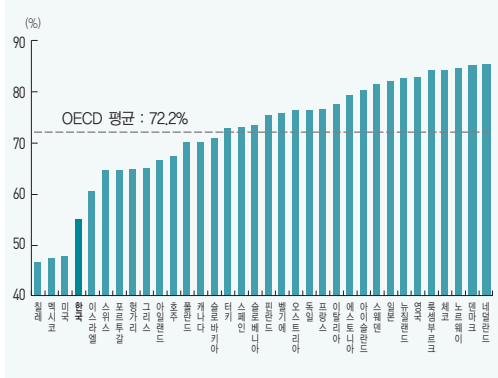
그림 III-7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율, 1990-2011



출처: 보건복지부, 「2011년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보건계정」, 2013.

OECD의 공공부담비율이 평균 72.2%인데 한국은 여기에 크게 미달한다(그림 III-8). 한국 국민은 병원을 이용할 때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몫이 크다. 특히 장기간 많은 치료비가 필요한 중질환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너무 커져서 가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그림 Ⅲ-8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율,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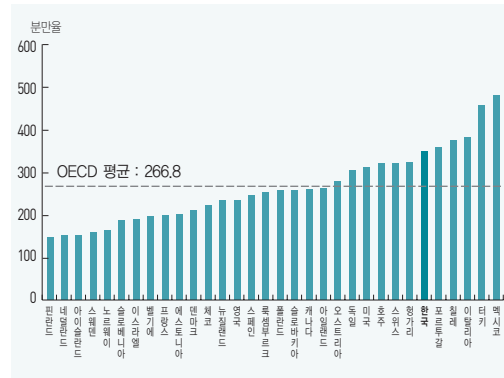


주: 1) 호주, 일본, 멕시코는 2010년 자료, 터키는 2008년 자료임.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13, 2013.

과거에는 의료체계의 성취도를 의사와 병원의 수와 같은 투입지표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투입지표보다는 성과지표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 성과지표란 의사와 병원이 얼마나 환자를 잘 치료하고 그 결과 국민의 건강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측정한 지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암환자 생존율이나 뇌졸중환자 생존율 같은 것이 그 예이다. 그런데 성과지표는 최근에 개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지표가 많지 않다. 여기에서는 그 대표적 지표로 부정적 측면을 보여주는 제왕절개 분만율을 살펴보기로 한다. 자연분만을 정상적 출산이라고 할 때 여러 비의학적 또는 사회적 이유로 인하여 수술로 출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국은 유독 그 정도가 높아서 의학기술이 왜곡 또는 남용되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분만건수는 OECD 평균이 266.8건이고 유

럽 선진국들은 대개 200건 이내이다. 반면, 한국은 352건으로 매우 높는데 선진국 중에서 유독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은 나라인 미국의 314건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그림 Ⅲ-9). 정부는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분만에 대한 수가 인상 등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제왕절개 분만율은 거의 낮아지지 않고 있다.

그림 Ⅲ-9 OECD 국가의 제왕절개 분만율, 2010



주: 1) 제왕절개 분만율은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분만건수임.  
2) 아이슬란드, 호주는 2009년 자료, 스위스는 2008년 자료임.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13, 2013.

의료체계 성과지표의 또 다른 측면은 이용자의 의료에 대한 평가 또는 만족도로 측정한다. 그런데 국가적 차원의 의료 신뢰도와 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응답자가 이용한 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단일 문항으로 질문하고 있을 뿐이다.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에서 2011년에 보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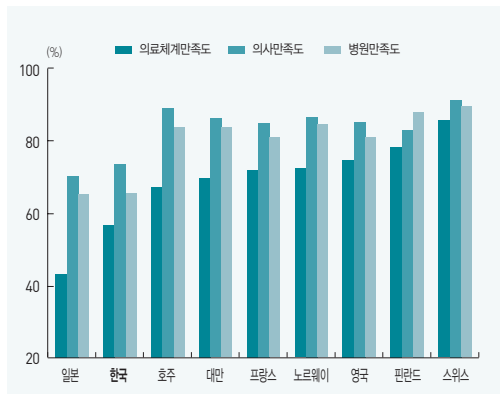
의료체계를 주제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 조사에 한국도 참여하였다. 조사에 포함된 문항들 중에서 의료체계만족도, 의사만족도, 병원만족도에 관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 [그림 Ⅲ-10]이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 핀란드,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의 의사와 병원에 대한 만족도는 80~90% 수준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만, 자국의 의료체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70~80%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함께 유럽 국가들에 비해 의료체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고, 의사와 병원에 대한 만족도 역시 60~70% 전후의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서구의 경우 의사들의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이 발전하여 있고, 제도적으로 주치의 제도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 간의 교감이나 소통이 원활하고 오랜 신뢰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의료비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규제들과 치료를 받기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의사나 병원과의 신뢰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유럽의 선진국들보다 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종합병원 만족도는 1999년에 24.5%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 45.2%, 2008년 54.1%, 2012년 52.9%로 높아졌다.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사유를 보면, 1999년에는 비용과다(45.0%)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장시간의 진료대기(39.9%)와 치료미흡(36.4%)이 주된 이유였는데, 2012년에도 이 세 가지가 주요 불만 사항이었다.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크고 의사수가 부족하여 환자의 대기시간도 길며 의사의 노동 강도가 높아 환자에 대한 세심한 진료나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환자에게 부족한 느낌을 주게 된다. 서구에서는 의료제도에 대해서는 불신하지만 의료공급자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의료제도에 대한 불만족과 의료공급자에 대한 불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렵다.

그림 Ⅲ-10 주요 국가의 의료체계, 의사 및 병원 만족도, 2011



주: 1) 만족도는 각각 자국의 전반적인 의료제도, 최근 받은 의사치료 및 병원 입원치료에 대해 '만족한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11: Health, 2013.

# 02

## 건강검진의 추이와 실천요인

조성일(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요 약

- 최근 건강검진 실천율이 급속히 높아져서 2012년 현재 15세 이상 인구의 약 54%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 건강검진 실천율의 증가는 남녀 및 모든 연령집단에서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검진율이 높아지면서 집단 간의 검진율 차이가 줄어들었다.
- 그러나 건강검진 실천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으며, 가구주인 경우와 기혼인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다. 직종별로는 사무직이 가장 높으며, 서비스판매직이 가장 낮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인 경우가 중졸 이하 또는 대졸 이상인 경우보다 낮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건강검진 실천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 정기적 건강검진의 실천율은 아침식사하기, 적정수면, 규칙적 운동 등 여러 가지 건강증진 행태와 관련이 있다. 아울러, 건강검진 실천율은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경우 낮고, 현재 질병 치료 중인 경우 높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근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건강검진은 특별한 건강 문제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건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건강 문제를 일찍 발견하고 일찍 치료 또는 관리를 하기 위한 예방활동이며, 이러한 활동은 보다 일반적으로 2차 예방의 개념에 속한다. 이에 비해, 건강 문제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는 것을 1차 예방이라고 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차 예방이 최선이지만, 건강검진은 그 다음 단계를 보완하여 이미 문제가 시작되었더라도 가장 빠른 시기에 문제를 찾아내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질병이 이미 진행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아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3차 예방이라고 한다. 건강검진은 건강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한 부분이기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방을 위한 각 단계의 노력이 합쳐질 때 건강검진의 의미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가지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러 민간기관들에서도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해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을 8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건강검진 실천율의 변화 추이를 개관하고, 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 행태에 따른 건강검진 실천율의 차이를 살펴본 후, 건강검진



실천 관련 요인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사회조사」는 건강검진 실천에 관한 표준 문항을 사용하고 있어서 건강검진 실천율의 시계열 변화와 인구집단 간 차이를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아울러 흡연, 음주, 질병치료 여부 등 건강 관련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러한 요인들과 건강검진 실천과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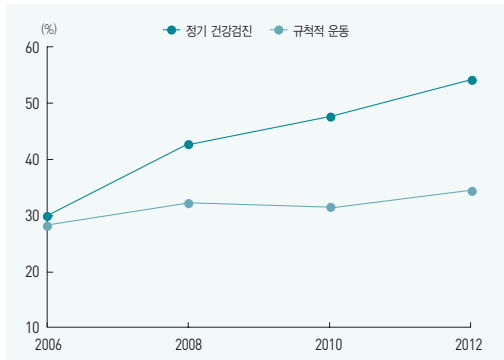
### 건강검진 실천율 추이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2006년부터 정기 건강검진 실천에 대한 시계열 추세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설문을 사용해 오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귀하는 평소 다음 각 사항을 실천하는 편입니까?”로 묻고, 아침식사, 적정 수면(6-8시간), 규칙적 운동, 정기 건강검진을 각각 실천하는지 여부를 답하도록 하였다.

[그림 Ⅲ-11]은 2006-2012년 기간의 「사회조사」에서 나타난 15세 이상 인구의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 추이를 규칙적 운동 실천율의 추이와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규칙적 운동 실천율의 증가에 비해서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가지 모두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정부가 추진해 온 예방사업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나, 운동 실천율의 증가를 위해서도 많은 사업을 해 온 것을 고려하면 건강검진의 뚜렷한 증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려우나, 정

그림 Ⅲ-11 정기 건강검진과 규칙적 운동 실천율, 2006-2012



주: 1)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임.  
 2) 규칙적인 운동 실천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임.  
 3) 2012년은 만 13세 이상 대상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기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의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주요 관련 요인을 파악해 볼 수 있다.

### 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행태별 건강검진 실천율

여기에서는 성, 연령, 지역, 직업, 교육수준, 가구소득, 규칙적 운동 실천여부 등 여러 특성들에 따라 건강검진 실천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졌지만 성별, 연령별로는 차이가 있다. <표 Ⅲ-8>에서는 이러한 건강검진 실천율의 변화를 성 및 연령집단별로 비교하여 보여준다. 2006년에는 남자의 실천율이 여자보다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줄어들어 2012년에는 남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어 각각 53.7%와 53.0%로 절반 이상이 정기 건강



검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집단에서 실천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실천율이 2.5%로 미미했던 20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도 20.5%로 약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을수록 실천율이 높은 경향은 여전히 뚜렷하게 유지되고 있다. 60세 이상의 경우 2006년 42.3%에서 큰 폭으로 올라 2012년에는 75.8%의 실천율을 기록하여 노인층의 대다수가 정기적 검진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8 성 및 연령별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 2006-2012 (%)

	2006	2008	2010	2012
성				
남자	32.6	44.4	48.6	53.7
여자	27.5	41.0	46.3	53.0
연령				
15-19세	2.5	14.1	16.3	20.5
20-29세	12.2	21.2	22.6	24.2
30-39세	28.1	36.3	40.4	44.9
40-49세	36.9	49.5	54.9	62.9
50-59세	45.4	59.3	64.7	72.0
60세 이상	42.3	61.1	66.6	75.8

주: 1)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임.

2) 2012년은 만 13세 이상 대상으로 만 15-19세가 아닌 만 13-19세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건강검진의 실천은 지역과 직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역마다 검진기관과 시설에의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직장마다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경우도 다르기 때문이다. <표 Ⅲ-9>에서는 지역과 직업에 따른 건강검진 실천율의 추이를 보여준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 모두 2006-2012년 사이에 실천율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도시보

다 농어촌 지역에서 실천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모든 직업군에서 실천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2년 농어업 종사자의 실천율은 75.6%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서비스판매직은 지속적으로 가장 낮은 실천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직업군에서도 2006-2012년 기간에 실천율이 약 2배 증가하여 50.2%에 이르렀다.

표 Ⅲ-9 지역 및 직업별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 2006-2012 (%)

	2006	2008	2010	2012
지역				
도시(동부)	29.6	41.9	46.4	52.1
농어촌(읍면부)	31.7	46.0	52.1	59.4
직업				
전문관리직	41.6	51.8	55.3	59.8
사무직	41.2	52.3	59.1	60.7
서비스판매직	25.4	36.4	44.3	50.2
농어업직	37.5	57.3	65.5	75.6
기능노무직	31.3	44.8	49.1	57.9

주: 1)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임.

2) 2012년은 만 13세 이상 대상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도시 및 농어촌 지역과 모든 직업집단들의 건강검진 실천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라서 물리적 접근성의 문제는 현재 장애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농어촌과 농어업 종사자들에게서 비교적 높은 실천율을 보이는 것은 국가적인 보건 의료 지원사업의 결과로 접근성의 문제를 상당히 극복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만, 서비스판매직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천율을 보이는 것은 이들의 고용상태가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아서 산업보건 관리 측면에서 취약한 집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기적 건강검진의 실천율은 검진에 비용이 드는 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표 Ⅲ-10>은 사회계층의 대표적인 지표인 교육 수준과 가구소득에 따른 실천율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사회계층에 따라 나타나는 경향을 고려할 때 중상층에서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낮은 층에서는 오히려 중간층보다 건강검진 실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요인 외에도 다른 요인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는 노인층과 농촌지역 거주자들이 많이 포함될 것이므로 앞서 농어촌 지역, 고연령층, 농어업 종사자의 실천율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요인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Ⅲ-10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별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 2006-2012 (%)

	2006	2008	2010	2012
<b>교육수준</b>				
초졸 이하	33.7	52.8	58.2	61.8
중졸	25.3	37.4	42.6	51.4
고졸	26.0	36.2	41.1	47.1
대졸 이상	36.3	48.1	52.1	56.7
<b>월평균 가구소득</b>				
100만 원 미만	26.1	44.5	48.4	56.3
100-199만 원	25.4	37.5	41.9	50.9
200-299만 원	28.4	37.9	43.6	48.9
300-399만 원	33.8	44.8	49.5	52.2
400-499만 원		48.6	53.3	55.6
500-599만 원	42.1	51.2	56.1	61.7
600만 원 이상	45.0	55.9	59.5	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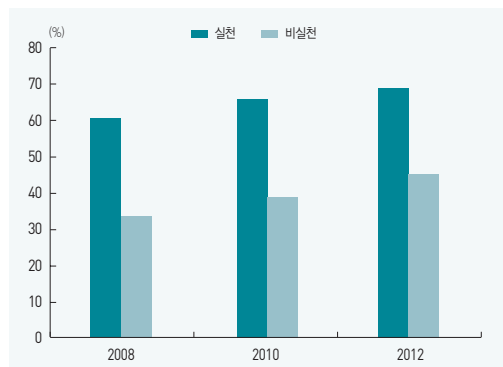
주: 1)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임.

2) 2012년은 만 13세 이상 대상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건강 관련 행태와도 관련이 될 수 있다. [그림 Ⅲ-12]는 규칙적 운동 여부에 따른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운동 실천 집단은 비실천 집단보다 계속해서 높은 실천율을 나타내고 있다.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실천율의 상승폭은 운동 실천 집단의 경우 8%p인 데 비해 비실천 집단은 11%p여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운동 실천과 건강검진 실천의 연관성은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Ⅲ-12 규칙적 운동 실천여부별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 2008-2012



주: 1)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임.

2) 2012년은 만 13세 이상 대상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건강검진 실천요인

건강검진의 여러 가지 관련 요인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려면 각 변수들을 통계적으로 보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

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12년 「사회조사」 자료에 포함된 관련 요인들의 독립적인 영향을 추정한 결과가 <표 Ⅲ-11>부터 <표 Ⅲ-13>에 제시되어 있다. 이 3개의 표에 있는 전체 변수들은 모두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변수들을 하나의 모형으로 동시에 보정한 결과를 각 표에 다시 나누어 제시하였다.

<표 Ⅲ-11>에서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과 함께 보정비(adjusted odds ratio)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보정비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보정하고 해당 요인의 기준 범주(보정비 1)에 비교한 실천율의 비(실천율/비실천율)를 나타낸 것이다. 기준 범주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괄호로 표시하였다. 성별 실천율은 차이가 매우 적기 때문에 보정비도 1에 가깝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반면, 연령, 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등의 다른 변수들은 모두 유의미한 실천율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영향이 큰 것은 연령으로서 나이가 많을수록 보정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0세 이상에서는 30세 미만에 비해 7.65배에 이른다. 가구주에 비해 배우자나 기타 가구원들의 실천율이 낮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실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연령에 따라 건강 문제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반영하며 아울러 건강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11** 인구학적 특성별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과 보정비, 2012

	실천율(%)	보정비
성		
남자	53.7	1.00
여자	53.0	(1.06)
연령		
30세 미만	22.6	1.00
30-39세	44.9	1.83
40-49세	62.9	3.46
50-59세	72.0	5.35
60세 이상	75.8	7.65
가구원 구분		
가구주	62.7	1.00
배우자	62.6	0.87
기타	28.2	0.69
혼인상태		
배우자 없음	35.2	1.00
배우자 있음	66.6	1.47

주: 1) 보정비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보정한 실천율의 상대적 비임. 괄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를 나타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2.

사회경제적 특성의 영향에 대한 결과는 <표 Ⅲ-12>에 제시되어 있다.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건강검진 실천율이 높은 것은 약간의 보정비 증가로 나타나며, 이는 유의미한 차이임을 보여준다. 직업군 간 건강검진 실천율의 차이는 사무직이 유의하게 높은 보정비를, 그리고 서비스판매직이 유의하게 낮은 보정비를 나타내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러한 차이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지원 서비스의 차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실천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정비는 전문관리직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농어업 종사자들의 연령이나 가구소득 등 다른 특성

들에 의해 실천율이 높아진 것임을 의미한다. 교육수준의 영향은 고졸의 경우 낮은 실천율을, 대졸 이상의 경우 높은 실천율을 보이는 것이 보정비에도 반영되고 있다. 소득수준의 경우 높을수록 실천율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12 사회경제적 특성별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과 보정비, 2012

	실천율(%)	보정비
지역		
도시(동부)	52.1	1.00
농어촌(읍면부)	59.4	1.09
직업		
전문관리직	59.8	1.00
사무직	60.7	1.20
서비스판매직	50.2	0.71
농어업직	75.6	(0.97)
기능노무직	57.9	0.86
교육수준		
초졸 이하	61.8	1.00
중졸	51.4	(1.05)
고졸	47.1	0.87
대졸 이상	56.7	1.18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51.6	1.00
300-499만 원	53.6	1.27
500만 원 이상	61.5	1.69

주: 1) 보정비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보정한 실천율의 상대적 비임. 괄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를 나타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2.

건강검진의 실천은 여러 건강 관련 특성들과 관련이 있으며 <표 Ⅲ-13>에서 이를 잘 보여준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보정하지 않은 실천율은 낮으나 다른 요인의 영향을 보정한 후에는 1.24로 보정비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다. 즉, 실제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들이 검진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으나, 보정하지

표 Ⅲ-13 건강 관련 특성별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과 보정비, 2012

	실천율(%)	보정비
주관적 건강수준		
보통/나쁨	54.8	1.00
좋은	51.7	1.24
아침식사하기		
비실천	36.2	1.00
실천	59.7	1.39
적정수면		
비실천	40.7	1.00
실천	57.2	1.44
규칙적 운동		
비실천	45.1	1.00
실천	69.0	2.64
흡연		
아니오	54.6	1.00
예	49.0	0.79
음주		
아니오	54.6	1.00
예	52.7	0.89
질병 치료 중		
아니오	51.6	1.00
예	64.9	1.20

주: 1) 보정비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보정한 실천율의 상대적 비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2.

않은 결과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질병치료 중인 경우 실천율이 더 높아지는 것과는 대비된다. 여기서 질병치료는 만성질환 등으로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의료진과의 잦은 접촉으로 인해 검진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검진 실천은 아침식사, 적정수면, 규칙적 운동 등 건강증진 행동들과는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규칙적 운동과 가장 큰 연관성을 보인다. 반면, 흡연과 음주를 하는 사람들은 실천율이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03

## 음주수준과 건강과의 관계

김광기(인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요약

- 한국 사회는 음주자의 비율이 높으며, 과음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 음주는 한국 사회 질병부담 원인들 중 두 번째에 해당하며, 특히 알코올 사용 장애로 인한 질병부담 수준은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높다.
- 음주와 관련된 상병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음주로 인한 사망수준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음주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라 할 수 있다. 술을 마시게 되면 기분을 좋게 해주는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완화된다. 또한 음주는 '사회적 유희유'로서 집단 구성원간의 유대감 증진과 통합에 기여하기도 한다. 주류의 생산과 유통, 관광 및 접객 산업, 광고 마케팅 등 음주와 관련된 산업을 통해 고용이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도 있다. 그러나 기분이 좋아지는 주량을 넘어서게 되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정적 결과들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과음이나 폭음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다. 알코올 자체가 중독성을 가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알코올에 중독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음주는 60여 가지의 질환, 사고, 그리고 폭력 등의 직간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속적 음주로 생길 수 있는 건강문제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암(식도암, 후두암, 인두암, 구강암, 직장암 및 유방암),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알코올성 간경화를 포함하는 간질환, 고혈압 등을 들 수 있다. 건강문제 외에 음주운전, 음주폭력, 음주로 인한 사고 등은 한 번의 음주로도 발생한다. 음주는 음주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제3자의 사고나 사망, 임신부의 음주로 인해 태아에게 발생하는 태아성알코올증후군, 음주자에 의한 폭력(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이 대표적이다. 음주는 경제와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근로 현장에서의 음주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이후의 음주도 업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한국에서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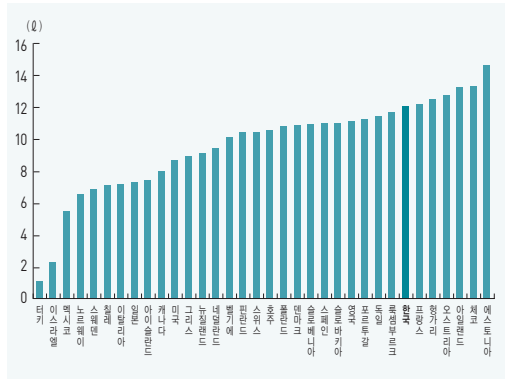
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질병, 사망 등과 같은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 수준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의료비, 생산성 손실, 사회서비스나 경찰 및 법률 집행에 관련된 서비스 비용 등)이며, 이는 사회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음주가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건강에서부터 사회발전이나 경제발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 글에서는 음주의 영향을 주로 건강에 한정하여 살펴볼 것이다. 먼저 한국인의 음주 수준과 행태를 살펴본 후 음주가 알코올 사용장애, 질병, 비만 및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 음주수준의 변화

한 사회의 음주수준은 15세 이상 성인 1인당 알코올 소비량과 음주율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5세 이상 성인들이 한 해에 마시는 술을 순수 알코올량(공식적으로 판매된 주류에 한정)으로 환산하면 약 12.1L로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에스토니아, 체코,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프랑스에 이어 7번째로 많은 편이다(그림 Ⅲ-13).

이 지표에 의한 알코올 소비 추세는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이다.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 음주자(1년 동안 한 번이라도 마신 적이 있는 성인)는 전체 성인의 약 75%에 달하며, 이 중에서 남자는 87%, 여자는 67%이다. 음주자 중 한

그림 Ⅲ-13 OECD 국가의 성인 1인당 알코올 소비량, 2007



주: 1) 성인은 1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함.

출처: WHO, Global Information System on Alcohol and Health  
(<http://apps.who.int/gho/data/node.main>).

달에 한 번 이상 음주를 하는 정기적 음주자는 전체 59.2%(남자 77.5%, 여자 41.4%)로 모든 연령층에서 그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전체적으로 음주자 비율은 안정적인 가운데 미미하지만 증가하고 있다.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남녀 모두 최근으로 올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이었지만, 최근 들어 40대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남자의 경우, 60세 이상의 노인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음주자 비율의 변화 추이가 매우 유사하다. 여자의 경우, 20대가 가장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음주자 비율이 낮아지는 양상이다. 여자 음주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2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1년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여자 20대에 서만 다른 변화 추이를 보이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2007년과 2008년에만 조사시점을 7월로 변경한 것과 관



련이 있어 보인다. 즉 젊은 층의 음주소비가 많은 여름에 조사가 이루어져 이 두 시기에 20대의 음주율이 과대보고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음주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이며, 가장 낮은 연령대는 70세 이상이다(표 Ⅲ-14).

표 Ⅲ-14 성인의 성 및 연령별 월간 음주자 비율, 2005-2011 (%)

	전체	19-29	30-39	40-49	50-59	60-69	70+
남자							
2005	73.3	78.4	77.8	76.1	71.5	60.7	45.3
2007	73.9	74.6	79.9	79.4	75.8	58.3	47.8
2008	74.8	75.6	79.9	80.5	74.1	65.6	50.3
2009	75.7	82.7	78.1	79.1	75.1	66.4	50.5
2010	77.7	81.6	84.9	79.8	78.1	66.6	51.1
2011	77.5	84.8	81.9	75.4	81.2	70.6	51.4
여자							
2005	36.2	51.8	41.2	38.6	28.6	17.9	14.5
2007	39.9	63.1	43.5	40.6	36.0	20.6	10.4
2008	42.9	63.8	50.3	47.5	34.4	20.4	15.0
2009	41.2	55.4	50.1	48.6	33.9	23.2	13.8
2010	41.3	52.1	49.1	50.6	36.4	23.4	15.5
2011	41.4	60.2	52.6	43.3	34.9	24.9	14.4

주: 1) 월간 음주자 비율은 만 19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1 국민건강통계」, 2012.

성인들 중에서 고위험음주<sup>1)</sup>를 하는 비율은 남녀 모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2008년을 정점으로 다시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이다. 이를 성 및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자 7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은 2007년까지 낮아

지다가 2008년에 다시 높아진 후 완만하게 낮아지고 있다. 남자 60대의 고위험음주율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남자 30-50대의 고위험음주율은 해마다 등락을 반복하다가 최근 약간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가장 등락이 심한 연령은 남자 50대로 2008년에 갑자기 높아졌다가 2009년에 하락하고 2010년에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다. 남자 20대의 고위험음주율은 2008년을 정점으로 완만하게 하락 중이었으나 2010년부터 약간 높아지고 있다. 여자의 고위험음주율 변화는 남자보다 단순한 편이다. 여자의 모든 연령대에서 고위험음주율이 2008년을 정점으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 다만 여자 30대의 고위험음주율은 2010년에 높아졌다가 2011년에 다시 낮아졌으며, 여자 60대의 음주율은 2009년에 높아졌다가 2010년에 급격히 하락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 남녀 전체의 고위험음주율은 17.6%(남자 26.5%, 여자 6.5%)이다. 2011년 고위험음주율은 남자의 경우 30-40대가 가장 높고, 여자의 경우 20대, 30대, 40대, 50대의 순으로 높다(표 Ⅲ-15).

최근 순수 알코올 소비량이 감소하는 데 반해 고위험음주율이 낮아지지 않는 것은 주류의 전반적 저도화 경향과 관련이 있다. 소주의 경우, 저도화로 인해 동일한 수준의 순수 알코올을 섭취하려면 이전보다 더 많이 마셔야 한다. 2011년 고위험음주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 남자 40대와 50대로 드러난 것은 이들이 소주의 가장 큰 소비 집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자 20대의 경우에

1) 소주 기준 7잔(여자는 5잔) 이상을 1주일에 두 번 이상 마시는 음주자를 의미한다.



표 Ⅲ-15 성인의 성 및 연령별 고위험 음주자 비율, 2005-2011 (%)

	전체	19-29	30-39	40-49	50-59	60-69	70+
남자							
2005	22.9	14.0	20.7	31.8	27.8	24.2	22.6
2007	25.3	18.7	29.3	33.8	22.1	22.2	6.3
2008	29.0	23.2	28.8	34.8	37.1	21.4	15.7
2009	25.1	21.7	26.5	30.6	26.8	19.2	12.1
2010	25.5	18.6	29.4	29.9	29.9	18.6	14.0
2011	26.5	20.7	32.7	32.8	29.8	15.5	7.2
여자							
2005	4.8	7.1	4.0	4.6	4.1	2.3	2.5
2007	5.3	6.7	5.5	6.1	3.5	1.3	2.2
2008	9.0	12.5	9.4	9.9	6.3	1.0	2.8
2009	7.7	9.6	8.3	8.1	6.5	4.5	0.8
2010	7.6	9.8	10.5	8.7	3.9	0.6	1.5
2011	6.5	9.4	8.8	5.6	4.3	1.6	1.8

주: 1) 고위험 음주자 비율은 만 19세 이상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음주한 조사대상자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한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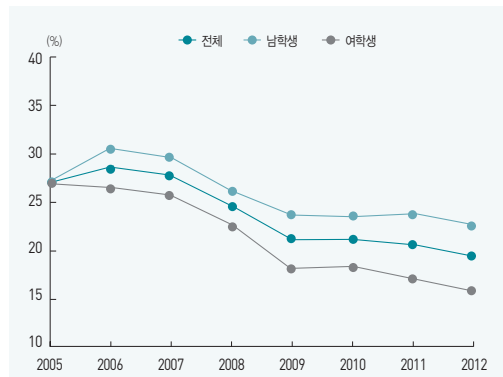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1 국민건강통계」, 2012.

는 이미 알코올 도수가 낮은 소주로 음주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30-50대에 비해 고위험음주율이 낮을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주하는 비율로 보면 남자 20대는 남자 30-50대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들의 고위험음주율은 남자 30-50대보다 낮다는 사실이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 해 준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음주자 비율과 고위험음주율이 감소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30-50대의 남자가 다른 연령대의 남자보다 고위험음주를 더 많이 한다. 이는 30-50대의 남자가 20대와 60세 이상의 남자보다 경제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남자보다 낮기 때문에

연령의 증가와 함께 고위험음주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음주행태는 성인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주하는 청소년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청소년 음주율은 19.4%(남학생 22.7%, 여학생 15.8%)이다. 청소년 음주율은 성인에 비해 남녀 간 차이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2005년에는 청소년 음주율의 남녀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남녀 간 차이가 확대되는 양상이다(그림 Ⅲ-14).

그림 Ⅲ-14 청소년의 성별 월간 음주자 비율, 2005-2012



주: 1) 월간 음주자 비율은 중·고등학생 중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음주한 청소년의 비율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각 년도.

## 음주와 건강

전 세계 187개국을 대상으로 세계질병부담연구를 수행한 미국 워싱턴대학교 연구팀에 의하면, 한국인의 건강수명 손실의 원인은 첫 번째가 잘못된 식습관이고 두 번째가 음주이다. 즉 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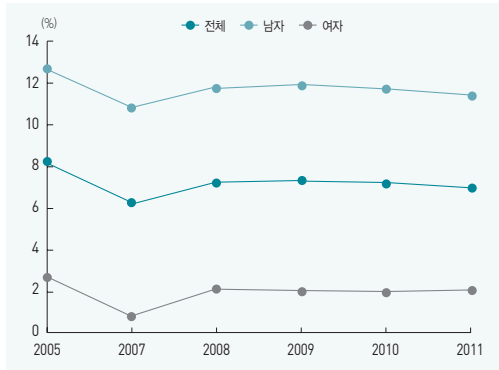


가 건강수명의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흡연, 고혈압, 비만보다 더 크다. 여기에서는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코올 사용장애, 음주로 인한 상병, 음주로 인한 비만, 음주와 사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알코올 사용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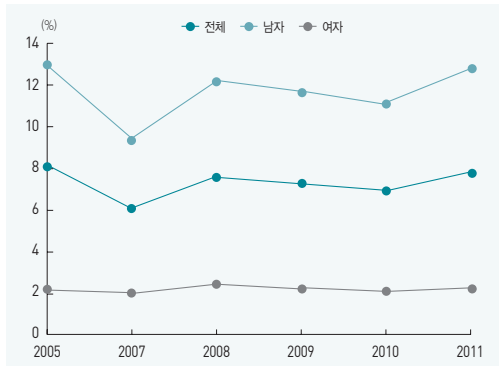
고위험음주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알코올 남용자나 알코올 의존자가 될 수 있다. 알코올 남용자와 의존자를 통틀어 알코올 사용장애자라고 하며, 이는 문제가 있는 음주수준을 가늠하는 측정기준으로 사용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이를 선별하는 도구로 AUDIT(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을 활용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알코올 남용자 비율은 2011년 7.0%(남자 11.4%, 여자 2.1%)이고 알코올 의존자 비율은 7.8%(남자 12.8%, 여자 2.2%)이다. 따라서 이 둘을 합한 알코올 사용장애자 비율은 14.8%(남자 24.2%, 여자 4.3%)에 달한다. [그림 Ⅲ-15]와 [그림 Ⅲ-1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알코올 남용자와 의존자 비율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큰 변화가 없다. 여자는 거의 일정한 반면, 남자는 약간 감소하고 있다. 알코올 남용자와 의존자 비율에 있어서는 남녀 간 차이가 두드러진다. 남자는 알코올 남용과 의존 수준에서 여자보다 5-6배 정도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5 성인의 성별 알코올 남용자 비율, 2005-2011



주: 1) 알코올 남용자 비율은 만 19세 이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잔이라도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조사대상자 중 음주수준을 측정하는 AUDIT 척도의 총점이 16점 이상 19점 이하인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1 국민건강통계」, 2012.

그림 Ⅲ-16 성인의 성별 알코올 의존자 비율, 2005-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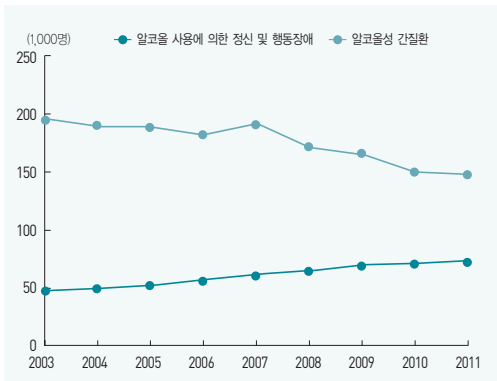
주: 1) 알코올 의존자 비율은 만 19세 이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잔이라도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조사대상자 중 음주수준을 측정하는 AUDIT 척도의 총점이 20점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1 국민건강통계」, 2012.

한국과 GDP가 비슷한 15개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은 알코올 사용장애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로 인한 질병부담은 1990년 15개 국가들 중 13위였으나 2010년에는 15위로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음주로 인한 상병

음주자에게 발생하는 각종 질환은 60여 가지에 달하지만 각 질환별 유병률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출한 통계자료를 통해 그 일부를 살펴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알코올성 간질환 진료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알코올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Ⅲ-17).

그림 Ⅲ-17 알코올성 질환 진료자수, 2003-2011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년도.

알코올성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진료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 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향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는 음주를 만성적으로 함에 따라 기억장애, 정신장애, 기분장애 및 불안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음주를 오랫동안 해 온 60대 이상의 남자 노인에게서 많이 발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알코올성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해 지출된 진료비는 60세 이상 노인집단에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연령집단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표 Ⅲ-16).

표 Ⅲ-16 연령별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비, 2003-2011 (100만 원)

연도	전체	0-19	20-29	30-39	40-49	50-59	60-64	65+
2003	53,254	53	1,538	9,236	16,518	13,241	6,147	4,014
2004	58,233	50	1,562	9,256	17,925	15,090	6,450	4,573
2005	63,888	41	1,835	10,002	18,520	17,063	7,152	5,158
2006	90,913	73	2,312	12,744	25,044	25,588	10,075	8,223
2007	117,105	66	2,951	15,777	30,465	32,832	13,588	11,916
2008	136,161	117	3,317	16,291	34,812	39,225	15,650	30,459
2009	156,532	139	3,376	18,129	39,828	46,704	17,753	33,776
2010	174,394	174	3,218	18,442	42,603	54,139	20,650	37,502
2011	191,004	174	3,284	18,562	44,260	60,578	23,182	42,437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년도.

알코올성 정신 및 행동 장애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이 지급한 총 진료비는 2011년 1,905억 원으로 2007년에 비해 연평균 12.5%씩 증가하였다. 남자의 경우에는 연평균 12.8%, 여자의 경우에는 연평균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기준 남자의 진료비는 여자에 비해 8.9배 많았다(표 Ⅲ-17).

표 Ⅲ-17 성별 알코올성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비, 2007-2011 (100만 원)

연도	총진료비(100만원)			여자 대비 남자 진료비의 비율(%)
	전체	남자	여자	
2007	119,072	105,943	13,129	8.1
2008	135,886	122,185	13,701	8.9
2009	156,197	140,236	15,961	8.8
2010	174,031	156,265	17,766	8.8
2011	190,556	171,316	19,240	8.9
연평균 증가율(%)	12.5	12.8	10.0	-

출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알코올성 정신장애 분석」, 2012.

## 음주로 인한 비만

대부분의 음주는 음식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비만해 질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다. 실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문제음주자가 되거나 고위험음주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비만이 될 위험성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표 Ⅲ-18). 이러한 경향은 남자들에게서 더 두드러진다. 삼겹살과 소주로 상징되는 우리의 음주문화에서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과음 횟수가 증가할수록 비만이 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완전히 알코올의존 수준이 되면 음식보다는 술 자체를 마시기 때문에 비만 가능성은 약간 낮아지지만 영양실조 가능성은 높아진다.

**표 Ⅲ-18** 음주자 유형 및 고위험음주 횟수별 비만 위험 가능성, 2010

비만(BMI 25 이상) 위험가능성	
음주자 유형	
사교적 음주자	1,000
문제 음주자	1,323
알코올 남용자	1,479
알코올 의존자	1,258
고위험음주 횟수	
하지 않음	1,000
한 달에 1번 미만	1,085
한 달에 1번 정도	1,114
일주일에 1번 정도	1,367
거의 매일	1,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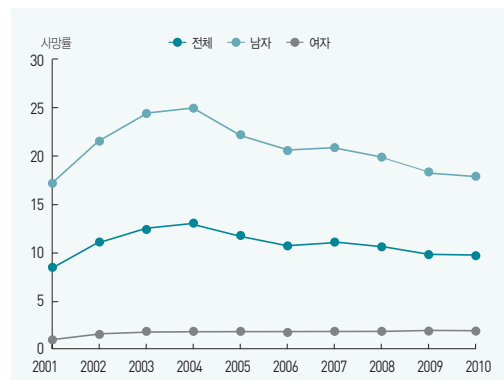
주: 1) 비만 위험가능성은 성, 연령 및 흡연여부를 통제한 것이며,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오즈비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자료, 2010.

## 음주로 인한 사망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15세 이상 인구의 알코올 관련 질환 사망률은 200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음주로 인한 질병 사망자 수는 2001년 인구 10만 명당 8.4명이었던 것이 2004년에 12.9명으로 늘어났다가 2010년에 9.6명으로 줄어들었다. 남자의 알코올 관련 질환 사망률이 여자의 10배 정도로 높다. 여자의 알코올 관련 질환 사망률은 미미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Ⅲ-18).

**그림 Ⅲ-18** 성별 알코올성 질환 사망률, 2001-2010



주: 1)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알코올성 질환 사망자수임. 15세 이상 인구 기준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간 차이가 뚜렷하다. 음주의 폐해는 음주방식과 음주량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보다 폭음 또는 고위험음주를 더 많이 하고, 한 번에 마시는 양도 더 많기 때문에 알코올 관련 상병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이나 사망수준에 있어서 남자가 월

등히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젊은 여자의 경우 젊은 남자와 비교해 음주량에 있어 차이가 크지 않고 음주하는 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음주의 폐해에 있어 남녀 간 차이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살펴본 알코올로 인한 사망수준의 변화양상에서 알 수 있듯이, 여자의 사망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 전조로 해석된다.

#### 맺음말

UN과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해로운 음주와 그로 인한 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 인류가 체계적인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류사회의

번영과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비감염성 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이고 이에 원인이 되는 것이 해로운 음주라고 규정하면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음주를 많이 하고 그로 인한 폐해도 가장 큰 국가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국제기구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음주행동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고 음주폐해의 원인을 찾아 효과적인 정책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발전, 경제발전,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 04

##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장세진(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

### 요 약

- 한국 직장인이 느끼는 직무스트레스는 OECD 국가들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 2011년 「취업자 근로환경조사」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30대와 40대가 다른 연령층보다 더 많이 직무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상용근로자(정규직 근로자)가 임시 및 일용 근로자보다 더 많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 직업별로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판매종사자, 서비스종사자의 순으로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다. 특히 출판·영상·정보,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업, 운수업 종사자들 가운데 직무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들의 비중(30% 이상)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의하면, 2001년 현재 세계적으로 4억여 명이 정신질환, 신경학적 질환, 약물 및 알코올 중독 등의 정신심리학적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전체 질병 중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질병부담이 약 12%를 차지하여 정신건강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직장인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흐름 속에서 구조조정, 고용불안정 등으로 경제적 및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다수 직장인의 건강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OECD 국가들 중 한국 직장인이 직무로부터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은 87.8%로 1위, 직무만족도는 69%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한국은 OECD 34개 국가들 중 행복지수 24위, 종합복지지수 26위, 갈등지수 4위,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긍정경험지수 3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직장인의 94.7%는 하루에 3~4회 이상 '욱' 하는 순간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스트레스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사람이 91.4%에 이르고 있다.

스트레스의 가장 대표적 형태인 직무스트레스(job stress)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다. 현대인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의 발생 근원지는 바로 직장이며, 직장에서의 대인관계나 역할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갈등과 긴장이 스트레스의 근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의 최근 변화 추세를 분석해 보고,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를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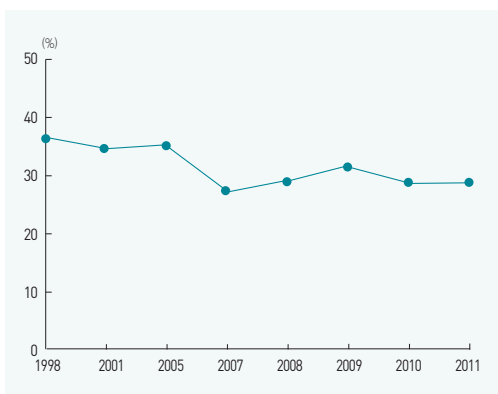


## 스트레스 인지율

직무스트레스란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스트레스로 위험한 작업 조건 및 환경, 복잡한 직무내용, 업무 과중 및 과소, 직장 내에서의 대인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 비합리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 보상의 비적합성, 가족-일 영역 간의 부조화 또는 갈등 등에 그 원인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결과를 보면, 만 19세 이상 인구 중에서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외환위기를 경험한 1998년에는 36.5%였고, 이후 다소 낮아지는 양상(2005년 35.1%, 2007년 27.1%)을 보이다가 2009년에 31.4%로 다시 높아졌으며, 2011년에는 28.7%로 다소 낮아졌다(그림 III-19).

그림 III-19 스트레스 인지율, 1998-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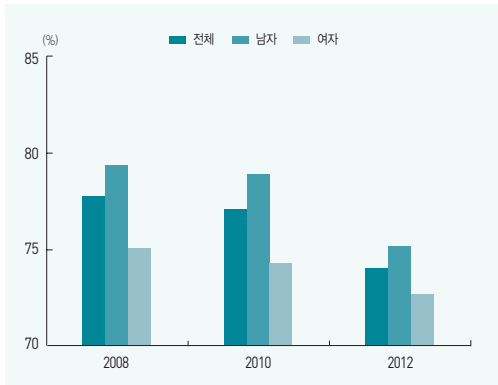


주: 1) 스트레스 인지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매단히 많이 느낀다'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로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년도.

한국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의 지역적 차이를 2008년부터 매년 조사된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조사 첫해인 2008년에는 전라북도가 31.4%로 가장 높고, 전라남도가 21.5%로 가장 낮다. 2009년 스트레스 인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은 제주도와 전라남도도 각각 33.0%와 21.9%이다. 2010년은 인천시가 30.6%로 가장 높으며, 전라남도가 23.0%로 가장 낮다. 2011년에는 인천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31.3%와 22.5%, 2012년은 인천시와 경상남도가 각각 31.5%와 23.6%로 스트레스 인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으로 드러났다. 스트레스 인지율이 가장 높거나 낮은 지역이 매년 변하기는 하지만, 대략 한국인 10명 중 2-3명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인지율에 있어서 지역 간 차이가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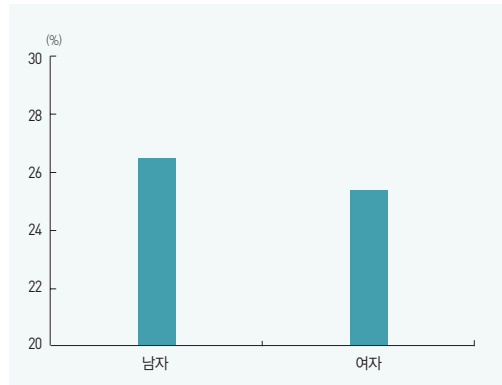
[그림 III-20]은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파악한 직장생활 영역에서의 스트레스 수준('매우 많이 느낌'과 '느끼는 편임'을 합한 수치)을 보여준다. 스트레스 수준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08년의 경우 남성 79.4%, 여성 75.1%, 2010년 남성 78.9%, 여성 74.3%, 2012년 남성 75.2%, 여성 72.7%로 전반적으로 남성의 직장생활 스트레스가 여성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직장에 다니는 한국인의 70-80%는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고,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림 Ⅲ-20 성별 직장생활 스트레스 경험률, 2008-2012



주: 1) 스트레스 경험률은 만 15세 이상 취업자 중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낌'과 '느끼는 편임'을 합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그림 Ⅲ-21 성별 직무스트레스 경험률,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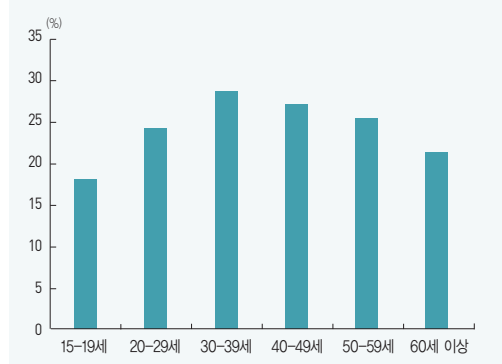
주: 1) 직무스트레스 경험률은 만 15세 이상 취업자 중 작업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대해 '항상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을 합한 비율임.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환경조사」, 2011.

### 사회경제적 특성별 직무스트레스 수준

이제 한국인의 직무스트레스를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살펴보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11년에 수행한 「근로환경조사」는 작업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받는지에 대해 묻고 있다. 구체적인 작업 상황에서 기인한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측정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26.5%)이 여성(25.4%)보다 일 수행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28.8%)와 40대(27.2%) 근로자들이 20대(24.4%), 50대(25.6%) 그리고 60대(21.6%) 근로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직무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Ⅲ-21, 그림 Ⅲ-22).

그림 Ⅲ-22 연령집단별 직무스트레스 경험률,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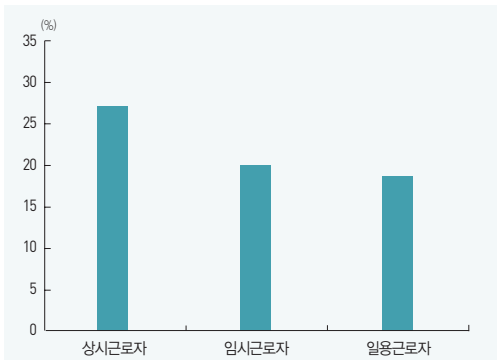


주: 1) 직무스트레스 경험률은 만 15세 이상 취업자 중 작업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대해 '항상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을 합한 비율임.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환경조사」, 2011.

다음으로 근로자들의 종사상 직위 즉, 고용형태별 직무스트레스를 살펴보면, 상시(정규직)근로자(27.3%), 임시근로자(20.1%), 그리고 일용근로자(18.8%)의 순으로 직무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Ⅲ-23).



그림 Ⅲ-23 고용형태별 직무스트레스 경험률,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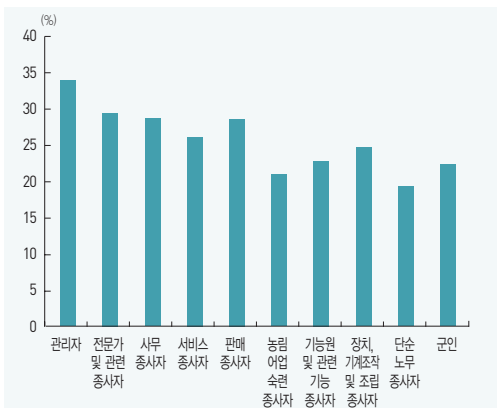


주: 1) 직무스트레스 경험률은 만 15세 이상 취업자 중 작업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대해 '항상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을 합한 비율임.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환경조사」, 2011.

직업별로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은 직업군은 관리자(34.0%)였고, 그 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직 종사자(29.5%), 사무직종사자(28.7%), 판매직종사자(28.7%), 서비스직종사자(26.3%) 등의 순이다.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낮은 직업군은 단순노무직종사자(19.3%)였다(그림 Ⅲ-24).

그림 Ⅲ-24 직업별 직무스트레스 경험률,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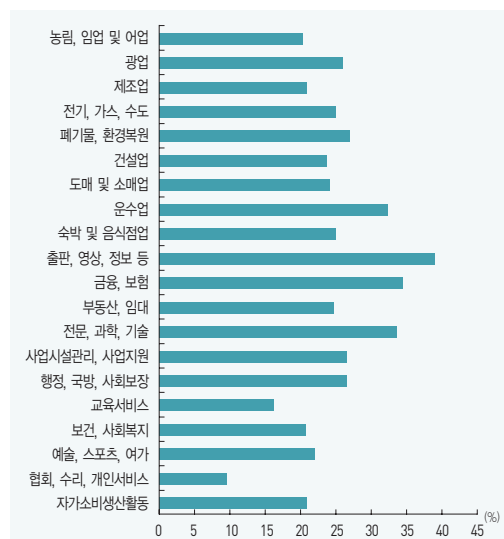


주: 1) 직무스트레스 경험률은 만 15세 이상 취업자 중 작업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대해 '항상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을 합한 비율임.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환경조사」, 2011.

산업별로는 출판·영상·정보(39.8%), 금융·보험(34.6%), 전문·과학·기술업(33.7%), 운수업(32.4%) 종사자들의 30% 이상이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였고, 협회·수리·개인서비스(9.6%), 교육서비스(16.4%)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25).

그림 Ⅲ-25 산업별 직무스트레스 경험률, 2011



주: 1) 직무스트레스 경험률은 만 15세 이상 취업자 중 작업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대해 '항상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을 합한 비율임.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환경조사」, 2011.

직무스트레스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 직장인이 직장 안팎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많은 관련 질병을 초래하기도 한다. 2001년에 실시된 정신질환의 발생분포에 관한 역학 조사에 의하면, 경제활동인구(18~64세) 중 정신질환의 12개월 유병률이



14.4%로 나타났다. 또한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당뇨병 등의 질병 발생이 직장인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직무스트레스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의 건강 및 삶의 질 저하와 함께 재해 및 의료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나아가 우울증 및 자살의 증가와 같은 사회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직장생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대인은 누구나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러한 직무스트레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수준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직업의 특성(예를 들면,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 등)으로 인해 만들어 지는 직업성 긴장(job strain) 수준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주변으로부터 제공받는 사회적 자원(예를 들면, 사회적 지지 등)이나 개인의 성격, 자기존중심 등의 사회심리적 요인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한다. 즉, 사회적 자원의 동원 여부에 따라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직무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거나 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의 완충적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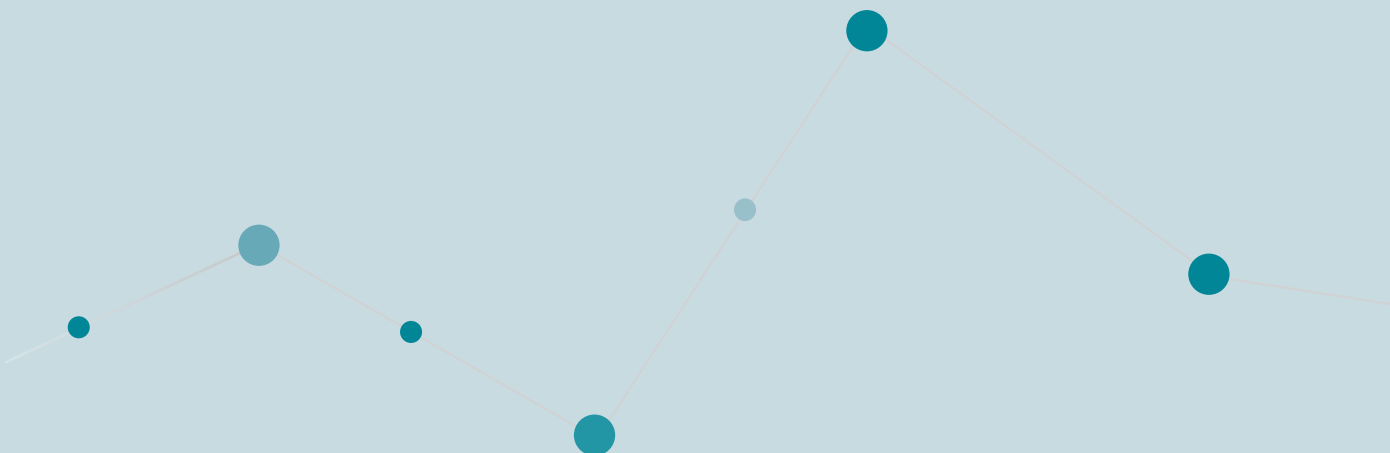
직장이나 국가 역시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회사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 및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하고, 국가는 근로자와 회사를 적절히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생활에 활력소와 동기를 부여해 주고 직무에 대한 몰입과 만족을 주어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적절하게 다스리는가이다.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의 위험을 완화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 완충 전략과 방안을 만들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 회사, 그리고 국가가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 KOREAN SOCIAL TRENDS 2013

## 한국의 사회동향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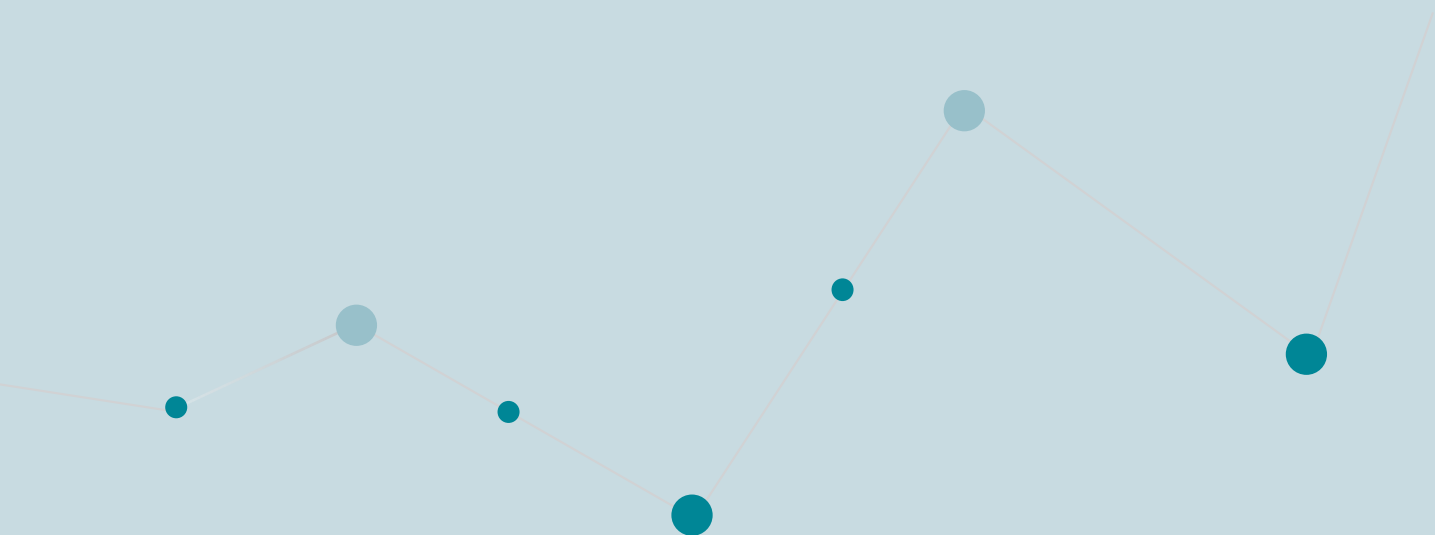


# STATISTICS KOREA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 IV 교육 Education

- 01 교육 영역의 주요 변화 김경근 | 고려대학교 [94](#)
- 0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실태 김경근 | 고려대학교 [104](#)
- 03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황여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12](#)
- 04 학생들의 스트레스 황여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20](#)



## 01

교육 영역의  
주요 변화

김경근(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요 약

- 고등교육기관 취학을 및 진학률은 2000년대 중반까지 상승했으며, 그 이후에는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 하락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도 완만하나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득 수준별 참여율 격차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 전반적으로 2008년 이후에 학생들의 학교 생활만족도가 하락하고 있는데, 대학(교) 이상 재학생들 사이에서 이러한 경향이 특히 두드러진다. 한편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초등 학교에서 가장 가시적인 감소세가 관찰되었다.
- 한국 학생들은 인지적 성취 수준(TIMSS)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성취 수준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학력 간 임금 격차는 점차 확대되어 왔는데, 이는 대졸 이상 집단의 임금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교육은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교육은 지위 상승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온 핵심 동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학력이 개인의 능력을 시현하는 객관적 지표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육은 많은 사람들을 무지와 문맹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지적·정서적·사회적 잠재력을 계발시킴으로써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교육은 또한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산업화와 민주화의 원동력으로도 작용했다. 즉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에서 교육은 국민통합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인력의 양성에도 괄목할 만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교육 영역에서 목도된 주요 변화를 교육기회, 교육의 조건과 과정, 교육효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교육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기회 영역에서는 연도별, 학교급별 취학을 및 진학을 추이와 더불어 학력별 인구분포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실태와 평생교육 참여율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의 조건과 과정 영역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시간,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교원 1인당 학생수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효과 영역에서는 인지적 성취 수준(TIMSS)을 중심으로 살펴본 학업성취 수준, 교육수준별 임금수준 등을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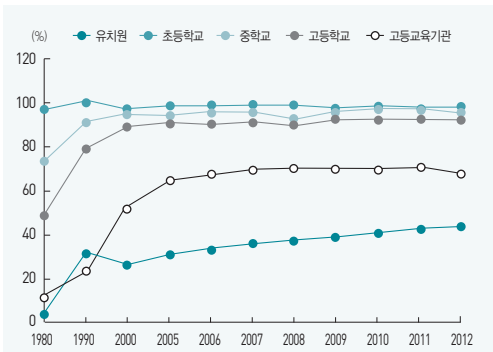
## 교육기회

교육기회 영역의 지표들은 국민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얼마나 향유하고 있는지를 계량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 취학률, 진학률, 학력별 인구분포가 주로 논의되었지만,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것에 대한 참여가 점차 활발해지면서 평생교육 참여율이 새롭게 보고되고 있다. 아울러 사교육이 공교육을 위협할 만한 수준으로 변창함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도 교육기회 영역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는 지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교육기회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현재 어떤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하겠다.

취학률은 교육기회 영역의 지표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고 유용한 것인데, 각 학교급별로 취학 적령 인구 중 실제로 해당 학교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로 측정된다. [그림 IV-1]에는 1980년 이후부터 연도별로 학교급별 취학률이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교 취학률은 이미 1980년에 97.7%로 실질적으로 완전 취학 수준에 도달한 후에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취학률은 1980년대에 괄목할 만하게 높아졌으며, 그 상승세가 1990년대까지도 이어졌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중학교는 90% 중반, 고등학교는 90% 초반 수준에서 취학률이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그림 IV-1 학교급별 취학률, 1980-2012



- 주: 1) 취학률=(취학 적령의 재적 학생수÷취학 적령 인구)×100.  
 2) 유치원의 경우 1992년부터 취원 적령이 4-5세에서 3-5세로 확대되었으며 1990년 이전 자료는 4-5세를 취원 적령으로 하여 산출되었음. 유치원 재적 원아수에는 6세 이상 아동이 포함됨.  
 3) 1990년대 초등학교 취학률이 100%를 초과하는 것은 취학 적령기(6-11세) 이전 또는 이후에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더러 있기 때문임.  
 4) 고등교육기관에는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이 포함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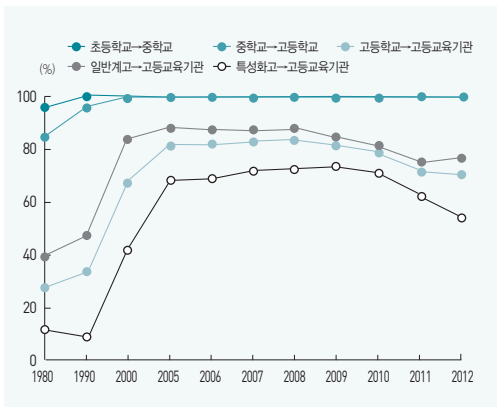
유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보편교육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 더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교를 포함한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졸업정원제가 실시된 1980년대 초반 이후에 급속히 증가하였고, 1995년에 정부가 대학설립 인허가권을 포기하고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채택하면서 다시 2000년대 중반까지 상승세가 탄력을 받게 된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상당 기간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 하락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심각한 고학력 실업 문제와 고졸자 채용 확대 정책 등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현재 유치원 취원율은 44.0%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학교급에 비하

면 현저하게 낮다. 일반적으로 유아교육의 효과는 다른 어느 학교급보다 크고 그 효과가 일생 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할 때 저조한 유치원 취원율은 교육기회 신장의 측면에서 한국 교육이 극복해야 할 취약점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계층 간 교육격차의 해소에 취약계층 아동의 유치원 취원을 제고가 매우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진학률도 취학률과 함께 교육기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진학률은 각 학교급별로 전체 졸업생 가운데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비율로 측정한다. 이 때문에 진학률은 상급 학교 진학 과정에 존재하는 입시와 같은 진입장벽에 의해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다. [그림 IV-2]는 각 학교급의 진학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IV-2 교육단계별 진학률, 1980-2012



주: 1) 진학률=(당해 연도 졸업자 중 진학자÷당해 연도 졸업자)×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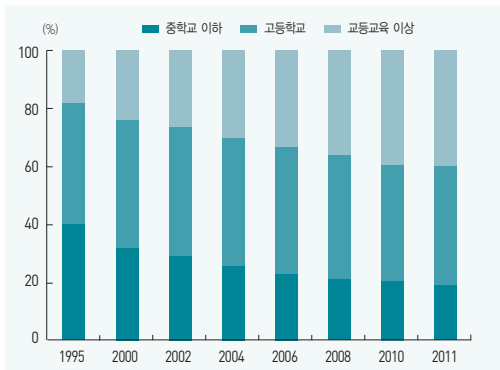
초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은 최근 10년 이상 99.9%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 역시 200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99.6-99.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2009년에 81.9%로 정점에 도달한 후에 2010년 79.0%, 2011년 72.5%, 2012년 71.3%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2010년에 비해 2011년에 하락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2011년부터 보다 정확한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산출을 위해 조사기준을 4월 1일 현재 대학등록자로 조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2011년 이전에는 2월 졸업 당시 대학 합격자를 기준으로 진학률을 산출했었다. 한편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의 변화 양상을 고등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계고에 비해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졸업자의 진학률이 더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졸자의 실업문제와 고졸자 취업 확대 정책 등에 의해 일반계고 출신보다는 특성화고 출신들이 더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인의 학력별 인구분포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국민의 교육기회 향유 정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림 IV-3]은 25-64세의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산출된 학력별 인구분포를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다. 이 지표는 전체 인구의 교육수준을 각 시점별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인적자원 정책의 기초자료로 자주 활용된다.





그림 IV-3 인구의 학력구성, 1995-2011



주: 1) 인구는 25-64세의 성인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1997-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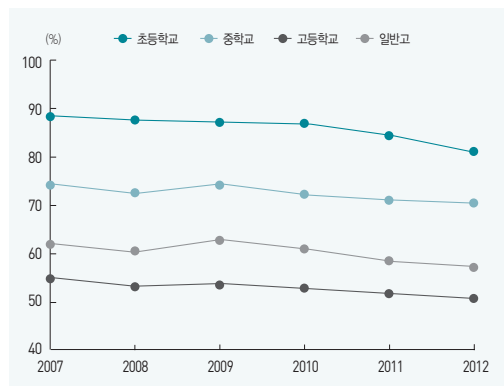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고등교육을 이수한 인구의 비율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구체적으로 1995년에는 성인 인구 중에서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집단의 비율이 40%이고 고등교육을 마친 인구의 비율은 18%였지만, 2011년에는 중졸 이하 학력 소유자의 비율은 19%로 떨어지고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율은 40%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시간의 경과와 함께 국민의 평균 교육연한이 계속 높아지게 되었다. 이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을 이수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기회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학생들의 교육성고가 사교육에 대한 접근 가능성 및 활용 양상에 따라 결정되는 정도가 점차 커지면서 사교육 참여율이 교육기회 영역의 주요 지표로 등장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공교육에 비해 사교육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사교육이 계층

고착화의 핵심 기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을 반영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그림 IV-4]에는 연도별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제시되어 있다. 초·중·고 학생 전체의 사교육 참여율은 통계청이 「사교육비 조사」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2007년에 77.0%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 2010년 73.6%, 2011년 71.7%, 2012년 69.4%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이 80%대로 가장 높았지만,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다른 학교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초등학교 다음으로는 중학생의 사교육의 참여율이 높아 70%대에 머물고 있었다. 고등학생 전체로는 50%대의 사교육 참여율을 보이고 있지만, 일반고 학생들만 놓고 보면 고등학생 전체 평균보다는 7%p 정도 높은 사교육 참여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IV-4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2007-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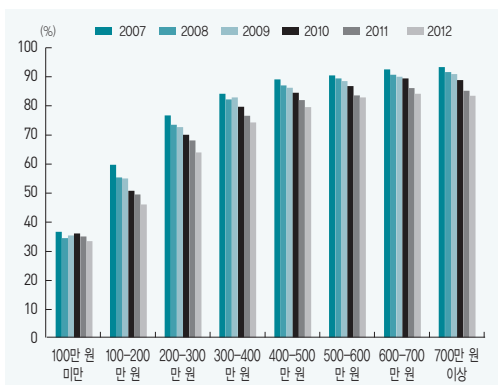


주: 1) 사교육 참여율은 해당 학교급별 조사대상 학생 중 지난 3개월 동안 유료로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각 연도.



한편 사교육 참여율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가시적인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림 IV-5]는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나타나듯이 사교육 참여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뚜렷하게 증화되어 있다. 소득수준이 월평균 1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속한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소득이 600~700만 원 미만이나 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90%가 넘는 참여율을 보일 정도로 소득수준에 따라 참여율 격차가 크다.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사교육 참여율이 하락하면서 집단 간 차이가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그 격차는 현격한 편이다. 비록 여기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집단은 낮은 참여율을 보이는 집단에 비해 지출액 자체도 클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기회가 실질적

그림 IV-5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2007~2012



주: 1)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 조사대상 학생 중 지난 3개월 동안 유료로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2) 소득수준은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임.

출처: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각 년도.

으로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부와 빈곤의 대물림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그림 IV-6]은 교육기회 영역의 지표 가운데 하나인 평생교육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은 크게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으로 나눌 수 있으며, 평생교육 참여율은 25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들 중에서 각 유형의 교육에 참여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형식교육은 방송통신대에서 제공하는 교육처럼 학습자들의 교육 참여 경험의 체계화되어 있음은 물론 그 경험이 사회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교육 유형을 가리킨다. 비형식교육은 각종 평생교육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처럼 교육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 경험이 사회적으로 공인받지 못하는 교육 유형을 일컫는다(김한별, 2011).

[그림 IV-6]에 나타나 있듯이 전반적으로 형식교육에 대한 참여는 정체 내지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비형식교육에 대한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형식교육에 대한 참여의 감소분을 비형식교육에 대한 참여의 증가분이 능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5.6%인데, 이는 2008년의 26.4%에서 매년 조금씩 참여율이 높아져서 나타난 결과이다.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 및 지원의 증가와 함께 비형식교육에 대한 참여율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V-6 평생학습 참여율, 2007-2012



주: 1) 평생학습 참여율은 만 25-64세 이하 성인인구 중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인구의 비율임.  
 2) 형식교육은 평생학습 중에서 학력인정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졸업장이나 학위의 취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교육임.  
 3) 비형식교육은 형식교육과 동일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교수과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며 국가의 학력 또는 학위 인증을 받지 않는 교육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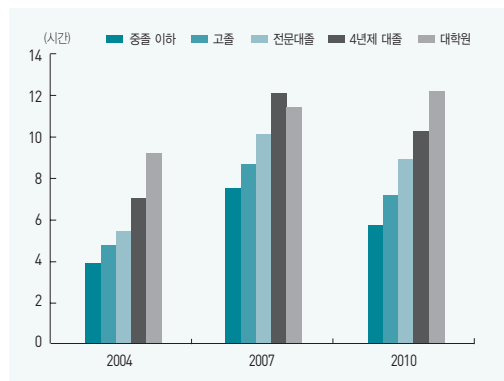
## 교육의 조건과 과정

교육의 조건과 과정 영역 지표들은 학습자 수준과 학교 수준으로 구분되는데, 직·간접적으로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학습자 수준의 대표적인 지표로는 학습시간, 학교생활만족도 등을 들 수 있고, 학교 수준에서는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등이 가장 많이 논의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교육의 조건 및 과정 영역에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학습시간은 교육성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한편 그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학

생들은 매우 긴 학습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처럼 긴 학습시간을 고려했을 때는 뛰어난 학업성취에도 다소간 거품이 끼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종종 제기되고 있다. [그림 IV-7]에는 부모 교육수준별로 중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이 제시되어 있다. 중학생의 국어·영어·수학 3과목에 대한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은 증가하고 있다. 2004년 평균 5.45시간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8.51시간, 그리고 2010년에 8.54시간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2004년에 비해 2007년에 중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이 크게 증가한 사실이 눈에 띈다. 여기에는 2004년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발표되고 후속 조치로 특목고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이 도입된 것 등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된다.

그림 IV-7 중학생의 부모 교육수준별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 2004-2010



주: 1) 조사대상은 중학교 3학년생임.  
 2)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은 학교 수업 및 학원(과외) 수업을 제외하고,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숙제나 공부를 위해 1주일에 평균 투입하는 시간을 과목별로 합산하여 산출하였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 수준 및 실태조사: 중학교」, 1주기-3주기 데이터.

중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은 부모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분명히 달라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대체로 부모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기주도적 학습시간도 더 길어진다. 아울러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의 증가폭에서도 부모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가 중졸 이하인 집단에서는 2004년 코호트에 비해 2010년 코호트의 경우 학습시간이 1.81시간만 증가한 반면, 부모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집단의 경우에는 2004년 코호트에 비해 2010년 코호트에서 학습시간이 약 2.98시간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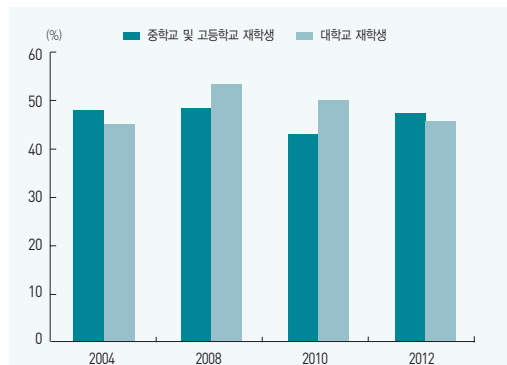
기본적으로 일반고 학생들도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의 시계열적 변화 양상 및 가정배경에 따른 학습시간의 격차라는 측면에서 중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에도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이 처음 조사가 이루어진 2003년에 비해 2006년에 크게 늘어나지만 2009년에는 다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2003년에 비해 2006년에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이 크게 증가한 것은 2004년에 발표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2006년에 비해 2009년에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이 다시 감소하게 된 것은 2006년부터 전면 실시된 방과후 학교 때문에 수준별 수업 등이 늘어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이 증가하면서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학습시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도 중학생의 경우와 흡사했다. 이는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한 교육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더라도 계층 간 교육격차는 완화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해 준다.

다음으로 교육의 조건과 과정 영역의 지표 가운데 학생들의 주관적 삶의 질과 관련된 학교생활만족도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으면 학교적응이 순조로워 학업성취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먼저 응답자 전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2004년과 2008년 사이에는 학교교육에 만족하는 학생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했지만, 그 이후에는 만족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IV-8). 2008년 이후의 학교생활만족도 감소는 대학(교) 이상 재학생들 사이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가 하향세를 그리게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8 학교급별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도, 2004-2012



주: 1) 학교생활 만족도는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15세 이상) 중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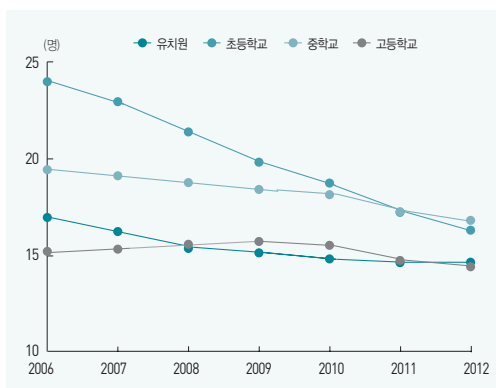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대학(교) 이상 재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2008년 53.5%, 2010년 50.2%, 2012년 46.0%로 4년 사이에 약 7.5%p 감소하였다. 이처럼 최근 들어 대학(교) 이상 재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은 이들이 직면해 있는 엄혹한 현실 때문일 개연성이 크다. 즉 이전 세대에 비해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대학에 입학하여 취업을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여전히 암울한 취업 전망이 이들의 학교생활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학습자 수준 지표들을 중심으로 교육의 조건과 과정 영역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대표적인 학교 수준의 지표인 교원 1인당 학생수의 변화 추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수준 및 교수의 질을 가늠하게 하는 유용한 지표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한국이 그간 비약적인 교육발전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그림 IV-9]에는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제시되어 있다.

모든 학교급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시계열적 감소세의 정도는 학교급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여타 학교급에 비해 초등학교의 감소폭이 눈에 띄게 큰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가시적인 감소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초등학교에서

교원 1인당 학생수의 두드러진 감소가 이루어진 데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초등학생 수의 격감도 일조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IV-9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수, 2006-2012



주: 1) 교원 1인당 학생수=재적학생수÷재직교원수.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교육효과

교육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는 상당히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 수준을 보여주는 TIMSS 성적, 교육수준별 월평균 임금수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는 만 13세(중학교 2학년)와 만 9세(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수학 및 과학 성취도의 추이 변화를 파악하고,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교육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자 실시되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다. 이 평가에는 2011년 현재 총 50개국이 참여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만

13세 학생들의 성취도 평가 결과만을 제시했는데, 그 개요가 <표 IV-1>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 학생들의 수학, 과학 성취도는 무척 높은 편이다. 수학의 경우 1995년 581점에서 1999년 587점, 2003년 589점, 2007년 597점, 2011년 613점으로 지속적으로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순위 역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 실시된 2011년 평가에서는 평가대상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과학의 경우에도 순위에 다소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3위에서 5위 사이를 유지하며 우수한 성취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1 IEA 학업성취도(TIMSS) 순위와 점수, 1995-2011

연도	수학		과학	
	점수	순위	점수	순위
1995	581	3	546	4
1999	587	2	549	5
2003	589	2	558	3
2007	597	2	553	4
2011	613	1	560	3

주: 1) 분석대상은 만 13세(중 2) 학생들의 성취 수준임.

2) TIMSS에서 공표되는 성취도 점수는 평균이 500이고 표준편차가 100인 척도 점수임.

출처: IEA, TIMSS 2011 International Results in Mathematics, 2012; TIMSS 2011 International Results in Science, 2012.

주지하듯이 공교육비 중 정부부담률은 한국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권인 반면, 민간부담률은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매우 열악함에도 학생들은 뛰어난 학업성취를 거두는 다소 불가사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학

생들의 뛰어난 학업성취는 공교육의 성취라기보다는 사교육에 힘입은 결과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표 IV-2>에는 교육수준별 월평균 임금수준을 제시하였다. 학력 간 임금 격차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대졸 이상 집단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을 기준으로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78만 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174만 원으로 17년 동안에 123% 정도 증가하였다. 반면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995년 약 126만 원에서 2012년에 326만 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에 약 159% 높아졌다. 그 결과 1995년에는 대졸 이상 집단의 임금수준이 중졸 이상 집단에 비해 약 62% 가량 더 높았지만, 2012년에는 그 격차가 약 87%로 확대되었다.

표 IV-2 교육수준별 월평균 임금액, 1995-2012

(1,000원)

연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4년제 대졸 이상	전체
1995	782	861	936	1,264	928
2000	1,042	1,186	1,226	1,789	1,314
2005	1,384	1,618	1,675	2,506	1,888
2008	1,614	1,894	1,981	2,950	2,259
2010	1,674	1,947	2,070	3,006	2,360
2012	1,741	2,112	2,291	3,264	2,567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2) 임금은 월급여액(정액급여+초과급여)으로 상여금(보너스) 등은 제외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년도.



교육수준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받게 되는 경제적 보상에 큰 격차가 존재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학력주의가 더욱 강고해져 온 측면이 있다. 최근 들어 다소 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대다수가 대학 진학에 매달리고, 좀 더 나은 평판을 지닌 대학

에 진학하기 위해 재수, 삼수를 불사하는 현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고학력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일단 취업에 성공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의 소유자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높은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력주의에 대한 믿음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

#### 참고문헌

김한별. 2011.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동향.” 『한국의 사회동향 2011』.





## 0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실태

김경근(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요 약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2010년 이후에 매년 조금씩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2년 현재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고,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가장 낮았다.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실업률은 2000년 이후에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문대졸보다는 4년제 대졸 이상 집단의 실업률이 낮았다. 유휴청년층(NEET)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비구직 NEET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 학력이 높을수록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 보유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집단에서는 전공과 직업이 불일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상당히 강했다.
- 한국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의 고용률은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신분 상승에서 고등교육이 갖는 효용성에 대한 강고한 믿음이 대학 진학에 대한 집착을 추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등교육이 높은 진학률에 상응하는 성과를 산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특히 대졸 청년층이 겪고 있는 심각한 실업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대학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등교육을 마친 젊은 이들 가운데 많은 수가 실업 상태에 있거나 유휴청년층(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NEET'라는 개념은 1999년에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부터 일본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되었는데,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청년층을 지칭한다.

인적자본 축적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시기의 청년층 가운데 상당수가 노동시장에서 격리되어 생활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과 좌절을 안겨줄 수 있거니와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궁극적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에도 큰 위협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에서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실태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추이를 학교급별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전공계열별 및 성별에 따라 취업률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연도별로 실업률 추이를 살펴볼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NEET의 실태도 고



찰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취업의 질을 따져보는  
작업의 일환으로 전공-직업 일치 정도에 대한  
취업자의 인식도 제시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고용률의 상대적 위치를 살펴보겠다.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먼저 개괄적인 수준에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의 취업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IV-3>에는  
2010년 이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이  
연도별로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고등교육기  
관 졸업자의 취업률을 2010년 이후로 한정하  
는 통계의 산출 방식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9년까지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보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취업률이 산출되다가  
2010년부터는 건강보험 DB와 연계하여 취업률  
이 추계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이전과 2010  
년 이후에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새로운 취업률 산출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통계가 더 엄밀하고 정확  
하게 작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IV-3>에 나타나 있듯이 고등교육기관 졸  
업자의 취업률은 2010년 이후에 매년 조금씩 높  
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취업률의 상  
승세는 4년제 대학 졸업자들에서 두드러지게 나  
타나고 있는 반면, 대학원에서 석사나 박사학위  
를 취득한 졸업자들의 경우에는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취업률이 오히려 하락했음을 알 수 있  
다. 2012년 현재 취업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대  
학원 졸업자인데, 그 중에서도 석사학위 취득자  
(68.7%)보다는 박사학위 취득자(72.1%)가 더 높  
은 취업률을 보였다. 반면 4년제 대학 졸업자  
(56.2%)의 취업률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학 졸업자(60.8%)의 취업률이 낮았다. 이  
러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실태는 4년  
제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  
학원 진학이 갖는 매력을 높일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표 IV-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2010~2012 (%)

연도	전체	전문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사	박사
2010	55.0	55.6	51.9	69.4	74.2
2011	58.6	60.7	54.5	70.8	75.1
2012	59.5	60.8	56.2	68.7	72.1

주: 1) 취업률=(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  
유학생+제외대상)))×100.

2) 취업률은 당해 연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대학 및 일반대학원의  
전년도 후기(8월) 졸업자와 당해 연도 전기(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각 연도.

### 전공계열 및 성별 취업률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전공계열이  
나 성별에 따라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표 IV-  
4>에는 전문대학 졸업자의 전공계열 및 성별 취  
업률이 제시되어 있다. 성별에 따른 취업률 차이  
가 크지는 않지만, 전공계열별로는 성별에 따라  
취업률에서 가시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표 IV-4 전문대학 졸업자의 전공계열 및 성별 취업률, 2010-2012 (%)

전공계열	2010		2011		2012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체	56.0	55.2	61.0	60.4	61.5	60.3
인문	51.1	47.0	51.7	50.9	51.0	50.4
사회	55.5	57.7	57.8	60.7	58.9	60.9
교육	62.6	74.5	63.2	78.9	69.6	80.1
공학	61.7	54.9	67.8	60.7	67.4	60.6
자연	51.5	46.4	55.3	53.8	58.8	52.1
의약	58.8	71.2	63.8	75.6	64.2	73.2
예체능	39.0	33.5	46.1	41.7	46.5	43.6

주: 1) 취업률=(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 유학생+제외대상)))×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각 년도.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취업률 차이가 크지 않지만 교육계열, 의약계열 등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확연히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공학계열과 자연계열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취업률이 높다. 이러한 취업률에서의 남녀 간 격차는 2010년 이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교육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고, 의약계열, 공학계열, 사회계열, 인문계열이 그 뒤를 잇는 양상을 보였다. 취업률이 가장 낮은 것은 예체능계열이었다. 교육계열의 취업률이 높고, 특히 이 계열의 여성 졸업자들이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것은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졸업과 동시에 유아교육기관에 취업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V-5〉에는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전공계열 및 성별 취업률이 정리되어 있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전체 취업률에서 성별에 따라 눈에 띄는 차이가 없었지만, 4년제 대학 졸업자

표 IV-5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전공계열 및 성별 취업률, 2010-2012 (%)

전공계열	2010		2011		2012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체	55.7	47.9	58.7	50.0	60.1	52.1
인문	44.6	43.1	50.6	44.4	51.0	47.2
사회	52.0	51.9	54.2	52.7	55.2	53.6
교육	38.1	39.5	40.1	45.2	46.5	50.2
공학	64.5	60.9	68.0	62.2	68.9	62.0
자연	52.6	47.8	55.0	48.6	55.1	50.0
의약	80.8	69.9	79.4	75.2	79.8	71.7
예체능	42.0	33.0	43.3	34.7	49.3	41.1

주: 1) 취업률=(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 유학생+제외대상)))×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각 년도.

중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8%p 정도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취업률에서의 남성 우위 현상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유지되고 있다.

전공계열별로도 교육계열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계열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은 특히 공학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에서 여성에 비해 취업률에서 뚜렷한 우위를 보여 주었다. 의약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고, 공학계열, 사회계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취업률이 가장 낮은 것은 예체능계열이다. 최근 정부는 계열의 특성상 취업률이 낮거나 파악이 어려워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는 대학 측의 주장을 반영하여 앞으로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은 대학평가지표 중 취업률 부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표 IV-6〉에는 대학원 졸업자의 전공계열 및 성별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잘 나타



나 있듯이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해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취업률의 남녀 간 격차가 훨씬 더 심하다. 남성이 여성보다 현저하게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격차가 특별히 개선되는 조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예체능계열에서 성별 격차가 컸다.

**표 IV-6** 대학원 졸업자의 전공계열 및 성별 취업률, 2010-2012 (%)

전공계열	2010		2011		2012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체	78.9	58.3	80.6	59.4	77.0	59.2
인문	48.6	39.8	56.7	39.3	50.4	40.2
사회	75.3	58.7	78.0	59.8	75.3	61.2
교육	75.7	66.1	82.6	68.7	78.8	70.5
공학	83.8	73.2	84.0	73.5	80.0	68.9
자연	75.1	62.6	75.9	62.9	72.6	61.7
의약	93.3	78.3	92.5	79.3	91.7	78.4
예체능	51.3	27.4	49.9	26.3	49.7	25.6

주: 1) 취업률=(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 유학생+제외대상))×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각 년도.

전공계열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의약계열이 가장 높고 교육계열, 공학계열, 사회계열 등이 그 뒤를 잇는 양상을 보였다. 예체능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낮았는데, 이 계열의 경우 2012년 현재 대학원 졸업자 가운데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이 남성도 50%를 넘지 못했고 여성의 경우에는 25.6%에 불과했다. 예체능계열보다는 사정이 조금 낫지만, 인문계열의 취업률도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 실업 및 NEET 상태

실업률은 취업률과는 다른 방향에서 학교교육의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다. 취업률이 학교교육의 단기적인 성과지표라면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성과지표로 볼 수 있다. 실업자는 지난 4주간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고 일자리가 있으면 곧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 같은 실업자의 정의에 따르면 구직 의사가 있어도 적극적으로 구직에 나서지 않고 가사노동에 종사하거나 취업준비를 하고 있으면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층의 고용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청년층의 실업통계와 관련하여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인 청년들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이 공식실업률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표 IV-7〉에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실업률이 연령대별로 제시되어 있다. 전문대졸이나 4년제 대졸 이상을 막론하고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실업률은 2010년에 일시적으로 약간 상승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2000년 이후 어느 연도에서건 전문대졸보다는 4년제 대졸 이상 집단의 실업률이 낮았다. 또한 동일한 학력을 갖고 있더라도 20대의 실업률은 30대나 40대보다 높다. 이는 급속한 학력 상승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에서 대졸자의 상대적 희소성이 갈수록 떨어지

게 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대의 경우에 전문대 졸업자는 2000년 이후 실업률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4년제 대졸 이상은 정체가 내지는 상승의 양상을 노정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여겨진다. 적어도 20대 고학력자에게는 시간이 흐를수록 취업 전망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저간의 현실이라 하겠다.

표 IV-7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연령집단별 실업률, 2000-20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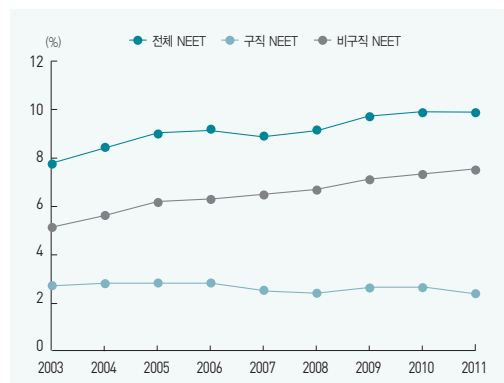
연도	전체		20대		30대		40대	
	전문대졸	4년제대졸 이상	전문대졸	4년제대졸 이상	전문대졸	4년제대졸 이상	전문대졸	4년제대졸 이상
2000	6.3	3.3	8.1	5.9	4.2	2.4	5.2	2.2
2002	4.9	3.0	6.2	6.7	4.0	2.4	2.4	1.3
2004	4.7	2.9	6.7	6.7	2.7	2.1	2.3	1.6
2006	4.3	2.9	6.2	7.2	3.0	2.1	1.9	1.4
2008	3.7	2.7	6.1	6.3	2.3	2.2	1.7	1.4
2010	4.6	3.1	7.0	7.5	3.7	2.6	2.6	1.9
2012	3.7	2.9	5.9	8.1	3.1	2.2	2.2	1.4

주: 1)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100, 구직기간 1주 기준.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청년층이 직면해 있는 비노동력화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유휴 청년층(NEET)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NEET는 크게 구직 NEET와 비구직 NEET로 나눌 수 있다. 구직 NEET는 노동시장에 남아 구직활동을 계속하는 청년을 가리키는 바, 대부분 실업자와 중첩된다. 비구직 NEET는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은 채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을 일컫는데, 가장 대표적인 취업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V-10]에는 국내에서 NEET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남재량(2012)이 15-34세 인구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NEET 실태를 정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 그림은 NEET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3년에는 15-34세 인구 가운데 NEET 비율이 7.8%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9.9% 수준까지 높아졌다. 특히 청년실업과 관련하여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구직 NEET의 증가세가 조금 더 두드러져서 2003년에는 그 비율이 5.1%였지만 2011년에는 7.5%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NEET는 비구직 NEET와 흐름을 같이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직 NEET의 비율은 완만한 하락 내지 조정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앞서 <표 IV-7>에서 살펴본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실업률 하락 추세와 부합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IV-10 청년층 NEET 비율, 2003-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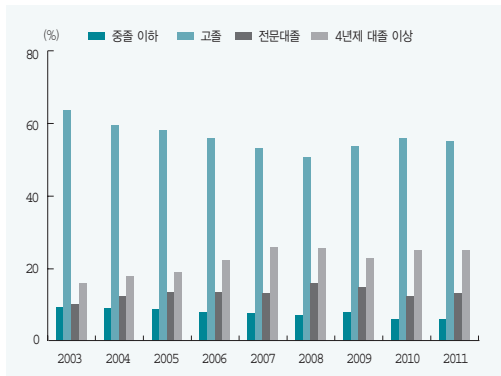


주: 1) NEET 비율은 15-34세 인구에서 NEET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남재량, 2012.



[그림 IV-11]에는 비구직 NEET의 학력별 비중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국내 비구직 NEET 중에서는 고졸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03년에는 전체 비구직 NEET 가운데 63.6%가 고졸이었는데 2011년 현재는 그 비중이 55.2%로 다소 감소한 상태이다. 고졸자 비구직 NEET와 마찬가지로 중졸 이하 비구직 NEET도 그 비중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다. 반면 전문대졸 및 4년제 대졸 이상 비구직 NEET는 약간 증가하고 있다. 특히 4년제 대졸 이상 비구직 NEET의 비중은 2003년에 16.3%이던 것이 2011년에는 25.3%까지 높아져 있다. 전문대졸 출신 비구직 NEET도 증가세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2008년에 정점에 이른 후에는 조정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2003년 이후 비구직 NEET에서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상승한 것은 노동시장 상황에는 아랑곳없이 대학 진학률이 높게 유지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그림 IV-11 비구직 NEET의 학력별 구성비율, 2003-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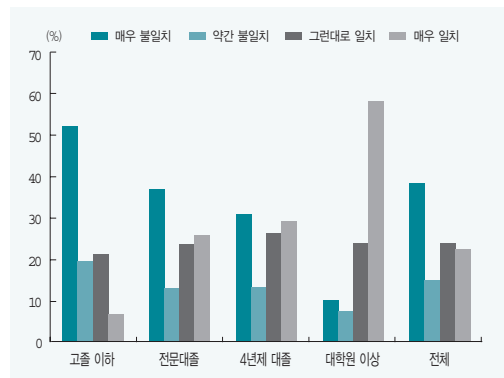
출처: 남재량, 2012.

## 전공-직업 일치에 대한 인식

일반적으로 취업의 질은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는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전공-직업의 일치도가 높으면 생산성이 제고되어 임금에 긍정적인 혜택을 받고 경력관리에서도 유리할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구직환경에서는 전공-직업 일치 정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줄곧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낮은 생산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림 IV-12]에는 학력별 전공-직업 일치 정도에 관한 취업자의 인식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제시된 전공-직업 일치 정도에 관한 인식은 통계청의 2012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것인데, 고등

그림 IV-12 청년층 취업경험자의 학력별 전공-직업 일치에 대한 인식, 2012



주: 1) 설문문항은 최종 학교를 졸업/중퇴한 만 15-29세의 취업경험자를 대상으로 '지난주 일자리 또는 가장 최근에 경험한 일자리는 최종 학교 전공과 비교하여 어떠했습니까?' 라고 조사되었음.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층·고령층)」,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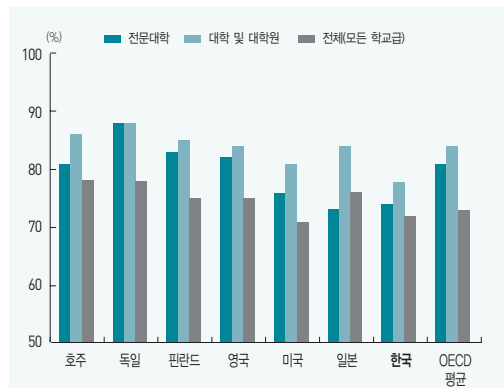
교육기관 졸업자와의 비교를 위해 고졸 이하 및 전체 학력에 대한 조사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학력별로 그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공-직업 일치 정도는 학력과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학력이 높을수록 전공-직업 불일치에 응답하는 비율이 낮을 반면, 전공-직업 일치에 응답하는 비율은 높았다. 특히 대학원 이상 학력을 지닌 집단의 경우에는 약 82%(매우 일치 58.1% + 그런대로 일치 23.8%)가 전공과 직업이 '일치한다'고 응답했다. 4년제 대졸 학력을 가진 집단에서도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는 것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55.7%(매우 일치 29.2% + 그런대로 일치 26.5%)로 양자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여기는 비율(44.3%)보다 높았다. 반면 전문대졸 이하의 학력 집단에서는 전공과 직업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보다 우세했다. 특히 고졸 이하 학력 집단에서는 전공과 직업이 매우 불일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만 52.2%에 달했다. 이를 통해 국내 청년층의 전공-직업 불일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궁극적으로 이들의 노동 성과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고용률 국제비교

여기에서는 OECD 주요 국가들의 상응한 학력 집단에 비해 국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어떠한 수준에 놓여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IV-13]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한국은 물론 다른 OECD 국가들에서도 학력은 고용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전문대 졸업자의 고용률이 전체 평균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소 예외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고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독일이었고 핀란드, 호주, 영국 등이 그 뒤를 이었

그림 IV-13 OECD 주요국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고용률, 2011



주: 1) 조사대상은 25-64세 성인 인구임.

2) OECD 평균의 고등학생은 일반계열만 포함함.

3) 고용률=(취업상태 인구÷(경제활동+비경제활동 인구))×100.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2013.





다. 독일의 경우 전문대 졸업자가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 전문대 졸업자의 위상이 상당히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고용가능성도 높아진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교육은 노동시장에서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습득한 이러한 지식이나 기술은 노동시장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아울러 교육은 새로운 정보를 적절히 처리하거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제고한다. 이에 따라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주어진 과업을 잘 수행함은 물론 새로운 과업에도 훨씬 용이하게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IV-13]에서 드러난 학력과 고용률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은 교육이 고용가능성에 대해 발휘하는 이 같은 효과가 국경을 초월하여 두루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한편 한국의 경우 전체 고용률은 OECD 평균과 거의 유사하지만,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의 고용률은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았고, 전문대학 졸업자의 고용률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노동성과가 여타 OECD 국가들의 상응한 학력 소유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시사해 준다.

#### 참고문헌

남재량. 2012. “고졸 NEET와 대졸 NEET.” 『노동리뷰』 85: 39-54.



## 03

##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황여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요 약

-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생활·직업·취업에의 활용보다 지식·기술 습득에서 더 높다.
- 연령이 높을수록 학교교육의 효과를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다.
- 한국 학생들의 학교교육의 실생활 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비교적 낮은 편이며, 특히 직업세계 준비 효과에 대한 평가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고등학교 진학률이 99%에 이르고 대학 진학률 또한 70%를 상회할 만큼 한국인의 교육수준이 높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학교교육을 받는 이유는 이를 통해 삶에 도움이 되는 가치들을 획득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허경철 외, 1998). 우리는 학교를 다님으로써 사회 성원으로 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및 가치관을 전달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학교교육을 마치고 나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지식·기술의 습득과 직업획득에의 활용과 같은 편익은 학교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대표적인 가치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학교교육이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한다면 사회구성원들이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대로 학교교육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삶의 질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구성원들이 학교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개괄적인 수준에서 최근 수년 간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교육의 효과는 지식·기술 습득과 생활·직업·취업에의 활용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것이다.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은 평가자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재학생과 졸업생 집단을 구분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



볼 것이다. 재학생의 경우에는 학교급별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졸업생의 경우에는 주요 특성별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상대적 수준도 관찰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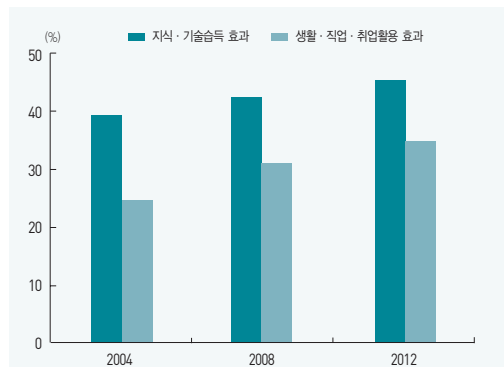
###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의 변화 추이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의 변화 추이를 개괄하기 위해 재학생과 졸업생을 포함하는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식·기술 습득 효과와 생활·직업·취업에의 활용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을 [그림 IV-14]에 제시하였다.

먼저 학교교육의 지식·기술 습득 효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학교교육이 지식·기술 습득에 '효과가 있다'는 응답비율은 2004년 39.5%에서 2008년 42.5%, 2012년 45.4%로 점차 증가해 왔다. 그러나 증가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아 학교교육의 지식·기술 습득 효과에 대한 평가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이미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학교교육을 통해 획득한 지식·기술이 졸업 후 실생활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실제 경험에 근거했을 가능성이 높다.

학교교육의 생활·직업·취업에의 활용 효과에 대한 인식은 지식·기술 습득 효과에 대한 인식보다 더 부정적이다. 지식·기술 습득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40%를 상회했던 데 비해, 생활·직업·취업에의 활용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2004년 24.7%, 2008년 31.1%, 2012년 34.9%로 상대적으로 낮다. 이처럼 지식·기술 습득 효과에 비해 생활·직업·취업에의 활용 효과가 낮게 인식되는 것은 학교에서 주로 가르치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간 한국의 학교교육은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하거나 진로·직업교육을 통해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기보다는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해 지식·기술 습득에 비해 실생활 적용 가능성은 더 낮게 체감될 소지가 있다.

그림 IV-14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2004-2012



주: 1) 통계치는 만 15세 이상 인구(2012년은 13세 이상 인구) 중 해당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해 '매우 효과가 있다' 또는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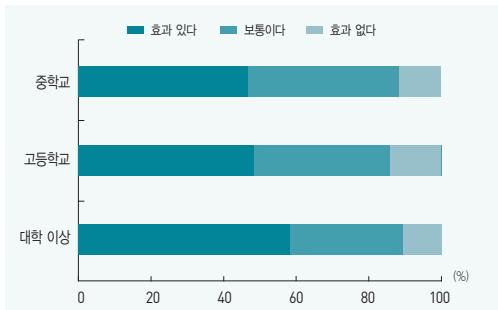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 학교교육의 지식·기술 습득 효과에 대한 인식

먼저 현재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IV-15]에는 지식·기술 습득 효과에 대한 중·고등학교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들의 인식 수준이 제시되어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46.9%, 47.9%로 절반에 채 이르지 못한 데 비해,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58.8%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반면 ‘효과가 없다’는 응답비율은 중학생 11.3%, 고등학생 13.9%, 대학·대학원생 10.6%로 고등학생이 가장 높다. 고등학교는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 비해 체험활동이 제한되고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지식 전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이 지식·기술 습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고등학생들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7명 가운데 1명은 효과

그림 IV-15 재학생의 학교급별 학교교육의 지식·기술 습득 효과에 대한 인식,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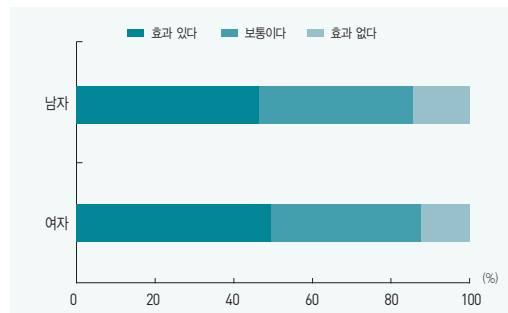
주: 1) 재학생은 현재 해당 학교급에 재학 중인 만 13세 이상 25세 미만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2.

가 없다고 느낀다는 사실은 현재의 교육이 학생들의 수요와 요구를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IV-16]은 졸업생들이 응답한 학교교육의 지식·기술 습득 효과에 대한 평가를 성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지식·기술 습득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응답의 경우, 남자 45.2%, 여자 47.7%로 여자가 약간 더 높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 ‘효과가 없다’는 응답의 경우에도 남자 14.9%, 여자 13.3%로 그 차이가 크지 않다.

그림 IV-16 졸업생의 성별 학교교육의 지식·기술습득 효과에 대한 인식, 2012



주: 1) 졸업생은 현재 학생이 아닌 만 2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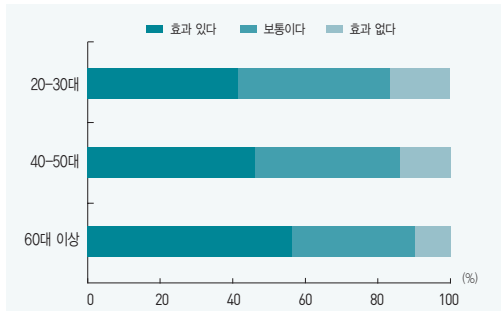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2.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은 연령대별로 상이할 수 있다. 세대에 따라 학교교육에 대한 수요나 기대수준이 다르고 그로 인해 교육 효과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IV-17]은 학교교육의 지식·기술 습득 효과에 대한 인식을 연령대별로 제시하고 있다. 지식·기술 습득 효과에 대한 인식은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젊은 세대보다



나이트 세대에서 학교교육이 지식·기술 습득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한 것이다.

**그림 IV-17** 졸업생의 연령집단별 학교교육의 지식·기술 습득 효과에 대한 인식, 2012



주: 1) 졸업생은 현재 학생이 아닌 만 2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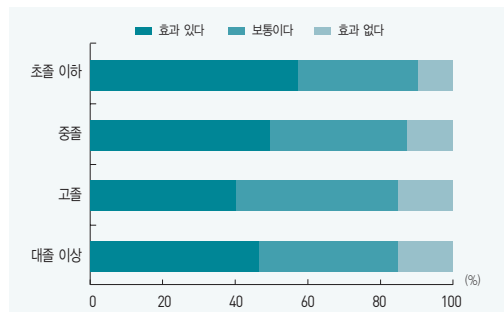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효과가 있다’는 응답의 경우, 20-30대는 41.1%만 동의하는 반면, 60대 이상은 56.3%가 동의한다. ‘효과가 없다’는 응답의 경우에는 20-30대에서는 16.8%, 40-50대에서는 14.0%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비해 60대 이상은 9.6%에 그쳐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세대에 비해 나이트 세대에서는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해 더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교육의 지식·기술 습득 효과에 대해 세대 간에 뚜렷한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전에 비해 무척 빨라진 지식·기술의 변화 속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에는 지식·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을 비교적 오랜 기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기술 변화 주기가 점점 단축되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지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해 더 낮은 평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학교교육 외에 별다른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이전 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는 정규교육 이외의 교육기회를 더 많이 접하며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젊은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학교교육의 효과를 더 낮게 평가했을 수 있다.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은 교육수준별로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림 IV-18]은 교육수준별 지식·기술 습득 효과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학교교육이 지식·기술 습득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초졸 이하 학력 집단에서 가장 높고, 고졸 집단에서 가장 낮다. 구체적으로, 초졸 이하 응답자들의 57.3%가 학교교육이 지식·기술 습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고졸의 경우에는 40.6%만이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림 IV-18** 졸업생의 교육수준별 학교교육의 지식·기술 습득 효과에 대한 인식, 2012



주: 1) 졸업생은 현재 학생이 아닌 만 2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2.

### 학교교육의 생활·직업·취업 활용 효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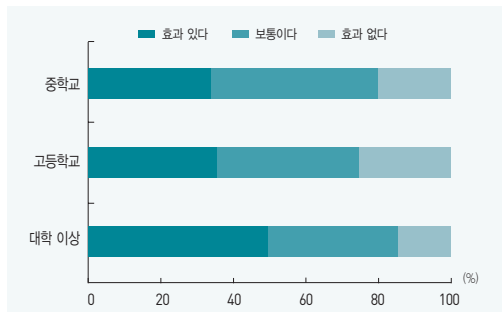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은 직업탐색과 취업에 도움을 준다. [그림 IV-19]는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교급별 생활·직업·취업 활용 효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생활·직업·취업에의 활용 효과에 대한 인식은 학교급에 따라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 중·고등 학생에 비해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효과가 있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33.6%와 35.2%로 나타난 데 비해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50.5%로 훨씬 더 높다. ‘효과가 없다’는 응답은 중학생이 20.8%, 고등학생이 25.9%,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14.9%로 나타났다.

학교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 진입을 목전에 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도 7명 가운데 1명꼴로 학교교육이 생활·직업·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고등교육이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school to work)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아울러 중학생의 1/5, 고등학생의 1/4이 학교교육이 실생활에 효과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 교육시스템에 대한 반성과 점검을 요구한다.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학교교육의 필요성과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고등학생의 경우, 지식·기술 습득 효과에 비해 ‘효과가 있다’는 응답비율은 13%p 정도 낮았고,

‘효과가 없다’는 응답비율은 12%p 정도 높게 파악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학교교육의 생활·직업·취업 활용 효과를 상대적으로 더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IV-19** 재학생의 학교급별 학교교육의 생활·직업·취업 활용 효과에 대한 인식,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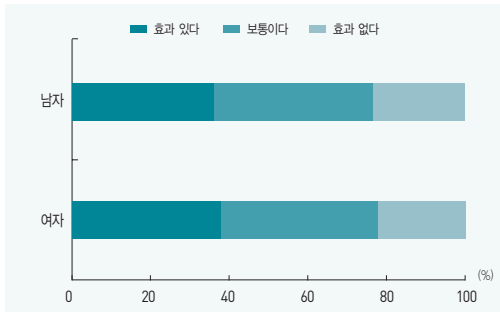
주: 1) 재학생은 현재 해당 학교급에 재학 중인 만 13세 이상 25세 미만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2.

[그림 IV-20]은 학교교육을 이미 마친 졸업생들의 성별에 따라 생활·직업·취업에의 활용 효과를 평가한 결과를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지식·기술 습득 효과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남녀 간에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남자 35.1%, 여자 36.2%로 나타났으며, ‘효과가 없다’는 응답 역시 남자 24.4%, 여자 23.7%로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세대별 차이는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림 IV-21]에 제시된 연령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교육이 생활·직업·취업에의 활용에 ‘효과가 있다’는 응답비율이 20-30대에서는 30.4%에 불과한 반면, 40-50대에서는 34.2%, 6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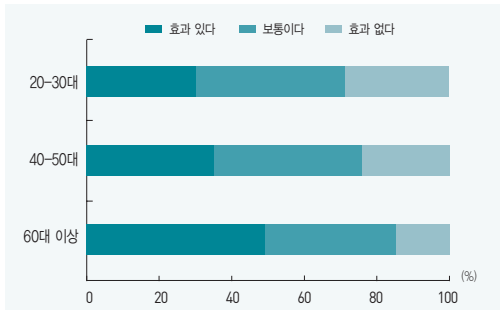
**그림 IV-20** 졸업생의 성별 학교교육의 생활·직업·취업 활용 효과에 대한 인식, 2012



주: 1) 졸업생은 현재 학생이 아닌 만 2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2.

이상에서는 47.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30대 젊은 층에서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60대 이상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V-21** 졸업생의 연령집단별 학교교육의 생활·직업·취업 활용 효과에 대한 인식,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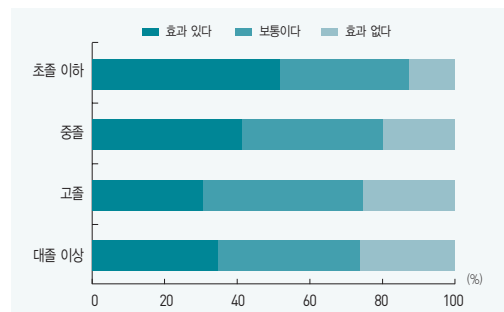
주: 1) 졸업생은 현재 학생이 아닌 만 2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2.

학교교육의 생활·직업·취업 활용 효과에 대해 세대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식·기술 습득 효과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과 맥

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20~30대 젊은 세대는 학교교육이 삶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충분히 가르쳐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높은 학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취업난을 겪어야 하는 최근 젊은 세대의 현실이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학교교육의 생활·직업·취업 활용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는 교육수준별로도 드러난다.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초졸 이하 학력에서 49.1%로 가장 높고, 중졸 39.4%, 고졸 30.1%, 대졸 이상 34.7% 등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그림 IV-22).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오히려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신뢰가 약함을 의미한다.

**그림 IV-22** 졸업생의 교육수준별 학교교육의 생활·직업·취업 활용 효과에 대한 인식, 2012



주: 1) 졸업생은 현재 학생이 아닌 만 2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2.

저학력층에서 학교교육의 생활·직업·취업 활용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고학력층



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선 각 학교급별로 제공되는 교육내용의 상이한 성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교육은 문해 및 기본적인 수리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배양하고,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초졸 이하 학력을 가진 집단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이 그들의 삶에 매우 긴요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해 고졸 또는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에 대한 체감 활용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고학력 집단이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이 저학력 집단의 기대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더 낮을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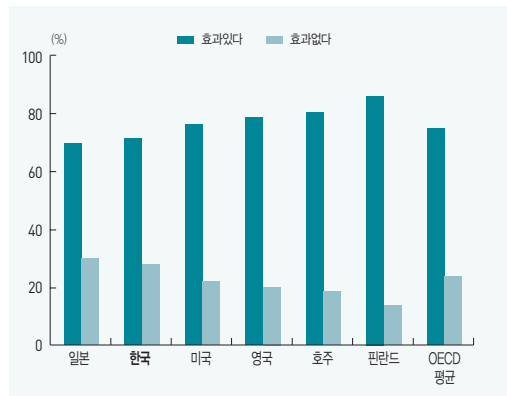
### 학교교육의 효과 인식 국제비교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인식이 다른 국가의 학생들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기 위해 OECD에서 수집하는 PISA 2009년 자료를 살펴보았다.

[그림 IV-23]은 OECD 주요 국가들의 만 15세 학생들이 졸업 후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데 있어 학교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효과가 없다’는 응답은 핀란드에서 13.8%로 가

장 낮게 나타났으며, 호주도 18.4%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그에 비해 한국과 일본은 각각 28.1%와 30.2%가 ‘효과가 없다’고 평가하여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신뢰가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IV-23 OECD 주요국 학생의 졸업 후 성인으로서의 삶 준비에 대한 학교교육 효과 인식,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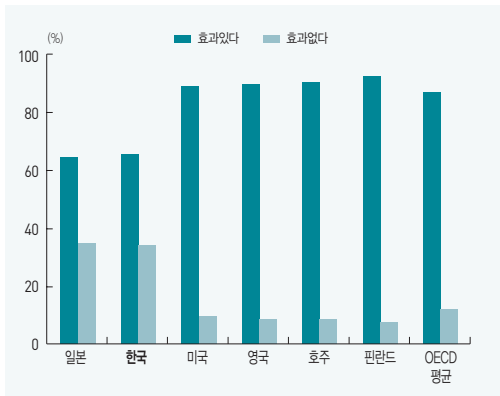
주: 1)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함.  
출처: OECD, PISA 2009.

[그림 IV-24]는 학교교육이 직업생활에 유용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국가별로 제시한다. 학교교육이 일 자리에 유용한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핀란드, 호주, 미국에서는 10%를 밑도는 데 비해, 한국과 일본은 각각 34.1%와 35.2%로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서구권 국가들에 비해 한국과 일본에서 학교교육의 실용적 측면에 대한 효과가 낮게 인식되는 이유는 두 국가의 교육풍토와 관련이 깊



**그림 IV-24** OECD 주요국 학생의 직업 관련 지식획득에 대한 학교교육 효과 인식, 2009



주: 1)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함.  
출처: OECD, PISA 2009.

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한 국가에 속한다. 따라서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해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을 가능성이 있

고, 그로 인해 학교교육의 효과가 낮게 평가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는 한국의 학교교육이 지식·기술 습득 및 생활·직업·취업 활용 측면에서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교육의 효용성을 낮게 인식할 경우, 일상적인 삶에 대한 의욕이나 열의, 흥미가 저하될 소지도 있다. 교육이 직업·취업 등 실생활 적용 측면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한국의 학교교육이 입시 중심의 지식 전달에 치중하기보다는 학생들이 각자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 스스로에게 적합한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허경철 · 김영화 · 김정래 · 성기선 · 이돈희 · 정재걸. 1998. 「학교교육 효과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04

## 학생들의 스트레스

황여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요약

- 한국 학생들의 약 70%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학교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정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크다.
-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 정도가 심하다.
- 한국 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 수준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란 일상생활 중에 환경의 자극에 대해 겪는 어려움을 뜻하며, 현대인이 자주 경험하는 보편적 현상이다. 스트레스가 우리 삶에서 일정 부분 불가피한 것이라고 본다면, 학생들 또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학생들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학생들의 지나친 스트레스는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비행과 같은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학생들은 성인에 비해 스트레스 방어 기제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 더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접근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학생들이 생활 전반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가정생활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스트레스로 나누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학생들이 가지는 스트레스의 상대적 수준을 점검한다.

## 한국 학생들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학생들의 비율이 2008년 55.6%에서 2012년 69.0%로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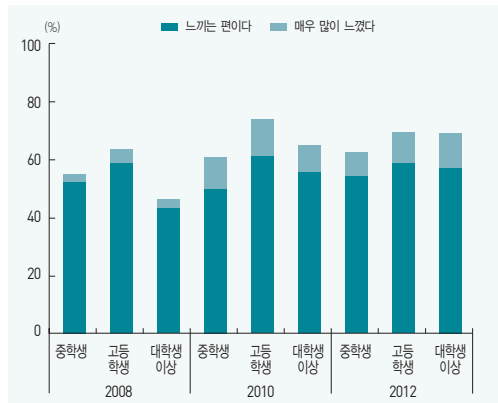


저 과거에 비해 더 많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5]에는 학생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스트레스 인지 수준을 학교급별로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2008-2012년에 걸쳐 일관되게 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확인된다. 2008년에는 중학생의 55.0%,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46.1%, 고등학생의 63.8%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했다. 2010년에도 중학생 61.1%, 대학생 및 대학원생 65.2%, 고등학생의 73.6%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2년 조사에서는 중학생(62.7%)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69.2%)에 비해 고등학생(69.6%)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 인지 비율을 나타낸 점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학교급 간 차이는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학생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실제로 중학생의 경우, 2008년 55.0%, 2010년 61.1%, 2012년 62.7%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2008년 46.1%에서 2010년 65.2%, 2012년 69.2%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둔 고등학생이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가 없지만, 중학생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도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스트레스가 점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IV-25 학교급별 학생들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인지율, 2008-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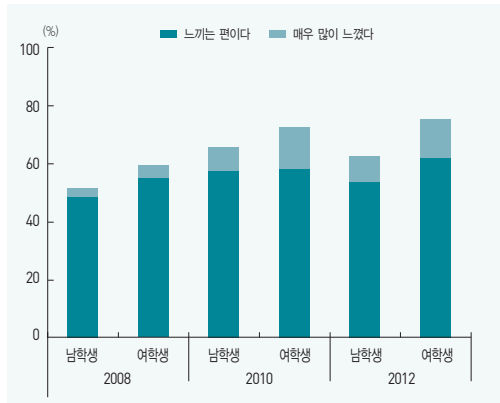


주: 1) 스트레스 인지율은 해당 학교급별 학생들 중 지난 2주 동안 일상 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이다' 또는 '매우 많이 느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로, 학생은 15세 이상 25세 미만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성별로 제시하고 있는 [그림 IV-26]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 인지 수준이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꼈다'는 응답의 비율이 최근에 와서 남학생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과 2012년에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낀다'는 남학생의 응답 비율은 각각 7.9%와 8.6%인 데 비해서 여학생의 경우는 14.7%와 13.6%에 이르고 있다. 또한 남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최근에 다소 하락(2010년 65.8%에서 2012년 62.7%로 감소)하였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2008년 59.5%, 2010년 72.9%, 2012년 75.7%)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이유를 파악해 보기 위해 학생들이 주로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

그림 IV-26 성별 학생들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인지율, 2008-2012



주: 1) 스트레스 인지율은 해당 학교급별 학생들 중 지난 2주 동안 일상 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이다' 또는 '매우 많이 느꼈다' 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로, 학생은 15세 이상 25세 미만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인지 살펴보았다. <표 IV-8>에는 학생들이 고민거리로 응답한 것들의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조사 시점과 학교급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역시 공부 문제이다. 중·고등학생은 80% 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약 58%가량이 성적이나 적성 등 공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공부 문제를 제외하면, 주된 고민 사유에 있어서 학교급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중학생은 외모, 친구(우정), 직업 문제가 중요한 고민의 원인으로 파악되었고, 고등학생은 외모, 직업, 친구(우정)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직업, 외모, 가계 경제의 어려움 등이 주된 고민 사유로 거론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공부, 친구 문제 때문에 고민이라는 응답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직업 문제 때문에 고민이

표 IV-8 학교급별 학생들이 고민하는 문제, 2008-2012 (%)

고민문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상		
	'08	'10	'12	'08	'10	'12	'08	'10	'12
외모	44.1	42.5	34.7	39.4	41.1	41.3	31.1	32.1	31.6
신체·정신 건강	15.3	11.6	15.6	14.1	14.8	15.4	13.8	13.4	14.9
가정환경	9.1	7.0	11.0	10.9	7.7	9.2	12.4	6.4	7.9
가계의 어려움	-	7.5	10.2	-	10.3	10.1	-	21.8	23.5
용돈부족	17.3	19.6	13.4	18.2	14.9	18.8	20.2	20.7	22.0
공부(성적, 적성)	83.2	86.5	79.2	85.0	83.9	78.3	56.7	59.0	57.8
직업	21.5	20.9	25.1	25.0	31.8	32.7	56.5	53.9	54.6
친구(우정)	31.6	22.9	19.2	25.0	20.6	17.1	10.3	8.8	9.1
이성교제	6.2	6.1	7.7	9.7	9.1	6.5	18.9	16.9	13.7
학교·학원 폭력	4.4	2.2	2.4	1.3	0.9	1.0	0.4	0.2	0.2
흡연, 음주	0.0	1.1	0.5	0.5	0.5	0.7	1.0	1.2	1.7
인터넷 중독	4.6	10.2	4.9	4.5	3.9	4.0	1.4	1.3	1.7
기타	0.7	0.2	0.0	0.5	0.8	0.7	0.6	1.1	0.8
고민 없음	3.2	2.5	6.2	1.9	2.7	3.3	4.5	3.3	3.7

주: 1) 통계치는 해당 학교급별 학생들 중 해당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로, 학생은 15세 이상 25세 미만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2) 2008년에는 '가계의 어려움'이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라는 응답 비율은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중학생의 경우 2008년과 2010년에는 직업이 4순위였으나 2012년에는 친구(우정)보다 더 높은 3순위가 되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직업 때문에 고민이라는 응답이 2008년 25.0%에서 2010년 31.8%, 2012년 32.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취업난이 장기화되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중·고등학생 시기부터 진로 문제를 고민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끼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진로, 직업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와 고민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 시기에 눈에 띄게 증가한다. 직업 문제로 고민이라는 응답이 50%를 훌쩍 상



회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은 노동시장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직업 문제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가 중·고등학생보다 훨씬 더 심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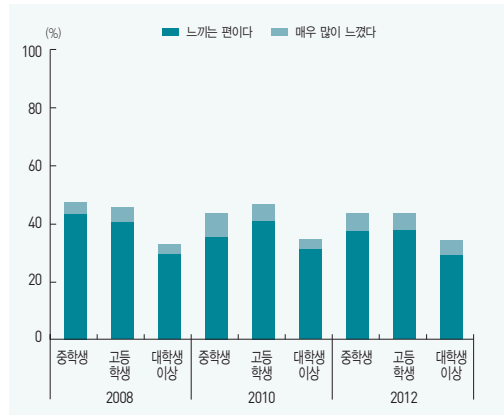
한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 중·고등학생보다 가계 경제의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도 눈길을 끈다. 실제로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가계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10% 안팎에 머문 데 비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2010년 21.8%, 2012년 23.5%로 중·고등학생에 비해 2-3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싼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학생들에게 주요한 고민의 원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 가정생활 스트레스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곳은 가정과 학교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가정생활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스트레스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가정생활 스트레스 수준은 2008년 40.6%, 2010년 41.6%, 2012년 39.4%로 나타나, 이 기간 동안 40%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림 IV-27]은 학생들이 느끼는 가정생활 스트레스를 학교급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2008-2012년에 걸쳐 일관되게 중·고등학생이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비해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27 학교급별 학생들의 가정생활 스트레스 인지율, 2008-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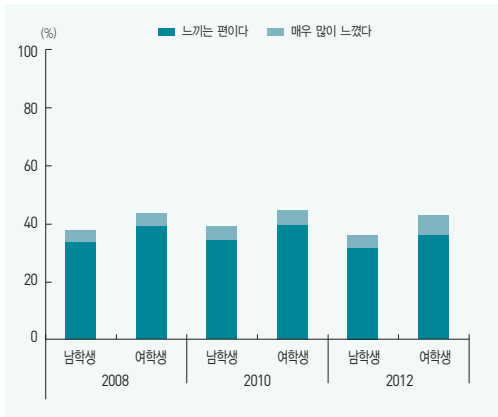


1) 스트레스 인지율은 해당 학교급별 학생들 중 지난 2주 동안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이다' 또는 '매우 많이 느꼈다' 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로, 학생은 15세 이상 25세 미만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중·고등학생 시기는 사춘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고, 성적이 나 상급학교 진학을 둘러싸고 부모와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다가 대학에 진학하고 성인이 되면서 가정에서 벗어나 지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생활 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정생활 스트레스 수준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정생활 스트레스 응답 비율이 남학생의 경우 2008년 37.7%, 2010년 38.8%, 2012년 36.2%를 나타낸 데 비해, 여학생은 2008년 43.6%, 2010년 44.6%, 2012년 42.9%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6-7%p 정도 가정생활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은 것이다.

그림 IV-28 성별 학생들의 가정생활 스트레스 인지율, 2008-2012



주: 1) 스트레스 인지율은 중학생 이상 학생들 중 지난 2주 동안 가정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이다' 또는 '매우 많이 느꼈다' 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로, 학생은 15세 이상 25세 미만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일반적으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관계지향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가 좋지 못할 때 남학생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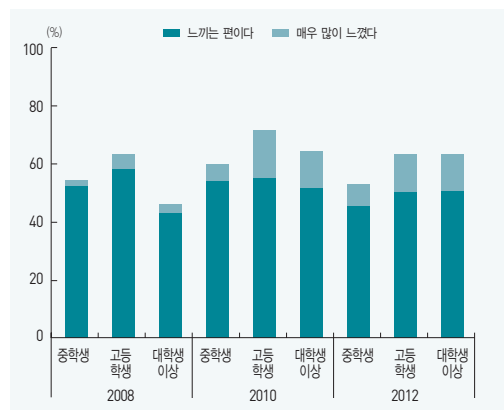
### 학교생활 스트레스

학교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따라서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학생들의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하다.

[그림 IV-29]는 학교생활로부터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학교급별로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중학생의 경우 53-60%의 학생들이 학교생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63-72%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가정생활 스트레스 인지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가정보다 더 주된 스트레스 원인임을 드러낸다.

그림 IV-29 학교급별 학생들의 학교생활 스트레스 인지율, 2008-2012



주: 1) 스트레스 인지율은 해당 학교급별 학생들 중 지난 2주 동안 학교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이다' 또는 '매우 많이 느꼈다' 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로, 학생은 15세 이상 25세 미만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중학생의 경우에는 2008년 55.0%, 2010년 60.0%, 2012년 53.1%가 학교생활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2008년 63.8%, 2010년 71.6%, 2012년 63.3%로 더 높다. 고등학교는 대학입시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타 학교급에 비해 교육 과정이 입시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업과 성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학교생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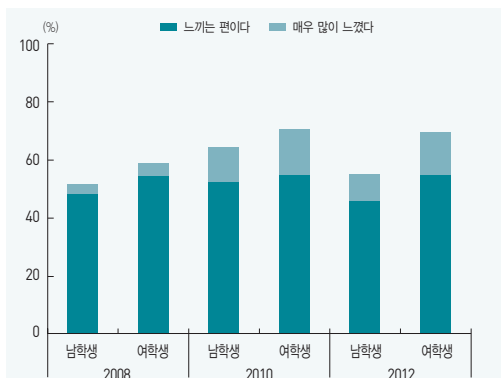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스트레스 인지 비율이 2008년 46.1%에서 2010년 64.5%, 2012년 63.1%로 불과 수년 사이에 17%p 이상 상승한 점이다. 이는 최근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대학생들이 소위 '스펙' 관리에 몰두하고, 그로 인해 학교 안에서 경쟁이 치열해진 현상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V-30]은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학교생활 스트레스 인지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조사에서 남학생은 51.9%가 학교생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그 비율이 59.5%로 더 높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2012년 조사에서 더 두드러져 남학생과 여학생의 스트레스 인지 비율은 각각 55.6%와 70.0%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4.4%p 더 높다.

**그림 IV-30** 성별 학생들의 학교생활 스트레스 인지율, 2008-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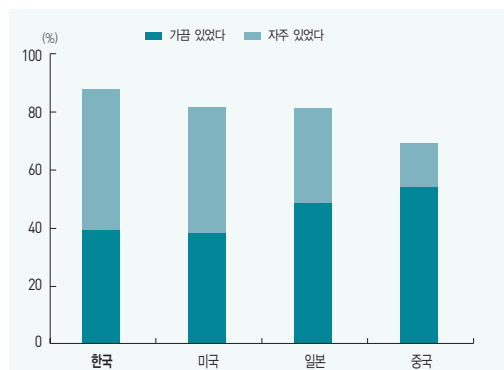
주: 1) 스트레스 인지율은 중학생 이상 학생들 중 지난 2주 동안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이다' 또는 '매우 많이 느꼈다' 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로, 학생은 15세 이상 25세 미만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 학생들의 스트레스 국제비교

마지막으로, 한국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비교를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가 [그림 IV-31]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4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스트레스를 느낀 빈도를 조사한 결과,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한국에서 87.8%로 가장 높았고, 중국이 69.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스트레스를 '자주 느꼈다'는 응답의 경우, 중국이 15.6%로 가장 낮다. 일본과 미국은 각각 32.6%와 43.2%였으며, 한국은 48.5%로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그림 IV-31** 주요국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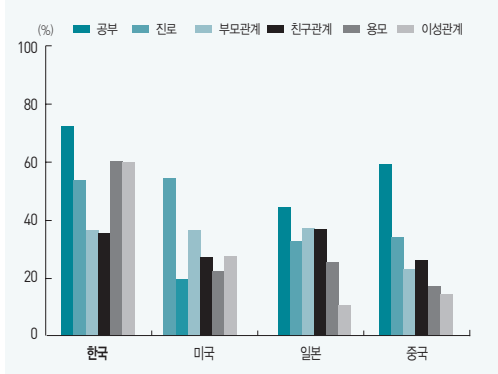


주: 1) 스트레스 인지율은 해당 국가의 고등학생들 중 지난 1년 동안 스트레스를 느낀 적이 '가끔 있었다' 또는 '자주 있었다' 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Ⅴ: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비교 조사(한·미·일·중 4개국 비교)」, 2010.

[그림 IV-32]는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주요 원인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이다. 4개국에서 모두 공부 문제가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원

그림 IV-32 | 주요국 고등학생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 2010



주: 1) 통계치는 해당 국가의 고등학생들 중 해당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비교 조사(한·미·일·중 4개국 비교)」, 2010.

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응답 비율의 차이는 매우 크다. 중국 59.2%, 미국 54.2%, 일본 44.7%의 학생들에게 공부가 주된 스트레스 원인인 데 비해, 한국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72.6%로 가장 높았다. 이는 국가를 불문하고 공부가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원인이지만 한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큰 부담감을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공부를 제외한 여타 스트레스 원인에서도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진로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많다. 한국 학생들의 53.2%가 진로가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답해 중국 34.0%, 일본 32.9%, 미국 19.3%에 비해 월등히 높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진로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육은 학생들의 인지적 학습에 관심을 집중한 채, 정서적 측면을 돌보는 데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심리·정서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STATISTICS KOREA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 노동

Labor

- 01 노동 영역의 주요 변화 장지연 | 한국노동연구원 [128](#)
  - 02 근로빈곤과 저소득층 소득지원 장지연 | 한국노동연구원 [135](#)
  - 03 최저임금의 준수와 상대적 수준 전병유 | 한신대학교 [141](#)
- 

## 01

노동 영역의  
주요 변화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요 약

- 한국의 고용률은 2012년 현재 64.2%로 장기적인 정체상태에 있다. 남성은 74.9%로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데 비해서 여성은 53.5%로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청년층 고용률의 감소와 50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 증가가 대비되는데, 이는 노동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 전체 취업자 중에서 비임금근로자와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선진국이 겪어온 구조변화의 패턴을 따르고 있다. 서비스업종 종사자 중에서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그 외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33.3%이다. 한시적 근로자의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2년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26%가 중위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저임금 근로자로 분류되었다.
-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1.5%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의 조직률은 평균보다 훨씬 낮는데, 이는 취약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할 노조조직을 갖기 더욱 어려운 현실임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을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현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노동시장 현황은 고용률,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와 산업 및 직업 구성, 임금근로자의 특성 순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특히 인구집단별 고용현황에 주목한다. 고용이 경제성장과 복지 양자의 기반이라는 인식 속에 고용의 양적 확대를 추구하는 정책이 추진되어 온 가운데 일자리의 질은 악화되지 않았는지 살펴본다. 노사관계는 노동조합 조직률의 변화와 노동쟁의 관련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 고용률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취업자의 비율로 표시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체 생산가능인구에서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데 비해, 고용률은 취업자만의 비율을 나타내는 차이점이 있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사이에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추세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보다 고용률이 갖는 의미가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고용률은 2012년 현재 64.2%로 2010년에 비해서는 0.9%p, 1990년에 비해서는 3.0%p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남성은 74.9%, 여성은 53.5%를 기록하였다. 1990년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의 고용률은 미세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여성의 고용률은 1990년에 비해 4.5%p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청년층의 고용률이 2012년 현재 40.4%로 1995년에 비해서는 6.0%p 감소하였고, 2005년에 비해서도 4.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세에서 49세의 고용률은 75% 수준에서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5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고용률은 2012년에 68.3%로 증가하는 양상이다(표 V-1). 청년층 고용률의 감소와 장년층 고용률의 증가는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구의 구성 자체도 고령화되는 추세에 있는 데다 청년층의 고용률은 감소하고 장년층의 고용률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은 노동인력의 고령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1 성 및 연령집단별 고용률, 199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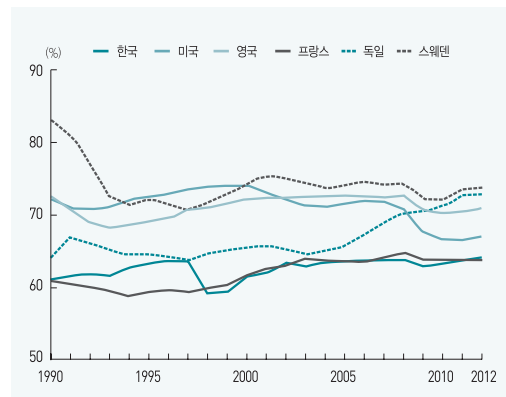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전체	61.2	63.5	61.5	63.7	63.3	63.9	64.2
성							
남자	73.9	76.8	73.1	75.0	73.9	74.5	74.9
여자	49.0	50.5	50.1	52.5	52.6	53.1	53.5
연령							
30세 미만	43.6	46.4	43.4	44.9	40.3	40.4	40.4
30-49세	75.8	76.4	74.3	74.7	75.0	75.4	75.6
50-64세	67.3	67.6	62.5	64.2	66.7	67.6	68.3

주: 1) 15-64세 인구를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실업률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 자체도 낮은 편이라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것은 비경

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림 V-1]에 제시한 OECD 주요 국가들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독일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시기에도 고용률이 증가하는 데 반해, 미국은 고용률의 감소폭이 크고 최근까지 뚜렷한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고용률이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의 정체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5.8%p의 고용률 증가가 필요하다. 절대수치로 환산하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238만 명, 매년 48만 명의 고용이 늘어나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다.

그림 V-1 OECD 주요국의 고용률, 199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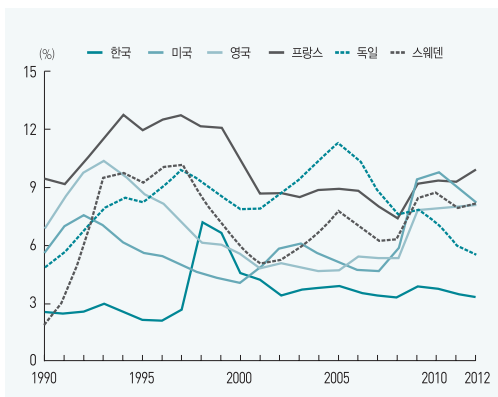
주: 1) 15-64세 인구를 기준으로 함.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한국에서 실업률은 경기순환이나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민감한 지표라고 보기 어렵다. 실업보험의 적용률이 높지 않고 공공부조의 포괄

범위도 좁은 상황에서 자신의 상태를 '실업'으로 주장하는 것의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의 실업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에 실업자로 등록한 사람만을 실업자로 보는 등록실업률을 사용하는 데 비해 한국은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일할 의사가 있고 일자리가 있으면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실업자로 본다. 한국의 실업자 정의가 선진국보다 실업률이 크게 나타나기 쉬운 방식인 것을 감안하면, 실업자로 등록하고 구직하는 사례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림 V-2]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OECD 국가들의 경우 독일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2009년에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줄곧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V-2 OECD 주요국의 실업률, 1990-2012



주: 1) 15-64세 인구를 기준으로 함.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 취업자의 구성

취업자는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임금 근로자와 자기 사업을 하는 비임금근로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고용주,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되는데, 자영업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에 28.2%를 기록하여 1990년에 비해 11.3%p 감소하였다. 취업자의 71.8%는 임금근로자이다 (표 V-2).

비임금근로자의 감소폭은 여성에게서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남성은 1990년에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36.9%에서 2012년에는 29.8%로 7.1%p 감소하였으나, 여성의 경우는 1990년 43.2%에서 2012년에는 26.0%로 17.2%p 감소하였다. 이제는 여성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남성보다 더 낮아지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는 주로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표 V-2 성별 비임금근로자 비율, 1990-2012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전체	39.5	36.8	36.8	33.6	28.8	28.2	28.2
남자	36.9	34.3	35.7	34.0	30.0	29.6	29.8
여자	43.2	40.4	38.5	32.9	27.1	26.4	26.0

주: 1)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취업자의 산업별 및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V-3>과 같다. 취업자 중에서 제조업과 농림어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흐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서비스업 내에서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그 외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은 16.7%인데, 이는 2005년 18.1%에 비해서 1.4%p 감소한 것이다. 2012년 현재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은 69.4%이다.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의 25.4%에서 22.7%로 감소하였고, 그 외 서비스업 종사자는 40.0%에서 46.7%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V-3**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 구성, 2005-2012 (%)

	2005	2010	2011	2012
<b>산업</b>				
농림어업	7.9	6.6	6.4	6.2
제조업	18.1	17.0	16.9	16.7
건설·전기·수도업	8.5	8.0	7.8	7.8
도소매·음식·숙박업	25.4	23.0	22.7	22.7
기타 서비스업	40.0	45.5	46.2	46.7
<b>직업</b>				
전문·관리직	18.4	21.5	21.5	21.3
사무직	14.8	15.7	16.5	16.6
서비스·판매직	25.2	22.5	22.1	22.5
농업직	7.5	6.0	5.9	5.8
생산직	34.2	34.2	34.1	33.8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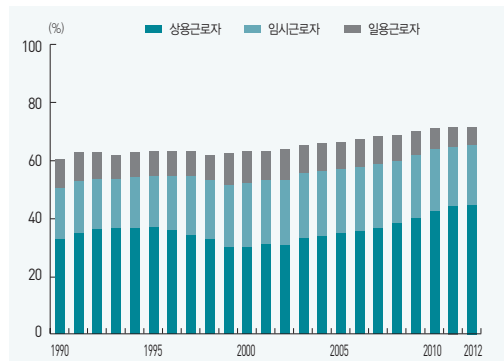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과 농업직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2005년과 2012년에 전문·관리직은 18.4%에서 21.3%로, 사무직은 14.8%

에서 16.6%로 각각 증가하였다. 서비스·판매직은 25.2%에서 22.5%로 감소하였고, 농업직도 7.5%에서 5.8%까지 더 떨어졌다. 생산직은 34% 내외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근로조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에 60.5%에서 2012년에는 71.8%로 증가하였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줄어드는 추세이며, 대신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그림 V-3). 임금근로자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2000년에 47.9%를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2년에는 62.6%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V-3**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자 비율, 1990-2012



주: 1) 임금근로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해당 고용형태의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상용근로와 임시근로 및 일용근로로 나누어 살펴보는 방식은





장기적인 시계열 자료가 있어서 변화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방식에 의해 산출한 자료는 비정규직의 규모를 파악하기에 가장 적합한 통계는 아니다. 보다 엄밀한 정의에 기초한 비정규직 분류는 한시적 근로와 시간제 근로, 비전형 근로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비정규직으로 보는 방식이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2012년 현재 66.7%로 2000년대 중반 63~64% 수준이던 것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33.3%이다(표 V-4).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 임금근로자의 27.2%가 비정규직인 데 비해 여성은 41.5%가 비정규직이다.

표 V-4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별 구성비율, 2003-2012 (%)

연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한시적 근로	시간제 근로	비전형 근로
2003	67.4	32.6	21.3	6.6	11.9
2004	63.0	37.0	24.7	7.4	13.4
2005	63.4	36.6	24.2	7.0	12.7
2006	64.5	35.5	23.6	7.4	12.6
2007	64.1	35.9	22.3	7.6	13.9
2008	66.2	33.8	20.4	7.6	13.3
2009	65.1	34.9	21.3	8.7	13.9
2010	66.6	33.3	19.2	9.5	13.4
2011	65.8	34.2	19.7	9.7	13.9
2012	66.7	33.3	19.2	10.3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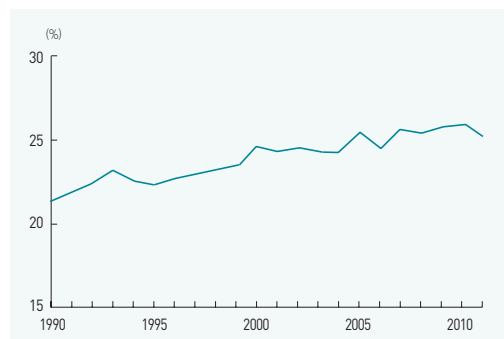
주: 1)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정규직 하위 유형 비율의 합이 비정규직 비율을 초과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 8월.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하기로 계약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한시적

으로 근로하는 경우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9.2%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던 한시적 근로자 비율은 2004년에 24.7%를 최고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파트타임 근로자, 즉 시간제 근로자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에 전체 임금근로자의 6.6%에 불과하던 시간제 근로자는 2012년 현재 10%를 넘어섰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17.4%가 시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간접고용과 재택근로, 특수고용 등을 포괄하는 비전형 근로자의 비중은 2011년까지 증가하다가 2012년에는 증가세가 멈춘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비정규직 추이는 시간제 근로의 증가와 기간제 근로의 감소로 요약할 수 있다.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중위임금의 2/3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저임금'이라고 정의한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림 V-4]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990년에는 저

그림 V-4 저임금 근로자 비율, 1990-2011



주: 1)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임금수준이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의 2/3 수준 미만인 근로자의 비율임.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22%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2010년에는 26%에 달하는 임금근로자들이 중위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을 살펴보는 것은 임금불평등 양상을 살펴보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외에도 1-9분위수배율이나 임금수준 지니계수를 계산해 볼 수도 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 간에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임금수준의 불평등도는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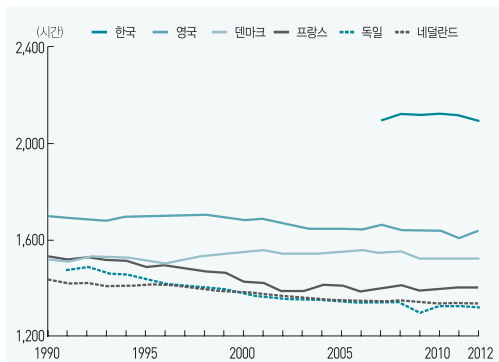
한국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도 널리 퍼져있다. [그림 V-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100시간 내외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길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전체 취업자의 근로시간을 측정하면 이보다 더 길어진다. 선진국에서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990년대에 이미 1,400시간에

서 1,600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덴마크를 제외한 이들 국가들은 최근에도 연간 근로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은 1990년대 초반부터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있고 프랑스와 네덜란드, 영국은 지금도 근로시간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 노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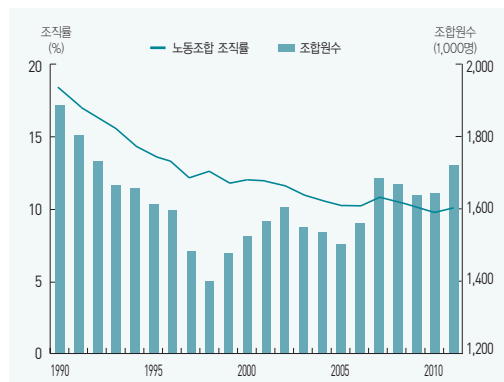
2011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1.5%로 1990년 18.4%에 비해 6.9%p 감소하였고, 조합원수는 170만 명이다(그림 V-6).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조직률은 그 중에서도 현저히 낮은 편에 속한다. 선진국 중에서 비교적 조직률이 낮은 국가들로는 미국이 11.1%, 일본과 독일이 18.0%, 영국이 25.8%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는 한국보다 낮은 7.8%를 기록하고 있지

그림 V-5 OECD 주요국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 1990-2012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그림 V-6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수, 1990-2011



주: 1) 노동조합 조직률=(조합원수÷임금근로자수)×100.  
출처: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각 년도.



만 이는 노사협약의 적용범위가 조합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노동자로 매우 넓은 제도적 차이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경우는 70%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으로 높은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사회적 발언권이 강하고, 고용주와의 협상에서도 비교적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노동조합 조직률은 사업체 규모나 고용형태별로 그 격차가 매우 크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비정규직인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진다.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재 정규직 근로자의 노조가입률은 15.8%인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가입률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V-5). 이는 근로조건

표 V-5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노조가입률, 2005-2012 (%)

연도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2005	11.8	15.9	4.6
2010	11.4	15.7	2.8
2011	10.9	15.2	2.6
2012	11.5	15.8	2.9

주: 1) 노조가입률=(노동조합가입자수÷임금근로자수)×10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 8월.

과 관련한 노사 간 협상에서 비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파업건수와 근로손실일수를 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노동쟁의 발생은 65건, 근로손실은 429일로 같은 방식으로 통계를 정리하기 시작한 2005년에 비해 볼 때 노동쟁의 발생과 근로손실이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 V-6). 그러나 통계에 명확히 포착되기는 어렵지만, 다른 중요한 지표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있어서 노동쟁의 발생건수의 감소를 노사관계의 안정화로 곧바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표 V-6 파업건수와 근로손실일수, 2000-2011

연도	파업건수	근로손실일수
2000	250	1,894
2005	287	848
2010	86	511
2011	65	429

주: 1) 2006년부터 산별노조파업에 다수의 사업장이 참가할 경우 1건으로 파악함.

2) 근로손실일수=(파업참가자수×파업시간)÷1일 근로시간(8시간).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백서」, 각 년도.

# 02

## 근로빈곤과 저소득층 소득지원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요약

- 한국의 근로연령대 빈곤율은 9.3%로 OECD 국가들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
- 빈곤문제에 대응하는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연령대 절대빈곤인구의 약 30%, 상대빈곤인구의 17.5% 정도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로서 임금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면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 제도도 본래 제도가 대상으로 하는 가구의 약 1/3 정도에 해당하는 가구에 혜택을 주고 있다.

18-64세 인구를 근로가능연령 인구라고 한다. 이 인구집단의 빈곤은 근로를 하더라도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또 다른 사회적 이슈를 제기한다. 이 글에서는 근로 가능한 연령대의 인구 중에서 빈곤한 인구의 규모와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의 수혜자 비율을 살펴본다.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중심이 되며, 보충적으로 근로장려세제(EITC)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 연령별 빈곤율과 빈곤인구

빈곤을 정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구분방식은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을 나누는 것이다. 절대빈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자원의 결핍상태를 의미하는데, 각각의 나라에서 정부가 조사하여 발표한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매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공표한다. 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가 절대빈곤가구이며, 절대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절대빈곤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로 계산된다. 상대빈곤은 중위가구소득의 50%에 미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때 기준은 40%, 50%, 60% 중에서 선택된다. 유럽에서는 60%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50%를 기준으로 계산해 왔다.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수를 반영하여 조정해 주는데, 이를 균등화된 가구소득이라고 한다. 균등화의 방법도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빈곤여부를 판정할 때 가구소득의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킬 것인지도 중요하다. 시장소득만 가지고 가구소득을 계산



하는 방법과 조세납부분과 공적이전소득을 반영한 최종적인 소득인 가처분소득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계산방식에 따른 차이는 그 사회의 조세 및 복지 제도가 가진 재분배 기능을 반영하는지와 관련된다.

2012년에 한국의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4.0%이다. 노인세대의 빈곤율이 48.0%로 매우 높아서 근로연령대의 빈곤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논의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근로연령대의 빈곤율도 높은 편이다. 장지연·이병희(2013)가 수행한 1997-2008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율 증가요인분해 연구에서도 이 기간 한국의 빈곤율 상승을 초래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근로연령대 가구주 빈곤의 증가라는 점이 드러났다. 한국 사회의 근로연령대 인구의 상대빈곤율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7%이고, 최종적인 소득인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9.3%이다(표 V-7). 근로연령대 인구 중에서 대략 10명 중 1명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가 빈곤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표 V-7 연령집단별 상대빈곤율, 2012

	시장소득 기준	가처분소득 기준
전체	16.3	14.0
0-19세	9.7	9.6
20-64세	10.7	9.3
65세 이상	60.0	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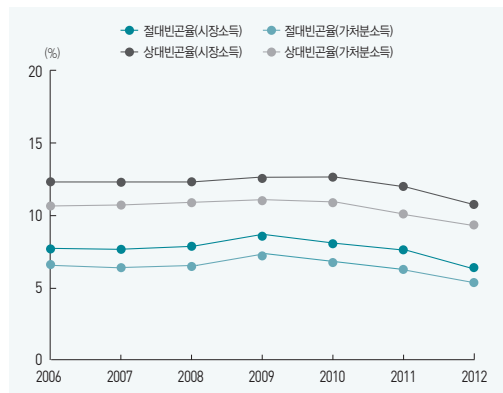
주: 1) 전국 1인 이상 비농어가구 기준임.

2) 상대빈곤율은 해당 소득 기준으로 균등화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빈곤가구로 보고 이런 가구에 속한 각 연령대 개인의 비율을 계산한 것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2.

20-64세 인구의 빈곤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V-7]과 같다. 2006년부터 1인 이상 전 가구를 포괄하는 「가계동향조사」 자료가 생산되었으므로 이 시점부터 살펴보았다. 균등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빈곤가구로 보고, 이러한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을 계산한 상대빈곤율은 지난 2006년 이후로 10%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림 V-7 20-64세 인구의 빈곤율, 2006-2012



주: 1) 전국 1인 이상 비농어가구 기준임.

2) 절대빈곤율은 해당 소득 기준으로 균등화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한 가구를 빈곤가구로 보고 이런 가구에 속한 각 연령대 개인의 비율을 계산한 것임.

3) 상대빈곤율은 해당 소득 기준으로 균등화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빈곤가구로 보고 이런 가구에 속한 각 연령대 개인의 비율을 계산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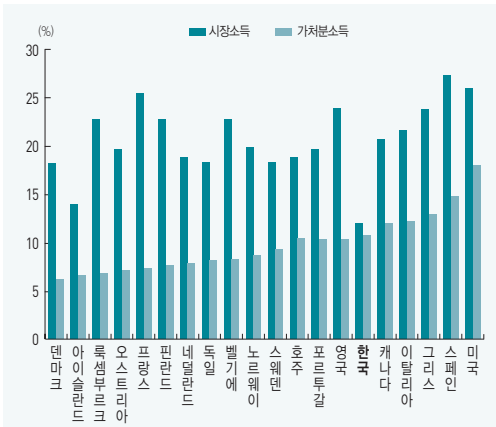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소득으로 살아가는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을 절대빈곤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된 절대빈곤율은 2012년에 시장소득 기준으로 6.3%,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5.3%이다. 최저생계비로 결정되는 절대빈곤선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근로연령대 인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보다 빈곤율이 높은 국가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남유럽 몇 개국에 불과하다(그림 V-8). 잔여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영미권 국가들과 남유럽 복지국가들에서 근로연령대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북유럽의 사민주의 복지국가들과 서유럽의 조합주의 복지국가들의 경우 낮은 빈곤율을 보인다. 한국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빈곤율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빈곤율 간에 차이가 거의 없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것은 조세와 공적소득이전 제도가 빈곤완화를 위한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V-8** OECD 주요국 근로연령대(18-64세) 인구의 상대빈곤율, 2010



주: 1) 빈곤선 기준은 중위소득 50% 미만임.

2) 한국은 2011년 자료임.

출처: OECD,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2013.

한편, 한국에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빈곤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은 의외의 결과로 받

아들일 수 있는데, 이는 복지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가난한 가구의 가구원들이 적극적으로 소득 활동에 나서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장지연, 201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률

한국 정부는 1961년부터 빈곤층 지원제도로 생활보호제도를 운영하다가 이를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면 개편하였다. 생활보호제도가 근로능력이 없고 부양자도 없는 빈곤인구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 데 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자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부양할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을 경우, 국가가 실제 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체 인구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수급자는 2012년 기준으로 139만 명이다. 연령층을 20세에서 64세로 제한하면<sup>1)</sup>, 수급자는 약 62만 명이다. 이 수치를 근로연령대 인구로 나누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률을 계산하면 1.9% 내외이다(표 V-8).

1) 다른 국가들은 근로연령대를 흔히 18-64세로 정의한다. 이 글에서는 수급률 계산을 위한 통계수치가 제공되는 관행을 반영하여 20-64세로 정의하였다.

이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수치는 빈곤인구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계산한 것이 <표 V-8>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열에 제시되어 있다. 절대빈곤 상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2년 현재 약 30% 정도이다. 중위소득 50% 미만의 상대빈곤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지급률은 더 낮아진다. 2012년 기준으로 상대빈곤 인구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자는 17.5%에 불과하다.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첫째, 빈곤선을 상대빈곤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지급자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 50%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고 둘째, 지급자를 선정할 때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자산의 소득환산액도 고려되며 셋째, 부양의 무자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때문이다.

**표 V-8** 근로연령대(20-64세)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률, 2006-2012

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명)	수급률(%)		
		인구 대비	절대빈곤 인구 대비	상대빈곤 인구 대비
2006	653,977	2.1	27.0	16.9
2007	657,753	2.1	27.1	16.8
2008	656,627	2.0	26.1	16.6
2009	685,899	2.1	24.6	16.8
2010	682,826	2.1	26.0	16.7
2011	655,026	2.0	26.3	16.6
2012	619,729	1.9	29.9	17.5

주: 1) 빈곤여부는 정부가 발표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각 년도)' 미달 여부로 판정하며, 소득은 시정소득 기준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 년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장래인구추계」,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수혜율의 수준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자. 제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에 어려움이 있으나, 노인인구와 근로연령대 인구 중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대략적으로 <표 V-9>와 같은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공공부조 수혜율은 보편주의 급여체계가 발달하여 빈곤율 자체가 매우 낮은 북유럽계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한국이 빈곤인구 자체가 적어서가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호하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빈곤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을 시사한다.

**표 V-9** 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 지급률, 2008

(%)

국가	근로연령대 인구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오스트리아	5.5	10.2	5.1
벨기에	3.0	5.9	6.5
네덜란드	5.1	1.3	5.4
프랑스	7.8	5.8	9.3
독일	11.3	2.4	9.6
덴마크	3.4	0.0	4.4
핀란드	3.3	0.6	3.2
스웨덴	2.3	1.0	2.2
한국	1.9	7.0	3.0

출처: Bahle 외(2012)로부터 재구성. 한국은 필자 추가.

### 근로장려세제(EITC) 수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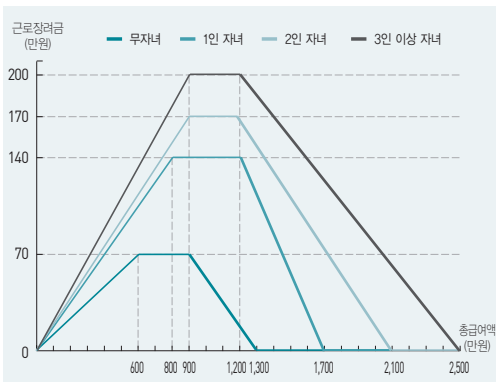
근로장려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아닌 빈곤층, 즉 차상위계층을 보호하기 위





한 제도로 2009년부터 도입되었다.<sup>2)</sup> 수급요건은 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의 4가지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인 가구로 18세 미만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이자 무주택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 소유, 그리고 주택을 포함한 재산이 총 1억 원 미만인 세대에 한하여 지급되었다. 2011년 말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방안에 따라 2012년부터 무자녀가구에까지 수혜범위가 넓어졌고, 총소득 기준도 자녀수에 연동하여 상향 조정되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그림 V-9]와 같이 결정된다.

**그림 V-9**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2012



출처: 김재진, 2013.

근로장려세제는 빈곤가구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는 받을 수 없는 근로연령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수혜율은 차상위계층 가구수 대비 실제 수급가구수의 비율

로 계산하였다. <표 V-1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12년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는 비수급 빈곤가구 중에서 약 30%에 해당하는 가구가 근로장려세제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0** 근로장려세제 수혜율, 2009-2012

연도	차상위층가구수 (1,000가구)	EITC수급가구수 (1,000가구)	수급률 (%)
2009	2,553	591	23.1
2010	2,569	566	22.0
2011	2,585	522	20.2
2012	2,498	752	30.1

주: 1) 차상위층가구수는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0-120%인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를 제외한 가구수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 맺음말

한국의 근로연령대 인구 중 빈곤율은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9.3%로 OECD 국가들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 빈곤문제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 연령대 절대빈곤 인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국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이상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과 자산 기준을 고려하면 실제로 도움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상대빈곤선 기준으로 본 제도의 포괄범위는 더욱 좁아진다.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로서 임금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2) 2005년에 제도 도입이 결정되었으며 준비과정을 거쳐 2008년부터 시행되어 2009년에 첫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다.



면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이 낮아서 빈곤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

도이다. 현재 이 제도도 본래 제도가 대상으로 하는 가구의 약 1/3 정도에 해당하는 가구에 혜택을 주고 있을 뿐이다.

#### 참고문헌

- 김재진. 2013. 「한국의 근로장려세제(EITC) 소개」. 한국노동연구원(영문자료).
- 장지연. 2012. “다양한 총위의 소득정의와 구성요소에 따른 불평등 수준.” 『동향과 전망』 85: 131-163.
- 장지연 · 이병희. 2013. “소득불평등 심화의 메커니즘과 정책선택.”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3: 71-109.
- Bahle, T., V. Hubl, and M. Pfeifer. 2011. *The Last Safety Net: A Handbook of Minimum Income Protection in Europe*.



# 03

## 최저임금의 준수와 상대적 수준

전병유(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요약

-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영향 아래 있거나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수혜 근로자의 비율인 영향률은 2001년 2.1%에서 2010년 15.9%까지 상승하였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인 미만율은 2001년 4.3%에서 2009년 12.8%까지 상승하였다.
- 최저임금 영향률과 미만율이 상승한 이유는 2004-2009년 사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임금 인상률보다 높았고, 저임금 일자리가 증가했으며,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영역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보면, 2012년의 경우 통계청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49.7%,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46.2%이며, 이는 OECD 국가들 중 중간 정도의 수준이다. 다만, OECD에 보고된 것은 2011년에 41% 수준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의 문제는 많은 국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 문제가 완화되기보다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일차적으로 근로빈곤층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최저임금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이다.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012년 24.8%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저임금 일자리를 줄이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에서 최저임금이 철저히 지켜지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도 암시한다.

최저임금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보장하고 근로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인권적인 측면도 가진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고, 해당 사업장이 공공분야 용역을 입찰할 때 불이익을 주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국내 근로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 8명 중 1명(12.5%) 수준이다. 이 중 장애인 등 적법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전체의 약 8%로 미국(6%), 일본(1.6%)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여전히 많은 문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평등,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로 연결된다.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되어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의 건설도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의 영향률과 미만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정도를 파악하고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검토한 후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국제비교해 보고자 한다.

### 최저임금 영향률 및 미만을

2013년 현재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당 4,860원이다. 일 8시간 근로 기준으로 일급은 38,880원이고 월급은 1,015,740원이다. 여기서 시간당 임금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된다.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여 임금이 조사된 자료는 이 자료가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임금은 지난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조사되고 근로시간은 주된 직장에서의 평소 근로 시간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이 자료의 경우 대표성은 있으나 정확성은 떨어진다. <표 V-11>은 이 자료에 기초해 계산된 최저임금 영향률을 보여준다.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수혜 근로자의 비율(예측치)로서 수혜 근로자수를 적용대상 임금근로자수로 나누어 계산된다.

<표 V-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3년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자는 약 1,751만 명이고, 예상되는 수혜 근로자는 258만 명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은 14.7%이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01년 2.1%에서 2010년 15.9%까지 상승하였다가 2011년부터 약간 하락하여 이후 14%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V-11 최저임금 영향률, 2001-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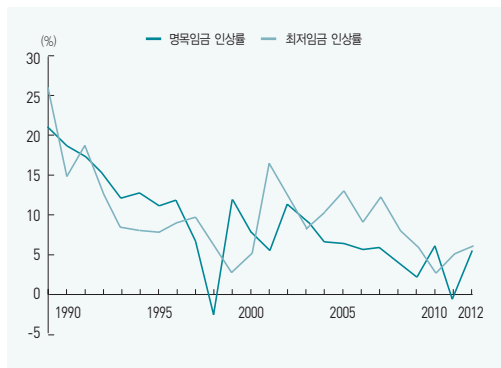
연도	적용대상 근로자수 (1,000명)	수혜 근로자수 (1,000명)	영향률 (%)
2001	6,692	141	2.1
2002	7,152	201	2.8
2003	13,216	849	6.4
2004	13,631	1,035	7.6
2005	14,149	1,245	8.8
2006	14,584	1,503	10.3
2007	14,968	1,784	11.9
2008	15,351	2,214	13.8
2009	15,882	2,085	13.1
2010	16,103	2,566	15.9
2011	16,479	2,336	14.2
2012	17,048	2,343	13.7
2013	17,510	2,582	14.7

주: 1) 영향률=(수혜 근로자수÷적용대상 근로자수)×100.

출처: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 영향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원인은 [그림 V-10]에서 보듯이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평균임금 이상으로 인상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1989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2000

그림 V-10 명목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1989-2012



주: 1)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상용직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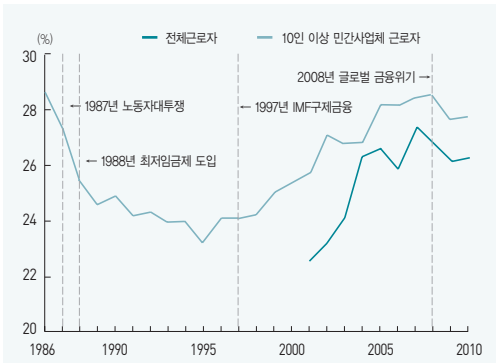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년도.



년까지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임금 인상률보다 낮았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임금 인상률보다 높아진 것은 2001년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명목임금 인상률보다 높았던 기간은 주로 2004~2009년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영향률이 증가한 것은 평균임금보다 높은 인상률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그림 V-11]에서 보면,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최저임금이 상승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게 유지된 것이 최저임금제도의 영향률을 높게 만든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림 V-11 저임금 근로자 비율, 1986~2010



주: 1)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임금수준이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의 2/3 수준 미만인 근로자의 비율임.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 각 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 8월.

한편,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최저임금 미만율이다. 최저

임금 미만율은 조사 시점에서 '평상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임금근로자의 비율이다. 이는 영향률과는 달리 전망치가 아니라 확정치이다. 최저임금 미만율이란 통계조사를 통해 관측한 결과 실제 노동현장에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근로자의 비율(실적치)로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를 적용대상 임금근로자수로 나누어 계산된다.

〈표 V-12〉에서 알 수 있듯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2012년 약 170만 명으로 적용대상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6%이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3%에서 2009년 12.8%까지 증가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임금 상승률이 정제하면서 최근에 완만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 V-12 최저임금 미만율, 2001~2012

연도	임금근로자수 (1,000명)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 (1,000명)	미만율 (%)
2001	13,540	577	4.3
2002	14,030	682	4.9
2003	14,149	689	4.9
2004	14,584	949	5.8
2005	14,968	1,213	8.1
2006	15,351	1,442	9.4
2007	15,882	1,891	11.9
2008	16,103	1,747	10.8
2009	16,479	2,104	12.8
2010	17,048	1,958	11.5
2011	17,510	1,899	10.8
2012	17,734	1,699	9.6

주: 1) 미만율=(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임금근로자수)×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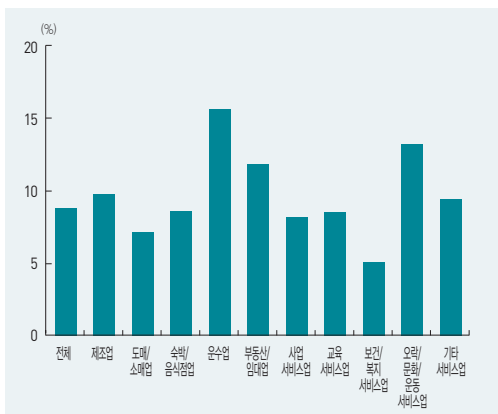
출처: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 미만율은 역으로 기업들이 얼마나 최저임금을 잘 지키느냐를 보여주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나타내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10%대에 달하는 것은 한국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거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중이 8.8%로 나타났다. 이 비중은 운수업에서 가장 높아 15.7%에 달하고 오락·문화·운동서비스업(13.1%), 부동산·임대업(11.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V-12).

그림 V-12 업종별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체 비율, 2010



주: 1)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체 비율은 조사대상 사업체 중 사업체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하여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율임.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2010.

「최저임금법」은 적용제외자(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신체장애자)와 감액적용

자(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이들을 파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 영향률이나 최저임금 미만율을 산정할 때 약간의 과대추정이 불가피하다.

###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한국에서 최저임금 수준은 매년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노사합의로 순탄하게 결정이 내려진 것은 네 번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의 수준과 인상률을 놓고 노사가 합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노동계 측에서는 저임금 근로의 보호와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50% 수준으로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과 관련된 객관적 지표가 정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2012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의 49.7%로 거의 50%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2008-2012년 사이에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50% 전후에서 유지되고 있다. 평균임금과 비교할 경우, 최저임금은 38-



39% 수준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46.2%이다. 2009년에는 49.5%까지 높아지기도 하였다(표 V-13). 이 정도의 수준이면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중위임금이나 평균임금에 비해 매우 낮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저임금 일자의 비중이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표 V-13〉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조사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우선 최저임금의 법적인 개념(최저임금 산입임금)에 가장 가까운 시급(시간당 임금)은 월통상 임금(기본급에 통상적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월소정 실근로시간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 조사 부가조사」에서는 시간당 임금을 ‘월평균 임금총액 ÷ {평소 주당 노동시간 × (30.4 ÷ 7)}’ 방식으로 계산한다. 즉 이 조사에서는 월통상 임금이 조사되지 않고 기타수당이나 초과급여, 성

과급 등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월평균 임금총액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실제보다 낮은 것으로 과소평가 하게 할 수 있다. 반대로 ‘근로기준법’ 상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과대평가할 가능성도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경우, 기본급에 통상적 수당을 포함한 월통상 임금과 월소정 실근로시간을 사용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법적인 개념에 근접한 시급을 산정하기는 하지만, 이 자료의 경우 영세사업장의 대표성이 떨어지고 사업장에 강하게 귀속되지 않는 근로자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비교

[그림 V-13]에서 보듯이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상대적 최저임금 수준(2011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41%로 체코 34%, 미국 38%, 일본 38% 등에 이어 OECD 24개국 중 5번째로 낮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나라는 터키 71%, 프랑스 60%, 뉴질랜드 59% 등이다.

다만, OECD가 발표한 국제비교 자료에도 논란이 존재한다. 국가 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차이가 있고, 비교대상 임금자료의 조사대상이 달라서 정확한 국가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표 V-13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2008-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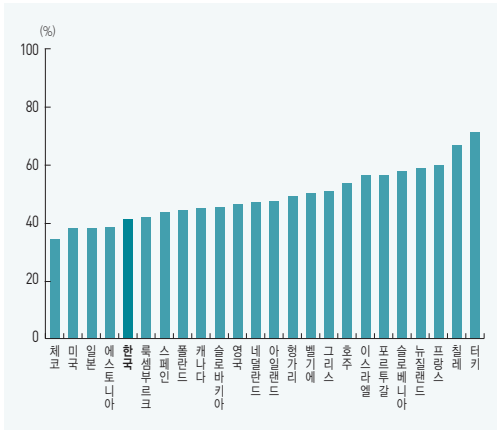
연도	통계청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원/시간)	중위임금 (원/시간)	비율 (%)	최저임금 (원/시간)	중위임금 (원/시간)	비율 (%)
2008	3,770	7,671	49.1	3,770	8,194	46.0
2009	4,000	7,767	51.5	4,000	8,077	49.5
2010	4,110	8,443	48.7	4,110	8,375	49.1
2011	4,320	8,635	50.0	4,320	8,957	48.2
2012	4,580	9,211	49.7	4,580	9,920	46.2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 년 6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년 8월





그림 V-13 OECD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2011

출처: OECD, OECD Stat(<http://stats.oecd.org>).

OECD에서 파악하고 있는 한국의 2011년 수치 41%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의 2012년 수치인 49.7%와 46.2%와도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은 OECD 24개국 중에서 20번째가 아니라 10번째 정도는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반드시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맺음말

최저임금은 노사 간 의견 차이와 갈등을 일으키는 첨예한 사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영향률과 미만을 및 상대적 수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의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임금 파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는 각각 정확성과 대표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두 조사 자료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조사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가구조사로는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관한 세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조사에서는 공공부문이 제외된다거나 총 근로일수가 부족한 종사자들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영세사업장들의 경우 대표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들 가운데 하나로 사업체조사를 기본으로 하여 임금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사업체조사가 가지는 대표성의 문제를 모집단 구성의 조정이나 가중치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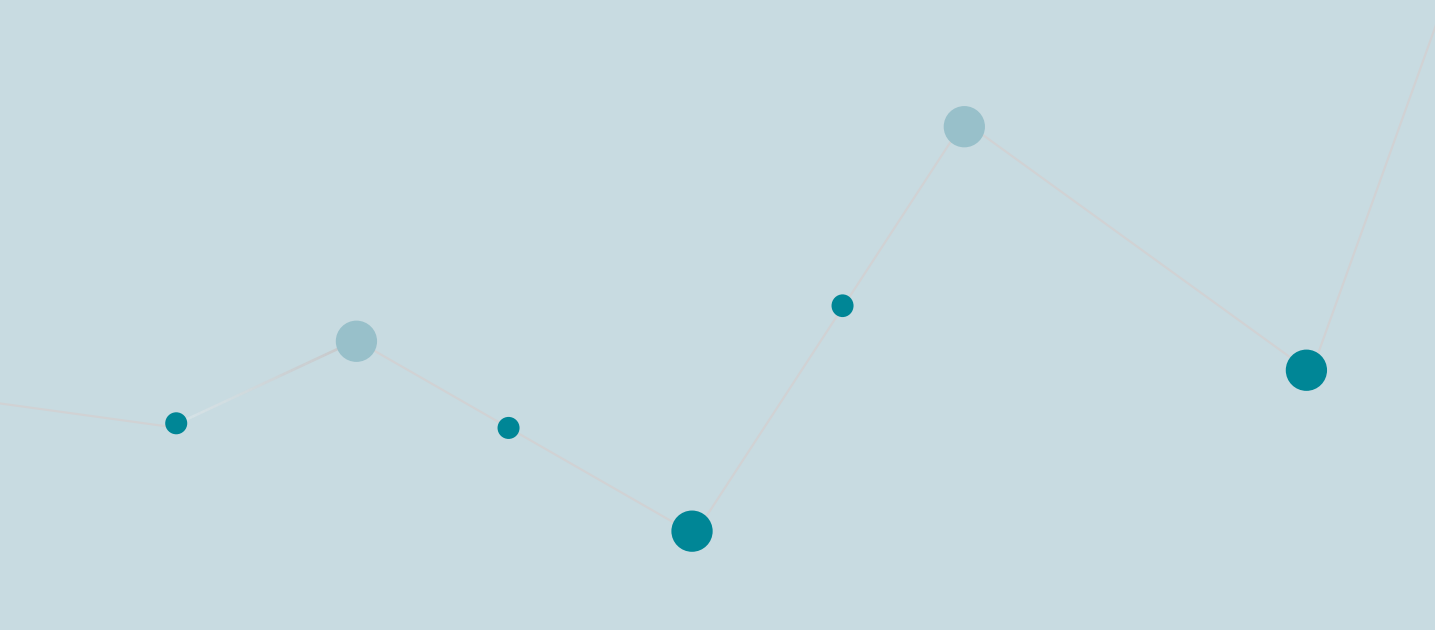
# STATISTICS KOREA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VI

## 소득과 소비

Income & Consumption

- 01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변화 박정수 | 서강대학교 [148](#)
  - 02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 김진영 | 건국대학교 [159](#)
  - 03 소득분배의 지역적 양상 이정민 | 서강대학교 [166](#)
  - 04 인구 고령화와 소득 및 소비 불평등 홍석철 | 서강대학교 [173](#)
- 

## 01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변화

박정수(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요 약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실질소득 증가율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현저하게 낮아졌고, 금융위기 이후 소득계층별 소득증가율은 수렴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는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지난 20년간 소득 불평등도는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악화되었다.
- 지난 20년 동안 청·노년층과 장년층 간 소득비의 양극화가 진행되었으며, 교육수준 간 소득의 격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위기 이후 2인가구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으나 1인가구의 소득은 정체 상태이다.
- 근로소득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사업소득의 비중은 낮아졌고 공적이전소득은 낮은 소득계층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 여성배우자의 가구소득 기여도는 고소득 계층일수록 높았고, 여성근로자의 사회 진출은 전문직 및 관리직 등 고소득 직종으로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 지난 10년간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과 나머지 소득 계층 간 소비지출비중의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모든 소득계층에 있어서 의식주에 대한 비중이 확대되었다.
- 고소득계층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흑자비율이 낮아졌으며, 최근 저소득계층의 순자산 점유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순자산의 계층별 격차가 확대 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두 차례에 걸친 경제위기가 있었다. 1997년에 외환위기가 일어났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경제가 이 두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계의 소득과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가구특성 별로는 소득과 소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난 20년을 5년 단위의 4개 기간, 즉 1992년에서 1997년까지 외환위기 직전 기간, 1997년에서 2002년까지 외환위기 회복 기간, 2002년에서 2007년까지 금융위기 직전 기간, 그리고 2007년에서 2012년까지 금융위기 회복 기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생계는 가구단위로 이루어지므로 가장 적절한 분석의 단위는 가구이다. 이 글에서 이루어진 가계 분석, 즉 가구의 소득과 소비 분석에는 통계청에서 매월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 자료가 이용되었다. 이 조사는 2006년 이전에는 전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1인가구로 확대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년 전체 기간을 비교하는 분석은 1인가구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1인가구와 관련된 분석에서는 2006년 이후의 자료만을 이용한다. 지난 20년간 기간별로 물가상승률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기간별 소득 및 소비를 비교하기 위해서 실질소득과 실질소비 개념을 이용하기로 한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초로 명목소득과 명목소비를 각각 실질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 가구소득의 분포와 변화

가구의 생활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가구원들이 벌어들이는 총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가구의 총소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민총생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 경제는 아직까지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저성장 기조가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 가계에 상당히 다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먼저 전체 가구의 소득 변화를 소득수준별로 살펴보고 가구 특성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관찰하고자 한다. 전체 가구를 소득규모에 따라 5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데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을 1분위로 하고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을 5분위로 하여 4개의 기간별로 각 소득집단의 연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을 살펴보았다.

[그림 VII-1]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 실질소득 증가율은 모든 소득집단에 있어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되었음을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직전 1992-1997년 기간에는 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이 5.04%에 달했으나 외환위기 직후 1997-2002년 기간에는 -0.03%로 정체되었고, 2002-2007년 기간에는 0.86%로 실질소득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08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하는 시기인 2007-2012년에는 0.63%로 다시 실질소득 증가율이 낮아졌음을 볼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시기에 따라서 소득집단별 소득 변화의 추이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2-1997년 기간에는 1분위 계층을 제외한 모든 소득집단의 소득증가는 모두 5%대를 기록하며 큰 차이가 없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2007년까지는 각 소득집단별 소득증가율이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으며,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소득증가율이 낮았음을 볼 수 있어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개방화, 글로벌화, 탈규제, 산업구조의 변화, IT기술의 발달 등 다양한 요인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VII-1 가구 소득분위별 실질소득 증가율, 1992-2012



주: 1) 해당 시기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각 시기의 첫 해 대비 각 해 실질소득의 평균 증가율임.

2) 인가구 통계는 2006년 이후에만 제공되므로 시계열적 일관성을 위해 제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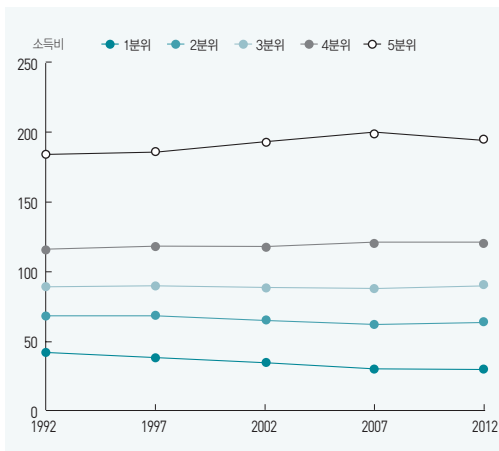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계층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다시 낮아졌고, 계층 간 소득증가율 또한 수렴하는 추이를 보이



고 있다.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1분위를 제외하고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 소득계층 간 불평등은 다소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1분위 소득계층은 1997-2007년 10년간 실질소득 증가율이 연평균 -1.32%로 실질소득이 줄어들었으며, 1992-2012년 기간 동안은 보아도 연평균 0.28%의 낮은 소득증가율을 보여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소득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I-2]에는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각 소득분위별 집단의 소득비가 제시되어 있는데, 지난 20년간 저소득층의 상대적 소득은 점차 낮아진 반면 고소득층의 상대적 소득은 점차 커졌음을 볼 수 있다.

그림 VI-2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비, 1992-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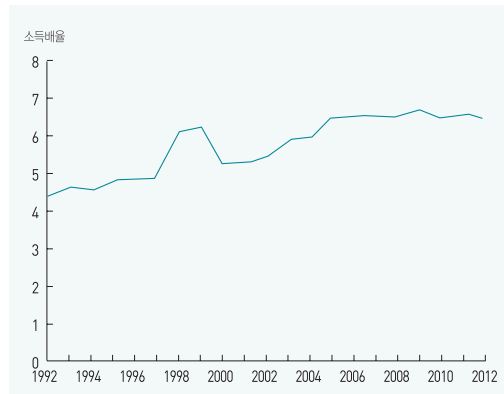
주: 1) 소득비는 각 연도의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분위의 소득비임.

2) 1인가구 통계는 2006년 이후에만 제공되므로 시계열적 일관성을 위해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지난 20년 간 소득집단별 소득변화의 차이는 소득집단 간 소득격차를 심화시켜 소득불평등의 악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림 VI-3]에 소득불평등도를 반영하는 지표인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 배율을 제시하였다.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 배율은 1992년에 4.4배였고 이는 1997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1999년에 6.2배 그리고 2009년에는 최고점인 6.7배에 이르렀으나 2009년 이후 최근 다소 낮아져서 2012년 6.4배를 보이고 있다.

그림 VI-3 소득 5분위 배율, 1992-2012



주: 1) 소득 5분위 배율은 각 연도의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의 비임.

2) 1인가구 통계는 2006년 이후에만 제공되므로 시계열적 일관성을 위해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 가구주 및 가구형태의 특성에 따른 소득의 변화

지난 20년 동안 가구소득의 변화는 소득분위에 따른 계층 간 차이도 상당하지만 가구주의 연령계층 간 차이도 뚜렷하다. [그림 VI-4]에서는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가구

주 연령에 따른 각 소득집단의 소득비가 지난 20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VI-4**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비, 1992-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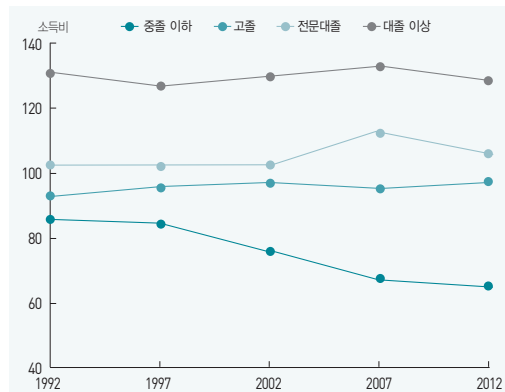
주: 1) 소득비는 각 연도의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령집단의 소득비임.  
2) 1인 가구 통계는 2006년 이후에만 제공되므로 시계열적 일관성을 위해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1997년까지는 20대 이하부터 50대까지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 격차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60대 이상의 경우 은퇴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20대 이하와 함께 가장 낮은 소득비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50대 집단의 소득비가 급격히 낮아진 반면에 30대 및 40대의 소득비가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30대부터 50대 간 연령집단의 소득비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추세는 2012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60대 이상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소득비가 상대적으로 급격히 하락하여 2012년 현재 소득비가 가장 낮은 연령집단이 되었다. 이 연령집단은 외환위기 이후 인력구조조정 of 가장 큰 타격

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대 이하 연령집단의 소득비는 지난 20년간 완만한 등락을 하였으나 결국 정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저성장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더디고 이에 따라 청년실업이 점차 증가한 데 부분적으로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지난 20년의 기간 동안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연령집단의 소득비는 나머지 연령집단과 격차가 크게 증가하여 청·노년층과 장년층 간 소득비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소득과 비례 관계를 보이므로 학력집단 간에는 소득의 격차가 있기 마련이다. 이처럼 교육에 따른 소득격차가 지난 20년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기 위해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라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고 전체 평균소득 대비 각 학력집단의 소득비를 [그림 VI-5]에 제시하였다.

**그림 VI-5**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비, 1992-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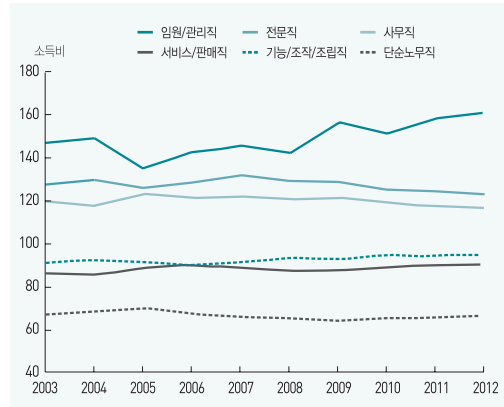
주: 1) 소득비는 각 연도의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학력집단의 소득비임.  
2) 1인 가구 통계는 2006년 이후에만 제공되므로 시계열적 일관성을 위해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대졸 이상 집단의 소득비는 1992년 130.9에서 시작하여 완만한 등락을 하면서 그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소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대졸 이상 집단은 나머지 집단에 비해 현저히 높은 소득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고졸 및 전문대졸 집단의 소득비 역시 완만한 등락 끝에 20년 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졸 이하 집단의 소득비는 동 기간 내에 소득비가 급격히 하락하여 1992년에 85.6에서 2012년에는 64.9에 이르렀다. 이처럼 중졸 이하 집단에서만 소득비의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될 뿐 나머지 집단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서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소득의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요구하는 기술적 특성에 따라 그리고 직업에 적합한 인력의 희소성에 따라 직업별 임금이 결정되므로 가구의 소득은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다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원·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등 직업군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서비스·판매직, 기능·조작·조립직, 단순노무직 등 직업 군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림 VI-6]에서 보면 지난 10년 동안 전체 평균소득 대비 임원·관리직의 소득비는 상승한 반면, 전문직 및 사무직의 소득비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기능·조작·조립직과 같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군의 상대적 소득비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숙련 단순노무직의 경우 소득비

가 정체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직종 간 소득격차는 지난 10년 동안 점차 확대되어 왔다.<sup>1)</sup>

그림 VI-6 가구주 직업별 소득비, 2003-2012



주: 1) 소득비는 각 연도의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직업집단의 소득비임.

2) 1인가구 통계는 2006년 이후에만 제공되므로 시계열적 일관성을 위해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최근 1인가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1인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10년 25.3%로 급증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1인가구의 후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체 평균소득 대비 1인가구의 소득비는 2007년 46.1에서 2012년 43.1로 다소 하락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소득은 각각 -2.5%와 -2.6% 감소를 기록했으며 2010년에는 각각 1.7%와 1.3%로 유사한 소득증가율의 변화를 보였다. 하지만 그 후 2010-2012년 동안 2인 이상 가구의 소득이 연평균 2.2% 증가한 반면, 1인가구의 소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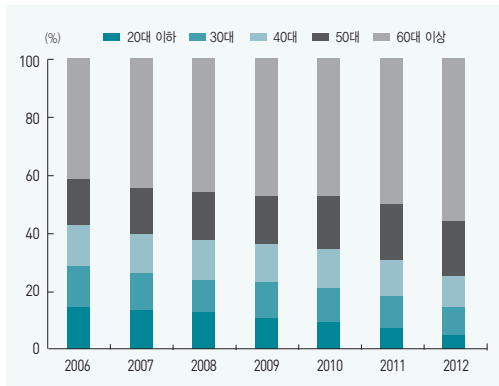
1) 직종별 코드가 여러 차례 개편됨에 따라 비교 가능한 연도가 2003년 이후로 제한되어 지난 10년간 변화만을 살펴보았다.



가율은 -0.8%로 실질소득이 하락하였다. 다시 말해 금융위기 이후 2인 이상 가구는 점차 소득 증가가 정상화되고 있는 데 반해 1인가구의 소득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VI-7]에서 1인가구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 추이를 보면, 50대와 60대 이상의 비중이 유의하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20대 이하와 30대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12년에는 60대 이상의 비중이 56%, 50대의 비중이 19%에 이르러 1인가구의 빈곤은 곧 장년층 및 노년층의 빈곤과 연결됨을 알 수 있다.

**그림 VI-7** 1인가구의 가구주 연령집단별 구성비율, 2006-2012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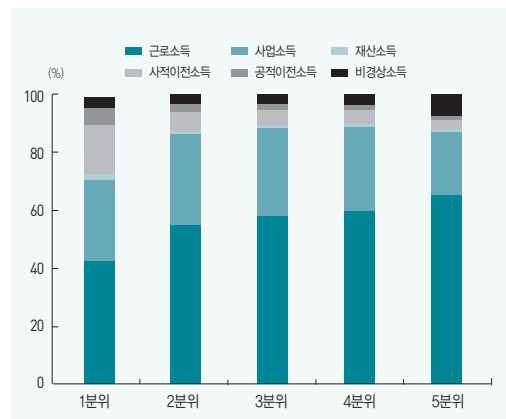
## 가구소득의 구성과 변화

가구소득은 주로 근로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그 원천별 구성도 점차 변화해 왔다. 가구소득은 원천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사적 및 공적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2년의 경우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59.8%를 차지하고 사업소득은 26.7%를 차지하여 두 소득 비중의 합이 86.5%에 이르렀다. 2012년에는 근로소득 비중이 증가하여 64.1%를 차지한 반면, 사업소득의 비중은 감소하여 21.3%를 차지하였다. 두 소득 비중의 합은 85.4%에 이르러 두 원천별 소득의 합은 변화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기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공적이전소득의 변화다. 공적이전소득은 동 기간 동안에 2.2%에서 4.7%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한국 사회의 복지체계가 양적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I-8]과 [그림 VI-9]에는 2002년과 2012년 소득분위별 소득원천별 구성을 제시하여 지난 10년간 소득구성의 변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근로소득의 비중이

**그림 VI-8**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원천구성,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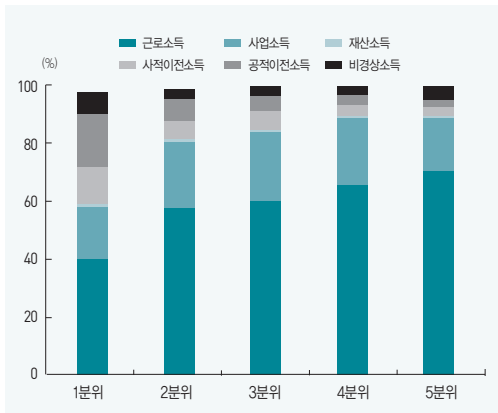


주: 1) 1인가구 통계는 2006년 이후에만 제공되므로 시계열적 일관성을 위해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02.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1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분위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사업소득의 비중은 낮아졌다. 공적 이전소득은 1분위 소득계층에서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고 2분위 및 3분위에서도 그 비중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I-9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원천구성,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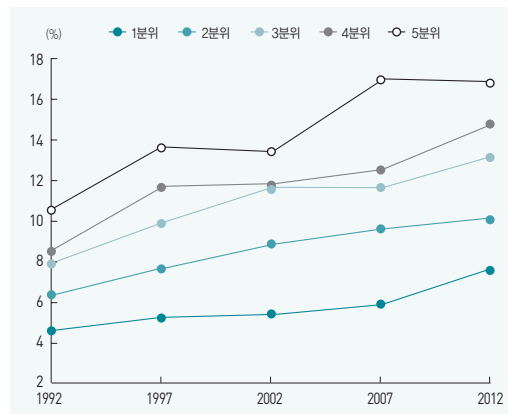
주: 1) 1인가구 통계는 2006년 이후에만 제공되므로 시계열적 일관성을 위해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2.

한국 사회는 1990년대 이후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가구소득에서 여성배우자의 소득이 기여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배우자의 소득 비중은 1992년에 8.6%에서 1997년 11.2%로 급증했다가 외환위기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00년에 10.4%가 되었다. 그 후 2010년 14.7%로 최고점을 기록하였으나 금융위기의 여파로 2012년 14.4%로 감소하였다. 여성배우자의 소득기여도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1992년에는 고

소득 계층일수록 그 기여도가 높았고 이러한 경향은 지난 20년 동안 점차 확대되어 동 기간에 1분위 여성 배우자의 소득기여도는 4.6%에서 7.6%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동안 5분위의 배우자 소득기여도는 10.6%에서 16.8%로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VI-10).

그림 VI-10 가구 소득분위별 여성배우자의 소득기여도, 1992-2012



주: 1) 소득기여도는 가구소득 중 여성배우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임.

2) 1인가구 통계는 2006년 이후에만 제공되므로 시계열적 일관성을 위해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여성배우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20대 및 30대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40대 이상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이가 뚜렷하다. 1998년에는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59.9%이었으나 2012년에는 40대 이상의 비중이 66.7%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30대 이하에서 미혼 여성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그 만큼 그 연령대의 여성배우자의 수가 감소함과 동시에 50대 이상 여성들의 수명이 늘어난 데에 기

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연령별 구성의 변화는 직장을 가진 여성배우자로 표본을 제한하여도 매우 흡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여성 배우자의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기간에 있어서 서비스·판매직과 사무직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2012년에는 그 비중이 52.1%에 달했다. 여성배우자의 직종별 분포에서 전문직 및 관리직의 비중이 1998년에는 5.3%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 이르러 19.5%로 급격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성근로자의 사회적 진출이 보다 다양한 직종으로 또 고소득 직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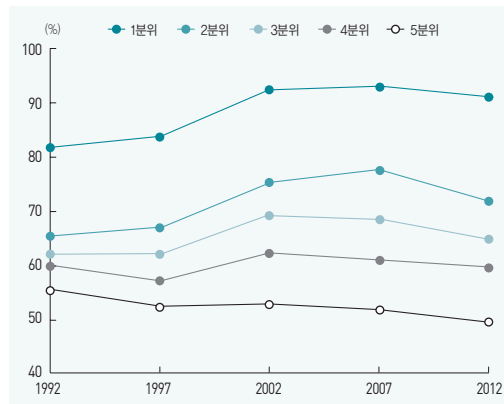
### 가구지출 및 가계수지의 변화

가구소득의 중요한 기능은 가구지출의 재원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가구지출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의 비중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VII-11]에서는 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중을 소득분위별로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기간에 걸쳐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소비지출 비중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소비지출 비율의 기간별 변화를 살펴보면, 1992년부터 2002년까지는 소비지출 비중이 64.7%에서 70.0%로 높아졌으며 동 기간에 5분위 소득계층을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의 소비지출 비중이 높아졌다. 이후 2002년부터 2012년까지는 소비지출 비중이 다시

67.0%로 하락하며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비지출 비중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VII-11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 1992-2012



주: 1) 1분위에서는 소비지출 비중이 200%가 넘는 가구는 제외하였음.  
2) 1인가구 통계는 2006년 이후에만 제공되므로 시계열적 일관성을 위해 제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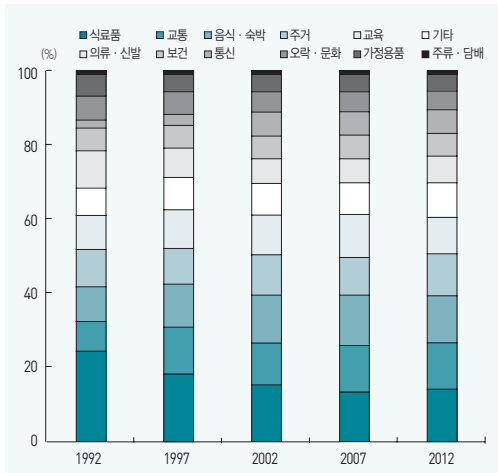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전체 평균 소비지출 대비 소득분위별 소비지출비를 살펴보면 2분위, 3분위, 4분위의 소비지출비는 점차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1분위와 5분위의 소비지출비는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분위 이상의 소득계층 간 소비지출의 불평등도는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1분위와 나머지 소득계층 간 소비지출의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평균 소비지출 대비 가구형태별 소비지출비를 살펴보면, 1인가구의 소비지출 비율이 전체 평균의 45.8%에 불과하며 1인가구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큰 변화가 없다. 이처럼 소비지출 비율이 낮은 것은 우선 적은 가구원수에 원인이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1인가구가 1분

위와 2분위에 각각 56.6%와 19.0%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도 기인한다.

가계는 가구소득을 기초로 주로 식료품, 주류·담배, 의류·신발, 주거, 가정용품,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등의 항목에 지출한다. [그림 VI-12]에 제시된 소비지출 순위를 살펴보면, 2012년에는 식료품, 교통, 음식·숙박, 주거, 교육에 대한 지출이 각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항목들의 가격변화가 한국 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간별 변화를 살펴보면, 식료품비가 1992년 24.3%에서 2012년에는 14.4%로 그 비중이 급격히 하락한 반면 교통비는 8.5%에서 12.6%로, 음식·숙박비는 9%에서 12.5%로, 주거비는 10.3%에서 11.1%로, 교육비는 9.1%에서 10.4%로, 그리고 통신비는

그림 VI-12 가구 소득분위별 소비지출구성, 1992-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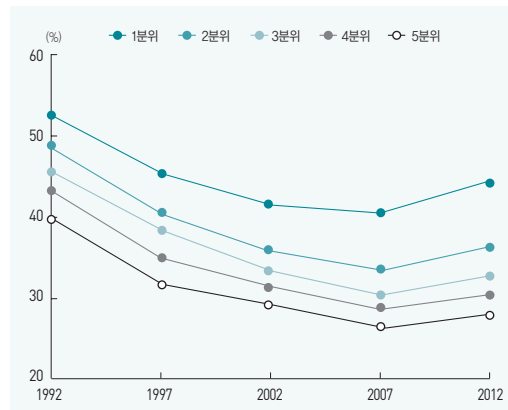


주: 1) 1인가구 통계는 2006년 이후에만 제공되므로 시계열적 일관성을 위해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2.2%에서 6.2%로 각각 그 비중이 확대되었다.

[그림 VI-13]에서 소득분위별 의식주 지출의 비중을 보면, 외환위기 기간을 포함하여 1992년부터 2007년까지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그 비중이 뚜렷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모든 소득분위에서 의식주 비중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특히 그 상승의 폭이 1분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금융위기 이후 특히 빈곤한 계층에게 의식주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I-13 가구 소득분위별 의식주 지출비율, 1992-2012



주: 1) 의식주 지출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 등의 지출을 포함함.  
2) 1인가구 통계는 2006년 이후에만 제공되므로 시계열적 일관성을 위해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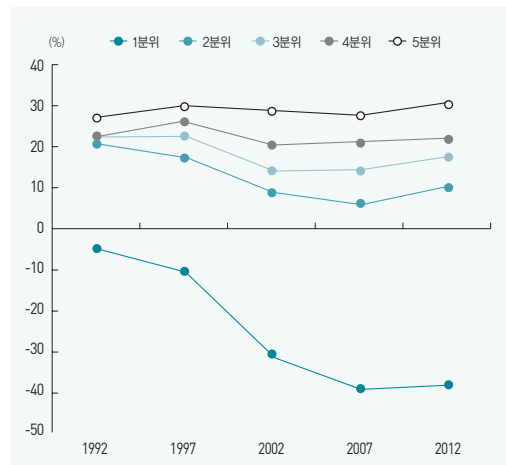
가계는 소득 중 일부분을 조세 또는 사회보장 과 같이 소비와 상관없는 비소비지출 항목에 지출하게 된다. 소득 대비 비소비지출 비중은 1992년 14.9%에서 2012년 17.7%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동 기간 동안에 비소비지출 중에서 경상 및 비경상 조세를 포함한 조세부담률은

2.18%에서 2.68%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한국 국민의 소득이 높아져 선진국에 진입함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함께 높아져 가고 이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도 커지는 과정에서 가계의 조세부담률도 완만하게 상승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더 많은 복지재원이 필요할 것이고 가까운 미래에 가계의 조세부담률에 큰 압력이 올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연금 및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비중은 1992-2012년 기간 동안 각각 0.70%와 0.92%에서 2.63%와 2.60%로 급격하게 증가했고, 특히 외환위기 직후 1997-2002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국민의 기대수명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연금 및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국민부담률을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최근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0년 기준으로 34개국 중에서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어서 아직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가구 입장에서는 소득이 지출보다 더 크면 흑자를 볼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는 적자를 볼 것이다. 소득과 지출 간의 차이를 다시 소득으로 나눈 것을 가계흑자비율이라고 할 때, 가계흑자비율이 각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 보았다. [그림 VI-14]에서 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3-5분위의 흑자비율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1분위와 2분위는 완만한 하락 추세를 나

타내고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2002년까지 3-5분위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인 반면 1분위와 2분위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금융위기 이후 2007-2012년 사이에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흑자비율이 다시 상승하여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높은 흑자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1992-2012년 기간 동안 5분위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흑자비율이 낮아졌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1분위 가구의 흑자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림 VI-14 가구 소득분위별 가계흑자비율, 1992-2012



주: 1) 가계흑자비율은 가구소득에서 지출을 차감한 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임. 1분위의 경우 월 10만원 이하 가구는 제외하였음.

2) 1인가구 통계는 2006년 이후에만 제공되므로 시계열적 일관성을 위해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가구의 자산과 부채 실태에 관한 조사로 2010년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2012년에는 전체 가구 중 64.6%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소득이 높을수록 부채 보유비율이 높

아지는데 1분위는 32.3%의 가구, 5분위는 81%의 가구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순자산을 계산한 후 전체 순자산에서 각 소득계층이 차지하는 점유비율을 구한 결과, 1분위가 9.6%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5분위는 43.0%를 점유하고 있어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순자산 점유율을 2006년 「가계자산조사」 통계와 비교해 보면, 1분위와 2분위의 점유율은 현저히 감소하였고 3분위와 4분위의 점유

율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며 5분위의 점유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순자산의 계층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앞서 살펴본 소득계층 간 소득증가율 격차의 심화가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와 더불어 금융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위 소득계층 가구들이 부채를 늘려 그 자금으로 자산에 투자하고 그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순자산이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 02

##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

김진영(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요 약

- 최근 국민의 국가재정부담률은 급속도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조세부담률보다는 사회보장부담률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 외환위기 이후 1인당 세금 납부액 증가율과 1인당 사회보장부담금 납부액 증가율은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 전체 가구 중 소득 7분위 가구까지는 소비세를 제외한 경상조세부담액보다 사회보험부담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최근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 모두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국가든 가구든 경제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선택은 주어진 소득에서 얼마나 소비하고 얼마나 저축하느냐는 것이다. 소득, 소비, 저축 간 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실제 소비할 수 있는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선진국 정부들에서는 대개 GDP의 30% 이상을 지출을 하는데 이러한 정부의 지출은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어느 만큼의 세금을 부담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조세부담률인데 국내총생산에서 조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된다. 세금과는 의미가 다소 다르지만 정부는 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위험이 되는 요소인 빈곤, 질병, 생활불안 등에 대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도모한다. 한국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는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사회안전망의 작동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사회보장부담금이라는 형태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한 가구의 소비수준은 총소득보다는 총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을 제외한 부분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에 정부의 지출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민부담금은 정부의 활동 규모를 나타내는 주요 국가지표가 된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의 변화 추이를 개관하고 이를 소득분위별로 검토해 본 다음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국민부담률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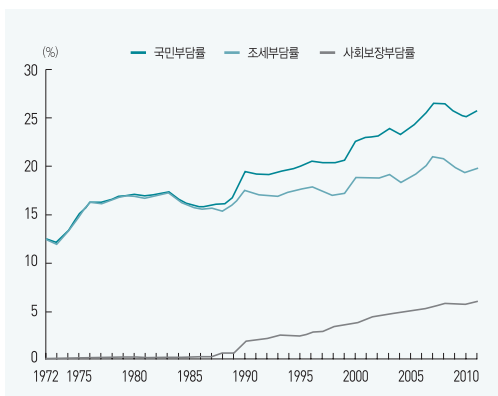


###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의 변화 추이

조세부담률의 결정요인은 크게는 담세능력 요인과 공공선택 요인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담세능력은 말 그대로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냐는 것이고 공공선택이란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상호작용에 의해 세금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대를 전후하여 1970년대 초까지는 담세능력이 조세부담률을, 그 이후에는 담세능력 증가와 세제개혁 조치로 공공선택이 조세부담률을 좌우하는 정도가 커졌다.

[그림 VI-15]는 1972년 이후 한국의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국민부담률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조세부담률은 1970년대 초반 12%이던 것이 1976년 처음으로 15%를 넘었다. 이후

**그림 VI-15**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1972-2011



주: 1)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국민부담률은 각각 GDP 대비 조세부담금, 사회보장보험금, 국민부담금(조세부담금+사회보장보험금)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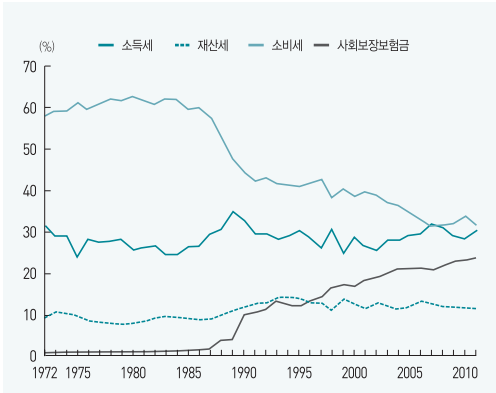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12, 2012.

1980년대 초반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83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1986년에는 15.3%까지 떨어진다. 이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으며 2011년에는 19.8%다.

한편 사회보장부담률은 1980년대까지는 GDP의 1%를 넘지 않는 수준이었다. 실제로 사회보장부담률이 의미를 갖게 된 것은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된 1988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부담률은 1988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해 1988년에 0.6%였던 것이 1992년에 2%가 되었고, 2001년에 4%, 2005년에 5%, 2011년에 6%를 넘게 되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1인당 세금 증가율, 1인당 사회보장부담금 증가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의 증가율이 국민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실질경제 성장률의 평균이 4.6%였던 반면, 1인당 세금 증가율의 평균은 6%였으며 사회보장부담금 증가율의 평균은 9.0%였다.

세금은 세원에 따라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로 구분된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를 포함하고 재산세는 상속·증여세, 부동산 관련 세금 및 취득세를 포함한다. 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VI-16]은 이들 주요 세원으로부터 나온 세금과 사회보장보험금이 전체 국민부담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그림 VI-16 국민부담금의 주요 원천별 구성비율, 1972-2011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12, 2012.

소비세와 소득세가 전체 국민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한 수준이다. 소비세의 비중은 1999년에 40.7%였던 것이 2011년에는 31.4%까지 하락했으며, 소득세의 비중은 1999년에 24.8%에서 2011년에는 30.3%로 상승하였다. 재산세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다소 줄어들었음이 확인된다. 반면, 사회보장부담금이 전체 국민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13.7%에서 2011년 23.5%로 상승하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부담금이 소득을 기초로 산정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난 10여 년간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부분이 매우 커져 왔음을 알 수 있다.

#### 가구소득과 조세부담률 및 사회보장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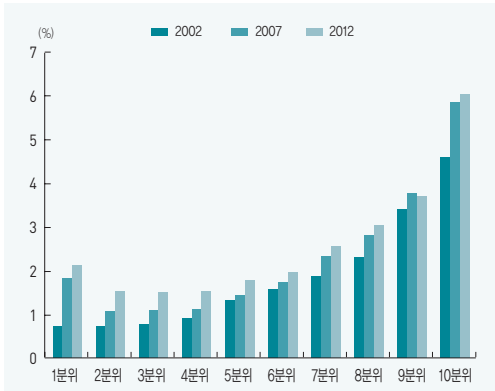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통해 가구소득수준별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살펴

보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가구 자료를 통해서는 가구가 실제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 소비 관련 세부담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가용한 자료를 통해서는 소득분위별 조세부담률을 도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가 용이한 소득분위별 경상소득 대비 경상조세와 사회보험금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경상조세는 매해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포함한다. 경상조세가 전체 조세 중 일부만 포함하기 때문에 경상소득 대비 경상조세 비율은 앞에서 살펴본 조세부담률에 비해 작은 값을 가진다.

먼저 2002년과 2007년 그리고 2012년의 경상소득 대비 경상조세부담률을 살펴보면, 모든 소득분위에서 경상소득 대비 조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경우 경상조세부담률이 2002년 4.6%에서 2012년 6.0%로 상승했고,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경우는 2002년 0.7%에서 2012년 2.1%로 상승했다(그림 VI-17). 세금 부담액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2007년과 2012년에는 1분위의 경상조세 비율이 2분위부터 6분위까지의 경상조세 비율보다 높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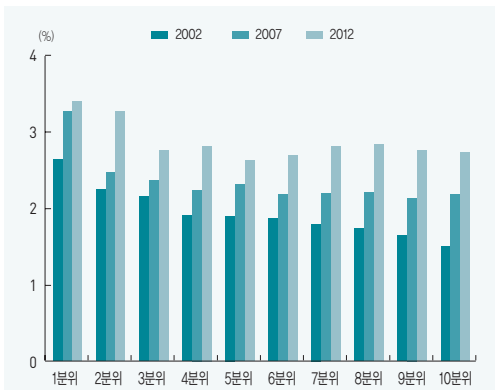
같은 기간 동안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사회보장부담률도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부담률은 조세부담률과는 달리 소득 1분위와 2분위에서 가장 높고 5분위부터 10분위까지는 비슷한 수준이다(그림 VI-18).

그림 VI-17 가구의 소득분위별 조세부담률, 2002-2012



주: 1) 가구 조세부담률은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경상조세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그림 VI-18 가구의 소득분위별 사회보장부담률, 2002-2012



주: 1) 가구 사회보장부담률은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사회 보험금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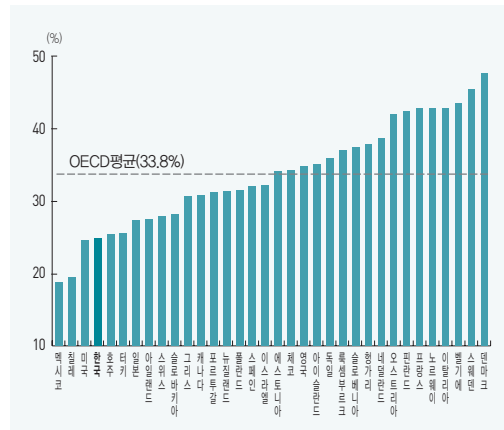
경상조세와 사회보험료는 실제로 소비를 통해 지출하는 간접세에 비해 액수가 크지는 않다. 예컨대 2012년 소득 1분위의 소비지출액은 106만 원인데 부가가치세율인 10%를 감안한다면 대략 10만 원 내외를 소비세로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소득 1분위의 경상조세 18,000원을 크

게 상회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세 부담이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소득층에게는 조세보다도 사회보험금의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실제로 7분위까지는 조세부담보다 사회보험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국민부담률의 국제비교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국민부담률이 낮은 편에 속한다. 2010년을 기준으로 국민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47.6%이다. 스웨덴, 벨기에, 이탈리아, 노르웨이,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도 국민부담률이 40%를 넘는 다. 한국은 국민부담률 25.1%로 OECD 국가들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국가는 미국, 칠레, 멕시코 등의 북미와 남미 국가들 뿐이다.

그림 VI-19 OECD 국가의 국민부담률, 2010



주: 1) 국민부담률은 GDP 대비 국민부담금의 비율임.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12,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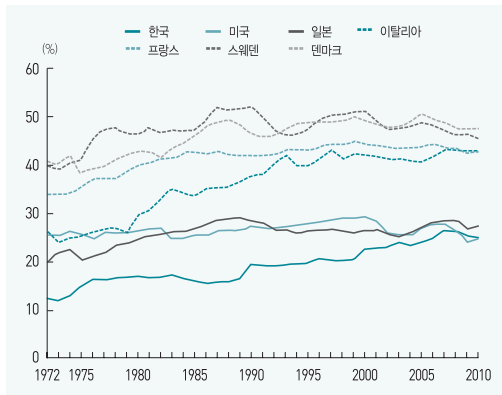
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 장기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국가별 특징들이 발견된다. 국민부담률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한국, 미국, 일본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자.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1972년 12%에서 2010년 25%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의 국민부담률은 1972년 25.6%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30% 가까이 접근하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0년에는 한국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일본의 국민부담률은 1972년 20%를 약간 웃돌다가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27.2%까지 이르렀다.

국민부담률에 있어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은 국가는 이탈리아다. 이탈리아의 국민부담률은 1972년에 미국과 비슷한 25% 수준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는 43%에 가깝다.

국민부담률이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들은 북유럽 국가들이다. 스웨덴의 경우 1970년대에는 40% 미만이던 국민부담률이 1980년대 중반에는 5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다소 감소하고 있다. 덴마크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국민부담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1980년대 후반에는 50% 가까운 수준에 이르렀으며, 2000년 이후에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OECD 국가들의 현재 국민부담률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향후 각국의 국민부담률 변화 추이를 쉽게 예측할 수 없겠지만, [그림 VI-20]에서 찾을 수 있

그림 VI-20 OECD 국가의 국민부담률, 1972-2010



주: 1) 국민부담률은 GDP 대비 국민부담금의 비율임.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12,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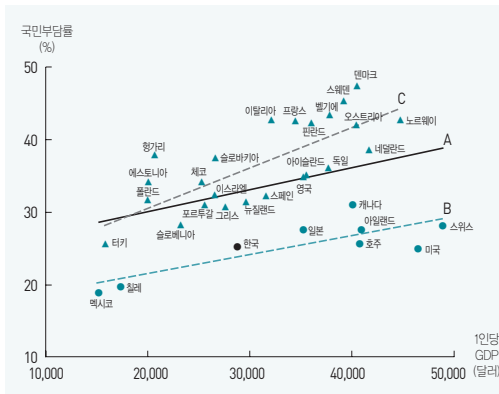
는 하나의 경향은 국민부담률의 높낮이가 다른 두 부류의 국가들, 즉 부담률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과 부담률이 낮은 한국, 미국 및 일본 3개국 모두 국민부담률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45% 수준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고 후자는 25% 수준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 국가의 국민부담률 변화를 엄밀하게 평가하려면 국가별 소득수준의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 국민부담률은 소득에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 VI-21]의 추세선 A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부담률은 소득이 높은 국가들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소득 1만 달러당 평균해서 약 1.8%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추세선의 하위에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CD 국가들 가운데는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일본, 멕

시코, 칠레,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스위스 등 소득수준에 비해 국민부담률이 낮은 국가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고 다른 유럽 국가들을 또 다른 한 집단으로 묶어 이 두 집단의 소득수준과 국민부담률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VI-21]의 추세선 B와 C 같이 두 개의 추세선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추세선 B보다 상위에 있는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부담률이 낮은 국가들 가운데서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VI-21 OECD 국가의 1인당 GDP와 국민부담률의 관계, 2010



주: 1) 국민부담률은 GDP 대비 국민부담금의 비율임.  
2) 추세선 A는 OECD 전체 국가(룩셈부르크 제외)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B는 한국 외 국민부담률이 낮은 8개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C는 그 외 24개국을 대상으로 한 것임.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12, 2012*.

국민부담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중이다.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은 경제규모에 비해 정부의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국가경제에서 정부의 지출이 커질수록 국민이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조세나 사회보장부담금으

로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림 VI-22]는 OECD 국가들의 2009년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과 국민부담률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 그림을 통해 덴마크가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이 가장 높고 한국은 GDP 대비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나라임을 알 수 있다.

그림 VI-22 OECD 국가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과 국민부담률의 관계, 2009



주: 1) 국민부담률은 GDP 대비 국민부담금의 비율임.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12, 2012; Government at a Glance 2011, 2011*.

## 맺음말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은 사회적 선택의 결과이다. 한국 국민부담률의 향후 추이는 국민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국민부담률을 더 높이는 선택을 당장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2011년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19세 이상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5%가 사회 보험료가 ‘매우’ 또는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하였다.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 중에서도 53%가 사회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빠른 시일 내에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잘 시사해 준다.

기본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정부로 이전되는 금액은 총소득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할수록 바람직할 것이나 정부가 존재하는 한 그 비중이 0이

될 수는 없다. 또한 현재까지의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국민부담률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불가피하게 국민부담률이 올라가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국민의 수용도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되든지 공공부문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납세자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신뢰 수준 또한 높아져야 할 것이다.



## 03

소득분배의  
지역적 양상

이정민(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요 약

- 지역 간 소득분배는 지난 2008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 이는 지역 간 소득격차가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의해 쉽게 바뀌지 않는 지역적 특성에 의해 결정됨을 시사한다.
- 지역 내 소득분배 역시 지난 2008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소득불평등 정도는 다소 높아졌으나 지역별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서울에서는 소득불평등이 다소 심화되었으나 다른 지역들에서는 일정한 추이가 관찰되지 않는다.
- 소득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는 지역 내 소득불평등보다는 지역 간 소득수준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서울과 울산의 경우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소득분배는 국가의 후생수준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소득분배는 일반적으로 성, 연령, 학력과 같은 인구학적 내지 사회경제적 특성별 비교를 통해서 파악된다. 이와 더불어 소득분배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역 간 소득분배 혹은 지역 내 소득분배는 인구의 이동과 지역별 삶의 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08년에서 2012년 동안 임금근로자 소득분배에 있어서의 지역적 특성을 찾아내고자 한다.<sup>1)</sup> 지역 간 비교를 위해서 임금근로자 중에서 18-65세 남성 가구주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2008-2010년의 경우에는 연간자료를, 2011년과 2012년의 경우에는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량은 주어진 승수를 이용하여 농업종사자 비중의 과대추정 문제를 보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의 2009년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배와 소득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 지역 간 소득분배의 최근 추이와 현황

〈표 VI-1〉은 월평균 근로소득(지난 3개월 평균 월급여)의 시도별 차이를 보여준다. 우선 전국평균을 보면 2008년 이후 평균소득은 소폭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표에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중위소득을 구해 보아도 평균소득과 비슷하게 2010년 이전까지 소폭 상승한 후 큰 변화가 없었다.

1) 소득분배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가계동향조사」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는 시도에 대한 정보가 없다.



표 VI-1 시도별 상대소득지수, 2008-2012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 소득(만원)	253	255	270	278	289
상대소득지수 (전국 소득=1)					
서울	1,075	1,122	1,110	1,097	1,085
부산	0,919	0,938	0,905	0,887	0,887
대구	0,881	0,894	0,858	0,883	0,932
인천	0,894	0,911	0,896	0,904	0,922
광주	0,978	0,991	0,916	0,915	0,941
대전	1,010	0,991	0,999	0,989	0,968
울산	1,277	1,117	1,211	1,261	1,311
경기	1,049	1,022	1,050	1,051	1,045
강원	0,867	0,883	0,869	0,896	0,890
충북	0,934	0,957	0,939	0,927	0,875
충남	0,944	0,943	0,921	0,906	0,918
전북	0,892	0,880	0,906	0,902	0,895
전남	0,980	0,999	0,994	0,976	0,971
경북	0,938	0,923	0,938	0,930	0,917
경남	0,940	0,928	0,925	0,942	0,983
제주	0,924	0,901	0,879	0,971	0,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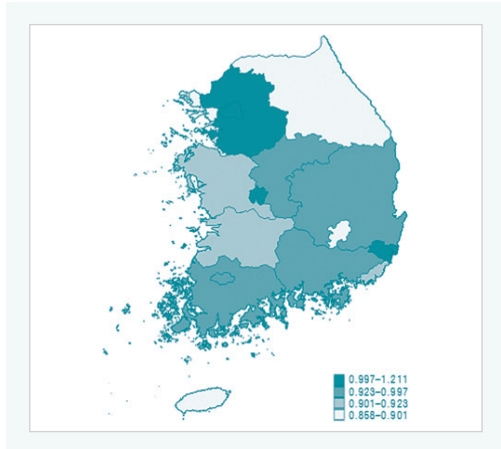
주: 1)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지난 3개월 평균 월급여액) 기준임.  
 2) 상대소득 지수는 전국 평균 소득 대비 해당 시도 평균 소득의 비임.  
 3) 2011년과 2012년 자료는 해당년도 3분기 자료임.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각 년도.

이 표에는 지역 간 소득분배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각 시도의 평균소득을 전국평균으로 나눈 상대소득지수가 제공되어 있다. 어떤 지역의 상대소득지수가 1보다 큰 값이면 이 지역의 평균소득은 전국평균보다 큰 것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대소득지수가 1.2이면 이 지역의 평균소득은 전국평균보다 20% 높은 것이다. 반대로 상대소득지수가 0.8이면 전국평균보다 20% 낮은 것이다. 이 지수를 보면 지역 간 소득분배는 지난 5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 간 소득격차가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의해 쉽게 바뀌지 않는 지역적 특성, 예를 들어 산업구조와 같은 특성에 의해 결정됨을 시사

한다. 2012년 상대평균소득을 보면, 울산, 서울, 경기도의 순으로 높다. 특히 울산의 경우 2012년에 전국평균보다 31.1%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울산지역에 대기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머지 모든 시도는 전국평균보다 낮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전국평균보다 13.3% 낮고, 다음으로 낮은 충청북도는 전국평균보다 12.5% 낮다. [그림 VI-23]은 2010년도 시도별 상대소득지수를 지도로 보여주고 있다.

〈표 VI-1〉에 나타난 지역 간 소득의 차이는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에 의해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 근로자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여기서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근로자, 즉 「지역별 고용조사」의 표본은 18-65세 남성가구주인 임금근로자들이나 이들의 다른 특성들은 지역 간에 크게 다를 수 있다. 특히 소

그림 VI-23 지도로 본 시도별 상대소득지수, 2010



주: 1) 상대소득지수는 전국 평균 소득 대비 해당 시도 평균 소득의 비임 (전국 평균 소득=1).  
 2) 음영이 진할수록 평균 소득이 높은 지역임.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2010.

득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 중의 하나인 교육수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4년제 대학교 졸업자로 분석 대상을 한정한 후 시도별 상대소득지수를 <표 VI-2>에 제시하였다.

**표 VI-2** 시도별 고졸자와 대졸자의 상대소득지수, 2008, 2010

시도	고졸자		4년제 대졸자	
	2008	2010	2008	2010
서울	0.925	0.922	1.061	1.110
부산	0.925	0.979	0.956	0.895
대구	0.868	0.890	0.903	0.900
인천	0.950	0.922	0.934	0.873
광주	0.979	1.025	0.910	0.847
대전	0.907	0.886	0.896	0.975
울산	1.572	1.384	1.088	0.930
경기	1.006	0.995	1.055	1.070
강원	0.957	0.940	0.858	0.841
충북	0.999	1.099	0.885	0.863
충남	1.037	1.101	0.945	0.824
전북	0.919	0.966	0.911	0.862
전남	1.121	1.146	0.964	0.894
경북	1.035	1.083	0.949	0.857
경남	1.028	1.052	0.935	0.878
제주	0.844	0.834	0.905	0.842

주: 1)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지난 3개월 평균 월급여액) 기준임.

2) 상대소득지수는 전국평균소득 대비 해당 시도의 고졸자 및 대졸자 평균소득의 비임(전국평균소득=1). 2008년과 2010년 전국평균소득은 각각 253만 원과 270만 원임.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각 년도.

우선 <표 VI-1>에서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소득지수는 연도에 따른 변화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교육수준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난다. 우선 서울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의 평균 소득이 전국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표 VI-1>에서 서울의 상대소득이 높았던 것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아닌 근로자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인데, 실제로 <표 VI-2>에서 볼 수 있듯이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의 상대소득이 높다. 울산의 경우 교육수준으로 나누어 보아도 상대소득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가 매우 높다. 울산의 상대소득은 2008년 1.572로 전국평균에 비해 57.2%가 높으며, 2010년의 경우에도 줄어드는 했지만 여전히 전국평균에 비해 약 38% 높다. 울산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소득이 높은 이유 역시 이 지역에 대기업이 집중되어 있어 숙련에 대한 보상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상대소득지수가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다. 전국평균에 비해 약 12%가 높다. <표 VI-1>에서 볼 수 있듯이 전라남도는 교육수준으로 나누기 이전에는 전국평균 수준이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고등학교 졸업자의 상대소득이 높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충청남도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충청남도의 상대소득은 전국평균 수준이나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2008년 3.7%, 2010년 10% 정도 전국평균을 상회한다. 이에 반해 서울, 기타 광역시, 제주도 등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상대소득이 낮다.

### 지역 내 소득분배의 최근 추이와 현황

<표 VI-3>은 각 지역 내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와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의 임금 격차를 보여주

고 있다. 지역 내 학력 간 임금격차는 지역 내 소득분배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학력 간 임금격차 역시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소폭 상승했을 뿐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자면, 서울에서의 학력 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서울 이외에 부산, 대구, 경기도와 같이 대도시 혹은 인근 지역,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학력 간 임금격차가 나타난다.

**표 VI-3** 시도별 고졸자 대비 대졸자의 상대소득지수, 2008, 2010

시도	2008	2010
전국	1,496	1,520
서울	1,717	1,829
부산	1,548	1,390
대구	1,558	1,537
인천	1,471	1,439
광주	1,390	1,257
대전	1,479	1,673
울산	1,036	1,021
경기	1,569	1,635
강원	1,341	1,360
충북	1,326	1,194
충남	1,363	1,138
전북	1,484	1,356
전남	1,287	1,186
경북	1,372	1,203
경남	1,362	1,269
제주	1,604	1,535

주: 1)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지난 3개월 평균 월급여액) 기준임.

2) 고졸자 대비 대졸자의 상대소득지수는 해당 지역 내 고졸자 평균 소득 대비 대졸자 평균 소득의 비임.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각 년도.

학력 간 임금격차는 지역 내 소득분배를 학력 계층 간 차이로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에 불과하므로, 좀 더 종합적으로 지역 내 소득분배를 보

여주는 5분위 분배율과 지니계수를 계산해 보았다. 5분위 분배율은 각 지역 내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고, 지니계수는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45도 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상대적 면적으로 계산된다. 5분위 분배율이나 지니계수 모두 그 값이 적을수록 소득분배가 더 평등하다고 할 수 있다.

〈표 VI-4〉는 5분위 분배율과 지니계수로 지역 내 소득분배의 추이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5분위 분배율을 보면, 그 값이 모든 시기 모든

**표 VI-4** 시도별 소득 5분위 분배율과 지니계수, 2008-2012

시도	5분위 분배율			지니계수		
	2008	2010	2012	2008	2010	2012
전국	2,133	2,333	2,467	0,282	0,286	0,281
서울	2,467	2,667	2,529	0,298	0,310	0,300
부산	2,475	2,000	2,333	0,286	0,274	0,269
대구	2,308	2,143	2,400	0,269	0,281	0,277
인천	2,000	2,000	2,000	0,246	0,248	0,244
광주	2,593	2,333	2,400	0,290	0,296	0,279
대전	2,333	2,667	2,500	0,291	0,286	0,274
울산	2,748	2,632	2,800	0,295	0,285	0,304
경기	2,333	2,317	2,222	0,278	0,279	0,280
강원	2,500	2,308	2,333	0,278	0,282	0,279
충북	2,143	2,000	2,000	0,267	0,266	0,248
충남	2,000	2,200	2,333	0,250	0,251	0,243
전북	2,500	2,308	2,333	0,277	0,280	0,279
전남	2,409	2,333	2,400	0,276	0,274	0,262
경북	2,308	2,133	2,333	0,269	0,275	0,275
경남	2,000	2,000	2,059	0,246	0,244	0,240
제주	2,500	2,354	2,147	0,296	0,275	0,288

주: 1)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지난 3개월 평균 월급여액) 기준임.

2) 소득 5분위 분배율은 지역 내 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의 비임.

3)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과 완전균등선(대각선)이 이루는 불평등면적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면적(0.5)과 대비시킨 비율로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으며,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더 평등함을 의미함(본 표에서 지니계수는 18-65세 임금근로자 중 남성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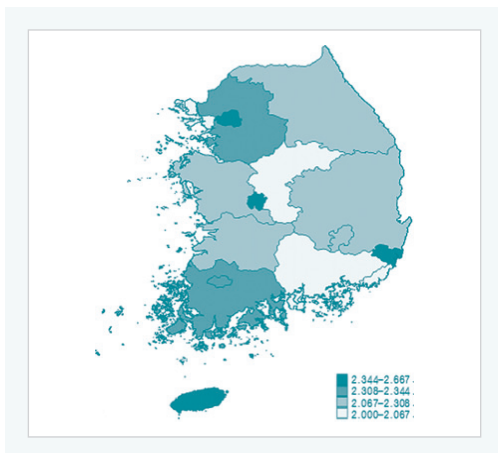
4) 2012년 자료는 3분기 자료임.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각 년도.

지역에서 2보다 크다. 이는 상위 20%가 하위 20%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5분위 분배율은 2008년 2.1에서 2009년 소폭 하락한 후 2010년 이후 다시 상승하여 2.3~2.4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역 내 소득 분배의 추이를 살펴보면 앞서 지역 간 소득분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08~2012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과 대전의 경우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대전의 경우에 5분위 분배율이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소폭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그림 VI-24]는 2010년도 지역별 5분위 분배율을 지도로 보여주고 있다. 5분위 분배율을 지역 간에 비교해 보면, 경상남도, 충청북도, 인천 지역에서 5분위 분배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

그림 VI-24 지도로 본 시도별 소득 5분위 분배율, 2010



주: 1) 소득 5분위 분배율은 지역 내 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의 비임.  
2) 음영이 진할수록 소득분배가 더 불평등한 지역임.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2010.

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서울, 대전, 울산, 제주도 등의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5분위 분배율이 높게 나타나 이들 지역에서 소득분배 불평등이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니계수의 지역적 양상 역시 5분위 분배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 내 소득분배를 교육수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VI-5>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로 분석대상을 한정 한 5분위 분배율을 시도별로 구한 결과를 보여 준다. 지니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앞서와 마찬가지로 5분위 분배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VI-5 시도별 고졸자와 대졸자의 소득 5분위 분배율, 2008, 2010

시도	고졸자		4년제 대졸자	
	2008	2010	2008	2010
전국	2,143	2,000	2,000	2,000
서울	1,923	2,333	2,091	2,500
부산	2,083	2,333	2,000	2,000
대구	2,083	1,923	1,830	2,000
인천	1,667	1,667	1,850	2,000
광주	2,283	2,107	2,052	2,222
대전	1,812	2,333	2,111	2,204
울산	2,778	2,500	2,045	2,050
경기	1,813	1,933	2,100	2,273
강원	2,500	2,308	1,944	2,000
충북	2,143	2,365	1,750	2,000
충남	2,000	2,353	2,000	2,000
전북	2,250	2,041	1,750	1,944
전남	2,000	2,536	2,000	2,222
경북	2,308	2,333	1,900	1,874
경남	2,000	2,000	2,000	1,820
제주	2,100	2,000	1,944	2,022

주: 1)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지난 3개월 평균 월급여액) 기준임.  
2) 고졸자 및 대졸자의 소득 5분위 분배율은 지역 내 고졸자 및 대졸자 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의 비임.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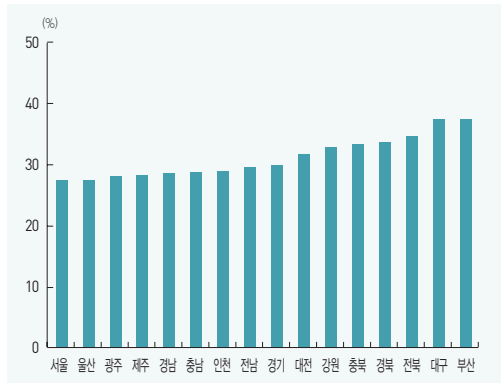
우선 전국적으로 보면 2008과 2010년 사이 지역 내 소득분배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지역 내 교육수준별 소득분배가 약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와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집단 모두에서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대전, 경기도, 충청북도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고등학교 졸업자들보다 4년제 대학교 졸업자들이 각 교육수준별 집단 내에서의 이질성이 클 것이므로 대학교 졸업자 집단 내에서의 소득불평등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서울에서는 관찰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 집단 내 소득불평등이 2008년과 2010년 모두에서 높다.

### 지역별 소득분배와 소득만족도

[그림 VI-25]는 시도별 소득불만족도를 보여준다. 통계청 「사회조사」는 소득에 대한 만족도를 '매우 만족'에서 '매우 불만족'까지 5점 척도로 묻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통' 미만, 즉 소득에 대해 '약간 불만족' 혹은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시도별로 계산하였다. [그림 VI-25]를 보면, 소득에 대해 불만족하는 집단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27.4%)과 울산(27.6%)이다. 반면, 소득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37.5%)과 대구(37.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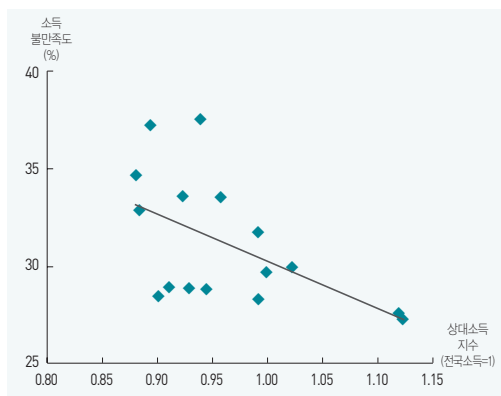
그림 VI-25 시도별 소득불만족도, 2009



주: 1) 소득불만족도는 해당 지역 15세 이상 인구 중 현재 자신의 소득에 '약간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하는 인구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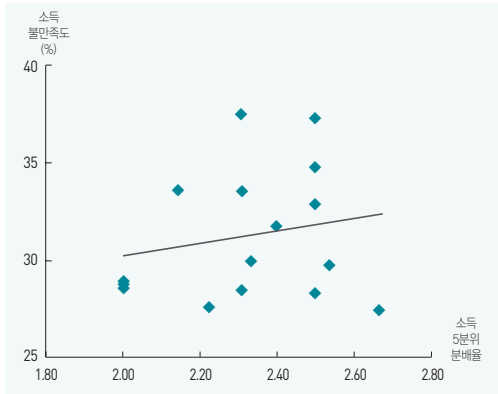
앞서 제시하였던 시도별 상대소득지수, 5분위 분배율,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소득불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VI-26], [그림 VI-27], [그림 VI-28]은 각 소득분배 지표들과 소득불만족도 간의 관계를 산점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VI-26 시도별 상대소득지수와 소득불만족도의 관계,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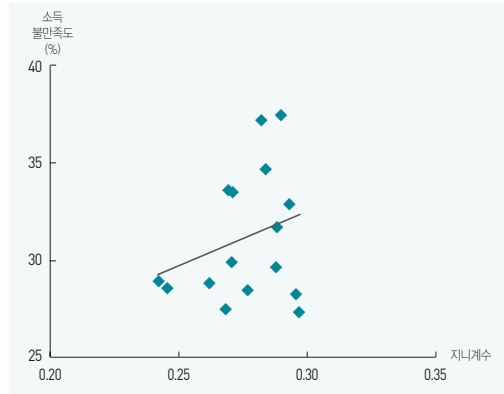
주: 1) 상대소득 지수는 전국 평균 소득 대비 해당 시도 평균 소득의 비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기준).  
2) 소득불만족도는 해당 지역 15세 이상 인구 중 현재 자신의 소득에 '약간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하는 인구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2009; 「사회조사」, 원자료, 2009.

그림 VI-27 시도별 소득 5분위 분배율과 소득불만족도의 관계, 2009



주: 1) 소득 5분위 분배율은 지역 내 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의 비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기준).  
2) 소득불만족도는 해당 지역 15세 이상 인구 중 현재 자신의 소득에 '약간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하는 인구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2009; 「사회조사」, 원자료, 2009.

그림 VI-28 시도별 소득 지니계수와 소득불만족도의 관계, 2009



주: 1) 지니계수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기준임.  
2) 소득불만족도는 해당 지역 15세 이상 인구 중 현재 자신의 소득에 '약간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하는 인구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2009; 「사회조사」, 원자료, 2009.

[그림 VI-26]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 지역의 소득불만족도는 그 지역의 상대소득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소득지수와 상관계수는 -0.545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반면 5분위 분배율이나 지니계수와 상관계

수는 양의 값을 보여 지역 내 소득불평등이 높을 수록 소득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그림 VI-27, 그림 VI-28). 따라서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소득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나 지역 내 소득불평등과는 뚜렷한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04

## 인구고령화와 소득 및 소비 불평등

홍석철(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요 약

- 최근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상대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지난 10년간 증가해 왔다.
- 일반적으로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구 소득과 가구소비의 불평등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 1990년 이후 인구고령화 추이와 소득불평등 심화 추이는 유사하게 관측된다.
- 생애주기별 소득불평등 심화를 고려할 때 인구고령화는 사회 전체의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고령층의 근로소득 감소는 생애주기별 소득불평등 심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고령인구 비중 7% 이상)로 진입하였으며, 2012년 말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11.8%이다.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sup>1)</sup>

인구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인구고령화가 주요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축적을 저해하여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이 맞물려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평균적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위험기 피적인 고령인구가 많아질수록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낮아져 점차 자산가격의 하락을 가져오고 자본축적을 저해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에는 고령층의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가의 재정 부담 증가와 관련한 문제들이 인구고령화 이슈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과 같은 복지정책은 고령층의 소득 분포가 청년 및 중년층의 분포와 다르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활동정도나 노동생산성 차이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고령기로 접어들면 노동생산성이 낮아지고 노동시장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국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추지 못

1) 이미 2009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이르기까지 78년이 걸렸으며, 200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36년이 소요되었다.



한 사회에서는 고령층의 평균소득 저하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고령층의 경우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도가 낮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은 직접적으로 지출과 소비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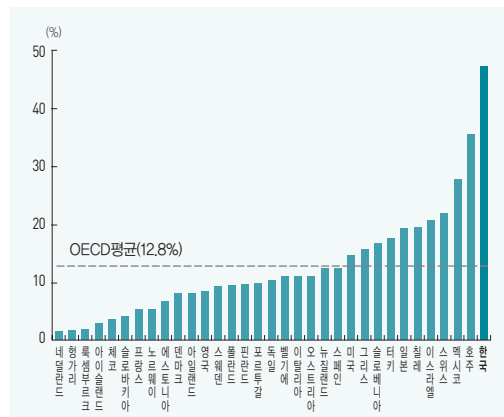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첫째, 고령인구 빈곤율의 국제비교와 장기추세 검토를 통해 한국 고령층의 경제적 취약성을 살펴본다. 둘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로부터 추정된 다양한 통계치를 활용하여 생애주기별 소득과 소비의 분포를 검토한다. 소득과 소비 분포의 특성은 각 변수의 평균값 그리고 지니계수로 추정한 불평등 지표를 통해 파악될 것이다. 특히 소득 및 소비의 원천별로 그리고 가구의 특성별로 발생하는 결과의 차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볼 것이다. 셋째, 1990-2012년 장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고령인구 비중이 빠른 속도로 변해온 만큼 소득불평등 역시 더욱 악화되었음을 살펴본다. 이러한 장기 추이가 생애주기별 소득분포의 차이와 어떤 상관성을 갖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인구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간략히 논의한다.

### 고령인구의 빈곤율

[그림 VI-29]는 2010년 OECD 국가들의 66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을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빈곤율은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 분포에서 소득

중위값의 50% 미만에 놓인 인구 비율로 정의되는 상대빈곤율이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66세 이상 빈곤율은 47.2%로 OECD 평균 12.8%의 세 배 이상이며,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 이는 한국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취약함을 보여준다. 또한 66세 이상 인구의 평균소득이 한국보다 낮았던 멕시코, 슬로바키아, 체코,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등과 비교할 때에도 상대빈곤율이 높다는 사실은 한국 고령층의 소득분포가 매우 불균등하다는 것을 잘 시사한다.

그림 VI-29 OECD 국가의 노인빈곤율, 2010



주: 1) 노인빈곤율은 66세 이상 인구 중 가구 가처분소득이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의 중위값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임.

2)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는 2009년, 칠레는 2011년임.

출처: OECD Statistics(Income Distribution Database).

〈표 VI-6〉은 「가계동향조사」로 파악된 고령층 빈곤율의 장기 추이를 보여준다. 2006년 이전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에는 1인가구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1인가구를 제외한 고령층의 빈곤율만 살펴보면, 2003년 36.6%에서 2012년

39.5%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전체 인구(가구)의 빈곤율은 지난 9년간 12%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그 동안 고령층의 빈곤율과 고령인구 비중이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젊은 층의 빈곤율은 다소 줄어들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빈곤율이 소득불평등의 한 척도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추이는 고령층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VI-6 노인빈곤율, 2003-2012

연도	노인빈곤율 (%)		전체 빈곤율 (%)	
	1인가구 제외	1인가구 포함	1인가구 제외	1인가구 포함
2003	36.6		11.4	
2004	34.3		12.1	
2005	35.4		12.9	
2006	39.1	46.0	12.6	13.8
2007	38.6	46.3	12.9	14.3
2008	39.2	47.5	12.9	14.6
2009	39.3	48.8	13.0	14.8
2010	39.1	48.1	12.5	14.3
2011	41.0	49.7	12.3	14.3
2012	39.5	49.3	12.2	14.0

주: 1) 빈곤율은 각각 65세 이상 인구 또는 전체 인구 중 가구 가처분 소득이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의 중위값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임 (농가 제외).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 가구주 연령별 소득분포

불평등의 심화와 인구고령화의 연관성을 살펴 보기에 앞서, 연령에 따라 소득과 소비의 분포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별 소득분포의 추이를 살펴 보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전국 도시지역 2인 이상 가

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다가 2003년부터 조사대상을 읍면동 가구로 확대하였고 2006년부터는 1인가구를 포함하여 실시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개인보다는 가구의 소득과 지출의 상세내역을 조사하므로 여기에서도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의 분포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생애주기의 변수가 되는 연령은 가구주의 연령으로 설정한다. 또한 가구소득의 분포는 지역(도시와 농촌)과 가구특성(1인가구 등)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런 특성에 제한을 받지 않는 2006년 이후 자료를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구주 연령은 25-69세로 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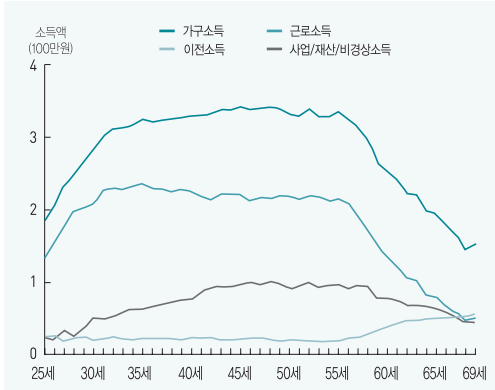
[그림 VI-30]은 2006-2012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주 연령별로 가구소득의 평균과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불평등도의 추이를 보여준다.<sup>2)</sup> 지니계수는 소득과 지출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로서 0에서 1의 값을 가지며, 추정치가 높을수록 분포가 더욱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우선 가구소득의 평균은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급격히 증가하며, 이후 일반적인 은퇴 시점인 50대 중반까지 아주 완만하게 증가하고, 50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가구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근로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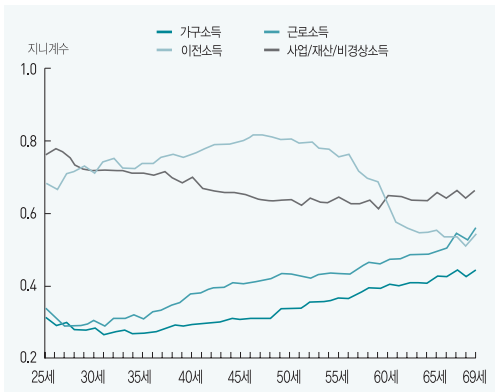
2) 이 글에서 사용하는 소득과 지출은 각 연도 GDP 디플레이터(2005년 기준)를 이용하여 계산된 실질소득과 실질지출이다.

**그림 VI-30**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가구소득과 소득지니계수, 2006-2012년 평균

1) 월평균 가구소득



2) 소득지니계수



주: 1) 가구는 전국 1인 이상 가구임.  
 2) 소득은 실질가구소득(2005년 기준)임.  
 3)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과 완전균등선(대각선)이 이루는 불평등면적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면적(0.5)과 대비 시킨 비율로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으며, 값이 클수록 분배가 더욱 불평등함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06-2012.

있다. 따라서 연령별 평균근로소득의 추이는 평균가구소득의 추이를 잘 반영한다. 사업, 재산, 비경상 소득 역시 역U자 형태를 가지지만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작은 편이다. 주목할 점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으로 구성된 이

전소득의 비중은 50대 중반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대 이후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한편 가구소득의 지니계수는 30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비록 가구 소득평균이 30-50대에서 큰 변화가 없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소득계층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평균적으로 30대에 비해 40대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11%, 50대는 31%, 그리고 60대는 52% 높게 추정되었다. 소득원천별로 살펴볼 때 생애주기별 가구소득 지니계수의 추이는 근로소득 지니계수의 추이와 매우 유사하다. 이는 생애주기별 소득분포를 결정할 때 근로소득 및 가구원의 근로여부가 중요한 요소를 시사한다. 또 다른 특이점은 40대 이후 이전소득의 지니계수가 빠른 속도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연령 증가에 따라 다수의 개인들이 유사 규모의 연금을 수령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 가구주 연령별 소비분포

다음으로는 생애주기별 가구지출 그리고 가구 소비 패턴을 살펴본다. 역시 2006-2012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며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가구를 구분하였다. [그림 VI-31]에서 가구주 연령에 따른 가구지출 평균의 변화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최대가 되는 역U자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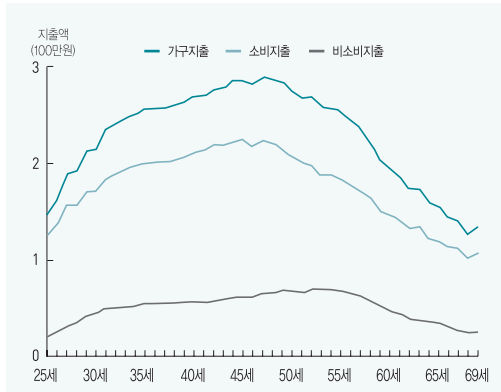
을 갖는다. [그림 VI-30]에서 30~50대의 가구소득 평균이 비슷했던 점을 돌이켜보면, 30대의 경우 지출보다 소득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가구지출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의 생애주기별 패턴을 살펴보면, 가구지출에서 소비지출의 비중이 압도적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I-31]은 지니계수를 이용한 지출불평등의 생애주기별 추이도 보여준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소득불평등에서처럼 30대 중반 이후 가구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구지출의 불평등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평균적으로 30대에 비해 40대의 지출불평등 정도는 15%, 50대는 31%, 그리고 60대는 45% 높게 추정되었다. 또한 가구주 연령에 따른 전체가구지출의 불평등 패턴은 소비지출 불평등 패턴과 거의 동일했으며, 이는 가구지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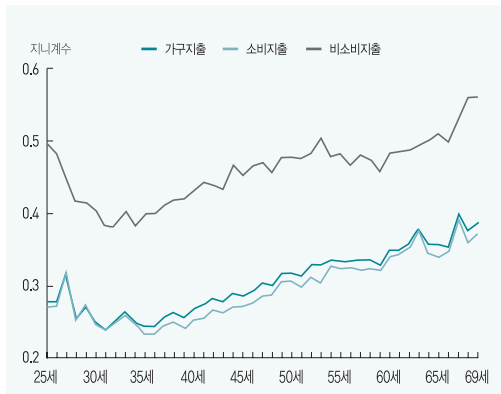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가구의 소비지출을 크게 12개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지출내역을 조사하였다. <표 VI-7>에서는 소비지출 유형별로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지출 분포의 변화를 살펴본다. 12개 소비 항목별로 30~44세 그리고 55~69세의 평균지출과 지니계수의 차이를 추정하고 비교하였다. 평균지출의 경우 보건의료지출을 제외하고 전 항목에서 30~44세의 지출 규모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의류·신발, 통신, 오락·문화, 교육, 그리고 음식·숙박 지출에서

**그림 VI-31**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가구지출과 지출지니계수, 2006~2012년 평균

### 1) 평균가구지출



### 2) 지출지니계수



주: 1) 가구는 전국 1인 이상 가구임.  
2) 지출은 실질가구지출(2005년 기준)임.  
3)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과 완전균등선(대각선)이 이루는 불평등 면적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면적(0.5)과 대비시킨 비율로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으며, 값이 클수록 분배가 더 불평등함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06~2012.

세대 간 지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비불평등의 경우 소비 전 항목에서 55~69세의 소비불평등도가 30~44세보다 높게 추정되었다.

표 VI-7 소비지출 항목별 생애주기에 따른 월평균 지출액과 지출지니계수, 2006-2012년 평균

소비지출 항목	월평균 지출액(10만원)			지출지니계수		
	30-44세 (A)	55-69세 (B)	B/A	30-44세 (A)	55-69세 (B)	B/A
식료품·비주류	2.62	2.57	0.98	0.26	0.30	1.13
주류·담배	0.27	0.24	0.89	0.57	0.63	1.10
의류·신발	1.37	0.90	0.65	0.43	0.57	1.32
주거·수도·광열	2.15	1.81	0.84	0.34	0.40	1.15
가정용품·가사서비스	0.82	0.59	0.72	0.61	0.69	1.13
보건의료	1.11	1.28	1.16	0.54	0.59	1.08
교통	2.60	1.88	0.72	0.49	0.58	1.18
통신	1.27	0.87	0.69	0.23	0.39	1.67
오락·문화	1.17	0.66	0.57	0.49	0.63	1.29
교육	2.57	0.46	0.18	0.52	0.83	1.57
음식·숙박	2.69	1.77	0.66	0.31	0.49	1.60
기타	1.98	1.37	0.69	0.43	0.58	1.35

주: 1) 가구는 전국 1인 이상 가구임.

2) 지출은 실질가구지출(2005년 기준)임.

3)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과 완전균등선(대각선)이 이루는 불평등 면적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면적(0.5)과 대비시킨 비율로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고, 값이 클수록 분배가 더욱 불평등함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06-2012.

### 가구특성에 따른 불평등의 차이

〈표 VI-8〉에서는 소득과 지출의 불평등에 집중하여 가구주 및 가구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다. 첫째, 1인가구의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보다 소득과 지출의 불평등 정도가 더 높다. 최근 1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소득과 지출 불평등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둘째, 가구주 미취업 가구의 지니계수는 가구주 취업 가구보다(특히 소득에서) 훨씬 높게 추정되었다. 이는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외벌이 가구의 소득 및 소비 지니계수가

표 VI-8 가구특성별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 및 지출 지니계수, 2006-2012년 평균

가구특성	소득지니계수			지출지니계수		
	30-44세 (A)	55-69세 (B)	B/A	30-44세 (A)	55-69세 (B)	B/A
가구원수						
1명	0.34	0.45	1.31	0.32	0.39	1.21
2명	0.32	0.39	1.21	0.29	0.34	1.17
3명 이상	0.32	0.27	0.83	0.24	0.29	1.20
가구주의 취업여부						
취업	0.28	0.37	1.36	0.26	0.35	1.35
미취업	0.42	0.49	1.17	0.32	0.39	1.22
맞벌이 여부						
맞벌이	0.24	0.31	1.26	0.23	0.30	1.29
외벌이	0.29	0.44	1.51	0.27	0.38	1.40
가구주의 학력						
고졸 이하	0.29	0.41	1.41	0.27	0.36	1.34
대학 이상	0.38	0.27	0.70	0.32	0.25	0.79
가구주의 성						
남자	0.27	0.38	1.41	0.25	0.33	1.32
여자	0.33	0.44	1.35	0.29	0.38	1.34

주: 1) 가구는 전국 1인 이상 가구임.

2) 소득과 지출은 각각 실질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2005년 기준)임.

3)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과 완전균등선(대각선)이 이루는 불평등 면적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면적(0.5)과 대비시킨 비율로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고, 값이 클수록 분배가 더욱 불평등함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06-2012.

맞벌이보다 더 높다는 결과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셋째, 30-44세에서는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 및 소비 불평등이 높은 반면, 55-69세에서는 이 격차가 크게 완화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고졸 이하의 학력 집단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니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고령층의 빈곤과 불평등 심화 문제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에 가구 소득과 지출의 불평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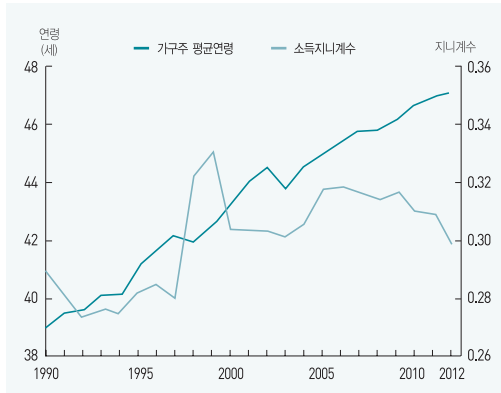
이는 여성가구주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sup>3)</sup>

### 불평등의 장기추이와 인구고령화의 관련성

[그림 VI-32]는 인구고령화와 가구소득 불평등의 장기 추이를 보여준다. 인구고령화 추이는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주 평균연령으로 추정하였으며, 소득불평등은 지니계수로 측정하였다.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1990년 38.9세에서 2012년 47.1세로 21% 증가하였다. 이 같은 인구고령화 추세는 1990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지니계수 추세와 매우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비록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1998-1999년 지니계수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2000년대 후반 소득불평등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의 소득불평등과 인구고령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가 사회 전체의 소득불평등을 높이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림 VI-30]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니계수가 증가하므로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사회 전체의 평균 지니계수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고령인구 비중이

그림 VI-32 가구주 평균연령과 소득지니계수, 1990-2012



주: 1) 2인 이상 도시가구 중 가구주 연령이 25-69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과 완전균등선(대각선)이 이루는 불평등 면적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면적(0.5)와 대비 시킨 비율로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으며, 값이 클수록 분배가 더욱 불평등함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그림 VI-30]에서 보는 연령에 따른 지니계수의 증가율 또는 기울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진다면 사회 전체의 소득 지니계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경로는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두 번째 경로의 가능성을 간략히 검토해 보도록 하자.

[그림 VI-33]의 왼쪽 그래프는 가구주 연령 30대 대비 50대의 소득지니계수 상대비중의 1990-2012년 추이를 보여준다. 다소 간의 연간 변동이 관측되지만 전반적으로 30대 대비 50대 가구주 가구의 상대적인 지니계수가 시간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림 VI-30]에서 연령에 따른 가구소득의 지니계수 그래프의 기울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가파르게 변해 왔다는 의미이다. 이는 고령인구 비중 증가로 인한 사회 전체 소득분포가 악화되었을 뿐만

3) 전체 가구소득 또는 가구소비 대신 가구원 1인당 소득과 소비를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추정할 경우에도 불평등도는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또한 가구주의 소득만을 이용하여 추정할 결과 역시 다른 가구원의 소득을 포함한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니라 연령집단 간의 소득불평등 격차가 증가한 것도 2000년대 중반까지 소득분포 악화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시사한다. 비록 최근 들어 소득 지니계수가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향후 인구고령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면 소득분포가 다시 악화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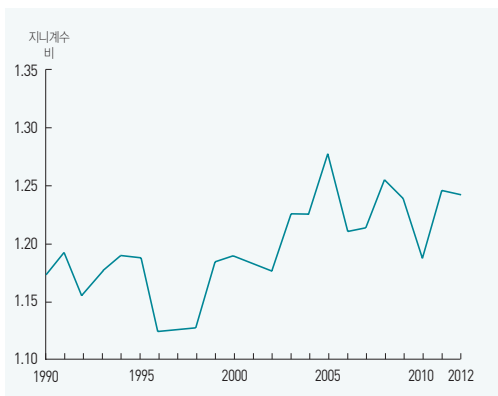
끝으로 [그림 VI-33]의 오른쪽 그래프는 30대와 50대의 가구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의 상대비중의 장기 추이를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지난 20년 간 50대의 소득 상대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 50대의 평균가구소득은 30대에 비해 약 20~30% 높았지만 2012년에는 대동소이하다. 이는 근로소득의 상대비율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가늠해 볼 수 있다. 1990년대 50대의 평균근로소

득은 30대에 비해 약 20% 높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30대 보다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기타소득의 상대비율은 지난 20여 년간 일정한 추이가 관측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높은 연령층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젊은 층에 비해 낮아졌으며, 이로 인해 높은 연령층 내에서 개인 간 또는 가구 간의 소득격차가 더욱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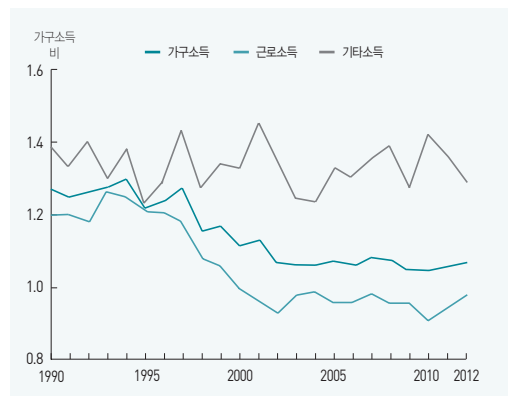
불평등의 심화를 해결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다. 최근의 연금제도 개혁이나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논의들은 고령층의 이전소득을 확대하여 고령층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는 재정부담과 재원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보다는 고령층

그림 VI-33 30대 가구주 가구 대비 50대 가구주 가구의 소득지니계수 비 및 월평균 가구소득 비, 1990~2012

#### 1) 소득지니계수 비



#### 2) 월평균 가구소득 비



주: 1) 2인 이상 도시가구 중 가구주 연령이 25~69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은 실질가구소득(2005년 기준)임.

3)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과 완전균등선(대각선)이 이루는 불평등면적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면적(0.5)과 대비시킨 비율로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으며, 값이 클수록 분배가 더욱 불평등함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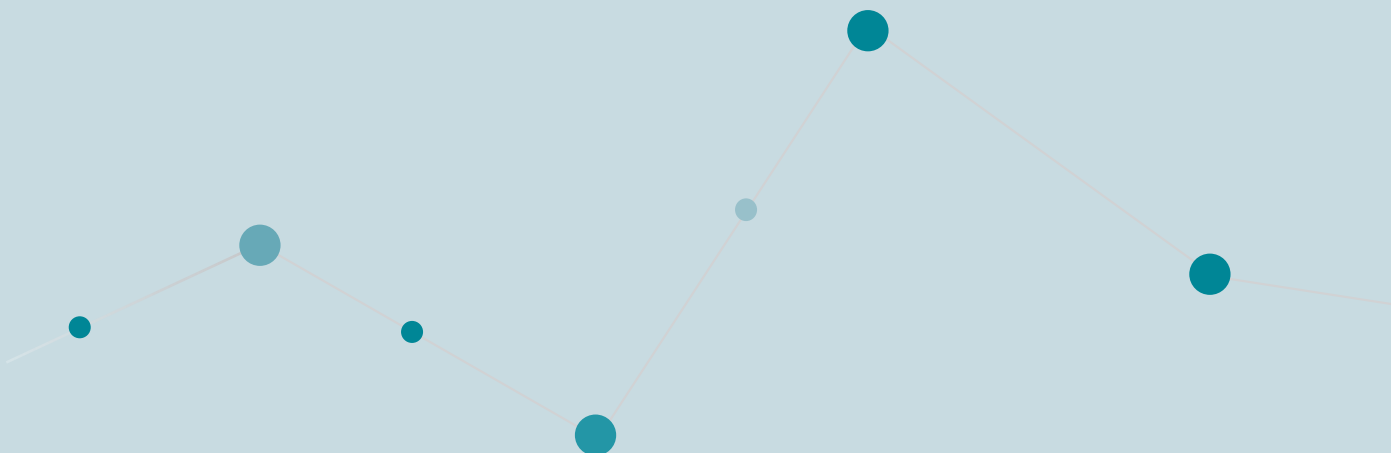
가구의 고용확대가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좀 더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단순히 고령층의 고용확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낮은

평균 근속연수와 조기퇴직의 보편화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 KOREAN SOCIAL TRENDS 2013

## 한국의 사회동향 2013





# STATISTICS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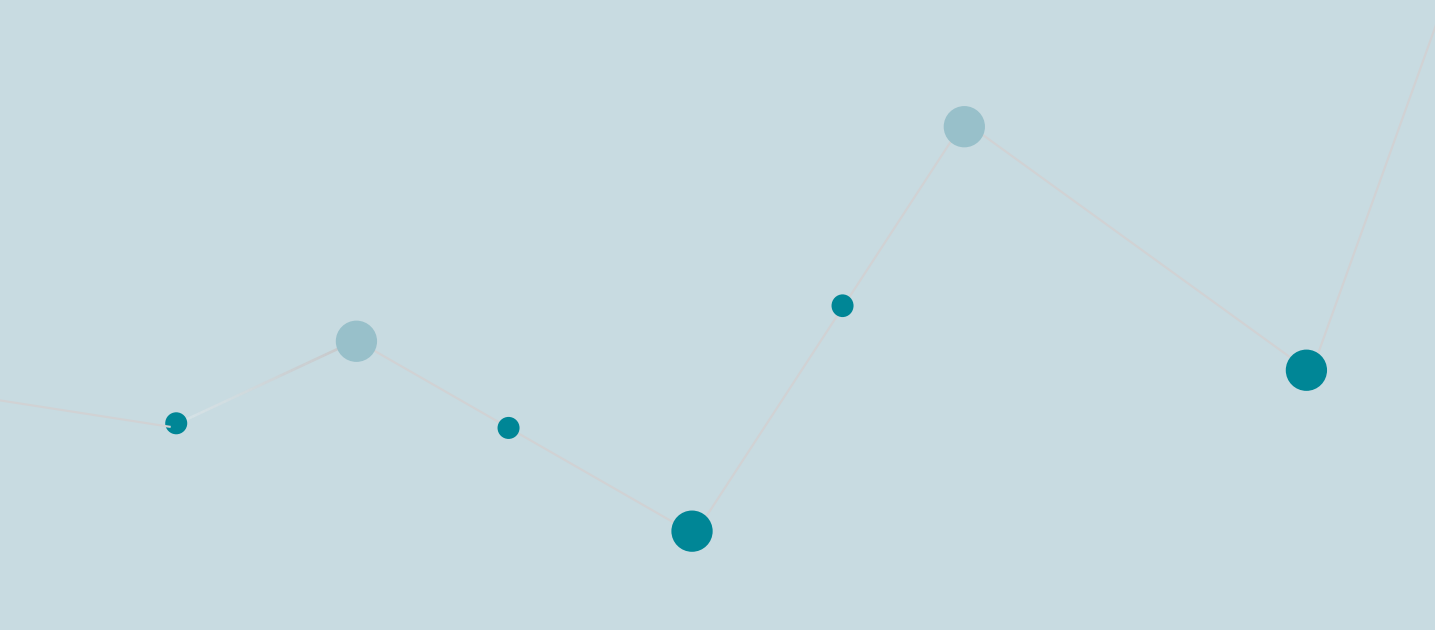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VII

## 문화와 여가

Culture & Leisure

- |                        |                 |            |
|------------------------|-----------------|------------|
| 01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변화    |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 <u>184</u> |
| 02 청소년 여가              |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 <u>193</u> |
| 03 생활체육 참여실태           | 황선환   서울시립대학교   | <u>198</u> |
| 04 노년층의 문화예술 관람 경험과 특성 |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u>205</u> |



## 01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변화

서우석(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 요 약

- 문화예술 시설의 확충과 문화산업의 성장으로 문화여가 기반은 개선되었으나, 여가 시간은 감소하거나 이전의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 중에서 TV시청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여행과 문화예술관람의 비율이 높았다.
- 문화예술관람률, 스포츠관람률, 해외여행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여가만족도는 2009년에 비해 낮아졌으며, 경제적 부담이 여가 불만의 가장 큰 이유였다.

최근 한국의 문화와 여가 동향을 보면 많은 분야에서 과거에 보기 힘든 새로운 발전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가졌던 세계적 인기가 보여주듯이 한국의 외연이 과거와 다른 수준으로 확장되었다. 국내에서는 한국 영화의 흥행 성공이 이어졌다. 공연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뮤지컬은 뉴욕, 런던 정도를 제외한다면 이제 세계 어느 도시에 못지않을 정도로 많은 작품들이 무대에 오르고 있다. 트레킹 열풍으로 전국에 수많은 올레길과 둘레길이 만들어졌으며, 캠핑이 인기를 얻으면서 주말 밤을 야외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문화와 여가 영역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기본 자료로 사용하여 문화와 여가의 기본 항목을 중심으로 시계열 비교를 하였고, 정부기관들이 생산한 「문화향수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여행실태조사」,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등의 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여가 활동을 파악하였다. 본문에서는 먼저 문화여가의 기반을 검토한 후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의 동향을 분석하고 여가만족도를 살펴보았다.

## 문화여가의 기반

문화여가 활동은 공공과 시장 투자에 의해서 시설들이 갖추어지고 상품이 공급될 때 가능해진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여가 활동의 기반은 문화 인프라 구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VII-1〉을 보면, 1990년대부터 전국 범위에서 본격화되었



던 문화 인프라 구축이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5년 358개였던 박물관이 2012년에는 743개로, 미술관도 같은 기간 80개에서 173개로 증가하여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최근에도 박물관, 미술관의 건립이 계속되고 있다. 도시공간의 문화재생 사례로서 구 서울역 역사 공간이 2011년 8월에 '문화역 서울 284'라는 이름으로 개관하였으며, 소격동 기무사터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건립되고 있다. 과거 문화 중심지가 아닌 장소에도 문화공간의 건립이 이어졌다. 2011년 5월에 대구시립미술관, 강동아트센터, 청주 우민아트센터가 개관하였으며, 10월에는 파주시 헤이리에 갤러리화이트블럭 개관, 12월에는 양평군립미술관, 충남 홍성에 이응노의 집 개관이 이어졌다. 이외에 공공도서관, 등록공연장, 문예회관 등도 박물관과 미술관의 증가 속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모두 꾸준히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등록공연장은 2010년 637개에서 2012년 826개로 늘어나서 주춤하였던 성장세가 최근 다시 살아났다. 문화예술시설의 지속적 증가 결과 인구대비 시설 비율도 크게 상승하였다(표 VII-1).

문화산업 역시 국민의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기본 재화를 상품의 형태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문화여가활동의 주요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문화산업 매출액을 보면 문화산업의 규모가 최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산업의 매출 규모는 2011년 82조 9,70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09년 67조 800억 원, 2010년 73조

표 VII-1 문화예술시설수, 2005-2012

연도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등록공연장	문예회관
2005	358	80	514	503	150
2006	399	92	564	558	155
2007	511	115	600	589	160
2008	579	128	644	619	167
2009	630	131	703	639	182
2010	655	141	759	637	193
2011	694	146	786	751	209
2012	743	173	-	826	21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운영실태조사」, 각 년도; 「미술관운영실태조사」, 각 년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각 년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http://www.libsta.go.kr)).

3,200억 원에 비해 급증한 것이다. GDP 대비 비율도 2009년 6.3%에서 2011년 6.7%로 증가하였다. 특히 음악산업의 매출액이 2010년 2조 9,600억 원에서 2011년 3조 8,200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표 VII-2).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음악산업이 음반 중심에서 음원 중심으로 재편되어 이제 본격적인 성장 기초를 보이는 것

표 VII-2 문화산업 분야별 매출액, 2009-2011

(1조 원)

	2009	2010	2011
총 매출액	67.08	73.32	82.97
(GDP 대비 %)	(6.3)	(6.2)	(6.7)
출판	20.61	21.24	21.24
만화	0.74	0.74	0.75
음악	2.74	2.96	3.82
게임	6.58	7.43	8.80
영화	3.31	3.43	3.77
애니메이션	0.42	0.51	0.53
방송(영상)	9.88	11.18	12.75
광고	9.19	10.32	12.17
캐릭터	5.36	5.90	7.21
지식정보	6.07	7.24	9.05
콘텐츠솔루션	2.18	2.36	2.87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산업통계」, 각 년도.

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문화산업의 성장은 국민들이 문화여가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문화여가활동은 여가시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2012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의하면, 평일의 평균 여가시간은 3.3시간, 휴일에는 5.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여가시간은 평일에는 실제 여가시간보다 1.1시간 많은 4.4시간, 휴일에는 1.2시간 더 많은 6.3시간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6년 평일 3.1시간, 휴일 5.5시간이었던 것이 2010년 평일 4.0시간, 휴일 7.0시간으로 증가하였다가 2012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여가시간과 희망 여가시간 모두 2010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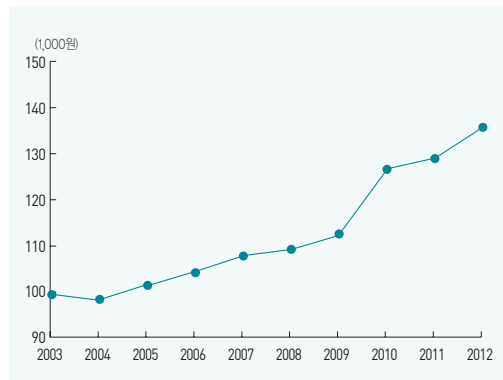
휴가경험 비율에서도 증가세 이후 감소세가 나타났다는데, 2007년 66.4%에서 2009년 69.9%까지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 62.5%로 감소하였고 이후 2012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2009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는 경제 불황의 영향으로 여가시간이나 휴가경험률이 감소하였거나 정체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가비용의 변화는 여가시간의 변화와 대체로 공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양상도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다. 「국민여가활동조사」의 2012년 결과에 따르면, 평균 여가비용과 희망 여가비용 모두 2010년에 비해 모두 감소하였다. 여가비용은 2006년 142,000원에서 2007년 122,000원으로 감소한 이후 2010년에 168,000

원으로 증가했다가 2012년에는 다시 125,000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여가비용 역시 2006년 243,000원에서 2007년 198,000원으로 감소한 이후 2010년에 266,000원까지 증가했는데 2012년에는 198,000원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감소세는 악화된 경제적 상황이 미친 영향으로 해석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결과를 보면, 오락문화비는 2003년 10만 원 미만에서 2012년 현재 135,000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비해 2011년 오락문화비 지출의 증가가 둔화되었으나 2012년에는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VII-1).

그림 VII-1 가구의 오락문화비 지출액, 2003-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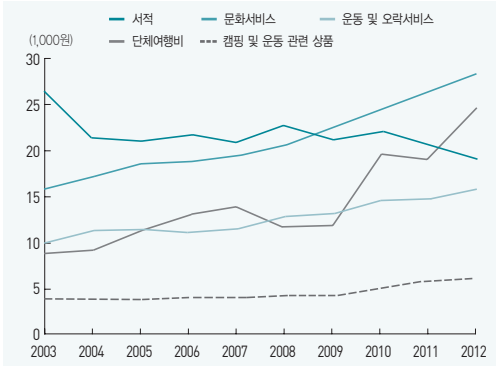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오락문화비 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서적 지출비용이었고, 증가 추세인 것은 문화서비스, 단체여행비, 캠핑 운동용품, 운동오락서비스를 위한 지출비용이었다(그림 VII-2).



그림 VII-2 가구의 오락문화비 주요 항목별 지출액, 2003-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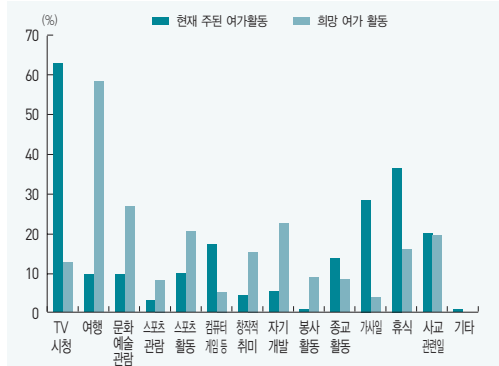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 여가활동

주로 하는 여가활동으로는 TV 및 비디오 시청이 36.1%로 가장 많았고, 가사(13.2%), 휴식(10.1%), 종교활동(9.2%), 사교 관련(6.6%), 컴퓨터게임 및 인터넷검색(6.1%), 스포츠활동(5.3%), 여행(4.1%), 문화예술관람(3.2%), 자기개발(2.6%) 등의 순으로 많았다. 3순위까지 고려한 다중응답을 기준으로 보아도 대체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TV시청이 63.0%로 가장 많았다. 1순위 기준 결과와 비교하여 다중응답에서 차이를 보인 것으로는 휴식(36.8%)이 가사(28.6%)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인 정도이다(그림 VII-3).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는 여행이 5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문화예술관람(26.7%), 자기개발(22.9%), 스포츠활동(20.7%), 사교 관련 활동(19.6%), 휴식(16.0%) 등의 순으로 많았다. 현재 활동과 희망 활동을 비교해 볼 때, 국민이 현재보다 더 많이 하기를 원하는 여

그림 VII-3 주로 하는 여가활동과 희망 여가활동, 2011



주: 1) 다중응답(1-3순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가활동은 여행, 문화예술관람, 자기개발, 창작취미, 스포츠활동, 스포츠관람 등이었으며, 현재보다 덜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TV시청, 종교활동, 가사, 휴식 등이었다(그림 VII-3).

여가활동 1순위로 TV 및 비디오 시청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 2004년 26.1%, 2007년 27.7%, 2009년 30.1%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특히 2011년에는 2009년에 비해 6.0%p나 증가하였다. 문화여가 시설이 확충되고 가용한 여가활동이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V시청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IPTV의 보급과 같이 새로운 기술의 영향도 있겠으나 경제 불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여가활동을 선호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여가활동 동반자는 가족이 5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구(20.0%), 혼자(16.9%), 동호회(5.5%) 등의 순서로 많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최근 2007년 이후의 조사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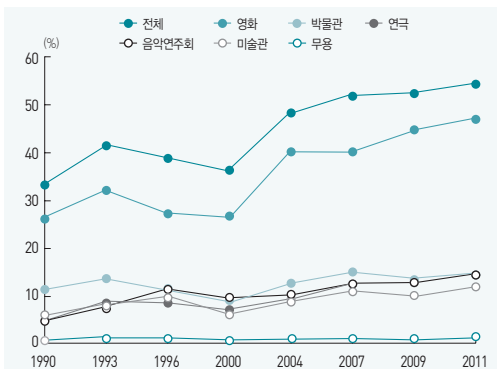


## 문화예술관람

문화예술활동은 경제 불황의 영향 속에서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로 파악된 문화예술 장르별 관람률을 살펴 보면, 영화가 4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박물관(15.0%), 연극(14.6%), 음악연주회(14.5%)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미술관이 11.9%로 다소 낮았고 무용은 1.5%로 가장 낮았다(그림 VII-4). 이러한 장르별 차이는 대체로 매년 비슷한 양상이지만, 2011년 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2009년에 비해 관람률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들 분야를 최소한 한 번이라도 관람한 인구를 나타내는 문화예술관람 비율은 2009년 52.4%에서 2011년 54.5%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199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현상이다.

「문화향수실태조사」의 결과에서는 문화예술 행사관람률이 2010년에는 67.2%, 2012년에는 69.6%로 나타나서 「사회조사」에 비해 10%대 정

그림 VII-4 문화예술 장르별 관람률, 1990-2011



주: 1) 문화예술 관람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해당 장르의 문화예술을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년도.

도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관람률의 증가 추세 경향에 대한 파악은 두 조사 결과가 대체로 일치한다. 2012년 「문화향수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모든 분야에서 2010년보다 관람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드러진 변화는 대중음악 관람률이었는데, 2010년 7.6%에서 2012년 13.5%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방송에서부터 시작된 콘서트 붐이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관람률 증가 폭이 컸던 분야는 영화와 문학행사로 각각 60.3%에서 64.4%, 3.8%에서 6.1%로 증가하였다.

박물관과 영화관의 증가 및 확장과 더불어 그 관객수의 증가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영화와 같은 대중적 장르 외에 연극관람 비율도 증가한 것은 문화예술활동의 저변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문화복지정책 확대와도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는 문화예술행사 관람의향이 78.1%로 조사되어 이 조사에서 파악된 실제 관람률과 약 9%p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람경험이 있는 관람자에서는 관람의향이 93.3%로 조사된 것에 비해 비관람자의 관람의향은 43.3%로 조사되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의 장애요인으로서는 '관심 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이 31.7%로 가장 많았고 시간부족(21.6%)과 경제적 부담(19.1%)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심 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은 2010년의 8.4%에 비해서 20%p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문화여가 시설의 확충에



도 불구하고 공급되는 콘텐츠가 다양한 문화적 관심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 교육, 창작 및 동아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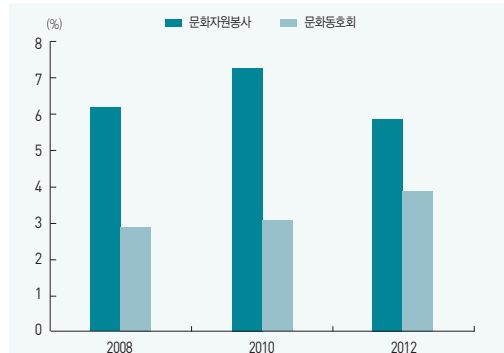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는 창작발표활동 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2012년 조사에서 창작발표활동의 경험 비율은 3.7%로 나타났고, 앞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의향 비율은 5.6%로 나타났다. 참여경험 비율은 2008년의 2.4%와 2010년의 2.2%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이었다. 참여의향 비율은 2008년의 6.5%에 비해서는 낮지만 2010년의 3.7%에 비해서는 증가한 것이었다. 분야별로는 연극 참여율이 1.7%로 가장 높았다. 참여경험과 참여의향 비율 사이에 차이가 2%p 대로 나타난 점을 보면 여건이 갖추어지면 창작발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증가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경험률은 2010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의향률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2012년 조사에서 8.7%로 나타나 2010년의 9.2%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문화예술교육 의향률은 2010년의 16.6%에서 25.2%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경험률과 의향률 사이의 차이가 2010년에는 의향률이 경험률의 두 배를 넘지 않았으나 2012년에는 의향률이 경험률의 세 배 가까운 수준에 도달했다. 잠재적 문화예술교육 수요자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야별로는 미술(2.2%)과 영화(2.1%)의 교육 경험률이 비교적 높았다.

문화예술교육 참여 장애요인으로서는 '관심 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이 4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시간부족이라는 응답이 25.8%로 많았으며 경제적 부담이라는 응답은 11.4%였다. 시간부족 응답률이 2010년 44.6%에서 크게 줄었고 '관심 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률은 2010년 26.6%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문화향수실태조사」에 의하면, 문화자원봉사 참여율은 감소하고 문화동호회 참여율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자원봉사 참여율은 5.9%로 조사되어 2010년 7.3%에 비해 감소하였다. 문화동호회 참여율은 3.9%로 조사되어 2008년 2.9%, 2010년 3.1%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II-5). 분야별로 보면, 문학 분야가 0.9%로 가장 높았고 영화(0.7%), 미술(0.6%), 대중음악(0.6%) 등의 순서로 높았다. 전체적으로 문화동호회 활동에 참여한 인구의 비율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VII-5 문화자원봉사 및 문화동호회 참여율, 2008-2012



주: 1) 문화자원봉사 참여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현재 문화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2) 문화동호회 참여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문화동호회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년도.



## 여행과 관광

관광활동은 최근 수년간 큰 변화를 겪었다.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의 수가 지난 2003년 이래 급증하였다. 2003년 475만 명이었던 외래관광객수는 200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여 2012년에는 1,113만 명으로 정부가 세운 1,000만 명 목표를 돌파하였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전 세계 국제관광객의 수가 감소하였다가 2010년 이후 다시 증가한 것과 달리,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2009년 이후 매년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였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하면 국내여행자 비율은 2009년의 64.8%에서 2011년 63.2%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해외여행자 비율은 2009년의 13.6%에 비해 2011년 16.0%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외여행자 비율은 2000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이 기간 동안 2.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그림 VII-6).

그림 VII-6 국내 및 해외 여행자 비율, 2000-2011



주: 1) 국내 및 해외 여행자 비율은 각각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국내 여행 및 해외 여행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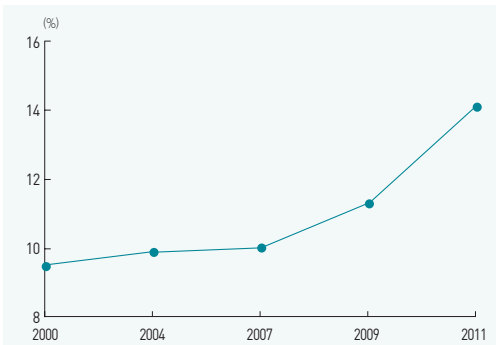
통계청 「사회조사」로 산출되는 국내여행자 비율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하는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와 차이가 난다.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여행 경험률은 2010년 72.8%, 2011년 81.6%에 이어 2012년 85.2%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여행의 비율 역시 2010년 59.7%, 2011년 64.8%에 이어 2012년 69.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국자수를 기준으로 파악한 해외여행자수는 2010년 1,249만 명에서 2011년 1,269만 명, 2012년 1,374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여행 지출비용의 동향이다. 국민 1인당 국내여행비가 2012년에 551,457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010년 396,741원, 2011년 470,727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여행이 국민의 여가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생활체육과 스포츠관광

다음으로 스포츠 관련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스포츠관광 비율은 2000년 9.5%에서 2011년 14.1%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그림 VII-7). 국내 프로스포츠 활성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스포츠관광 비율의 증가는 국내 스포츠산업의 대중적 저변이 확대되었음을 말해준다. 반면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1990년대 이래 생활체육 참여 비율이



그림 VII-7 스포츠관람률, 2000-2011



주: 1) 스포츠관람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스포츠 관람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뚜렷한 추세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조사에서는 생활 체육 참여 비율(주 2회 이상 체육활동 경험)이 34.9%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10년의 41.5%에 비해 6.6%p 하락한 수치이다.

## 미디어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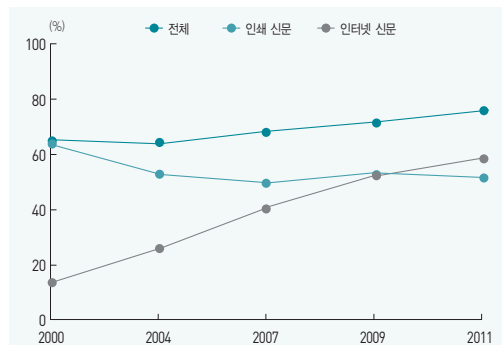
여가활동에서 TV 및 DVD 시청이 가장 많았던 것처럼 미디어 활용은 일상의 여가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2012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일상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매체는 TV(53.4%), 스마트폰(25.0%), PC·노트북(18.6%)의 순서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것은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는 TV를 필수 매체로 생각하는 비율이 92.9%나 되는 반면, 20대에서는 15.9%에 불과했다. 20대에서는 대신 스마트폰(50.7%)과 PC·노트북(30.7%)을 필수 매체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조사결

과는 매체 이용에서 세대 간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자주 이용하는(주 5일 이상) 매체는 TV(81.4%), 스마트폰(52.6%), PC·노트북(39.2%), 라디오(12.5%), 신문(12.2%)의 순서였다. 매체를 이용하는 시간은 TV가 가장 길었다. TV를 시청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9분으로 나타났으며, 평일에는 2시간 55분, 주말에는 3시간 45분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라디오는 1시간 1분을 청취하고 신문은 30분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을 읽는 방법 또한 크게 달라졌다. 인쇄신문 구독률은 감소 추세가 지속되었던 반면, 인터넷신문 구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2009년에 인쇄신문과 인터넷신문의 구독률이 거의 근접하였는데 2011년 조사에서는 인터넷신문의 구독률이 인쇄신문의 구독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II-8). 2009년 이후 전체 신문 구독률의 증가는 인터넷신문 구독률의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VII-8 신문구독률, 200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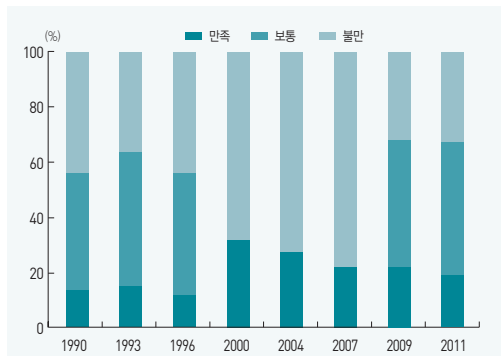
주: 1) 2007년 이전은 15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신문을 보는 사람의 비율이고, 2007년 부터는 지난 1개월 간 2주일에 1회 이상 신문을 보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여가만족

여가만족도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지난 1990년부터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되었으나 2000년부터 '보통'이라는 응답범주가 없어진 4점 척도로 조사되기 시작하였고 2009년부터는 다시 5점 척도로 변경되었다. 2011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통'이라는 응답이 48.8%로 가장 많은 가운데 '불만족한다'는 응답과 '만족한다'는 응답은 각각 32.5%와 18.6%로 불만족 응답률이 훨씬 더 높았다(그림 VII-9). 국민 중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인구가 5명 중 1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여가만족도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21.8%에서 3.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의 변경으로 체계적인 시계열 비교가 어렵지만 비교가 가능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여가만족도의 변화를 보면, 2000년대 이후 여가만족도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2007년의 만족도 수준은 10%대 초반에 머물렀던 1990년대의 수준보다는 높았다.

여가생활에 불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응답이 6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간부족이라는 응답이 22.8%로 많았다. 그 외 체력이나 건강문제(6.8%), 적당한 취미 결핍(3.4%), 여가 동반자 부재(1.6%),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그림 VII-9 여가만족도, 1990-2011



주: 1) 만족은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비율이며, 불만은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을 합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1.1%), 교통혼잡(1.0%) 등의 응답이 있었다. 여가 장애요인에 대한 응답범주의 빈도 순서는 예년과 거의 달라진 바 없으나 응답비율을 보면, 경제적 부담이라는 응답이 2009년에 비해 7.2%p 증가하였고, 시간부족이라는 응답은 2009년에 비해 5.6%p 감소하였다. 지난 1990년 조사 이래 경제적 부담이라는 응답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시간부족이라는 응답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 40시간 근무 및 주 5일 수업 도입과 같은 원인으로 시간적 제약 요건은 줄어든 반면, 경제 불황으로 인한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문화여가시설의 확충으로 여가활동의 기반과 잠재적 가능성은 커진 반면, 이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의 한계가 한층 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02

## 청소년 여가

서우석(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 요약

- 청소년의 평일 여가시간은 성인에 비해 짧고 평일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도 낮다. 반면 휴일 여가시간은 성인과 같은 수준이며, 이에 대한 만족도도 성인과 비슷한 수준이다.
- 청소년의 여가비용과 희망 여가비용 간에 차이가 크며 여가비용에 대한 만족도도 낮다.
- 청소년과 성인 모두 가장 많이 하는 여가 활동은 TV시청이고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여가활동은 여행이다.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컴퓨터게임이나 인터넷검색 등 미디어 중심의 여가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청소년은 문화예술관람, 자기개발, 창작적 취미 등 적극적인 형태의 여가활동에도 성인보다 더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 청소년의 여가활동 만족도는 성인보다 높으며 청소년 집단 중에서는 중·고등 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
- 청소년과 성인 모두 여가활동의 주요 불만족 사유는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족이다.

여가는 청소년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성장에 기여하며 직업경력 개발과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최근 일련의 교육제도 변화는 청소년 여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다. 2012년에 주5일 수업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이른바 ‘놀토’의 활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2009년),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체육활동 강화(2012년) 등 비교과과정의 비중 확대는 청소년 여가의 기능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청소년 여가 관련 프로그램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도 청소년 여가의 중요성은 크다. 한국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도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며(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0), 청소년 자살 사망자수가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크게 증가하였다(진재현·고혜연, 2013). 입시부담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왜곡된 청소년의 일상생활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여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여가활동을 위한 자원을 살펴보고, 청소년 집단 간 비교 결과를 제시하였다. 청소년 연령에 대해서는 여러 법적 기준이 있으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에서 주로 사용되는 ‘청소년기본법’의 기준을 적용하여 만 9세에서 24세까지의 연령집단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먼저 청소년의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을 성인 집단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2012년 「국민여가활동조사」의 결과에 따



르면, 청소년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에는 2.8시간이고 휴일에는 5.1시간으로 나타났다. 성인과 비교해 보면 청소년의 여가시간은 휴일에는 성인과 거의 같은 수준인 반면, 평일에는 0.6시간 짧았다. 청소년의 희망 여가시간은 평일에는 4.1시간, 휴일에는 6.2시간으로 나타나 실제 여가시간에 비해 평일에는 1.3시간, 휴일에는 1.1시간을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성인의 희망 여가시간 차이는 평일 0.4시간이고 휴일 0.1시간이다.

청소년의 월평균 여가비용은 91,741원으로 산출되었는데, 이는 성인의 여가비용 132,636원에 비해 약 41,000원 낮은 수준이다. 희망 여가비용은 157,421원으로 나타나 실제 여가비용에 비해 약 66,000원 정도 더 쓸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표 VII-3). 이는 성인의 실제 여가비용보다 높은 수준이다.

표 VII-3 청소년과 성인의 여가시간 및 여가비용,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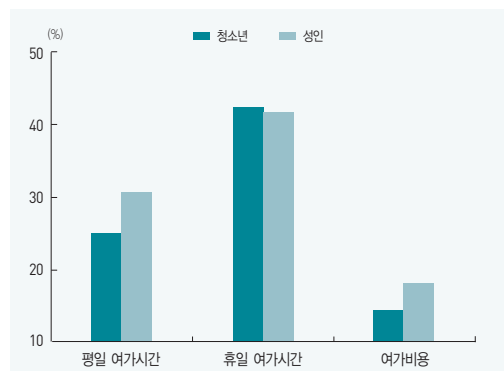
	1일 평균 여가시간(시간)		1일 평균 희망 여가시간(시간)		월평균 여가비(원)	월평균 희망 여가비(원)
	평일	휴일	평일	휴일		
청소년	2.8	5.1	4.1	6.2	91,741	157,421
성인	3.4	5.1	4.5	6.3	132,636	205,648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가활동조사」, 2012.

다음으로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여가활동조사」는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에 대한 만족도를 '매우 부족하다'에서부터 '매우 충분하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한다. 이 조사에서 평일 여가시간에 대해

'충분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5.2%에 불과했다. 평일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성인에서 30.8%로 나타나 청소년의 평일 여가시간 만족도가 성인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휴일 여가시간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42.6%로 나타나 '부족하다'는 응답(30.5%)보다 많았다. 이는 성인의 휴일 여가시간 만족도인 41.8%에 비해서도 더 높은 수준이다(그림 VII-10). 이와 같은 결과는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조사에서 주5일 수업제 실시 이후 학생 집단의 46.5%가 여가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줄었다'는 응답은 11.6%에 불과했다. 여가에 대한 만족도도 40.7%로 나타났다. 이는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하더라도 사교육이 증가하여 여가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결과이다.

그림 VII-10 청소년과 성인의 여가시간 및 여가비용 만족도, 2012



주: 1) 만족도는 전체 청소년 또는 성인 중 지난 3개월 동안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에 대해 각각 '매우 충분했다' 또는 '충분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가활동조사」, 2012.





여가비용이 '충분했다'는 응답은 14.4%에 불과한 반면, '부족했다'는 응답은 54.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그림 VII-10). 이는 성인의 여가비용 만족도인 18.0%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었으며, 앞서 살펴 본 여가비용과 희망 여가비용 사이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여가활동

통계청 「사회조사」의 '문화와 여가' 영역은 청소년과 성인의 주요 여가활동을 비교 가능하게 해준다. 2011년 조사에서 청소년은 만 13~24세의 연령집단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들을 교육 수준과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생(49.2%), 대학생(20.9%), 취업자(21.1%), 기타(8.7%)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기타 집단은 학업과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청소년이다.

먼저 청소년과 성인이 주말이나 휴일에 하는 여가활동 빈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청소년 집단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주말이나 휴일에 하는 여가활동에 대해 3순위까지의 응답을 다중응답으로 처리하여 집계하였을 때, 청소년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은 TV 및 DVD 시청(61.6%)이었으며, 다음으로 컴퓨터게임 및 인터넷 검색(49.6%), 사고 관련 일(30.1%), 휴식(28.7%), 문화예술관람(15.9%), 자기개발(15.5%), 스포츠 활동(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VII-4).

표 VII-4 청소년과 성인의 주말 및 휴일 여가활동, 2011 (%)

	청소년					성인
	중고생	대학생	취업자	기타	전체	
TV시청	64.7	58.7	57.5	60.8	61.6	63.3
여행	3.9	5.5	6.6	7.4	5.1	11.1
문화예술관람	11.3	19.9	23.3	15.4	15.9	8.5
스포츠관람	3.7	6.7	3.9	4.6	4.4	3.4
스포츠활동	14.0	9.8	8.5	7.6	11.4	10.0
컴퓨터게임 등	60.6	41.4	36.4	39.6	49.6	10.3
창작적 취미	9.6	6.6	6.0	6.8	8.0	3.8
자기개발	17.4	18.5	9.0	14.1	15.5	3.7
봉사활동	1.9	1.0	0.6	1.7	1.4	0.8
종교활동	9.3	8.0	7.9	5.4	8.4	15.1
가사	3.1	5.3	7.7	12.4	5.4	33.5
휴식	25.6	27.5	36.6	29.7	28.7	38.6
사고 관련 일	24.1	34.4	40.4	27.9	30.1	18.2
기타	1.0	0.4	1.0	0.8	0.9	1.0

주: 1) 3순위까지의 응답을 다중응답으로 집계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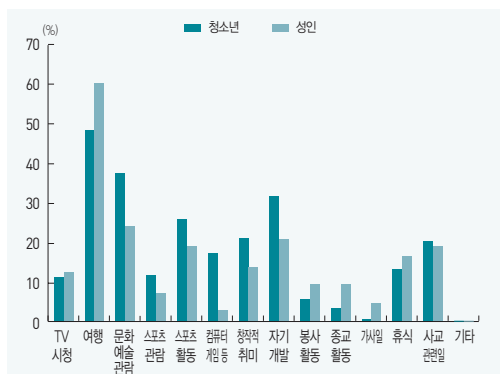
청소년의 여가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컴퓨터게임 및 인터넷검색 비율이 성인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는 점이다. 이는 성인의 거의 5배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미디어 활용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적극적인 형태의 여가활동에서도 청소년의 활동 비율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자기개발은 4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고, 문화예술관람과 창작적 취미도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청소년 하위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중·고등학생의 컴퓨터게임 및 인터넷검색 비율이 60.6%로 다른 청소년 집단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았으며 TV 및 DVD 시청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 청소년 중에서 특히 중·고등학생 집단이 미디어 중심의 여가활동에 더 편중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취업자 집단에서는 사고 관련 활동(40.4%)과 문화예술관람(23.3%)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VII-4).

다음으로 청소년의 희망 여가활동을 성인과 비교하였다. 희망 여가활동도 3순위까지의 다중 응답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활동은 여행으로 청소년의 48.6%가 희망하였으나 성인의 여행 희망 비율(60.6%)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청소년이 희망하는 여가활동에서 특징적인 것으로는 문화예술관람의 비율이 37.7%로 성인의 문화예술관람 희망 비율(24.4%)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의 문화예술관람에 대한 관심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그 외 청소년이 현재 수준보다 늘리고 싶은 여가활동은 자기개발(32.1%), 스포츠활동(26.1%), 창작적 취미(21.5%), 스포츠관람(11.9%) 등이었다. 실제 하고 있는 활동보다 줄이고 싶은 것은 TV시청, 컴퓨터게임, 휴식, 사고 등이었다(그림 VII-11).

그림 VII-11 청소년과 성인의 희망 여가활동, 2011



주: 1) 3순위까지의 응답을 다중응답으로 집계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1.

여가활동 동반자를 살펴보면, 청소년은 친구가 4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이 31.5%로 많았으며 혼자인 경우와 동호회는 각각 16.4%와 2.5%였다. 성인의 경우 가족이 62.3%로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친구는 14.5%에 머무른 것과 비교해 보면, 청소년의 여가 동반자가 성인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집단 내에서는 특히 취업자와 대학생 집단에서 친구를 여가 동반자로 삼는 비율이 높았다. 중·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여가 동반자가 가족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표 VII-5).

표 VII-5 청소년과 성인의 여가활동 동반자, 2011

(%)

	청소년					성인
	중고생	대학생	취업자	기타	전체	
가족과 함께	38.8	21.4	24.0	33.3	31.5	62.3
친구와 함께	40.6	59.4	61.3	47.0	49.5	14.5
동호회를 통해	1.9	3.3	3.1	2.1	2.5	6.0
혼자서	18.7	15.9	11.4	17.4	16.4	16.9
기타	0.1	0.0	0.2	0.4	0.1	0.3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1.

청소년의 여가활동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28.0%로 '불만족스럽다'는 응답(24.3%)보다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만족스럽다'는 응답(17.4%)보다 '불만족스럽다'는 응답(33.7%)이 더 많은 성인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표 VII-6).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평일 여가시간도 짧고 여가비용도 적게 지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성인에 비해 적극적인 활동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집단 내에서는 중·고등학생 집단의 만족도가 다른 청소년 집단보다 높았다.

표 VII-6 청소년과 성인의 여가활동 만족도, 2011 (%)

	청소년					성인
	중고생	대학생	취업자	기타	전체	
만족	30.6	25.1	27.0	23.0	28.0	17.4
보통	44.7	52.0	48.8	50.4	47.6	48.9
불만족	24.7	22.8	24.2	26.6	24.3	33.7

주: 1) 만족은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비율이며, 불만족은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을 합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1.

여가활동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4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시간부족이 36.4%로 많았으며, 이 외에 적당한 취미 부재(6.7%), 여가시설 부족(5.5%), 여가 동반자 부족(2.0%), 교통혼잡(1.3%) 등의 응답이 있었다. 청소년의 경우, 성인이 경제적 부담을 불만 이유로 응답한 비율(63.4%)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반면 시간부족이라는 응답 비율은 성인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고, 적당한 취미 부재나 여가시

설 부족이라는 응답 비율도 성인보다 청소년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건강을 불만족 이유로 답한 경우는 청소년 집단에서 훨씬 적었다(표 VII-7).

표 VII-7 청소년과 성인의 여가활동 불만족 사유, 2011 (%)

	청소년					성인
	중고생	대학생	취업자	기타	전체	
경제적 부담	25.9	64.0	62.3	63.6	44.6	63.4
시간부족	52.5	15.2	24.4	21.7	36.4	21.1
교통 불편	1.2	3.3	0.2	0.0	1.3	1.0
여가시설 부족	7.9	3.7	3.4	1.8	5.5	1.2
여가정보 부족	2.6	2.3	1.6	0.9	2.1	0.9
취미가 없어서	6.9	7.8	5.5	6.2	6.7	2.9
건강이 나빠서	0.7	0.1	0.5	2.4	0.7	7.7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1.3	2.7	2.3	3.5	2.0	1.5
기타	0.9	0.9	0.0	0.0	0.6	0.2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1.

청소년 집단 내에서는 중·고등학생과 다른 집단 사이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집단의 경우 다른 청소년 집단보다 시간부족 응답 비율이 뚜렷하게 높은 반면, 경제적 부담이라는 응답 비율은 상당히 낮았다.

## 참고문헌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구축과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진재현·고혜연, 2013. "OECD 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인구집단별 자살률 동향과 정책제언." 「보건복지포럼」 195: 141-154.

## 03

생활체육  
참여실태

황선환(서울시립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 요 약

- 생활체육 참여는 1994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나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불경기에 일시적 감소가 있었다.
- 생활체육 참여율은 대학입시와 취업의 부담이 큰 10대와 20대의 젊은 층에서 현저하게 낮고 남자가 여자보다 높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다.
- 생활체육 참여기간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길고 남자가 여자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 생활체육에 지출하는 경비는 2006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30대와 40대가, 여자에 비해 남자가,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
- 생활체육 동호인수와 클럽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체육 참여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생활체육은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생활의 일부분으로 행해지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체육'이라는 용어는 서구사회의 '평생체육' (Sport for Lifetime), '모든 사람을 위한 체육' (Sports for All)의 개념으로부터 출발되었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이전에는 '사회체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체육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생활체육'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모든 사람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전개되는 생활체육은, 학생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학교체육 및 전문선수의 최고 기량 발휘를 위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전문체육과는 활동 주체나 목적, 장소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생활체육의 중요한 특성들을 종합해 보면, 자유시간을 활용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시설에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여가선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체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맞게 되었다. 체육이 기존의 국위 선양을 위한 소수 엘리트 선수들의 활동이라는 인식으로부터 국민 누구나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라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더욱이 서구화된 식습관과 IT 기술의 발달로 인한 비만과 각종 성인병 등의 신체적 문제 해결, 그리고 모든 것이 통제되고 안정된 도시 산업사회로부터 촉발되는 심리적, 생리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생활체육이 부각되면서 국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인의 생활체육 참여실태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생활체육 참여율, 참여기간, 참여비용을 연령별, 성별 및 소득수준별로 비교해 본 후, 생활체육 참여종목과 동호인 및 클럽 수의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생활체육 참여수준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 생활체육 참여율

지난 정부에서 국민의 체력과 건강 유지 및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 여러 가지 정책사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생활체육 참여기회의 확대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2012년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8.2%로 나타났다(표 VII-8). 먼저 연령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10대와 20대가 가장 낮았고 30대와 70대 이상도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50대, 40대, 60대의 순으로 생활체육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입시와 취업의 부담이 큰 10대와 20대가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어서 생활체육 정책이 이들 집단에서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40대 이후의 국민은 건강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지함과 동시에 범국민적 생활체육 참여 홍보에 힘입어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생활체육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을 위한 신체활동 권고안’(Global Recommendation on Physical Activity for Health)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과 노인은 1주일에 150분 이상, 소아 및 청소년은 매일 60분 이상 신체활동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한국인의 주 2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은 35.0%에 불과하고, 특히 10대와 20대를 포함한 젊은 층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율(한 달에 2-3번 이상 참여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자 53.5%, 여자 43.0%). 여자 중에서도 특히 10대(72.9%)와 20대(67.3%)가 생활체육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여학생의 비만율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며, 20대 이후 체중을 감량하는 여자들이 많아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소득수준별 생활체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월소득 200만 원 미만에서는 45.0%, 200-400만 원 미만에서는 47.2%, 400-600만 원 미만에서는 52.3%, 600만 원 이상에서는 60.5%가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표 VII-8 연령, 성 및 소득수준별 생활체육 참여율, 2012

(%)

생활체육 참여율	
전체	48.2
연령	
10대	40.1
20대	41.7
30대	44.4
40대	55.7
50대	58.2
60대	50.7
70대 이상	42.8
성	
남자	53.5
여자	43.0
소득수준	
200만 원 미만	45.0
200-400만 원 미만	47.2
400-600만 원 미만	52.3
600만원 이상	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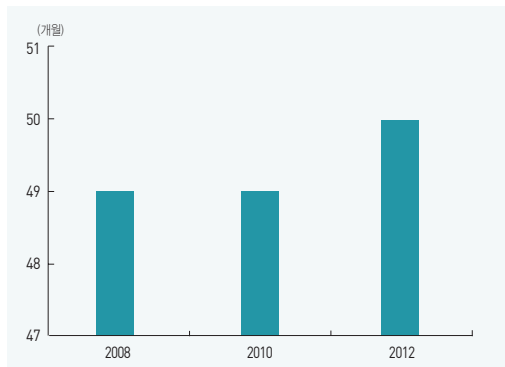
주: 1) 생활체육 참여율은 전체 조사대상자(10세 이상) 중 현재 규칙적 체육활동을 한 달에 2-3번 이상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2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2012.

생활체육 참여정도와 생활체육 참여에 투자하는 비용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생활체육 참여기간과 참여경비를 연도별로 살펴보고, 연령별, 성별, 소득수준별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그림 VII-12]는 연도별 평균 생활체육 참여기간을 보여주는데 2008년 49개월, 2010년 49개월, 2012년 50개월로 지난 4년간 1개월 정도 증가하였다.

생활체육 참여기간을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체육 참여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와 20대는 평균 25개월, 30대는 39개월, 40대는 50개월, 50대는 66

그림 VII-12 생활체육 참여기간, 2008-2012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2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2012.

개월, 60대와 70대 이상은 76개월 동안 생활체육에 참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체육에 한 번 참여하면 참여의 지속기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VII-9).

표 VII-9 연령, 성 및 소득수준별 생활체육 참여기간, 2012

(개월)

생활체육 참여기간	
전체	50
연령	
10대	25
20대	25
30대	39
40대	50
50대	66
60대	76
70대 이상	76
성	
남자	56
여자	42
소득수준	
200만 원 미만	62
200-400만 원 미만	48
400-600만 원 미만	46
600만원 이상	6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2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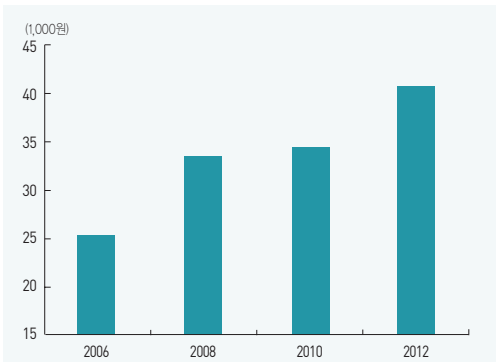


성별 생활체육 참여기간을 살펴보면, 남자가 56개월이고 여자가 42개월로 남자가 더 오랜 기간 생활체육에 참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사회진출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직장파 가정 두 가지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수준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기간을 살펴보면, 월소득 200만 원 미만에서는 62개월 동안 참여하였으며, 200-400만 원 미만에서는 48개월, 400-600만 원 미만에서는 46개월, 600만 원 이상에서는 61개월 동안 생활체육에 참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에서 생활체육 지속기간이 긴 것은 소득이 없거나 낮은 고령자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표 VII-9).

다음으로 생활체육 경비를 연도별로 살펴보고, 연령별, 성별, 소득수준별로 비교해 보겠다. [그림 VII-13]은 월평균 생활체육 지출액의 연도

그림 VII-13 생활체육 월평균 지출액, 2006-2012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2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2012.

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생활체육 경비는 2006년 25,300원에서 2012년 40,815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전적으로 생활체육에 더 많은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가상승과 더불어 생활체육비도 상승해 왔기 때문이다.

연령에 따른 생활체육 지출액을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8,530원으로 가장 적게 지출하고 있고, 10대가 23,630원, 60대가 26,925원, 50대가 43,876원, 20대가 49,153원, 30대가 51,079원, 40대가 51,758원을 각각 지출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능력이 낮은 1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생활체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적고, 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30대와 40대에서 생활체육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표 VII-10).

표 VII-10 연령, 성 및 소득수준별 생활체육 월평균 지출액, 2012 (원)

생활체육 월평균 지출액	
전체	40,815
연령	
10대	23,630
20대	49,153
30대	51,079
40대	51,758
50대	43,876
60대	26,925
70대 이상	8,530
성	
남자	48,805
여자	30,904
소득수준	
200만 원 미만	13,441
200-400만 원 미만	32,977
400-600만 원 미만	61,202
600만원 이상	202,50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2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2012.



성별 생활체육 지출경비를 살펴보면, 남자가 48,805원, 여자가 30,904원을 지출하여 남자가 18,000원 정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간 생활체육 참여종목과 그 종목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소비성향에 따른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생활체육 경비의 차이를 살펴보면, 소득이 많을수록 생활체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0만 원 미만에서는 월평균 13,441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200-400만 원 미만에서는 32,977원, 400-600만 원 미만에서는 61,202원을,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202,504원을 각각 지출하고 있다(표 VII-10). 특히,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서 생활체육 지출비가 크게 높은 것은 이들이 골프, 승마, 요트와 같은 경비가 많이 드는 생활체육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생활체육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경비지출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 준다.

### 생활체육 참여종목과 동호인 클럽

〈표 VII-11〉은 생활체육 참여종목을 조사한 결과이다. 2012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종목별 참여율은 걷기가 42.6%로 가장 높고, 보디빌딩(헬스) 16.1%, 등산 6.2%, 수영 6.0%, 자전거 5.4%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종목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2006년까지 등산이 1순위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집주변에서도 가능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며 운동효과도 검증된 걷기가 1순위로 부상하였으며, ‘몸짱’ 열풍이 일어난 2000년 이후 보디빌딩(헬스)이 계속해서 2-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자전거 참여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하고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시행함으로써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거나 자전거 타기를 생활체육으로 삼는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VII-11 생활체육 참여종목 순위, 1986-2012

연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986	육상/조깅	축구	체조/줄넘기	등산	테니스
1989	체조/줄넘기	축구	육상/조깅	등산	농구
1994	육상/조깅	체조/줄넘기	등산	볼링	농구
1997	등산	농구	체조/줄넘기	배드민턴	수영
2000	등산	체조/줄넘기	농구	축구	보디빌딩(헬스)
2003	육상/조깅	등산	보디빌딩(헬스)	체조/줄넘기	수영
2006	등산	축구	육상/조깅	배드민턴	보디빌딩(헬스)
2008	걷기	보디빌딩(헬스)	등산	축구	배드민턴
2010	걷기	등산	보디빌딩(헬스)	축구	자전거
2012	걷기	보디빌딩(헬스)	등산	수영	자전거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2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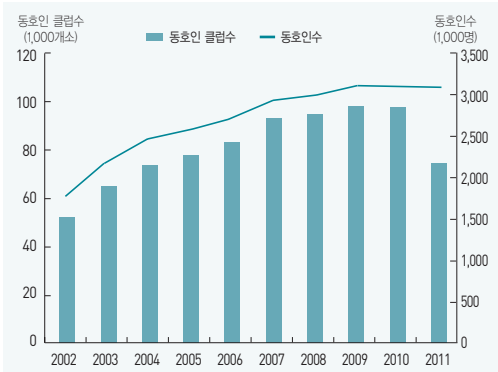
과거에는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볼링 등과 같이 운동 기술이 요구되며 참여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의 참여율이 높았던 반면, 2000년 이후에는 걷기, 등산, 보디빌딩(헬스), 자전거 등과 같이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종목의 참여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체육동호인에게 시설과 프로



그램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정부와 국민생활체육회가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생활체육 동호인과 클럽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2011년에 생활체육 동호인수는 소폭 감소하고 클럽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그림 VII-14), 그 이유는 2011년에 클럽 등록만 해놓고 실제 활동을 하지 않는 클럽들을 재정비하고 소규모 클럽 간 통합을 통해 실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클럽과 동호인만을 조사했기 때문이다.

그림 VII-14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수와 동호인수, 2002-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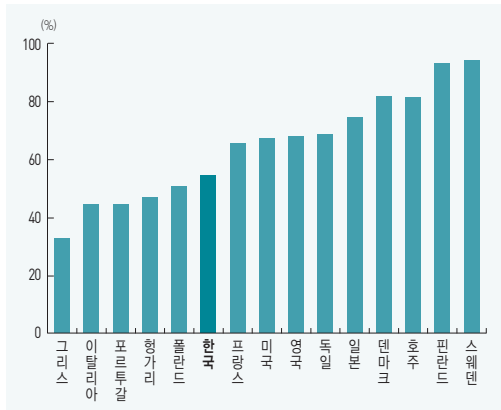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1 체육백서」, 2012.

### 생활체육 참여율 국제비교

마지막으로 한국의 생활체육 참여수준을 국제 비교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 [그림 VII-15]에 제시된 생활체육 참여율은 국가 간 표준화를 위하여 100%에서 전혀 참여하지 않는 비율을 뺀 수치를 적용하였다. 2010년 국가별 생활체육 참여율은 스웨덴이 94.0%로 가장 높았고 핀란드

93.0%, 호주 82.0%, 덴마크 82.0%, 일본 7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54.7%이다. 한국보다 생활체육 참여율이 낮은 국가로는 폴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이 있다. 한국은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율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규칙적인 생활체육 참여율(주 2회 이상 참여율)을 6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그림 VII-15 OECD 주요국의 생활체육 참여율, 201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 2010;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2010;  
Canadian Fitness and Lifestyle Research Institute, *Physical Activity Monitor*, 2010;  
Australian Sports Commission, *Participation in Exercise, Recreation and Sport Survey*, 2010;  
European Commission, *Special Eurobarometer: Sport and Physical Activity*, 2010.

### 맺음말

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참여

의지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 인프라는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 건강은 국가의 향후 100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생활체육 선호 파악과 활발한 생활체육 참여여건 조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04

## 노년층의 문화예술 관람 경험과 특성

조현성(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 요 약

- 60세 이상 노년층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2011년 현재 18.2%로 청·장년층 관람률의 1/4 수준이다. 영화를 제외하고는 모든 장르 관람률이 10%를 넘지 못하여 노년층의 문화예술 활동은 활발하지 못하다.
- 영화, 스포츠, 연극·뮤지컬, 미술관처럼 상대적으로 관람료의 부담이 있는 장르에서 노년층과 다른 연령대와의 격차가 심하다.
- 지난 10년 동안 60세 이상 노년층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89.6% 증가했고, 조만간 노년층이 될 50대의 증가율이 137.0%에 달하여 10년 후에는 노년층과 다른 연령대와의 문화예술 관람률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노년층에서는 남성의 관람률이 여성의 관람률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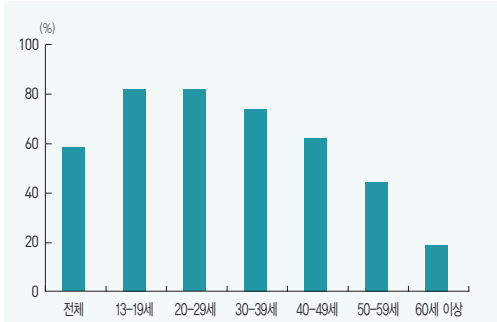
2012년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1.8%를 넘었고, 2020년과 2050년에는 각각 15.7%와 37.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노년층 문화활동 활성화는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노년층 문화활동의 실태와 지난 10여 년간의 변화 추이를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노년층은 균질적인 문화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성, 연령, 지역 등의 특성별로 다르게 문화활동을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문화예술 관람에 초점을 두고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이용 자료를 「사회조사」에 한정한 것은 다른 통계조사들은 표본크기가 작아서 노년층의 인구사회적 속성별 차이를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이고, 다양한 문화활동 가운데 문화예술 관람에 집중한 것은 문화예술 관람이 문화활동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조사」에서는 연령대를 10년 구간으로 구분해 왔기 때문에 노년층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노년층의 문화예술 관람

60세 이상 노년층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2011년에 18.2%로 청소년과 청·장년층의 1/4 수준이다(그림 VII-16). 청소년 및 청·장년층과의 관람률 차이는 예상되는 바이지만, 준노년층라고 할 수 있는 50대와의 차이도 매우 크다. 50대는 60세 이상에 비해서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이 2.5배나 높다. 이처럼 문화예술 관람에서 60세 이상은 다른 연령대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성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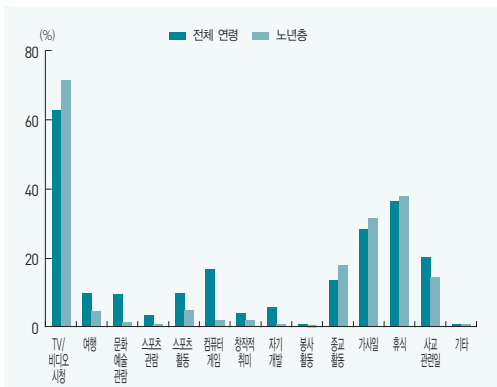
그림 VII-16 연령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2011



주: 1) 지난 1년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1.

노년층의 주된 여가활동을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보면, TV·비디오 시청, 종교활동, 가사, 휴식 등의 활동을 많이 한다. 반면에 여행,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관람, 스포츠활동, 컴퓨터게임, 창작적 취미활동, 자기개발, 사교 관련 일 등에서는 다른 연령대보다 활동경험이 훨씬 적다(그림 VII-17). 노년층은 가정에서는 TV 시청이나 가사를 하면서 밖에서는 종교활동을 하며 소극적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노년

그림 VII-17 노년층의 주된 여가활동,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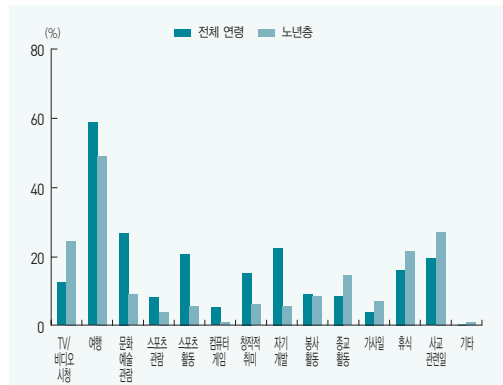


주: 1) 노년층은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1.

층에서 문화예술 관람률이 낮은 것은 노년층 여가활동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노년층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다른 연령대와 차이가 큰 것은 문화예술 관람은 교육이나 훈련의 기반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 관람이 체험과 지식을 요구하는 행위인 것은 [그림 VII-18]의 희망 여가활동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노년층에서 가장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여행(49.0%)으로 전체 연령 대비 83.8%에 달한다. 반면에 문화예술 관람을 희망하는 비율은 9.5%로 전체 연령 대비 35.6%에 불과하다. 노년층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이 적기 때문에 욕구 자체도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것이다.

그림 VII-18 노년층의 희망 여가활동,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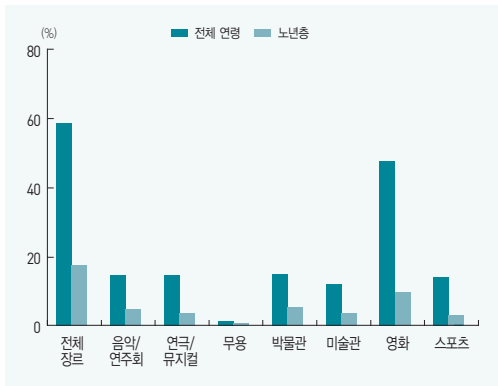
주: 1) 노년층은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1.

노년층이 선호하는 문화예술 관람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영화(10.0%), 음악·연주회(5.3%), 박물관(5.3%), 연극·뮤지컬(3.9%), 미술관(3.8%), 스포츠(3.3%), 무용(0.5%) 등의 순이다(그림 VII-19). 노년층이 선호하는 관람 장르는 다른 연령



대와 큰 차이가 없지만 장르별 관람률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노년층의 관람률 수준은 전체 연령 대비 영화 20.9%, 스포츠 23.2%, 연극·뮤지컬 26.5%, 미술관 31.4%, 박물관 34.2%, 무용 33.3%, 음악·연주회 36.1%에 불과하다.

그림 VII-19 노년층의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률, 2011



주: 1) 노년층은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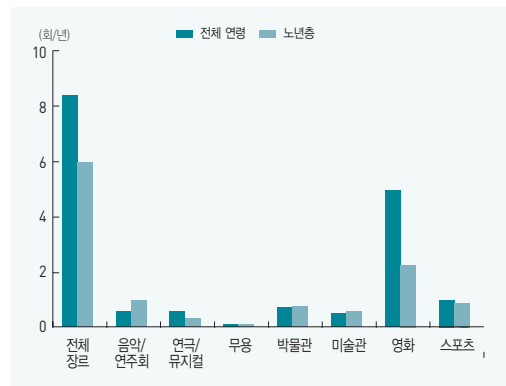
영화, 스포츠, 연극·뮤지컬에서 노년층과 전체 연령의 차이는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다. 영화, 스포츠, 연극·뮤지컬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노인 할인율이 낮거나 할인 혜택이 없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음악·연주회, 박물관 전시회 등은 공공시설에서 이루어질 경우, 노년층은 무료 또는 실비로 입장할 수 있다. 따라서 노년층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유료 또는 고가의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화, 스포츠, 연극·뮤지컬은 대규모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관람을 위해서는 생활권역을 넘어서 이동을 해야 하

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년층의 경우 건강과 체력의 문제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 여가 활동 불만 이유로 노년층에서는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라고 응답한 경우가 24.9%로 전체 연령(6.8%)보다 3.7배나 많다. 이처럼 경제적 부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노년층에서는 영화, 스포츠, 연극·뮤지컬의 관람률이 낮은 것이다. 반면에 음악·연주회는 거주 지역으로 찾아오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박물관은 다른 문화 시설보다 전국에 더 산재하기 때문에 이동이 수월하여 다른 연령과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다.

한편 문화예술 관람 노년층의 관람횟수는 다른 연령집단과 차이가 크지 않다. 오히려 음악·연주회,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는 노년층의 관람횟수가 전체 연령보다 많다(그림 VII-20).

그림 VII-20 노년층의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횟수, 2011



주: 1) 노년층은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1.

이러한 경향은 2000년부터 발견되는데 노년층의 문화예술 관람자들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더 자발적으로 관람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

석할 수 있다. 문화예술 관람은 경험과 지식이 누적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년이 되기 이전부터 관람을 한 사람들은 노년이 되어서도 관람을 지속하는 것이다.

### 향후 노년층의 문화예술 관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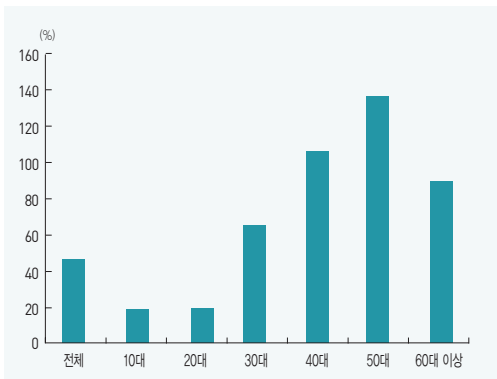
60세 이상 노년층의 문화예술 관람활동은 다른 연령대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앞으로 노년층의 문화예술 관람활동은 어떻게 될까? 이를 위해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의 노년층 관람행위 변화 추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60세 이상 노년층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2000년 9.6%에서 2011년 18.2%로 지난 10여 년 동안 89.6% 증가하였다(그림 VII-21). 이 같은 증가율은 50대(137.0%)와 40대(106.6%)보다는 낮지만 전체 연령(46.9%)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전체 연령과 비교해서 노년층의 관람 증

가율이 크기 때문에 연령별 격차가 약간 줄었다. 전체 연령 대비 노년층의 관람률 비율은 2000년 24.1%에서 2011년 31.1%로 그 차이가 개선되었다. 향후 노년층의 문화예술 관람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연령별 차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50대의 문화예술 관람률을 보면 이 같은 예측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 50대의 관람률은 지난 10여 년 동안 137.0% 증가하여 다른 연령대보다 증가율이 가파르다. 2000년을 기준으로 50대의 관람률은 전체 연령 대비 47.4%였으나 2011년에는 76.5%에 이른다. 50대의 급격한 관람률 증가는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 즉 1950년대 출생자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과 양태가 이전 세대와는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2000년 조사에서 50대는 1940년대 출생자인데 반하여, 2011년 조사에서 50대는 1950년대 출생자다. 1950년대 출생자가 이 같은 문화예술 관람률을 보인다면, 향후 10년 후 60대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VII-21 연령별 문화예술 관람 증가율, 2000-2011



주: 1) 문화예술 관람 증가율은 2000년 대비 2011년 문화예술 관람률의 증가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 사회경제적 특성별 문화예술 관람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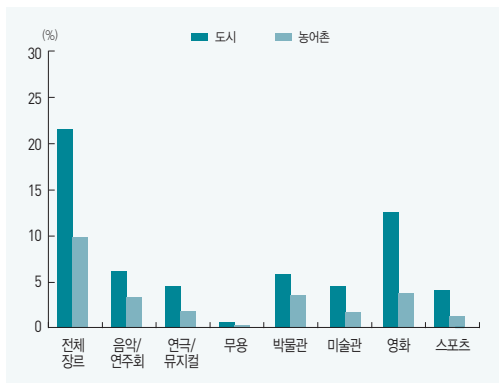
문화예술 관람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노년층이라고 할지라도 거주지역, 성, 연령, 학력, 직업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2011년 기준으로 도시지역 거주자의 관람률은 21.6%로 농어촌지역 거주자의 관람률(10.0%)보다 2배 이상 높다(그림 VII-22). 노년층의 도농 간 차이는 전체 연령(도시



62.1%, 농어촌 42.7%)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노년층에게 거주 지역은 문화활동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장르별로는 영화, 스포츠, 연극·뮤지컬, 무용, 미술관 관람에서 도농 간 차이가 크고, 음악·연주회, 박물관에서 차이가 작다. 도농 간 차이가 많은 장르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비용이 수반되고 도시지역에 집중된 행사들이다. 이것이 노년층 내부에서는 도농 간 차이로 연결된 것이다. 반면에 음악·연주회는 농어촌지역으로 '찾아가는' 예술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박물관은 전국에 743개가 운영 중이어서 농어촌지역에서도 접근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도농 간 차이가 크지 않다.

그림 VII-22 노년층의 거주지역별 문화예술 관람률,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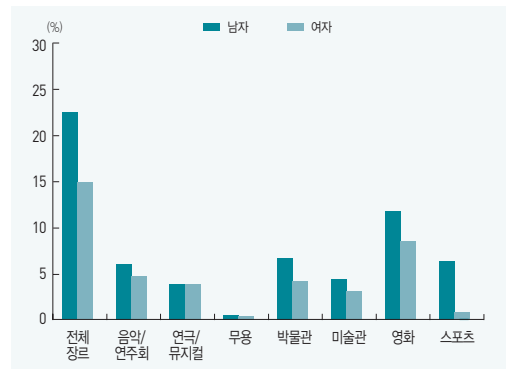


주: 1) 노년층은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1.

노년층의 남녀별 관람률은 남성 22.6%, 여성 14.9%로 남성이 1.5배 정도 높다(그림 VII-23). 전체 연령에서 성별 관람률(남성 58.0%, 여성 59.2%)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결

과이다. 노년층의 성별 관람률 차이에서 특이한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스포츠 관람의 차이(남성 6.4%, 여성 0.9%)가 매우 커서 전체 관람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든 예술장르에서 여성의 관람률이 남성보다 높지만, 노년층에서는 연극·뮤지컬을 제외한 모든 장르에서 남성의 관람률이 높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선호하는 영화나 미술관 관람에서도 노년층에서는 남성들이 더욱 많이 관람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관람률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층 여성들이 가정 밖 활동,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외부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림 VII-23 노년층의 성별 문화예술 관람률,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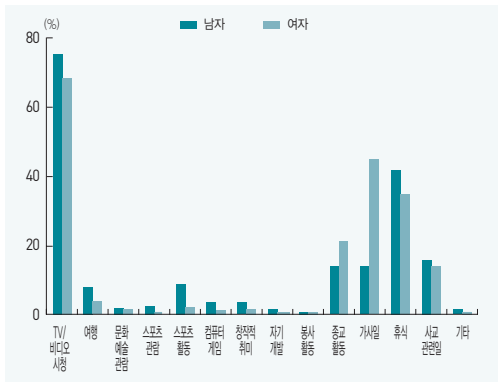


주: 1) 노년층은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1.

실제 노년층 여성들은 가사의 부담 때문에 문화예술 관람은 물론 수동적 여가활동도 활발하지 못하다. 주된 여가활동에서 보듯이 노년층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많이 하는 활동은 가사, 종교 활동, 그리고 봉사활동밖에 없다. 노년층 여성들

은 수동적 여가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휴식, TV 시청도 남성보다 적게 한다(그림 VII-24). 노년층이 되어 여가시간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여전히 가사에 얽매어 있는 것이다.

그림 VII-24 노년층의 성별 주된 여가활동,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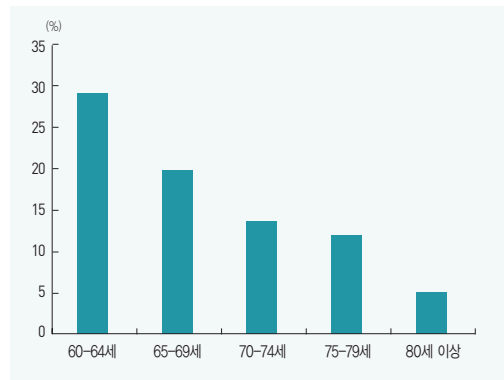
주: 1) 노년층은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1.

이것은 노년층에서는 아직까지 성차별적 제약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희망하는 여가활동에서 노년층 여성(10.1%)은 남성(8.6%)보다 문화예술 관람에 대한 욕구가 많다. 노년층 여성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자체가 남성보다 적기 때문이 아니라 노년층 여성의 현실이 문화예술 관람은 물론 여가활동까지도 제약하는 것이다.

노년층에서는 문화예술 관람률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감소한다. 60-64세의 관람률은 29.1%로 65-69세(19.9%)보다 1.5배, 70-74세(13.7%)보다 2.1배, 75-79세(12.0%)보다 2.4

배, 80세 이상(5.2%)보다 5.6배 높다(그림 VII-25). 60세 이상을 단일한 범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연령별 격차가 매우 크다. 65세 이상에서 관람률이 급감하는 장르는 영화, 연극·뮤지컬, 미술관 등이다. 이 같은 장르들이 비용을 수반하는 예술행사인 점을 감안하면 65세 이상이 되면 경제적 부담을 훨씬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VII-25 노년층의 연령별 문화예술 관람률,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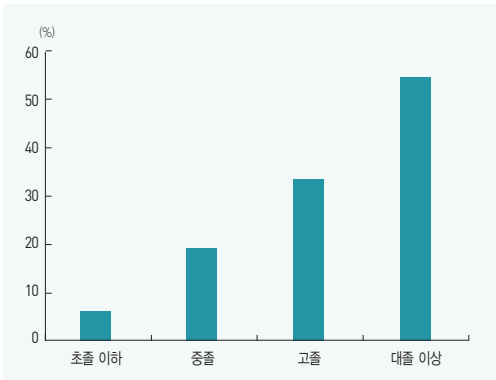


주: 1) 노년층은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1.

노년층의 학력 및 직업별 관람률 차이를 살펴보면, 대졸 이상 학력자(54.6%)와 초졸 이하 학력자(6.2%) 간의 관람률 차이는 8.8배, 전문·관리직(51.5%)과 농어업중사자(10.1%)간의 차이는 5.1배에 달한다(그림 VII-26). 물론 학력과 직업에 따른 관람률의 차이는 다른 연령대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이다. 전체 연령에서 대졸 이상(79.2%)과 초졸 이하(25.6%) 간의 차이는 3.1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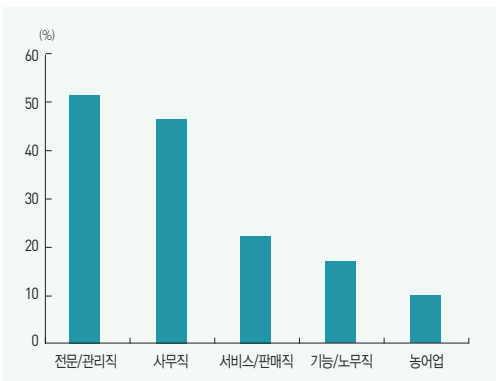
그림 VII-26 노년층의 학력 및 직업별 문화예술 관람률, 2011

### 1) 학력별



주: 1) 노년층은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1.

### 2) 직업별



주: 1) 노년층은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1.

전문·관리직(82.0%)과 농어업종사자(16.8%) 간의 차이는 4.9배다. 노년층에서는 직업보다 학력 집단 간 차이가 훨씬 큰 것이 특징이다. 60세 이전에는 직업이 어느 정도 학력의 영향을 상쇄하지만 노년층이 되면 직업보다 학력이 문화예술 관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취향과 선호는 60세 이전에 형성되기 때문에 같은 노년층이라고 하더라도 학력과 직업이 다르면 문화적 격차가 확대, 유지된다.

### 맺음말

외국에서는 노년층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약간 낮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영국의 경우, 2008-2009년 65-74세의 예술 관람률은 61.6%로 가장 높은 관람률을 보이는 25-44세(70.7%)의 87.1%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2008년을 기준으로 65-74세 연령대의 라틴음악과 공연예술축제 관람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을 뿐, 다른 장르에서는 연령별 차이가 거의 없다. 오히려 클래식음악, 오페라, 발레 등의 관람률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1년 노년층의 관람률이 장르별로 편차를 보인다. 60-69세의 미술전시회, 연극 관람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지만 영화 관람률은 낮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노년층이라고 할지라도 문화예술 관람을 적게 하지는 않는다. 한국보다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국가들은 생활권역 내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많고 노년층의 문화예술 활동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

한국 노년층의 문화예술 활동은 다른 연령대와 차이가 많지만 그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년층 가운데서도 이른바 취

약계층(농어촌지역 거주자, 저학력층, 고령노인)의 문화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추세로 본다면 노년층의 문화예술 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년층 이전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취약계층 노년층의 문화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일본총무성통계국. <http://www.stat.go.jp/english/data/shakai>.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09. *2008 Survey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rts*.

The Arts Council of England. 2010. *Arts engagement in England 2008-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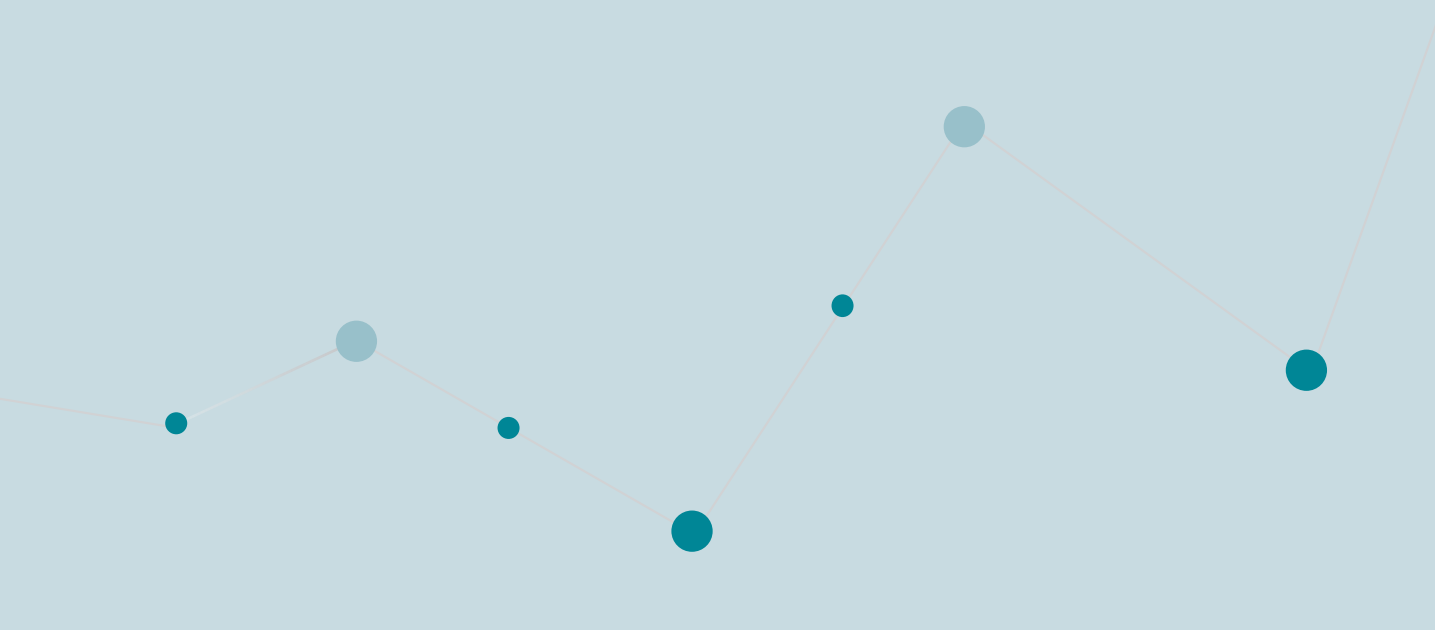
# STATISTICS KOREA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 주거와 교통

Housing & Transportation

- 01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변화 손경환 | 국토연구원 [214](#)
  - 02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복지 실태 손경환 | 국토연구원 [223](#)
  - 03 가구특성과 주거소비 정의철 | 건국대학교 [229](#)
  - 04 교통복지실태 이상민 | 한국교통연구원 [236](#)
- 

## 01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변화

손경환(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요 약

- 2012년 현재 한국의 신주택보급률은 102.7%, 그리고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371호로 증가해 주택부족 현상은 거의 해소되었다.
- 지난 10년 동안 주택공급실적은 연평균 48만 호에 달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2000년 이후 주택가격은 급등한 후 침체 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전세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월세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전반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자가가구의 주거만족도가 가장 높고, 월세나 사글세에 거주하는 가구의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 2012년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1,887만 대로 1990년의 약 340만 대와 비교하면 5배 이상 증가하였다.
- 도로연장은 2012년 현재 105,703km로 1980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980년 33.2%에 그쳤던 도로포장률은 2012년에 80%를 상회하고 있다.
-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건수는 2000년 까지 계속 높아졌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사고건수가 감소하여 약 450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주거와 교통 영역의 변화를 다루고자 한다. 먼저 주거 영역에서는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80년대 이후 주택수급, 주택가격 등의 변화를 중심으로 주요 지표들이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주택수급 측면에서는 주택보급률과 함께 인구 1,000명당 주택수의 변화, 연도별 주택건설실적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는 주관적인 인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택과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교통 영역에서는 자동차의 보급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구의 교통비 지출 패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도로 연장 및 각종 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와 도로교통 혼잡비용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도 검토하였다.

## 지속적인 주택건설과 주택보급률 상승

주택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필수적인 생활요건이며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주택은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고가성, 비이동성, 영구성 및 장기간의 건설 소요기간 등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인 데다 지역 및 주택유형별로 차이가 많은 세분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주택부족으로 가격의 폭등을 경험하였고,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로 무리하게 집을 장만한 사람들이 도리어 고통을 받는 상황도 겪고 있다. 한때는 내 집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심각한 재산 격차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하우스푸어 문제에서 보듯이 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리어 삶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전세가격은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표 VIII-1〉은 지난 30여 년 동안의 주택수급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주택사정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신주택보급률과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살펴볼 수 있다. 신주택보급률은 주택과 가구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기존의 주택보급률보다 시장상황을 더 잘 반영하도록 정의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의 출현에 따라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는 주택의 개념을 거처기준으로 확대하여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는 한편, 가구에서도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1인가구를 가구수에 포함시킨 개념이다.

또한, 2003년에 수립된 ‘주택종합계획’에서는 주택보급률의 보조지표로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발표하였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주택수를 인구로 나누는 간단한 방법으로 산출되는 지표이지만, 많은 국가들에서 주택수급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고 있어 국

제비교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주택사정을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빠른 고령화와 1인가구의 증가로 가구의 성격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 가구의 개념에 기초한 주택보급률로는 실제 사람들이 겪는 주택수급 상황의 변화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택보급률과 신주택보급률을 이용하여 한국 사회의 주택수급 상황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신주택보급률은 102.7%로 나타나고 있다. 신주택보급률은 2008년 처음으로 100%를 상회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2002년에 100%를 넘어선 이후 2005년에 105.9%, 2008년에 109.9%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여 신주택보급률이 낮은 것은 거처기준의 주택수 증가보다 1인가구 등을 포함한 가구의 증가

표 VIII-1 주택보급률과 인구 1,000명당 주택수, 1980~2012

연도	가구수 (1,000가구)	주택수 (1,000호)	주택 보급률 (%)	인구 1,000명당 주택수(호)
1980	7,470	5,319	71.2	142.2
1985	8,751	6,104	69.8	151.0
1990	10,167	7,357	72.4	165.0
1995	11,133	9,570	86.0	214.5
2000	11,928	11,472	96.2	248.7
2005	15,887	15,623	98.3	330.4
2010	17,339	17,672	101.9	363.8
2011	17,719	18,131	102.3	364.2
2012	18,057	18,551	102.7	371.0

주: 1) 2005년부터 신주택보급률임.  
출처: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각 년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가 더 빠르게 진행된 데 원인이 있다. 다만 신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주택수급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데다 주거이동에 따른 일시적 수급마찰 등으로 주택재고는 수요보다는 약간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되었다. 1990년 200호를 밑돌던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2000년 248.7호로 증가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371호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신주택보급률보다 빠르게 향상된 것은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구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반면, 가구증가율은 가구규모의 감소, 1인가구 증가 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신주택보급률이나 인구 1,000명당 주택수의 상승이 보여주고 있듯이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의 주택수급 사정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이는 <표 VI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동안 신규 주택이 많이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을 전후한 ‘주택200만호건설계획’에 힘입어 수도권 5개 신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주택이 단기간에 공급되었다.

주택건설 실적은 1980년대까지 연간 25만 호 내외에 머물렀으나 1988년에 41만 호로 대폭 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75만 호를 기록하였다. 한국에서 주택공급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

표 VIII-2 공공 및 민간 부문 건설 주택수, 1980-2012

(1,000호)

연도	공공부문	민간부문	계
1980	106	105	212
1985	132	95	227
1990	269	481	750
1995	228	391	619
2000	140	293	433
2005	141	323	464
2010	138	248	386
2011	115	434	549
2012	110	477	587

출처: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각 연도.

기는 1990년대 전반기로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5년 동안에 총 326만 호의 주택이 신규로 건설되었는데 이는 연평균 65만 호에 해당한다. 1990년대 전반기에 이처럼 주택공급이 대폭 증가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1980년대 후반의 만성적인 주택부족에 따른 사회불안과 수도권 주택가격의 급등 때문이다.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서울 주변에 분당, 일산, 평촌 등 5개의 신도시를 건설한 것도 이 시기였다. 그러나 1990년대 전반기의 활발한 주택건설은 1990년대 후반기 이후 다소 주춤해졌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매년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주택건설 실적은 연평균 48만 호에 달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대체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였으나, 1990년을 전후해서부터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훨씬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였다. 이처럼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이 활기를 보인 것은 분양가 자율화, 저렴한 택지의 대규모 개발, 미분양아파트 지원대책을



비롯하여 민간의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은 결과로 여겨진다.

주택공급의 증가와 함께 주목할 사실은 공공 임대주택의 재고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만성적인 주택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주택 정책의 관심은 저소득층 주거 문제로 옮겨갔으며, 1990년대 초반에는 영구임대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어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후에도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2005년 총 주택수의 2.3%에 불과했던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2010년에 5.5%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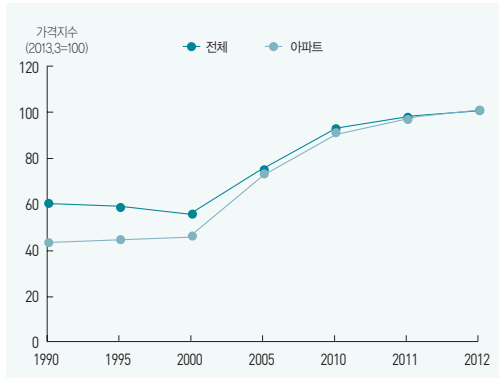
한편 주거사정의 개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등에 힘입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00년 거의 30%에 달했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은 2010년에 10.6%로 감소하고 2012년에는 7.2%까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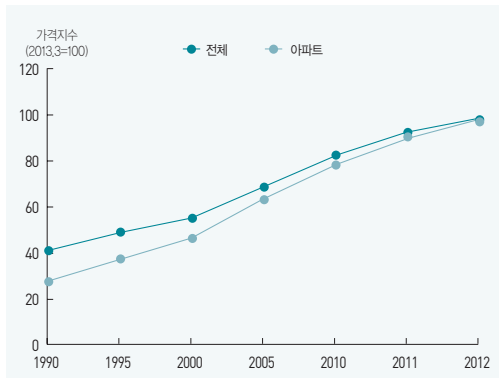
주거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는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다. [그림 VIII-1]은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의 주택가격지수 및 전세가격지수의 추세를 보여준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1990년대에는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가 2002년 이후 2010년까지 수년간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주었다. 주택가격의 급등은 외환위기 이후 사

그림 VIII-1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지수, 1990-2012

### 1) 주택매매가격지수



### 2) 전세가격지수



출처: KB부동산

회경제의 변화로 자리 잡은 저금리 기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 외환위기 당시 20%까지 치솟았던 금리가 5%대로 떨어지자 금융기관에서 얻는 낮은 이자수익에 만족하지 못한 자금이 금융기관에서 빠져나와 대거 주택시장에서 몰려들어 주택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대출의 리스크를 경험한 금융기관 역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에 주력하면서 주택시장에는 풍부한 자금이 형성되었다.



주택가격의 급등 이후 지난 2-3년 사이에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가격의 변화는 특히 아파트에서 심하게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의 대량공급으로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아파트의 비중이 절반을 상회할 정도로 높아진 데다 사람들의 주거선호가 아파트에 계속 쏠렸고 아파트가 투자수단의 하나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전세가격은 주택가격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 왔다. 주택가격이 1990년대의 하락과 2000년대의 상승이라는 상황을 보인 것과 달리, 전세가격은 외환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하여 왔다. 주택가격과 마찬가지로 전세가격 역시 아파트가 다른 유형의 주택에 비하여 변동 폭이 컸으며, 이는 사람들의 선호가 아파트에 집중된 데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현상은 사람들의 주거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 Price Income Ratio)는 2006년 4.2배에서 2012년에는 5.1배로 높아졌으며,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Rent Income Ratio) 역시 2006년 18.7%에서 2012년에는 19.8%로 높아졌다. PIR과 RIR의 상승은 사람들의 주택구입 능력을 떨어뜨리고 세를 들어 사는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주거유형의 변화

주택의 임차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는 전세가격의 상승과 함께 임차형태가 전세 중심에서 점차 월세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0년까지는 임차가구의 절반 이상이 전세로 거주하였으나 최근에는 보증부월세를 포함한 월세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10년에는 보증부월세나 사글세를 포함한 월세의 비중이 21.4%로 전세 비중인 21.7%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높아졌다(표 VIII-3).

월세 비중의 증가는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집주인들이 전세로 받은 자금의 적절한 투자처를 찾기가 어려워 전세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율은 연 7%를 상회하여 정기예금의 금리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한, 주택가격에 대한 상승기대가 낮아지면서 불확실한 시세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려는 주택소유자들의 판단도 월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편, 내 집 마련을 통한 자가거주의 비중은 1995년 53.3%까지 높아졌으나 이후로는 55% 내외에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중반의 주택가격 급등으로 주택구입이 어려워진 데다 사람들의 주거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점차 변하고 있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 또한, 자녀교육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다른 지역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육여건이 좋은 곳에서 거주하려는 성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표 VIII-3 주택점유형태별 가구구성 비율, 1990~2010 (%)

연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	기타	계
1990	49.9	27.8	8.2	11.0	3.2	100.0
1995	53.3	29.7	10.3	4.2	2.5	100.0
2000	54.2	27.1	11.0	4.4	3.3	100.0
2005	56.0	21.0	15.1	4.1	3.8	100.0
2010	54.1	21.7	18.1	3.3	2.7	100.0

주: 1) 주거실태 10% 표본자료 이용.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주거만족도의 상승

주거복지의 중요 측면은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판단이다. 주택보급률, 주거면적 같은 객관적 지표는 주거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척도로서 주거복지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에 비해 주관적 지표인 주거만족도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주거상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택과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중요한 주거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표 VIII-4〉는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주택의 점유형태별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이들 중 90% 이상이 주택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또한 전세나 보증부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택만족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이에 비해 월세나 사글세 거주자의 주택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이는 목돈이 없고 적정한 주거비를 부담하기가 어려워 매달 세를 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월세 형태의 주택에서 많이 거주하기 때문이다.

표 VIII-4 주택점유형태별 주택만족도, 2008, 2012 (%)

주택점유형태	2008		2012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전체	75.5	24.5	87.5	12.6
자가	78.7	21.3	92.2	7.8
전세	73.2	26.9	84.3	15.7
보증부월세	71.9	28.0	81.0	18.9
월세	55.5	44.4	54.9	45.1
사글세	57.5	42.4	36.9	63.1
무상 및 기타	71.4	28.6	78.5	21.5

주: 1) 2012년은 '보통'을 포함한 5점 척도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가구를 제외하고 계산하였음.  
출처: 국토해양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각 년도.

2008년과 2012년 사이의 주거만족도 변화를 살펴보면, 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주택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2008년에 24.5%였으나 2012년에는 12.6%로 낮아졌다. 특히 자가가구 경우 불만족 비율이 21.3%에서 7.8%로 크게 낮아졌으며 전세나 보증부월세 거주가구의 불만족 비율도 낮아졌다. 그러나 월세와 사글세 거주가구의 불만족 비율은 2012년에 각각 45.1%와 63.1%로 다른 주거유형에 비해 매우 높고 2008년과 비교해서도 오히려 더 높아졌다.

주택형태별로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VIII-5〉에서 보는 것처럼 2008년에 비해



2012년에는 주거환경에 불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낮아졌다. 2008년의 불만족 비율이 25.5%였던 것이 2012년에는 12.7%로 절반으로 낮아졌다.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불만족 비율은 다른 유형의 주택 거주자들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주거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불만족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어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표 VIII-5 거주종류별 주거환경만족도, 2008, 2012

거처종류	2008		2012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전체	74.5	25.5	87.2	12.7
단독주택	67.6	32.4	-	-
일반 단독주택	-	-	82.7	17.3
다가구 단독주택	-	-	81.1	18.9
아파트	82.4	17.6	93.1	6.9
연립/다세대	-	-	81.9	18.1
연립	71.0	29.0	-	-
다세대	72.3	27.7	-	-
기타	71.4	28.5	67.7	32.3

주: 1) 2012년은 '보통'을 포함한 5점 척도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가구를 제외하고 계산하였음.

2) '-'은 비해당임.

출처: 국토해양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각 년도.

### 자동차의 보급과 일상생활의 변화

도로망의 확충과 자동차의 보급은 국민의 출퇴근, 통학, 여행, 경제활동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990년 이후 최근까지 한국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6배가 증가하였으며, 2012년 현재 가구당 자동차수는 1.05대로 본격적인 1가구 1자동차 시대가 개막되었다. <표 VIII-

6>을 살펴보면, 1990년에는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약 340만 대에 그쳤으나, 2000년에 1,000만대를 돌파한 후 2012년 현재는 1,887만 대에 달하고 있다.

한국에서 자동차의 보급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2000년 이후로 증가 속도는 크게 둔화되었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 보급의 확대는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증가와 함께 자동차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가구당 자동차수 역시 1990년대 전반기에 빠르게 늘어났다. 2000년대 들어서는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다. 2012년 현재 가구당 자동차수는 1990년에 비하여 3배 이상으로 많아졌으며, 인구 1,000명당 자동차수 역시 377대에 이르고 있다.

표 VIII-6 자동차 등록대수, 1990-2012

연도	자동차 등록대수 (1,000대)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등록대수
1990	3,395	0.30	78.2
1995	8,469	0.65	190.1
2000	12,059	0.84	262.2
2005	15,397	0.97	327.3
2010	17,941	1.03	373.9
2011	18,437	1.04	370.4
2012	18,871	1.05	377.4

주: 1) 1990-2010년 가구당 및 인구 1,000명당 자동차등록대수는 각각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가구와 내국인인구를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2011년과 2012년 자료는 추계가구 및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각 년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장래가구추계」, 2012; 「장래인구추계」,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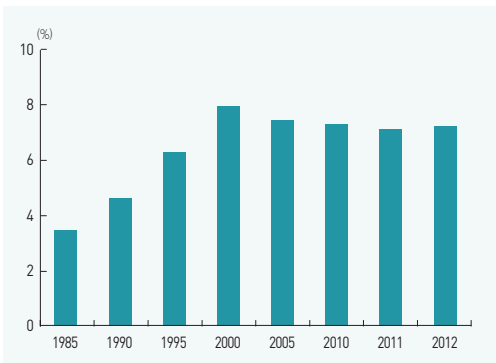
자동차 보급의 증가는 가구의 교통비 지출 양상을 크게 변화시켰다. [그림 VIII-2]에서 보는 것처럼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이 미미하였던 1985년의



경우 가구당 교통비 지출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아서 가구소득 대비 지출비율이 3.5%에 불과하였다. 대부분의 교통비 지출은 요금이 저렴한 공공교통에 치중되어 있었고 자가용에 대한 지출은 전체 교통비 지출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후 자동차수의 빠른 증가와 함께 가구소득 대비 교통비 지출비율도 크게 증가하여 2000년에는 8.0%에 달하였으며, 이후 7.3%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가용의 증가로 출퇴근, 관광 등 사회활동이 활발해진 데다 대중교통에 비하여 이동에 따른 단위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림 VIII-2 가구의 교통비 지출비율, 1985-2012



주: 1) 교통비 지출 비율은 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월평균 교통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임. 도시 2인 이상 근로자가구 기준.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자가용 승용차의 대중화는 국민의 통근, 통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 현재 12세 이상 인구 4,165만 명 중에서 매일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통근, 통학하고 있는 인구는 2,85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통근자는 2,157만 명, 그리고 통

학 학생은 693만 명이다. 이는 12세 이상 인구의 68.4%에 해당한다. 통근자와 통학자가 12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에 50.3%였으나 2000년에 63.1%로 증가하였고, 2005년에 다소 감소한 61.3%였다가 2010년에는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보면, 1990년에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비율이 53.3%였고 승용차 이용비율은 8.3%에 그쳤으나, 2010년에는 승용차의 이용비율이 34.0%로 크게 높아지고 버스나 지하철의 이용비율은 28.9%로 감소하였다.

교통수단의 발전을 뒷받침한 배경에는 도로망의 확충이 자리 잡고 있다. <표 VIII-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 46,951km에 불과했던 도로연장은 2012년에는 105,703km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원활한 도로이동에 필수적인 도로포장률은 1980년 33.2%에서 2012년에는 80%를 상회하여 대부분의 도로가 쾌적한 이동이 가능한 상태로 개선되었다.

표 VIII-7 도로연장 및 도로포장률과 교통사고건수, 1980-2012

연도	도로 연장 (km)	도로 포장률 (%)	교통사고건수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000대당
1980	46,951	33.2	315	228
1985	52,264	49.9	358	132
1990	56,715	71.5	597	75
1995	74,237	76.0	552	23
2000	88,775	76.0	618	21
2005	102,293	76.8	444	11
2010	105,565	79.8	464	11
2011	105,931	80.4	453	10
2012	105,703	83.4	447	10

출처: 국토교통부, 「도로업무편람」, 2013;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2013.





국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온 도로망의 확충과 자동차 보급의 증가는 교통사고의 증가라는 부작용도 가져왔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건수는 1980년 315건에서 2000년에는 618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도로의 확충과 자동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의 정비가 충분하지 못하고 교통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데 기인한다. 2000년 이후 교통에 대한 각종 제도가 개선되면서 사고건수는 크게 줄어 들었다. 2005년을 전후하여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건수는 450건 내외로 감소한 이후 최근까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 1,000대당 교통사고건수 역시 10건 정도에 머물고 있다(표 Ⅷ-7).

승용차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이 편리해진 측면도 있지만, 반면 도로교통의 혼잡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 혼잡비용이란 도시내부와 지역 간 도로에서 도로교통의 혼잡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금전적 단위로 환산한 것이다.

2010년 현재 도로교통 혼잡비용은 28조 원을 상회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달한다. 이 중에서 지역 간 교통혼잡비용은 10조 원, 도시의 교통혼잡비용은 18조 원으로 나타났

다. 이는 2001년과 비교할 때 약 35%가 증가한 수치다. 교통혼잡비용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시간비용 78.6%, 고정비용 16.9%, 그리고 유류비용 4.5%로 나타났다. 교통혼잡비용에서 시간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는 도로망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이나 주말 나들이에 따른 도로정체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교통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

최근 교통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하나는 교통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움직임이다. 그 동안의 교통정책이 주로 도로망 확충과 같은 시설투자에 치중하였다면, 교통복지는 사회적 약자의 교통편의성을 높이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수단의 확보와 함께 교통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자전거도로의 확대, 고령자나 장애인의 교통접근성 강화,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이용 제고와 같은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02

##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복지 실태

손경환(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요 약

- 주거복지를 가구주의 연령계층별로 살펴 보면, 가구당 주거면적은 30대 후반에 87㎡로 늘어난 다음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1인당 주거면적은 40대에는 줄어들었다가 50대 후반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
- 자가보유율은 변화가 거의 없으며 주거 안정이 가장 중요한 40대에도 60%를 밑돌고 있다.
- 전반적인 주거수준은 가구주의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향상되고 있으나 소득계층별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특히 저소득 가구의 주거향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거상태를 소득과 연령계층별로 살펴봤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적을수록 그 상태가 열악하다는 것이다.

주택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주거복지를 달성하는 데 있다. 모든 국민은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누려야 하고 소득이나 연령계층 간에도 주거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는 주거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만성적인 주택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주택200만호건설계획’을 비롯한 주택 공급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주택공급 확대에 필요한 각종 지원대책을 강력하게 펼쳐왔다. 이러한 지원대책으로는 주택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택지개발, 건설자금과 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주택금융의 역할 강화, 관련 세제의 개편, 공급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주택공급은 크게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주택이 많이 건설된다고 해서 모든 국민의 주거복지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주거복지를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주택이 국민의 생애주기에 따라 형평성 있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주거생활이 생애주기별로 어떤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

### 주택보급 현황

주택정책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정책의 중심은 주택공급의 확대 및 시장안정에 있었다. 주택구입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중산층에게는 저렴한 분양가격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낮은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보급률은 1980년 71.2%에서 2010년 110%(신주택보급률 기준 101.9%)로 상승하였으며,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1980년 142호에서 2010년 364호로 높아졌다. 자가점유비율 역시 1980년 58.6%에서 2010년 54.2%로 높아졌다. 또한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중도 5%를 넘어섰다(표 VIII-8).

표 VIII-8 주택보급률, 가구당 주거면적 및 자가점유율, 1980-2010

	1980	1990	2000	2010
주택보급률(%)	71.2	72.4	96.2	101.9
가구당 주거면적(㎡)	45.8	51.0	63.1	68.7
자가점유율(%)	58.6	49.9	54.2	54.2

주: 1) 2010년 주택보급률은 신주택보급률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각 년도.

### 연령계층별 주거수준

보편적인 주거복지의 실현은 국민이 생애주기에 따라 점차 향상되는 주거상태를 달성하는 데 달려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소득과 연령계층별 및 가구형성기간별로 주거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VIII-9〉는 2012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계층에 따른 가구당 및 1인당 주거면적, 가구당 사용방수, 자가보유율, 아파트거주비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를 통해 생애주기에 따라서 가구의 주거상태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보여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표 VIII-9 가구주 연령별 주요 주거복지지표, 2012

가구주연령	가구당 주거면적 (㎡)	1인당 주거면적 (㎡)	가구당 사용방수 (개)	자가 보유율 (%)	아파트 거주비율 (%)
30세 미만	44.6	31.5	1.3	5.9	33.2
30-34세	78.0	31.6	2.4	30.0	65.3
35-39세	87.2	28.5	2.66	41.9	72.0
40-44세	91.7	27.2	2.74	52.6	71.6
45-49세	92.7	27.7	2.79	58.3	65.8
50-54세	95.2	31.2	2.81	65.5	60.5
55-59세	97.5	37.2	2.81	71.5	54.3
60-64세	98.8	44.5	2.82	75.1	50.1
65-69세	97.1	49.0	2.77	75.4	43.1
70-74세	98.7	56.3	2.68	75.1	38.8
75세 이상	95.3	61.5	2.59	72.0	33.7

출처: 국토해양부, 「2012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13.

먼저 가구당 주거면적을 살펴보면, 대체로 가구주 연령이 40대 초반에 접어들면 약 90㎡ 정도 크기의 주택에서 거주하며, 이후 가구주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구당 주거면적이 약간 증가하지만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30세 미만에서는 가구당 주거면적이 44.6㎡에 불과한데, 이는 30세 미만 젊은이들의 상당수가 독신으로 살기 때문이다. 반면, 1인당 주거면적은 자녀가 생기는 30대 후반과 50대 후반 사이에서는 가구원수의 증가로 줄어들었다가 자녀의 결혼 등으로 가구원수가 줄어들면 다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가구당 사용방수 역시 40대 초반에 2.74개를 보인 이후에는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구주 연령이 50대에 들어서면서 주거면적은 소폭 향상되지만 이들의 가족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주거공간을 확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



렵다. 가구주 연령이 50대에는 자녀가 성인이 되고 더 넓은 주거공간이 필요하다. 반면, 60대는 자녀가 독립을 하고 주거공간을 줄일 필요가 있으나 주거면적은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가구가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주거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가보유율의 경우 생애주기상 30대 후반부터 자기 집을 가진 가구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60대 후반에는 75.4%까지 증가하고 있다. 가구당 주거면적 등의 지표에 비해 자가보유율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은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일생에서 가장 안정된 주거생활이 요구되고 소득도 대체로 높은 40대의 자가보유율이 60%를 밑도는 것은 생애주기별 주거복지 차원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거주비율은 오히려 30대 전반에 65%를 보이고 40대 전반까지 70%를 넘어섰으나 이후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가구주 연령이 70세를 넘어서면 아파트 거주비율은 40%를 밑돌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아파트의 대량공급이 1980년대 이후에 주로 이루어졌고, 그 이전에 주택을 마련한 상당수의 노인가구는 아파트 이외의 다른 유형의 주택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구주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구의 구성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결혼과 신희, 자녀의 출산과 성장, 자녀의 결혼과 분가 그리고 노인가구

생활에 이를 때까지 가구의 구성이 변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주거상태도 달라진다. <표 VIII-10>에는 가구구성에 따른 주거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표 VIII-10 가구구성 유형별 주요 주거복지지표, 2012

가구유형	가구당 주거면적 (㎡)	1인당 주거면적 (㎡)	가구당 사용방수 (개)	자가 보유율 (%)	아파트 거주비율 (%)
1인가구	67.5	67.5	2.0	37.2	34.0
부부자녀가구 (12세 이하)	90.0	25.3	2.7	46.3	78.5
부부자녀가구 (13세 이상)	96.8	28.0	2.9	67.7	62.7
노인가구	105.2	52.6	2.8	82.9	39.0

주: 1) 부부 및 자녀가구는 만자녀의 중학교 취학연령인 13세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노인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부부 가구를 의미함.

출처: 국토해양부, 「2012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13.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구당 주거면적은 1인가구, 부부가구, 노인가구로 가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가보유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그렇지만 1인당 주거면적의 경우, 부부가구는 25.3~28.0㎡로 1인가구 주거면적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아져 가구 구성에 따라 필요한 주거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거상태에 연령집단 간의 주관적 만족도 차이는 객관적 상황의 차이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VIII-11>에서 보는 것처럼, 가구주 연령이 40대와 50대에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며 젊은 층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75세 이상을 제외하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주거만족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I-11 연령별 주거 및 주거환경 만족도, 2012

연령	주거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30세 미만	3.18	3.31
30-34세	3.39	3.50
35-39세	3.45	3.54
40-44세	3.51	3.58
45-49세	3.46	3.58
50-54세	3.48	3.58
55-59세	3.46	3.58
60-64세	3.47	3.54
65-69세	3.46	3.50
70-74세	3.46	3.47
75세 이상	3.39	3.39

주: 1)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1점에서 5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국토해양부, 「2012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13.

### 소득 및 연령에 따른 주거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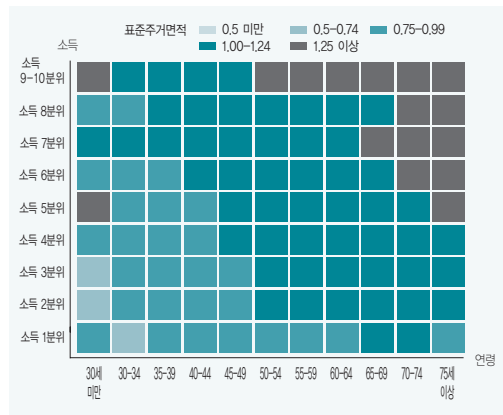
[그림 VIII-3]은 자가가구와 차가가구의 가구당 주거면적을 연령과 소득집단별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연령과 소득은 각각 11단계와 9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색깔이 짙을수록 주거면적으로 살펴본 주거상태는 양호하고 색깔이 옅을수록 주거상태가 열악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젊고 소득이 낮은 집단의 주거상태는 가장 나쁘다. 이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층의 주거불안 현상이 상대적으로 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가구주 연령이 높은 계층 역시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주거가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가가구의 연령 및 소득에 따른 가구당 주거면적을 살펴보면, 소득 1-3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면적은 연령이 높아져도 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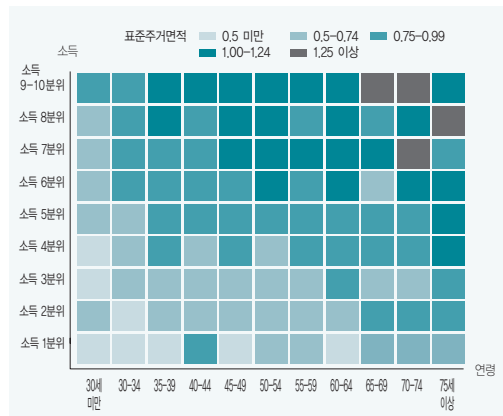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거면적이 넓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가구당 주거면적의 격차는 특히 차가가구에서 더욱 심하다. 차가가구는 연령이 높아져도 주거면적의 향상 정도가 자가가구에 비하여 훨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VIII-3 자가 및 차가 가구의 가구주 연령 및 소득 분위별 가구당 주거면적, 2012

#### 1) 자가가구



#### 2) 차가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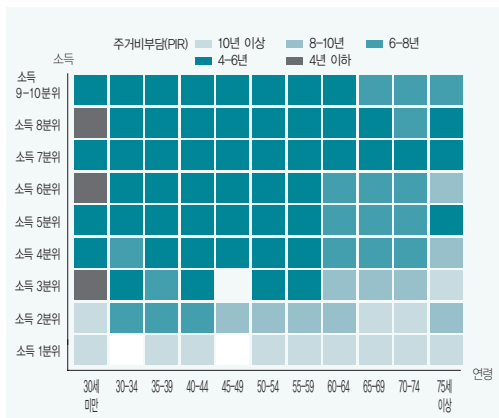
출처: 국토해양부, 「2012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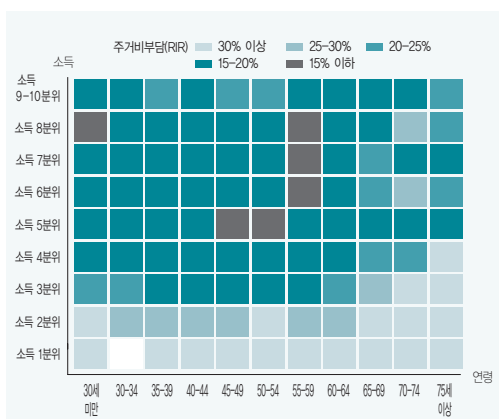
[그림 VIII-4]는 자가가구와 차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Price Income Ratio)과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Rent Income Ratio)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거비 부담상태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색깔이 짙을수록 주거비 부

**그림 VIII-4** 자가 및 차가 가구의 가구주 연령 및 소득 분위별 주거비 부담, 2012

#### 1) 자가가구



#### 2) 차가가구



주: 1) 자가가구와 차가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각각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과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임.  
출처: 국토해양부, 「2012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13.

담이 적고 색깔이 짙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비 부담을 살펴보면, 가구당 주거면적으로 살펴본 결과와 비슷하게 젊은 층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의 하나는 자가가구인 중간소득층의 경우 연령이 높아져도 주거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복지의 실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가가구는 내 집을 가지고 있지만 주택보유로 인한 부담이 많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 한 가지 주목할만한 사실은 저소득층의 경우 연령이 높아져도 주거비 부담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가가구와 차가가구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생애주기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주거상태도 점차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생애주기에 걸쳐 계속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는 상황이다. 물론 이들 계층의 가구당 주거면적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렇지만 중간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의 경우, 가구당 주거면적 증가와 주거비 부담의 감소가 함께 나타나 실질적인 주거상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할 때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주택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맺음말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따라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뿐 아니라 주거면적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복지는 한 개인이 사회에 진출하고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키우고 노후를 지내는 동안 주거생활의 향상과 가구의 상황에 걸맞는 주거안정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는 일이다. 이는 주택복지 정책에 소득 측면만 고려하지 말고 생애주기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주택정책에 있어서 생애주기를 감안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대한 지원확대,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고령자 주택공급이나 주택연금과 같은 노인가구 지원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정책 역시 생애주기라는 큰 흐름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집단을 선정하고 이들의 주거를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단편적이고 불충분하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가 거의 어려운 저소득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 03

## 가구특성과 주거소비

정의철(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요약

-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모든 연령구간에서 자가 비율과 전세 비율이 낮아졌고, 보증부월세 비율이 높아졌으며, 특히 청년층의 전세 비율 감소와 보증부월세 비율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 2010년을 기준으로 청년층의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청년층의 주된 거처로 주택 외 거처, 특히 오피스텔 거주 비율이 200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 1인가구가 단독주택에 보증부월세나 월세·사글세로 거주하는 비율은 전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아파트에 자가나 전세로 거주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 가구주 연령이 50세 미만까지는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과 자산이 동시에 많기 때문에 주거면적이 크고 자가 비율이 높다.
- 1인가구는 경제적 능력이 전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가구주 연령에 관계없이 주거면적이 작고 자가 비율이 낮다.

최근 한국 가구의 구성이 크게 변화했다. 핵가족화와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가구가 소형화 되고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2000년 3.1명에서 2010년에는 2.7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2000년 33.3세에서 2010년 38.1세로 높아졌다. 특히 1인가구의 비율이 2010년 24%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졌으며,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가구의 비율이 2010년 전체 가구의 18%에 이르렀다.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공간인 주택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택의 유형과 규모, 방수, 주택의 내부시설, 그리고 주택의 외부 환경 등이 모두 주택이라는 상품을 구성한다. 그리고 주택은 소유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고 임차를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임차는 다시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등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주거소비란 일반 상품과 같이 특정한 단위로 측정하기 어려우며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의 구성요인과 사용 형태에 따라 다차원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성격의 주거소비는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가구원수가 많아지면 더 큰 규모의 주택이 필요하게 되며, 소득이나 자산이 많으면 주택구입에 대한 지불능력이 높아져 자가 소유를 통한 주거소비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구주 연령에 따라 가구원수와 경제적 능력이 다르므로 주거소비 패턴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소비 변화를 살펴보고 경제적 능력에 따른 주거소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과 주거소비

한국 가구는 일반가구 기준으로 2010년 현재 약 1,730만 가구로 지난 30년간 약 937만 가구가 증가하였다. 가구증가율은 인구증가율보다 높다.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 미만이었던 반면, 연평균 가구증가율은 2% 이상이다. 그러나 가구증가율도 1985년 이후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가구원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가구당 가구원수는 1980년 4.6명에서 2010년 2.7명으로 지난 30년간 1.9명이나 감소하였다. 가구당 가구원수의 감소는 소형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대형 가구의 비율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가 높았다. 1980년 1인가구 비율은 4.8%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23.9%로 거의 5배 증가하였다. 또한 2인가구의 비율도 같은 기간 동안 2.3배 증가하였다. 한편 가구의 고령화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구주 연령이 20대와 30대인 비율은 1990년 이후 계속 감소해 왔으며, 40대 비율은 2005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반면, 가구주 연령이 50대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증가해 왔는데 1990년 32.5%에서 2010년 약 47%로 증가하였다.

주택이 다양한 형태의 상품으로 공급되는 만큼 주거소비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여기서는 먼저 주택점유형태, 거처의 종류, 사용방수를 중심으로 가구특성과 주거소비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VIII-12>는 2000년과 2010년의

가구주 연령과 주택점유형태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가구주 연령은 35세 미만(청년층), 35-50세 미만(중년층), 50-65세 미만(장년층), 65세 이상(노년층)으로 구분하였다. 전반적으로 청년층 가구일수록 자가 비율이 낮고 임차 비율이 높다. 35세 미만 가구는 2000년 자가 비율이 23.5%인 반면, 전세 비율은 48.5%, 보증부월세 비율은 17.2%였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임차 비율은 낮게 나타난다.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 가구의 경우 2000년 자가 비율은 76.0%였으며, 전세 비율은 12.6%, 보증부월세 비율은 5.4%였다. 이렇게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 비율이 높고 임차 비율이 낮은 이유는 가구주 연령 자체가 주택점유형태에 대한 선호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소득과 자산 등 가구의 경제력을 대변하는 변수이기 때문일 것이다. 청년층에서 중년층, 장년층으로

표 VIII-12 가구주 연령별 주택점유형태, 2000, 2010 (%)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	무상	계
2000						
전체	54.2	28.2	10.7	4.1	2.8	100.0
35세 미만	23.5	48.5	17.2	6.9	3.9	100.0
35-50세 미만	53.2	29.5	10.9	3.7	2.8	100.0
50-65세 미만	72.4	15.8	7.0	2.9	1.9	100.0
65세 이상	76.0	12.6	5.4	3.1	3.0	100.0
2010						
전체	54.2	21.7	18.2	3.3	2.7	100.0
35세 미만	20.8	32.9	36.5	5.7	4.0	100.0
35-50세 미만	49.3	26.4	18.6	2.9	2.9	100.0
50-65세 미만	66.1	15.7	13.3	3.0	1.9	100.0
65세 이상	74.8	11.9	8.5	2.6	2.2	100.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옮겨갈수록 일에 대한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저축도 증가하여 자산축적이 가능해진다. 주택은 값비싼 재화이므로 대출을 통해 주택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구입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산과 상환능력(소득)을 요구한다.

2000년과 2010년 사이 가구주 연령구간별 주택점유형태 변화의 특징은 모든 연령구간에서 자가 비율과 전세 비율이 낮아졌고, 보증부월세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전세 비율은 2000년 28.2%에서 2010년 21.7%로 낮아졌으며, 보증부월세 비율은 10.7%에서 18.2%로 높아졌다. 특히 청년층의 전세 비율의 감소와 보증부월세 비율의 증가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청년층의 전세 비율은 2000년 48.5%에서 2010년 32.9%로 15.6%p 감소하였으며, 보증부월세 비율은 17.2%에서 36.5%로 19.3%p 증가하였다. 또 다른 특징은 노년층 가구의 자가 비율이 젊은 연령층에 비해 높다는 점인데 2000년과 2010년에 모두 노년층 가구의 자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인구고령화 또는 가구고령화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노년층 가구의 자가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VIII-13〉은 가구주 연령구간별 거처의 종류를 보여준다. 2010년의 연령구간별 거처 비율을 보면, 2000년에 비해 모든 연령대에서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감소하고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 거주 비율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

요측면보다는 공급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동 기간 동안 단독주택의 재고는 감소하였고,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의 재고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VIII-13 가구주 연령별 거처의 종류, 2000, 2010 (%)

	단독	아파트	연립/다세대	영업용 건물내 주택	주택 외 거처	계
2000						
전체	49.6	36.6	9.0	4.1	0.6	100.0
35세 미만	47.4	39.5	8.9	3.2	0.9	100.0
35-50세 미만	39.3	46.0	10.0	4.3	0.5	100.0
50-65세 미만	57.0	27.9	9.4	5.2	0.6	100.0
65세 이상	73.6	17.4	5.5	3.1	0.5	100.0
2010						
전체	39.6	47.1	10.1	1.2	2.0	100.0
35세 미만	42.6	40.3	9.8	1.2	6.2	100.0
35-50세 미만	27.9	59.0	10.5	1.0	1.6	100.0
50-65세 미만	39.9	46.7	10.8	1.5	1.1	100.0
65세 이상	60.2	29.6	8.3	1.2	0.7	100.0

주: 1) 2000년 거처의 종류가 미상인 가구는 제외하였음. 영업용 건물내 주택(2000)과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2010)은 같은 것으로 취급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표 VIII-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주택재고는 약 290여만 호 증가하였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영업용 건물내 주택(또는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의 재고는 감소하였으며,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의 재고는 증가하였다. 특히 아파트 재고의 증가는 해당 기간 동안 주택재고의 순증가분과 거의 유사하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청년층의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42.6%로 중년층(27.9%)과 장년층(39.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단독주택에 여러 세대가 같이 거주할

표 VIII-14 주택유형별 재고, 2000, 2010

(1,000호)

주택유형	2000 (A)	2010 (B)	차이 (B-A)
단독주택	4,069	3,797	-272
아파트	5,231	8,185	2,954
연립주택	813	504	-309
다세대주택	453	1,246	793
영업용 건물내 주택	393	151	-241
계	10,959	13,884	2,924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수 있는 다가구 단독주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일 것이다. 다가구 단독주택은 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이 많지 않은 청년층의 주된 거주주택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2010년 청년층의 주된 거처로 주택 외 거처의 비율이 높게 증가하였다. 주택 외 거처는 오피스텔, 숙박업소 객실, 기숙사 및 사회 특수시설, 판잣집 또는 비닐하우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기간 동안 오피스텔 공급의 증가에 따라 청년층의 오피스텔 거주 비율은 2000년 0.5%에서 2010년 4.4%로 증가하였다.

가구특성 변화의 특징 중 하나가 1인가구의 증가이므로 1인가구의 주거특성을 주택점유형태와 거처의 종류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표 VIII-15>는 2010년 1인가구의 연령구간별 주택점유형태를 보여준다. <표 VIII-12>에서 제시하였던 전체 가구의 주택점유형태 분포와 비교해 보면, 1인가구의 자가 비율은 전체 가구의 자가 비율보다 낮고 임차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자가 비율이 54.2%인 반면, 1인가구의 자가 비율은

31.9%이다. 1인가구의 보증부월세와 월세·사글세 비율은 전체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 가구의 보증부월세 비율은 18.2%인 반면 1인가구의 보증부월세 비율은 34.4%로 1.9배 높고, 월세·사글세 비율은 전체 가구에 비해 2.4배 높다. 이러한 패턴은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1인가구의 자가 비율이 전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임차 비율이 높은 패턴은 가구규모의 영향뿐 아니라 가구의 경제적 조건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표 VIII-15 1인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주택점유형태, 2010 (%)

가구주 연령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	무상	계
전체	31.9	21.8	34.4	8.1	3.8	100.0
35세 미만	8.5	26.4	52.4	9.7	3.1	100.0
35-50세 미만	20.8	25.4	41.1	8.4	4.2	100.0
50-65세 미만	39.7	18.8	27.9	9.3	4.4	100.0
65세 이상	63.4	15.5	12.5	4.9	3.7	100.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표 VIII-16>은 2010년 1인가구의 연령구간별 거처종류를 보여준다. <표 VIII-13>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 가구에 비해서 1인가구의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아파트 거주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비율이 전체 가구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경우 약 40%의 가구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인가구는 59.4%가 단독주택에 거주



하고 있다. 또한 전체 가구의 2.0%가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고 있으나 1인가구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5.8%이다. 연령구간별로 살펴보면 청년층, 중년층 1인가구의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전체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 1인가구 중 10% 이상이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VIII-16 1인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거처종류, 2010 (%)

가구주 연령	단독	아파트	연립/다세대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택 외 거처	계
전체	59.4	25.5	7.7	1.7	5.8	100.0
35세 미만	61.5	18.6	7.1	1.7	11.1	100.0
35-50세 미만	51.9	31.1	8.7	1.9	6.5	100.0
50-65세 미만	55.3	30.9	8.7	2.2	3.0	100.0
65세 이상	67.2	24.1	6.6	1.0	1.1	100.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표 VIII-17〉은 2010년을 기준으로 1인가구와 전체 가구의 거처종류 및 점유형태별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가구에 비해 1인가구는 단독주택에 보증부월세나 월세·사글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아파트에 자가나 전세로 거주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1인가구의 22.8%는 단독주택에 보증부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6.1%는 월세나 사글세로 거주하고 있다. 반면, 전체 가구의 경우 단독주택에 보증부월세로 거주하는 비율은 10.2%이며, 월세나 사글세로 거주하는 비율은 2.5%이다. 전체 가구의 29.9%가 아파트에 자가로 거주하고 있으며, 10.2%는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반면, 1인

가구의 경우 아파트에 자가로 거주하는 비율은 11.3%이고, 전세로 거주하는 비율은 6.1%이다.

표 VIII-17 1인가구와 전체 가구의 거처종류 및 주택점유 형태별 비율, 2010 (%)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사글세	무상
1인가구					
단독	16.8	11.8	22.8	6.1	1.9
아파트	11.3	6.1	6.5	0.4	1.2
연립/다세대	3.1	2.4	1.7	0.2	0.3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0.3	0.3	0.6	0.4	0.2
주택 외 거처	0.5	1.3	2.8	0.9	0.3
전체 가구					
단독	17.6	8.1	10.2	2.5	1.1
아파트	29.9	10.2	5.6	0.3	1.1
연립/다세대	5.8	2.7	1.2	0.2	0.2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0.5	0.2	0.3	0.1	0.1
주택 외 거처	0.3	0.5	0.9	0.3	0.1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 가구의 경제적 능력과 주거소비

주택은 값비싼 재화이다. KB 국민은행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3월 가구의 중위소득 대비 중위 주택매매가격 배수(PIR: Price to Income Ratio)는 4.8이며, 동 분기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59.6%임을 고려하면 중위소득 대비 중위 주택전세가격 배수는 2.9로 계산된다. 따라서 가구 연소득의 5배 정도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3배 정도의 주택을 전세형태로 임차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앞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가구주 연령이나 가구원수와 같은 인구학적

요인들과 주택점유형태, 거처의 종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물론 가구주 연령은 가구의 생애 주기와 관련되어 있어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가구의 경상소득과 순자산이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대변하는 핵심변수로 설정하여 가구특성별 경제적 능력과 주거소비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VIII-18〉은 주거면적과 자가 비율 등의 주거수준 지표와 가구 경상소득 및 순자산 등의 경제적 능력을 가구주 연령구간별로 보여주고 있다.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 비율은 높고 거주주택의 주거면적은 가구주 연령이 65세 미만까지는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가구의 경상소득과 순자산 수준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주택은 소득이나 자산수준이 높으면 소비량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구주 연령이 50세 미만까지는 연령구간이 높을수록 경상소득과 순자산이 동시에 많기 때문에 가구의 주택구입능력과 주거면적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주거면적과 자가 비율이 증가한다. 가구주 연령이 50-65세 미만의 구간에서는 가구주의 퇴직 등에 따라 경상소득은 35-50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나 순자산이 많기 때문에 주거면적과 자가 비율이 높을 수 있다. 소득은 적으나 순자산이 많아 자가 비율이 높은 현상은 주택구입 시 자산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한국의 현실을 대변한다. 65

세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주거면적은 작지만 자가 비율은 높다. 경상소득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순자산 규모는 35-50세 미만 가구보다 많기 때문에 높은 자가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II-18 가구주 연령별 주거면적, 자가 비율, 경상소득 및 순자산 지수, 2010

	전체	35세 미만	35-50세 미만	50-65세 미만	65세 이상
주거면적(m <sup>2</sup> )					
전체 가구	76.6	59.3	74.2	84.3	79.9
1인가구	54.1	42.6	44.5	58.2	61.1
자가 비율(%)					
전체 가구	54.2	20.8	49.3	66.1	74.8
1인가구	31.9	8.5	20.8	39.7	63.4
경상소득 지수					
전체 가구	100.0	91.5	122.8	116.7	42.9
1인가구	36.3	61.5	58.1	37.0	16.5
순자산 지수					
전체 가구	100.0	43.6	91.7	135.5	98.0
1인가구	38.0	23.1	39.9	39.9	43.3

주: 1) 경상소득 및 순자산 지수는 각각 2011년 자료로서 전체 가구의 경상소득 및 순자산의 평균을 100으로 하여 계산함. 순자산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전세와 보증부월세 보증금 포함), 기타 자산의 합에서 부채를 제한 값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가계금융조사」, 원자료, 2011.

한편, 1인가구의 주거수준과 경제적 능력이 전체 가구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가구의 경제적 능력은 전체 가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과 평균 순자산을 100으로 볼 때 1인가구의 경상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36% 수준이며, 순자산은 38% 수준이다. 이러한 경제적 능력의 차이로 인해 1인가구의 주거수준은 전체 가구에 비해 낮다. 주거면적은 가구규모에 따른 면적 소요를 일부



반영하고 있기는 하나 전 연령구간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22.5㎡ 작으며, 자가 비율은 약 22%p 낮다.

### 맺음말

이 글에서 우리는 가구특성과 주거소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가구특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되어 왔으나 가구의 고령화와 소규모화가 주된 가구특성 변화 요인이라는 점에서 가구주 연령과 가구원수를 중심으로 주거소

비 실태를 분석하였다. 가구는 주택이 제공하는 주거공간의 사용 주체이므로 그 변화에 따라 주거소비도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택은 비싼 재화이므로 가구의 경제적 능력이 또한 주거소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구특성 변화가 주거소비의 장기적인 큰 흐름을 이끌어 나가겠지만 주택시장을 둘러싼 제반 경제적 요인들, 특히 소득, 자산 등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요 영역일 것이다.





## 04

## 교통복지실태

이상민(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요 약

- 전국의 교통약자 인구는 2011년 현재 약 1,241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약 24.4%에 달한다. 향후 교통약자는 연평균 약 1.8%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2030년에는 교통약자가 1,91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고령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교통약자의 교통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 버스보급률은 12%에 불과하다.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등 특별공급수단은 법정 기준 대수의 57.2%에 그치고 있고 이 또한 지역별 편차가 크다.
- 버스의 노선당 서비스 면적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3km<sup>2</sup>인 반면에 도농 복합도시와 농촌도시의 경우에는 각각 5km<sup>2</sup>와 10km<sup>2</sup>이다. 버스노선이 없는 마을(행정 구역 리, 동)도 1천 곳 이상에 달하고 있다.
- 가구소득 1분위의 공공교통 지출비중은 교통비 지출 총액의 약 51.5%나 되어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공공교통의 공급 및 비용경감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

최근 교통수단 및 시설 공급의 형평성, 교통시설의 무장애화,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권의 보장 등 보편적인 이동권 서비스 등과 같은 교통복지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가하고 교통약자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교통복지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교통복지란 교통약자들에게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신체적, 지역적, 경제적 차별을 최소화하고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약자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에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자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로 정의된다. 교통약자들에 대한 교통복지서비스는 신체적, 지역적, 경제적 교통복지서비스로 구분된다. 신체적 교통복지는 장애 등의 신체적 결함으로 교통서비스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의미하고, 지역적 교통복지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서비스의 공급이 지역적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지향하며, 경제적 교통복지란 경제적 능력에 따른 소외 없이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서비스 공급의 부재로 인한 사회경제적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글에서는 향후 고령화의 심화와 이동권 보장 요구 증대에 대비하는 대중교통 공급과 선진 교통복지체계의 구현을 위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신체적, 지역적, 경제적 교통복지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교통약자의 현황과 추이

〈표 VIII-19〉는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의 전국 교통약자 추이를 집단별로 보여준다. 전체 교통약자 인구는 고령자의 급격한 증가에 힘입어 연평균 약 0.8%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1년 현재 약 1,241만 명으로 2011년 전국 인구 5,073만 명 중 약 24.4%를 차지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증가 추세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4.1%와 3.0%로 두드러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임산부와 어린이의 증가율은 감소 추세에 있다.

표 VIII-19 교통약자 유형별 인구와 증가율, 2007-2011  
(1,000명)

연도	총 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2007	12,014	1,389	4,861	493	2,955	2,316
2008	12,080	1,448	5,069	466	2,807	2,290
2009	12,168	1,532	5,268	445	2,660	2,263
2010	12,291	1,557	5,506	470	2,458	2,300
2011	12,410	1,561	5,701	471	2,347	2,328
연평균 증가율(%)	0.8	3.0	4.1	-1.1	-5.6	0.1

주: 1) 임산부 인구는 인구동태통계의 출생인구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2) 영유아 동반자 인구는 영유아(0-4세) 인구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출처: 보건복지부, 「2011년 장애인 현황」, 2012.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안정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교통약자의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장래 교통약자 인구는 2012년 약 1,255만 명(25.1%)에서 2030년에 약 1,913만 명(36.7%)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추계된다. 고령자 중 교통약자의 수는 2012년 약 591만 명(11.8%)에

서 2030년 약 1,280만 명(24.5%)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임산부와 영유아동반자의 수는 저출산 등에 기인하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VIII-20). 따라서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중심의 교통복지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II-20 교통약자 유형별 인구추계, 2012-2030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20	2025	2030
인구(1,000명)								
총 교통약자	12,545	12,767	12,988	13,232	13,487	14,674	16,867	19,126
장애인	1,563	1,566	1,568	1,570	1,572	1,580	1,590	1,601
고령자	5,912	6,162	6,412	6,654	6,897	8,133	10,402	12,798
임산부	464	458	451	445	438	418	395	372
어린이	2,285	2,293	2,266	2,267	2,312	2,284	2,245	2,219
영유아 동반자	2,321	2,289	2,291	2,297	2,268	2,259	2,234	2,136
비율(%)								
총 교통약자	25.1	25.4	25.8	26.1	26.5	28.5	32.5	36.7
장애인	3.1	3.1	3.1	3.1	3.1	3.1	3.1	3.1
고령자	11.8	12.3	12.7	13.1	13.6	15.8	20.0	24.5
임산부	0.9	0.9	0.9	0.9	0.9	0.8	0.8	0.7
어린이	4.6	4.6	4.5	4.5	4.6	4.4	4.3	4.3
영유아 동반자	4.6	4.6	4.5	4.5	4.5	4.4	4.3	4.1

주: 1) 비율은 총 인구 중 해당 교통약자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2) 교통약자 인구 추계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기준으로 예측한 것임. 장애인 인구는 인구성장률과 등록장애인 현황을 고려하였으며,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중 영유아(0-4세), 어린이(5-9세), 고령자(65세 이상) 인구는 제외하였음.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인구는 인구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임산부 인구는 출생인구를 적용하여 역으로 추정하였음.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 교통복지서비스 실태

교통복지서비스는 두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전제로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동등성의 원칙, 즉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이동성(대중교통)을 확보해 주는 것이고 둘째, 최저서비스 공급의 원칙, 즉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교통서비스 이용 및 접근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표 VIII-21〉은 교통복지서비스의 대상과 서비스 제공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통복지서비스는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수단 및 시설의 공급과 오지, 벽지 등 교통취약 지역에 대한 교통공급과 아울러 빈곤층이 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제공되고 있다.

표 VIII-21 교통복지의 대상과 서비스

구분	대상	서비스
신체적 교통복지	장애인, 고령자 등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등
지역적 교통복지	군 지역을 포함한 교통취약 지역	인구과소지역의 교통서비스 공급(벽지명령노선 등) 및 수요 응답형교통서비스 등
경제적 교통복지	빈곤층 등 기초생활 수급자	형평적 교통요금 부과, 교통비 지원 및 할인서비스 등

### 신체적 교통복지서비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들이 필요로 하는 이동 수단과 시설의 확보가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하여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시작하였고 2012년 말 현재 저상버스는 4,720대로 전체 시내버스(31,044대)의 15.2% 수준에 달하고 있다(표 VIII-22). 재정자립도가 좋은 서울시의 경우,

저상버스의 비율이 25.6%에 달하나 그 외 광역 시도의 경우는 10% 내외로 계획목표치에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 저상버스 1대당 교통약자 인구수를 살펴보면,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5곳은 1만 명을 초과하고 있어 대폭적인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표 VIII-22 저상버스 보급대수 및 보급률, 2004-2012

연도	보급대수	보급률(%)
2004-2006	586	2.0
2007	890	3.1
2008	1,390	4.8
2009	2,368	8.2
2010	3,206	11.0
2011	3,899	12.0
2012	4,720	15.2

주: 1) 보급률은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의 비율임.

2) 2012년은 국토교통부 내부자료임.

출처: 국토교통부,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2012.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통일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은 2010년에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인구비율에 의해 도입되던 기준이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중 1급·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변경되었다.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 총 법정기준대수는 2009년 2,620대에서 2010년 2,785대로 소폭 증가하였고 인구 10만 이하의 소도시가 도입의무를 지니게 되어, 전반적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의 지역적·계층적 형평성을 제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별교통수단은 2010년 12월 기준으로 법정 기준대수의 47.3%를 보급하고 있으며, 보급률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



역과 경상남도에 집중되어있고, 그 외 지역의 보급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표 VIII-23).

표 VIII-23 시도별 특별교통수단 보급대수와 보급률, 2010

시도	법정기준 대수(2009)	법정기준 대수(2010)	보급대수 (10,12기준)	보급률 (%)
계	2,620	2,785	1,318	47.3
서울	80	409	300	73.3
부산	80	205	100	48.8
대구	80	141	60	42.6
인천	80	145	104	71.7
광주	80	78	30	38.5
대전	80	84	60	71.4
울산	80	53	20	37.7
경기	780	562	176	31.3
강원	240	120	23	19.2
충북	110	109	61	56.0
충남	150	146	42	28.8
전북	140	142	77	54.2
전남	80	159	24	15.1
경북	280	188	54	28.7
경남	260	205	182	88.7
제주	20	39	5	12.8

주: 1) 법정기준 대수(2009)는 각 시·도 통계연보(2009년)의 총인구를 활용함.

2) 보급률은 법정기준대수 대비 실제 보급대수의 비율임.

출처: 국토해양부(2010.12)

## 지역적 교통복지서비스

대중교통은 대부분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도시 외곽과 농어촌, 벽지 및 오지 등 인구저밀도 지역의 주민들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구저밀도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운행시간은 길고 수익성이 낮은 탓에 운행횟수가 적고 배차간격이 길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적절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버스노선수 대비 인구, 면적, 인구밀도를 도시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 인구 100만 명 이상 경제중심도시와 100

만 명 미만 지방중심도시의 버스노선당 인구는 각각 14,766명과 2,726명으로 다른 도시들보다 높으나 버스노선당 면적은 모두 3km<sup>2</sup> 이하로 낮은 수준이다. 이 정도라면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 버스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도농복합도시와 농촌도시의 버스노선당 인구는 각각 1,694명과 725명인데 반해 면적은 각각 5km<sup>2</sup>와 10km<sup>2</sup>로 대도시 및 지방중심 도시에 비해 수송해야 할 인구는 적으나 운행 면적은 훨씬 더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VIII-24). 버스노선의 운행이 없는 마을(행정구역 리, 동)도 1천 곳 이상에 달하고 있어 농어촌 등 인구과 소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공급이 필요하다.

표 VIII-24 도시유형별 평균 버스노선수와 노선 당 인구 및 면적, 2010

도시유형	평균 버스노선수	노선 당 인구 (1,000명/노선)	노선 당 면적 (km <sup>2</sup> /노선)
경제중심도시 (인구 100만 이상)	222	14.8	2.85
지방중심도시 (인구 100만 미만)	175	2.7	2.90
도농복합형 도시	124	1.7	5.06
농촌도시	69	0.7	10.01

주: 1) 각 통계치들은 각 도시유형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들의 평균값임.  
대중교통노선이 없는 도시들은 제외함.

출처: 교통안전공단,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연구」, 2011.

이러한 농어촌 대중교통 과소지역의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정부는 운송사업자에게 벽지노선과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명령하고, 운행명령을 이행하면 손실을 보상해 주고 있다.



벽지명령노선은 1981년부터 1995년까지 3차에 걸친 ‘벽지노선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지정, 운영되어 왔다. 이후 벽지명령노선 신설은 수요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되어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돕고 있으며, 5개년 계획의 마지막 기간인 제3차 계획기간까지 8,442마일에 2,217개의 노선이 개설되었다(표 VIII-25).

표 VIII-25 벽지명령노선 개발계획(1-3차)에 따른 버스노선 개설실적, 1981-1995

	노선수	마을수	수해인구 (1,000명)
1980년까지	804	4,028	3,025
1차 기간(1981-1985)	568	1,959	710
2차 기간(1986-1990)	464	1,371	330
3차 기간(1990-1995)	381	1,084	180
계	2,217	8,442	4,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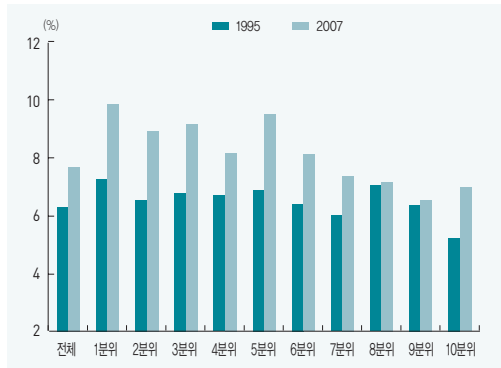
출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1995 버스통계편람」, 1996.

### 경제적 교통복지서비스

경제적 측면에서의 교통복지정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교통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교통비 부담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다. 「가계동향조사」의 1995년과 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교통비 지출구조를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소득층(소득 8-10분위)보다 저소득층(소득 1-3분위)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고,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하였음이 밝혀졌다(그림 VIII-5).

가구의 교통비 지출은 다시 개인교통과 공공교통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 바, 각각의 지출비용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1분위에서의 공

그림 VIII-5 가구 소득분위별 교통비 지출 비율, 1995,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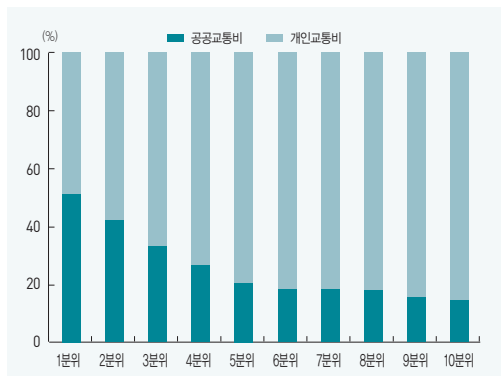
주: 1) 가구는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임.

2) 교통비 지출 비율은 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교통비 지출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공교통비 지출비중은 총 교통비 지출의 약 51.5%인데 반해 10분위의 경우는 14.3%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개인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그림 VIII-6).

그림 VIII-6 가구 소득분위별 공공 및 개인 교통비 구성 비율, 2010



주: 1) 공공교통비에는 철도운송, 육상운송(버스, 택시 등), 기타 운송, 기타 교통 관련 서비스가 포함됨.

2) 개인교통비에는 자동차 구입, 기타 운송기구(오토바이, 자전거 등) 구입, 운송기구 유지 및 수리, 운송기구 연료비, 기타 개인교통 서비스가 포함됨.

3)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2010)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2010)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정책 분석을 위한 경제모형 개발 연구: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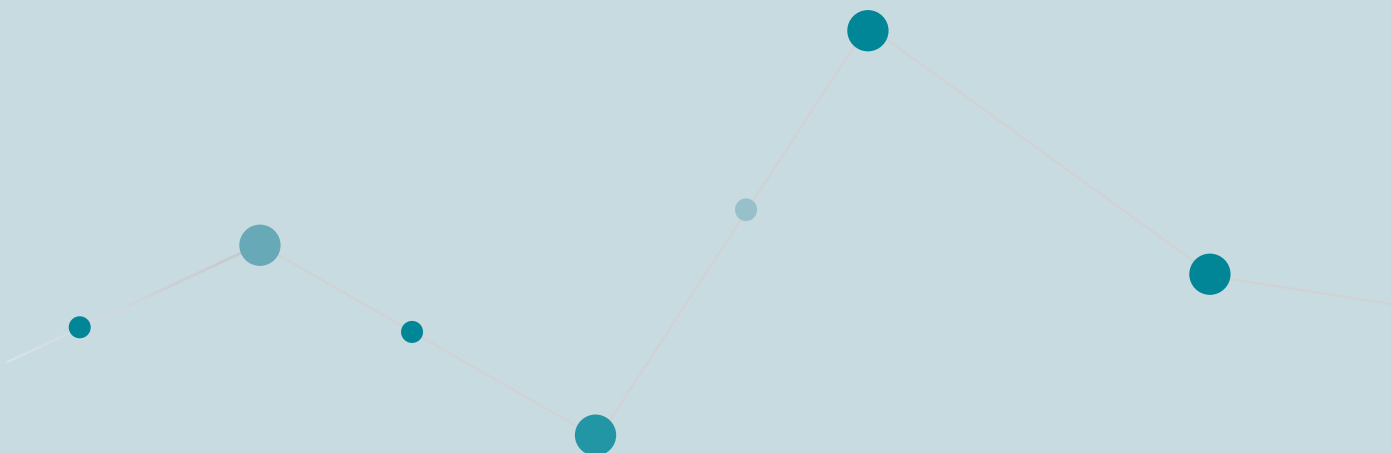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2012년 5월부터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광역버스), 도시철도(KTX 포함),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등의 대중교통비에 대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을 공제해 주는 대중교통비용 소득 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하는 경우 공제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한도도 400만 원(일반 신용카드 등 300만 원 포함)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대중교통비용 소득공제제도가 저소득층을 비롯한 시민들의 경

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시켜 주고는 있으나 의료, 교육, 주거 등 다른 복지분야와 비교할 때 아직까지도 저소득층에 대한 교통복지정책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 제도를 통한 연간 혜택은 1~2만 원에 불과하고, 4인 가족 기준 연간 총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본래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 효과가 없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적극적 인프라 투자,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소득 및 세액 공제 확대, 대중교통 바우처 제도 등의 교통복지정책이 요구된다.



# [ KOREAN SOCIAL TRENDS 2013

## 한국의 사회동향 2013






# STATISTICS KOREA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 IX 환경 Environment

- 01 환경 영역의 주요 변화 김중호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44](#)
  - 02 기후변화 대응행태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현황 조영탁 | 한밭대학교 [252](#)
  - 03 화학물질 노출실태 신용승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59](#)
- 



## 01

환경 영역의  
주요 변화

김종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요 약

- 한국은 1990~20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1위이며, 2010년 현재는 6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이다.
- 한국은 2010년 현재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 객관적인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수준이 개선되면서 주관적인 체감도 역시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 보호구역은 현재 전체 국토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 환경보호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출을 대표하는 환경예산과 경제 전체의 지출을 대표하는 환경보호지출 모두 조금씩이나마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1992년 세계환경정상회의의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성이 사회발전의 핵심 요인이라는 통념이 확산되면서 환경 문제는 사회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서 핵심적인 고려사항 중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 환경문제의 정책적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왔다. 1967년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 공해계에서 시작한 환경행정 조직은 1980년에 보건사회부 외청인 환경청으로 발전하였으며, 1990년에는 장관급 부서인 환경처로 승격했다가 1994년에 환경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한편 2000년에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환경행정 조직의 변화와 발전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결과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국내 환경문제의 변화 과정과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환경압력(오염물질 배출과 자연자원 이용으로 세분), 환경상태(생활환경과 생태환경으로 세분), 환경관리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주요 지표를 이용하여 해당 영역의 변화 양상과 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 오염물질 배출

현재 전지구적으로 가장 크고 보편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중요한 환경문제가 기후변화(지구온난화라고도 함)이다. 온실효과를 일으킴으로써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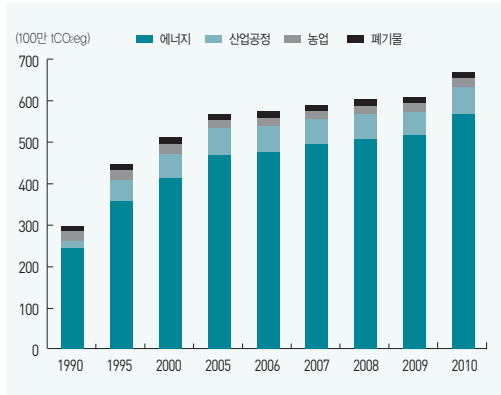
온실가스라고 하며, 현재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의 6개 기체가 온실가스로 규정되어 있다. 6개 온실가스 중에서 동일 중량 대비 온실 효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구온난화지수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낮지만,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체 온실효과의 80% 이상이 이산화탄소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1990~2010년 동안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1990년 약 3억 톤(이산화탄소 환산 기준)이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8년에 6억 톤을 넘겼으며 2010년에는 약 6억 7천만 톤까지 늘어났다. 2010년 현재 GDP 기준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5위인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2위(OECD 국가 중 6위)이다. 1990~20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4.15%(1990년 대비 125.9% 증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원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된다. 1990~2010년 동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주도한 것 역시 에너지 부문이며, 동 기간 동안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35.3% 증가하였다(그림 IX-1).

온실가스가 전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현실과는 달리, 지역의 대기질은 대기오염물질에 의해 결정된다.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로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있다.

그림 IX-1 부문별 온실가스배출량, 1990~2010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2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보고서」, 2013.

산성비를 야기하는 황산화물은 정부의 저황유정책에 힘입어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산성화 물질이면서 오존을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은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증가 추세가 꺾이게 된다. 반면 호흡기 질환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는 지속적으로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오존을 발생시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역시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표 IX-1).

표 IX-1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00~2010

(톤)

연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2000	490,761	1,122,844	61,719	706,915
2001	487,734	1,219,020	67,368	734,814
2002	474,084	1,242,265	65,100	741,647
2003	469,145	1,362,141	66,357	758,455
2004	446,804	1,377,526	62,491	797,240
2005	408,462	1,306,724	67,343	756,421
2006	446,488	1,274,969	64,795	794,158
2007	402,525	1,187,923	98,143	874,699
2008	417,980	1,045,104	110,797	857,856
2009	387,727	1,014,318	103,735	851,162
2010	401,741	1,062,210	116,808	866,358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수질오염을 야기하는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분뇨의 경우 2000년대 중반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그 후에는 일정 수준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생활하수의 경우 1인당 1일 발생량이 1990년 283ℓ에서 2005년 350ℓ로 동기간 동안 24% 정도 증가하였으나 그 후에는 350ℓ 이내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폐수 발생량은 200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표 IX-2).

표 IX-2 하수, 폐수 및 가축분뇨 발생량, 1990-2010

연도	하수 발생량 (1,000m <sup>3</sup> /일)	1인당 하수발생량 (ℓ/일)	산업폐수 발생량 (1,000m <sup>3</sup> /일)	가축분뇨 발생량 (1,000m <sup>3</sup> /일)
1990	12,323	283	4,106	128
1995	14,976	332	8,741	168
2000	15,441	328	-	125
2005	16,833	350	7,991	138
2006	16,920	350	8,682	137
2007	16,745	345	9,181	154
2008	17,113	350	6,215	128
2009	16,681	339	5,352	136
2010	16,111	326	4,557	136

주: 1) '-'은 자료 없음.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폐기물은 크게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되며, 일반폐기물은 다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발생량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생활폐기물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도 생활폐기물의 변화와 거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사업장폐기물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0년 이후에는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건설폐기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일종의 유해폐기물인 지정폐기물은 발생량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이다(표 IX-3).

표 IX-3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1995-2010 (톤/일)

연도	일반폐기물		지정 폐기물
	생활	사업장	
1995	47,774	95,823	4,445
2000	46,438	180,230	7,615
2005	48,398	247,325	8,634
2006	48,844	270,084	10,026
2007	50,346	286,812	9,511
2008	52,072	307,224	9,594
2009	50,906	306,955	9,060
2010	49,159	315,995	9,488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 자연자원 이용

2010년 현재 GDP 기준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5위이며, 에너지 소비는 10위, 석탄소비는 7위, 석유소비는 9위, 전력소비는 9위, 원유 수입은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8위 수준이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5.1TOE<sup>1)</sup>로 미국의 7.1TOE보다는 낮지만 영국(3.3TOE), 일본(3.9TOE), 독일(4.0TOE), 프랑스(4.0TOE) 등 주요 선진국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OECD 평균은 4.4TOE).

1) 석유환산톤(tonnage of oil equivalent)의 약자로 석유 1톤을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열량을 나타내는 단위임.



한국의 최종에너지소비량은 1990년 이후 연평균 9.6%씩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최종에너지소비량은 1990년 7,510만 TOE에서 2011년 2억 586만 TOE로 174% 증가하였고, 1인당 최종에너지소비 역시 동 기간 동안 137% 증가하였다. 전력소비는 에너지소비보다 더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1990년 94,383GWh에서 2011년에 455,070GWh로 5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1인당 전력소비 역시 동 기간 동안 4배 이상 증가하였다(표 IX-4).

표 IX-4 최종에너지소비량 및 전력소비량, 1990-2011

연도	최종 에너지 소비량 (1,000TOE)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TOE)	전력 소비량 (GWh)	1인당 전력 소비량 (KWh)
1990	75,107	1.75	94,383	2,202
1995	121,962	2.70	163,270	3,640
2000	149,852	3.19	239,535	5,067
2005	170,854	3.55	332,413	6,883
2006	173,584	3.59	348,719	7,191
2007	181,455	3.73	368,605	7,607
2008	182,576	3.73	385,070	7,922
2009	182,066	3.70	394,475	8,092
2010	195,587	3.96	434,160	8,883
2011	205,864	4.14	455,070	9,142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 년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각 년도.

물은 에너지와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자원이다. 에너지와 달리 물은 국내에서 자급이 가능한 자원이다. 수자원 이용량은 1990-2007년 동안 34% 증가하였다. 동 기간 동안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하천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인 유지용수로 117% 증가하였으며, 생활용수도 79% 증가하였다. 반면, 전체

수자원 이용량 중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수는 8% 수준의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표 IX-5).

한편 상수도를 통한 급수량은 1990년 1일 1,242만m<sup>3</sup>에서 2011년 1,610만m<sup>3</sup>로 30% 증가하였으며, 1인당 급수량은 1990년 1일 369ℓ에서 2011년 335ℓ로 9% 감소하였다.

표 IX-5 수자원 용도별 이용량, 1990-2007 (억 m<sup>3</sup>/년)

연도	총 이용량	생활 용수	공업 용수	농업 용수	하천 유지 용수
1990	249	42	24	147	36
1994	301	62	26	149	64
1998	331	73	29	158	71
2003	337	76	26	160	75
2007	333	75	21	159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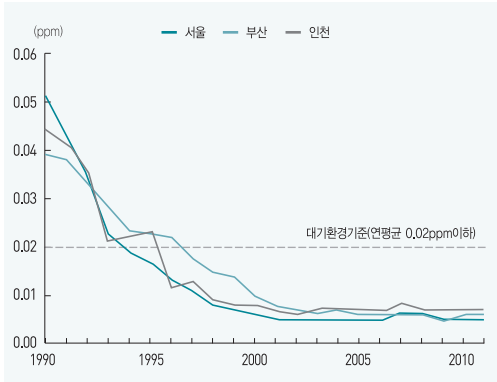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 2011.

## 생활환경

생활환경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다. 아황산가스는 연료에 함유된 황성분에 의해 발생하는데, 1990년 이후 저황유 공급 및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등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 오염이 가장 심했던 서울시의 대기질은 아황산가스 기준으로 1990년 연평균 0.051ppm에서 2000년 연평균 0.006ppm으로 대폭 개선되었으며(그림 IX-2), 이때부터 전국 주요 도시들이 모두 대기환경기준(연평균 0.02ppm 이하)을 충족시키고 있다. 하지만 1995년부터 측정을 시작한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그림 IX-2 주요 도시의 아황산가스 농도, 1990-2011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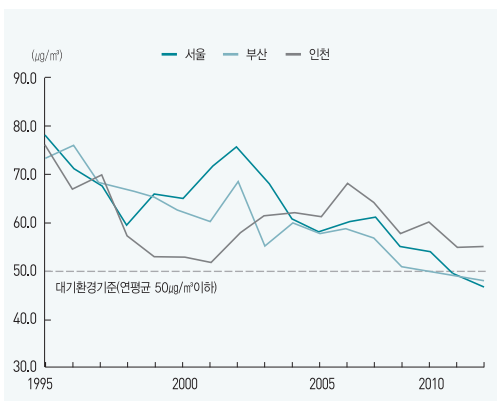
여러 도시들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그림 IX-3). 한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인한 대표적인 2차 오염물질인 오존의 경우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평균 농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는 기상여건에 따라 많이 좌우되어 해마다 변동 폭이 크다.

1991년과 1994년에 낙동강 폐놀오염사고와 유기용제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등 기존의 오염물질 사후처리와 환경오염사고 대응위주의 물관리정책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유역단위 차원의 사전예방적이고 선진적인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1996년에 범정부 차원의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이 수립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4대강 수계법'도 마련되었다. 이에 의거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변구역지정, 토지매수와 물이용부담금에 의한 수계관리기금 조성, 수계관리위원회 운영 등이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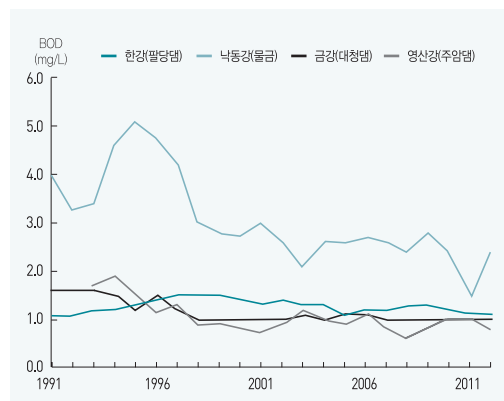
이러한 정부 정책에 힘입어 4대강 수질오염도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질 상태가 좋지 않은 영산강의 경우 하류 지역은 '보통'보다 좋지 않은 오염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4개강의 주요 상수원 취수구역(팔당, 물금, 대청, 주암)은 낙동강 물금 구역을 제외하고 BOD 2mg/l 이하의 '좋음' 수준을 달성하고 있다(그림 IX-4).

그림 IX-3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 1995-2011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그림 IX-4 4대강의 수질오염도(BOD), 1991-2012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생활주변의 환경상태가 개선되면서 국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도 역시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 대기오염의 경우 1997년에 1.7%만이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던 것이 2010년 이후에는 그 비율이 10%를 넘어섰다. 수질오염의 경우에도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1997년 2.9%에서 2008년 이후에는 10%를 넘어섰다. 특히 두드러진 점은 대기와 수질 모두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의 경우 ‘나빠졌다’고 느끼는 비율이 1997년 70.0%에서 2005년 34.2%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2012년에는 그 비율이 11.3%로 다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수질의 경우에도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1997년 64.0%에서 2005년 27.3%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2012년에는 그 비율이 8.4%로 다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표 IX-6).

한편 대기와 수질 외에 토양오염(쓰레기로 인한 오염), 소음공해, 녹지환경(주위 자연환경 훼손)

표 IX-6 거주지역 환경오염 수준 변화에 대한 체감, 1997-2012 (%)

연도	대기오염			수질오염		
	좋아짐	변화 없음	나빠짐	좋아짐	변화 없음	나빠짐
1997	1.7	28.3	70.0	2.9	33.1	64.0
2001	2.3	45.0	52.6	3.1	51.4	45.4
2005	5.9	59.9	34.2	7.5	65.3	27.3
2008	9.3	51.7	39.1	10.4	58.2	31.4
2010	11.3	74.8	13.9	11.4	78.0	10.6
2012	13.5	75.2	11.3	12.8	78.9	8.4

주: 1) 설문문항은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오염(또는 수질오염)은 1년 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2)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항목도 대기나 수질의 경우와 유사하게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나빠졌다’는 응답 비율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 생태환경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임야나 농경지 면적은 줄어들고 도시용지는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그만큼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왔다. 정부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등으로 지정하여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을 제한함으로써 훼손을 방지하고 있다.

2011년 말 현재 생태·경관보전지역 36개소(354.5km<sup>2</sup>), 습지보호지역 32개소(336.6km<sup>2</sup>), 국립공원 20개소(6,580.8km<sup>2</sup>), 특정도서 177개소(10.68km<sup>2</sup>) 등 전 국토의 10% 정도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국제적인 보호지역으로, 현재 대암산 용늪, 우포늪, 순천만 갯벌, 한강밤섬 등 총 18개 지역이 람사르협약(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에 의한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어 있고, 설악산, 백두산, 한라산 등이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표 IX-7).

한편 「환경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수는 약 10만 종 정도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 문헌조사에 의해 밝혀진 생물종수는 동물 21,785종, 식물 9,893종, 균류·지의류 4,103종, 원생생물 1,374종, 원핵생물 856종 등



표 IX-7 보호구역 지정 현황, 2012

지정현황	
생태·경관 보전지역	• 총 36개소, 354.52km <sup>2</sup> • 환경부(9개소), 국토해양부(4개소), 시도 지정(23개소)
습지보호지역	• 총 32개소, 336.61km <sup>2</sup> • 환경부(18개소), 국토해양부(11개소), 시도 지정(3개소)
특정도서	• 독도 등 177개소, 약 10.68km <sup>2</sup>
야생 동·식물 특별보호구역	• 총 1개소, 진양호 수달서식지 약 26.2km <sup>2</sup>
자연공원	• 총 79개소(면적 7,858km <sup>2</sup> ): 국립 20, 도립 31, 군립 28
문화재 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 1,626개(2010년 기준)
보전임지 (산림보전지역)	• 49,473km <sup>2</sup> (총 산림면적의 77%, 2011년 기준)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 405개소(893.28km <sup>2</sup> )
백두대간 보호지역	• 6개도 32개 시군 2,634km <sup>2</sup> (2005년 9월 고시) • 범위: 백두산-지리산(1,400km, 남한 684km) • 핵심구역(1,699km <sup>2</sup> ), 완충구역(935km <sup>2</sup> )
개발제한구역	• 3,889km <sup>2</sup> (2011년 기준)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12.

총 38,011종이다. 이는 비슷한 생물지리학적 조건을 가진 인접국가나 선진외국의 생물종수와 비교할 때 적은 편이지만, 자생생물종 등에 대한 조사·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관리

정부정책에서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엿볼 수 있는 지표 중의 하나가 환경예산의 규모와 비율이다.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확대 개편된 직후인 1995년 환경부 예산은 6,729억 원으로 전체 정부예산 대비 0.9%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환경부 예산과 타 부처의 환경 관련 예산을 합한 환경분야 예산은 1조 7,801억 원으로 환경

부 예산의 3배 가까운 수준이었다(표 IX-8).

정부예산 대비 환경부 예산의 비율은 조금씩 이나마 꾸준히 증가해왔으며(2005년에 행자부의 수질보전지방양여금이 환경부 예산으로 편입되면서 외형상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2011년에는 처음으로 정부예산 대비 2% 수준을 넘었다. 하지만 환경분야 예산의 비중은 2000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예산과 환경분야 예산의 차이가 현재에는 상당히 축소되었다.

표 IX-8 환경예산, 1995-2011

연도	환경분야 예산		환경부 예산	
	금액 (억 원)	정부예산 대비 비율 (%)	금액 (억 원)	정부예산 대비 비율 (%)
1995	17,801	2.39	6,729	0.90
2000	30,581	2.44	13,023	1.04
2005	35,578	2.12	28,557	1.70
2006	33,978	1.94	29,992	1.71
2007	32,837	1.86	32,203	1.82
2008	36,568	1.87	35,514	1.82
2009	42,101	1.94	40,282	1.85
2010	46,740	2.07	44,832	1.98
2011	49,741	2.11	47,778	2.03

주: 1) 환경분야 예산에는 환경부 예산과 타 부처의 환경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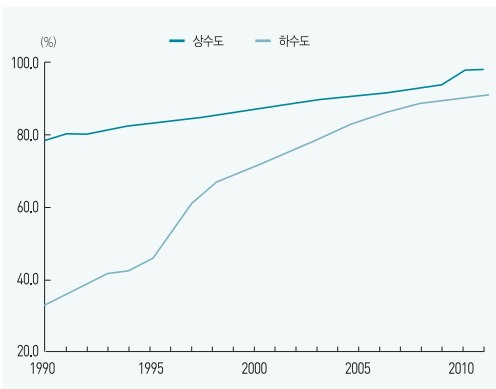
환경예산의 증가와 관련해서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는 것이 상하수도 보급률이다. 상수도 보급률은 1990년 78.4%에서 2010년에는 95%를 넘어섰다. 하수도의 경우에는 1990년 32.9%에서 2010년에는 90%를 넘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





다(그림 IX-5). 하지만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상하수도 보급률 차이가 매우 커서, 2008년까지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 보급률이 모두 50% 미만이었으며, 2011년 현재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 보급률은 각각 64%와 60%이다.

그림 IX-5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 1990-2011



주: 1) 상수도 보급률=급수인구÷총인구×100.  
2) 하수도 보급률=총하수처리인구÷총인구×100.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한편 정부 외에 기업이나 가계도 환경보호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며, 이와 같이 한 나라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을 보여주는 것이 환경보호지출이다. 환경보

호지출 역시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GDP 대비 비율은 대체로 2% 초반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9개 영역으로 구분되는 환경보호지출 영역 중에서 대부분의 지출을 차지하는 것은 폐수, 폐기물, 대기 영역이며, 이 세 영역이 전체 환경보호지출의 80% 정도를 차지한다(표 IX-9). 폐수 영역은 공공 부문이 대부분의 지출을 담당하며, 대기 영역은 반대로 기업 부문이 상당 부분의 지출을 담당하고 있다.

표 IX-9 환경보호지출, 2001-2010

연도	환경보호 지출액 (10억 원)	GDP 대비 비율 (%)	영역별 구성비(%)			
			대기	폐수	폐기물	기타
2001	12,395	1.90	16.2	38.8	28.1	16.8
2002	13,579	1.88	17.0	39.3	27.2	16.5
2003	14,741	1.92	16.2	37.6	27.7	18.5
2004	16,087	1.95	16.5	36.4	27.8	19.2
2005	17,631	2.04	17.1	36.4	26.8	19.6
2006	19,479	2.14	18.9	36.3	25.6	19.2
2007	21,010	2.15	21.4	35.3	24.3	19.0
2008	22,033	2.15	21.5	35.2	24.6	18.7
2009	23,861	2.24	19.0	36.3	24.5	20.2
2010	23,983	2.04	19.8	34.1	26.1	20.1

주: 1) 기타에는 토양·수질, 소음·진동, 생태계·종다양성,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등 6개 영역이 포함됨.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 02

기후변화 대응행태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현황

조영탁(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요 약

- 한국 국민은 대체로 기후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저탄소 제품 구매 등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경제행위는 인식의 정도에 비해 저조하다.
- 한국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저조하고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될 수 없는 화석연료의 폐기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종류별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저조한 이유는 자연여건상 신재생에너지의 부존여건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고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기반도 미약하기 때문이다.
- 불리한 자연적 및 기술적 여건에 더하여 인위적인 전기요금 억제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낮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수적인 금융여건 역시 우호적이지 않다. 또한 실제 보급과정에서 사회적 민원과 복잡한 인허가로 인해 보급에 많은 장애를 안고 있다.

화석연료 소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특정 국가를 넘어 전 지구적 범위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없는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 국민 역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산업화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늦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고, 신재생에너지의 부존여건도 아주 좋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확대, 그리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함께 국내 부존여건과 산업기반 등의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를 평가하고,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이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현황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행태

한국 국민은 대체로 화석연료 소비가 유발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즉 기후변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과 약간 심각하다는 응답을 합한 약 86%의 응답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표 IX-10).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존재하는데,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후변화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저탄소 제품의 구매 여부와 관련하여 거의 70%의 사람들이 별다른 구매행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표 IX-11). 이 역시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는데 경제적인 지불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월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약 80% 정도는 별다른 구매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앞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조차도 저탄소 제품 구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인식과 행위간의 괴리가 원인이지만, 저탄소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탓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탄소표지제도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저탄소 제품 구입에 대해 매우 노력한다고 응답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녹색 전기 요금제도 등과 같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제품의 특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표 IX-10** 교육 및 소득수준별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2011

(%)

	매우 심각 하다	약간 심각 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전체	41.9	43.5	12.4	2.2
교육수준				
초졸 이하	37.9	45.1	14.4	2.6
중졸	38.9	45.1	13.8	2.2
고졸	41.2	43.5	13.0	2.3
대졸 이상	45.1	42.3	10.6	2.0
소득수준				
200만 원 미만	39.7	43.7	14.3	2.3
200-400만 원 미만	42.2	43.8	11.7	2.3
400-600만 원 미만	45.5	42.6	10.1	1.8
600만 원 이상	45.4	41.6	10.7	2.3

주: 1) 설문문항은 전국 성인(20세 이상)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가 귀하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조사되었음.

출처: 통계청, 「녹색생활조사」, 2011.

**표 IX-11** 소득수준,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탄소성적표지 인지에부별 저탄소제품 구매 노력 정도, 2011

(%)

	매우 노력 한다	약간 노력 한다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전체	8.1	23.0	33.7	35.2
소득수준				
200만 원 미만	6.8	17.5	28.9	46.8
200-400만 원 미만	9.0	25.7	35.9	29.4
400-600만 원 미만	8.6	29.2	38.0	24.2
600만 원 이상	9.9	27.0	39.8	23.3
기후변화의 심각성				
심각함	8.3	23.5	33.5	34.7
심각하지 않음	6.9	20.1	34.5	38.5
탄소성적표지 인지에부				
알고 있음	24.7	57.5	16.0	1.8
모름	1.6	9.6	40.6	48.2

주: 1) 설문문항은 전국 성인(20세 이상)을 대상으로 "귀하는 탄소배출량이 적은 상품을 사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라고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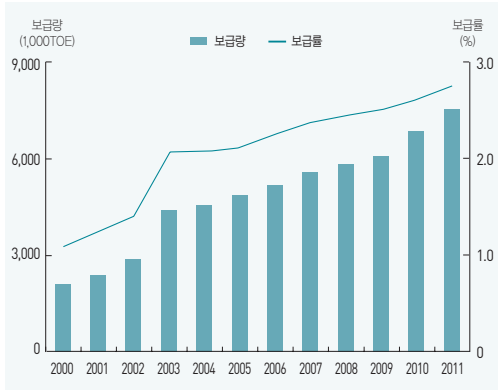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녹색생활조사」, 2011.



###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은 2000년의 약 212만 TOE(석유환산톤)에서 2011년 758만 TOE로 약 10년 사이에 3.6배 증가하였고,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의 1.1%에서 2011년 2.8%로 증가하였다(그림 IX-6).

그림 IX-6 신재생에너지 보급량과 보급률, 200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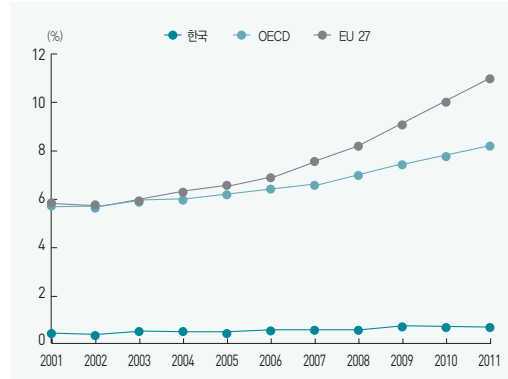
주: 1) 보급률은 총 1차 에너지 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2012.

신재생에너지 소비가 2003년과 2010년에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3년의 경우 통계상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지 않았던 대규모 수력발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2010년 이후의 추세는 실제 보급량이 증가한 것으로 이 시기부터 고유가와 함께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지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통계는 다른 OECD 국가들에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은 화석연료의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증가 추세가 과대평가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 기준에 유사하게 조정한 수치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OECD 국가들의 경우 2000년대 중반 고유가가 본격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한국은 거의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이 8.2%인데 반해 한국은 0.7%에 불과하다(그림 IX-7).

그림 IX-7 한국, OECD 및 EU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01-2011



주: 1) 보급률은 총 1차 에너지 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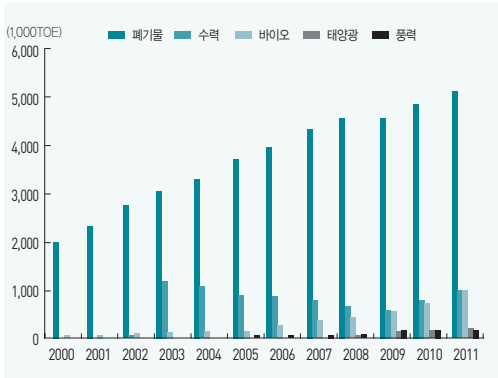
출처: IEA,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2, 2012.

이러한 차이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 추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X-8]과 [그림 IX-9]는 각각 한국과 OECD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종류별 추세를 나타낸 것으로 한국은 폐기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수력의 경우 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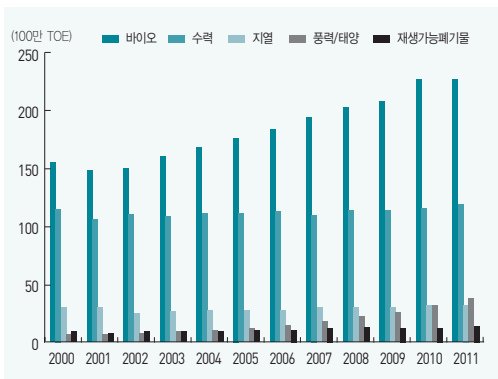
일시적인 증가 이후로 계속 감소하다가 2009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바이오에너지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상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최근 증가 추세이기는 하나 그 절대량이 매우 적다.

그림 IX-8 신재생에너지 종류별 보급량, 2000-2011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2012.

그림 IX-9 OECD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종류별 보급량, 2000-2011



출처: IEA,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2, 2012.

OECD 국가들의 경우, 바이오에너지의 비중이 가장 크고 전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풍력과 태양에너지의 증가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OECD의 수치는 폐기물 중 재생가능한 자원의 폐기물만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의 양과 비중은 크게 변화가 없다. 다만 최근 바이오에너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는 한국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11년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내부 구성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폐기물의 비중이 67.5%로 압도적이며, 수력 및 바이오에너지가 각각 12.7%를 차지하고 있다(표 IX-12). 이들 세 가지가 합계 93%로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집중된 태양광(2.6%), 풍력(2.4%), 연료전지(0.8%)는 모두 합하여 5.8%로 그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다.

표 IX-12 한국과 OECD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종류별 구성비율, 2011

순위	한국		OECD	
	에너지원	구성비율 (%)	에너지원	구성비율 (%)
1	폐기물	67.5	바이오	53.8
2	수력	12.7	수력	28.0
3	바이오	12.7	지열	7.7
4	태양광	2.6	풍력	5.4
5	풍력	2.4	재생가능폐기물	3.3
6	태양열	0.4	태양열	1.3
7	연료전지	0.8	태양광	0.6
8	지열	0.6	해양	0.0
9	해양	0.1	-	-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2012.

IEA,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2, 2012.



OECD 국가들의 경우 바이오에너지, 수력, 지열의 세 가지가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풍력이 그 다음으로 많다. 하지만 지열은 형보 추세인 반면, 풍력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조만간 풍력이 지열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과 추세는 다음 세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에너지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낮다. 둘째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하지 않은 폐기물이 양적으로 증가 추세를 주도하고 있다. 셋째, 그 결과 종류별 구성에서 폐기물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이 매우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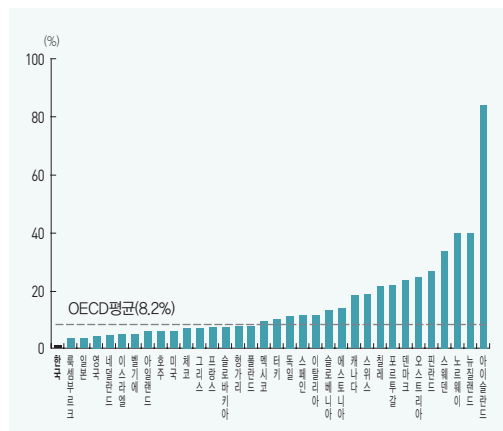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추이와 비중이 다른 OECD 국가들과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경우 에너지소비량이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량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 전체 비중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쉽게 상승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에너지소비량 자체가 급속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량이 증가하더라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쉽게 높아지기 어렵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OECD 국가들의 제1차 에너지소비량은 2.2%만 증가하여 거의 변동이 없었던 것에 비해

한국은 같은 기간에 37%나 증가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전체 에너지 소비량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는 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둘째, 신재생에너지의 부존여건 상 차이다. [그림 IX-10]은 OECD 국가별로 에너지소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순위별로 표시한 것이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은 국가는 대체로 산림자원(바이오에너지), 수자원(수력), 지열, 풍력이 풍부한 곳이다. 한국이 OECD 국가들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저조한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자원이나 풍력 등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다는 점도 작용한다.

셋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정책여건과 지원제도의 차이다. 즉 대부분의 신재생에너

그림 IX-10 OECD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11



주: 1) 보급률은 총 1차 에너지 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IEA,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2, 2012.



지는 화석연료보다 비싼 에너지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보급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얼마나 하고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과 관련이 많은데 각국의 전기요금 수준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 신재생에너지의 국내 잠재량과 기술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은 부존잠재량(국토 내 존재하는 총량), 가용잠재량(부존잠재량 중에서 에너지설비가 입지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총량), 그리고 기술적 잠재량(현재 기술수준으로 개발할 수 있는 총량)으로 구분되는데 기술적 잠재량이 실제 개발 가능한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X-13〉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을 종류별로 표시한 것이다. 우선 총량은 약 17억 TOE로 전체 에너지소비량인 2억 7천만 TOE를 훨씬 넘어선다. 수치상으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이 에너지소비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각 에너지원의 농도와 성격, 개발여건, 그리고 경제성에 따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양자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기술적 잠재량 역시 추정방식과 기술적 전제조건에 따라 수치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므로 현재 기술적 잠재량 수치는 객관성이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IX-13 신재생에너지 종류별 기술적 잠재량 (1,000TOE)

에너지원	기술적 잠재량
전체	1,753,831
태양열	870,977
태양광	585,315
지열	233,793
해상풍력	22,264
수력	20,867
육상풍력	8,097
해양	6,347
바이오매스	6,171

주: 1) 기술적 잠재량은 현재 기술수준으로 산출될 수 있는 최종 에너지의 양을 나타낸 값으로 기기의 시스템 효율 등을 적용함.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백서」, 2012.

이러한 한계를 감안한 상태에서 살펴보면, 한국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은 태양열, 태양광, 지열, 해상 풍력, 수력 순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순위인 수력, 바이오, 태양광, 풍력, 태양열의 순위(신재생에너지로 보기 어려운 폐기물은 제외)와 차이가 난다. 잠재량과 보급량 순위의 차이에는 주로 기술적 및 산업적 여건과 경제성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기술적 잠재량은 현재 기술 수준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해당 기술이나 산업기반이 국내에 형성되어 있느냐가 영향을 준다. 국내 기반 기술이나 산업기반이 있어야 산업 연관 효과는 물론 고장 시 사후대응 등이 용이하여 보급상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원천 기술 및 부품·소재 기술이 부족하여 거의 대부분의 핵심기술과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관련 업체는 원천기술 확보보다 단기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응용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잠재량이 풍부한 태양에너지와 지열에너지의 보급량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은 경제성의 이유도 있지만 기술 및 산업 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애로요인

기술적 잠재량이 풍부하고 국내 기반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은 정책이나 지원제도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한국의 경우, 기술적 잠재량에 비해 보급의 추이가 부진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기술수준의 열위와 함께 정책적 및 제도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가 현재 화석연료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급속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매년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PR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원발생 등의 장애요인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풍력이나 조력의 경우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데다 소음발생, 경관훼손, 어업활동 지장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장기간에 걸쳐 비용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조달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의 설치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행정업무 처리가 복잡하여 보급상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요인을 극복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및 산업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에너지관리공단. 2012.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 에너지관리공단. 2012. 「신재생에너지 백서」.
- 에너지관리공단. 2010.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 시책」.
- 통계청. 2012. 「녹색생활조사」.
- IEA. 2012. *Energy Balances of OECD*.



# 03

## 화학물질 노출실태

신용승(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요 약

- 한국에서 제조되는 화학물질은 약 2억 9천만 톤이고 사용량은 약 3억 5천만 톤이다.
- 화학물질 배출량은 2004년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으며, 취급량 대비 배출량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다.
-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는 매년 60여건 정도 발생해 왔으며, 이 중 유독물에 의한 사고는 연평균 12건으로 전체 화학물질 관련 사고의 20% 정도이다.
-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 진료환자수는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 36%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 국민 10명 중 8명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화학물질은 가정용 세제에서 자동차,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현장에서의 배출 또는 누출 사고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화학물질 사용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우려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는 10만여 종에 이르며 매년 2천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상품화 되고 있어서 향후에도 화학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화학물질 생산량이 2020년에 1995년 대비 약 8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화학산업 또한 빠르게 성장하여 국내 제조업 생산액의 14%, 고용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산업은 에틸렌 생산량 규모가 세계 3위일 정도로 성장했다. 국내에서는 4만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었거나 유통되고 있고, 매년 400여 종 이상이 새로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실제로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된 화학물질은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99%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해성, 용도, 안전 취급 요령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비교적 위해성에 대한 정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량생산화학물질(HPV, 연간 1,000톤 이상)조차도 전체의 약 21%는 유해성 정보가 없거나 65% 가량은 해당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유해화학물질은 대부분 독성 및 확산성이 강해 사고로 인한 유출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주변 환경을 황폐화 시킬 수 있다.



한국은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와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을 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생산과 사용이 많아 화학물질 사고나 노출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이 어느 나라보다도 클 수밖에 없다. 최근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가슴기 살균제 사건 등 잇따른 화학물질 사고들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크게 증폭시키고 있다. 1962년 레이첼 카슨(Rachel Caeson)은 그의 저서 「침묵의 봄」(*Silent Spring*)을 통해 그동안 살충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온 DDT (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가 먹이사슬이라는 긴 경로를 통해 종달새에게 피해를 입히며 결국에는 인간에게까지 그 피해가 전달된다는 사실을 고발하였다. 이는 그전까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이로온 물질로만 여겨졌던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운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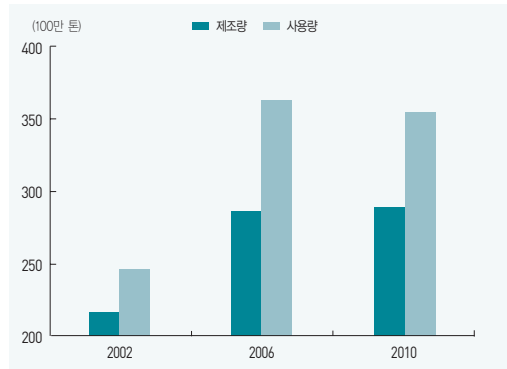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한국의 화학물질 사용 및 배출과 더불어 화학물질 사고 및 노출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국민의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우려 수준을 진단하고자 한다. 끝으로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환경보건정책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 화학물질 사용 및 배출 현황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4년 마다 실시되는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제조되는 화학물질은 약

2억 9천만 톤이고 사용량은 약 3억 5천만 톤이다. 2006년 이후 화학물질 제조량은 약간 증가하였으나 사용량은 다소 감소하였다(그림 IX-11).

그림 IX-11 화학물질 유통량, 2002-2010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12.

화학물질 가운데 유독물 제조량은 2011년 약 3,300만 톤으로 국내 전체 화학물질 제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 정도이다. 다만 유독물의 경우 제조량과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 IX-12).

그림 IX-12 화학물질 중 유독물 유통량, 2002-2011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12.

정부는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회원국의 준수사항 가운데 하나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1999년부터 시작하였다. 이후 조사대상 사업장과 화학물질 종류를 확대하면서 2000년부터 본격적인 배출량 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화학물질 배출량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조사대상 사업장의 확대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이후부터는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취급량 대비 배출량은 2004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다만 단위사업장별 배출량은 2004년 이후 큰 변화 없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IX-14).

표 IX-14 화학물질 배출량, 2000-2011

연도	배출량 (톤/년)	사업장 (개소)	취급량 대비 배출량(%)	사업장 대비 배출량(%)
2000	30,143	529	0.052	57.0
2001	36,587	1,023	0.038	35.8
2002	34,272	1,199	0.037	28.6
2003	38,041	1,384	0.039	27.5
2004	51,021	2,892	0.045	17.6
2005	47,299	2,741	0.042	17.3
2006	47,796	2,769	0.040	17.3
2007	47,688	3,012	0.037	15.8
2008	47,625	2,945	0.037	16.2
2009	46,989	2,917	0.035	16.1
2010	50,034	2,985	0.035	16.8
2011	52,288	3,159	0.035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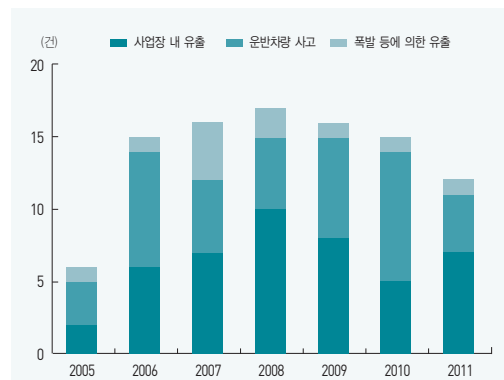
출처: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각 년도.

## 화학물질 사고

한국에서 1996년 이후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는 매년 60여건 정도 발생해 왔다. 이 중 대부

분은 유류로 인한 사고이며, 유독물에 의한 사고는 연평균 12건으로 전체 화학물질 관련 사고의 20% 정도이다. 유독물에 의한 사고는 2005년 6건, 2006년 15건, 2007년 16건, 2008년 17건, 2009년 16건, 2010년 15건, 2011년 12건으로 크게 줄거나 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구미 불산 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업장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는 사고를 포함하면 화학물질 사고 건수는 공식적인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IX-13).

그림 IX-13 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건수, 2005-2011



출처: 환경부, 「환경백서」, 2012.

〈표 IX-15〉는 2000년대에 발생한 주요 화학물질 유출사고를 요약하고 있다. 대부분의 화학물질 사고는 인명피해를 동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구미 불산 유출사고에서와 같이 누출된 유해물질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인근 주민의 건강과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그 피해를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따라서 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사용 각 단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총체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표 IX-15 2000년대 주요 화학물질 유출사고 및 인명피해

연도	주요 사고	피해규모
2000	반월공단 폭발사고	5명 사망, 48명 부상
2005	여수산업단지 염화수소 유출	65명 중독
2008	김천 폐놀 유출	2명 사망, 14명 부상
2012	구미산업단지 불화수소 유출	5명 사망
2013	화성 불화수소 유출	1명 사망
	상주 염화수소 유출	-
	청주산업단지 불화수소 유출	1명 부상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유출	1명 사망, 4명 부상
	구미 LG실트론공장 질산, 불산 유출	-
	구미산업단지 염소가스 유출	160여명 중독

출처: 환경부.

## 화학물질과 질병

화학물질은 직접적 노출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매개체와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소비와 같은 유해물질 간접노출을 통해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암 등에서부터 호르몬 장애, 임신장애, 조기사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카드름 중독으로 인한 이타이이타이병, 메틸수은으로 인한 미나마타병, 새집증후군(sick-house syndrome), 가슴기 살균제에 의한 폐질환 등이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대표적인 건강피해 사례이다. 생태계에서도 유해물질이 수체나 토양을 통해 생물에 노출됨으로써 체내에 축적되어 먹이사슬을 통해 전달되거나 급만성적인 독성피해

를 유발하기도 한다. 어떠한 노출경로든 간에 한번 생물 체내로 흡수된 유해물질은 대부분 쉽게 배출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어 질환이 나타난다. 그리고 한 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화학물질 배출과 그로 인한 노출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국내에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환경성 질환 발생을 포함한 별도의 건강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적 연구결과는 없다. 다만 화학물질 노출과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일부 환경성 질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다.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수가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 약 36%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표 IX-16). 이는 다양한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등 생활 속에서 화학물질 노출의 기회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주요 환경성질환 진료환자 비율이 9세 이하의 어린이들 사이에서 높다는 점은 화학물질 노출에 민감하거나

표 IX-16 환경성질환 진료환자수, 2002-2008

(1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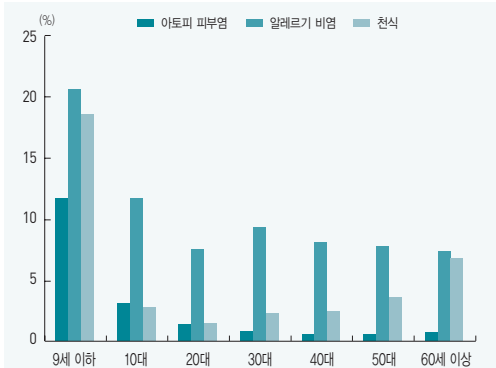
연도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계
2002	113	302	202	557
2003	116	325	204	583
2004	118	382	215	629
2005	117	401	236	679
2006	111	416	244	694
2007	114	455	241	724
2008	114	495	242	759
'02-'08년 증가율(%)	-	63.9	19.8	36.3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년 주요 환경성질환 진료환자 759만명", 보도자료, 2010.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그림 IX-14).

그림 IX-14 연령별 환경성질환 진료환자 비율, 2008



주: 1) 환경성질환 진료환자 비율은 의료보장인구 100명당 해당 환경성질환 진료환자수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년 주요 환경성질환 진료환자 759만명」, 보도자료, 2010;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09.

한편, 환경부는 2005년부터 국민 혈중 중금속 농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에 ‘환경보건법’이 제정되면서 3년 마다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를 통해 혈중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중금속 가운데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인 납과 수은의 농도는 2005년 이후 대체로 감소 추세에 있다(표 IX-17). 그러나 현재의 농도 수준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가령, 수은의 경우 한국인의 평균 혈중 농도는 미국인과 독일인에 비해 3-5배 높은 편이다.

표 IX-17 국민 혈중 중금속 농도, 2005-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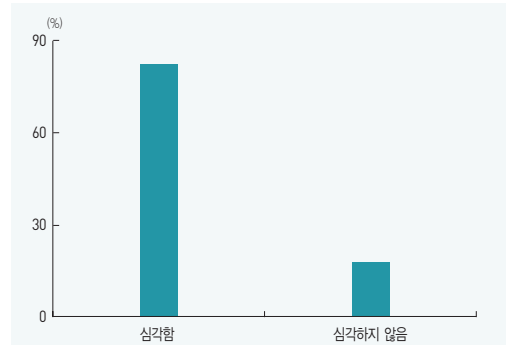
연도	납(ug/dL)	수은(ug/L)
2005	2.66	4.34
2007	1.72	3.80
2008	1.98	3.00
2009-2011	1.77	3.08

출처: 환경부, 「환경백서」, 2012.

## 화학물질 위해성에 대한 국민 인식

환경부는 2012년 3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생활공간 화학물질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7.0%에 불과했다(그림 IX-15). 그림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응답자 중 31%가 환경부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유해화학물질 피해 관리를 꼽음으로써 화학물질 피해에 대한 높은 우려와 관심을 드러냈다. 이는 한국인 대다수가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정부의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 강화가 시급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IX-15 화학물질 피해발생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2012



출처: 환경부, 「생활공간 화학물질 인식도 조사」, 2012.

[그림 IX-16]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생활주변의 화학물질 피해 원인들을 보여준다. 조사가 수행된 2002년과 2012년 모두 공장·소각시설이 배출하는 화학물질이 각각 35.0%와 35.7%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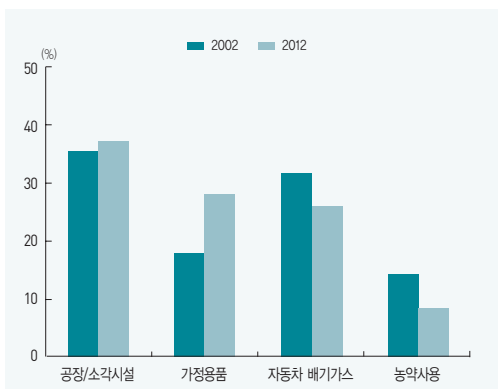




생활주변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불안감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가정용품으로 인한 화학물질 피해 우려는 2002년 17.7%에서 2012년 27%로 증가하였다. 반면,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피해 우려는 2002년 31.3%에서 2012년 24.9%로 대폭 감소하였다. 농약사용으로 인한 피해 우려도 2002년 14.2%에서 2012년 8.1%로 감소하였다.

한편, 한국인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의 역할(38.1%)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 기업체의 역할(24.6%)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장과 같은 주요 배출 시설에서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유해물질의 함유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IX-16 생활주변 화학물질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2002, 2012



출처: 환경부, 「생활공감 화학물질 인식도 조사」, 2012.

## 환경보건정책 동향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국민의 환경보건정책 수요에 부응하고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990년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1996년 OECD 가입 이후에는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화학물질 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2008년에는 ‘환경보건법’을 제정하여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이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규명 및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한편, 최근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sup>1)</sup>에 대응하는 조치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화학물질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환경성질환과 환경요인 간의 상관성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2007년부터 질 환별로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2013년 현재 알레르기질환, 소아발달장애, 소아암, 중금속 노출 등 분야별로 전국의 12개 병원

1) 화학물질의 유통 및 사용 증가에 따른 사람들의 건강 및 환경 위해성을 예방,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화학물질까지 등록평가 범위를 확대한 제도이다.





과 대학교 등을 지정해 운영 중이며, 각 센터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매년 3억 5천만 원 규모의 국비와 자체 부담금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 하에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유해중금속 관리대책, 환경오염 민감계층 보건대책 등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를 위한 주요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 계획의 이행을 통해 환경성질병부담(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s) 순위를 2010년 현재 세계 40위에서 2020년에는 20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맺음말

화학물질은 이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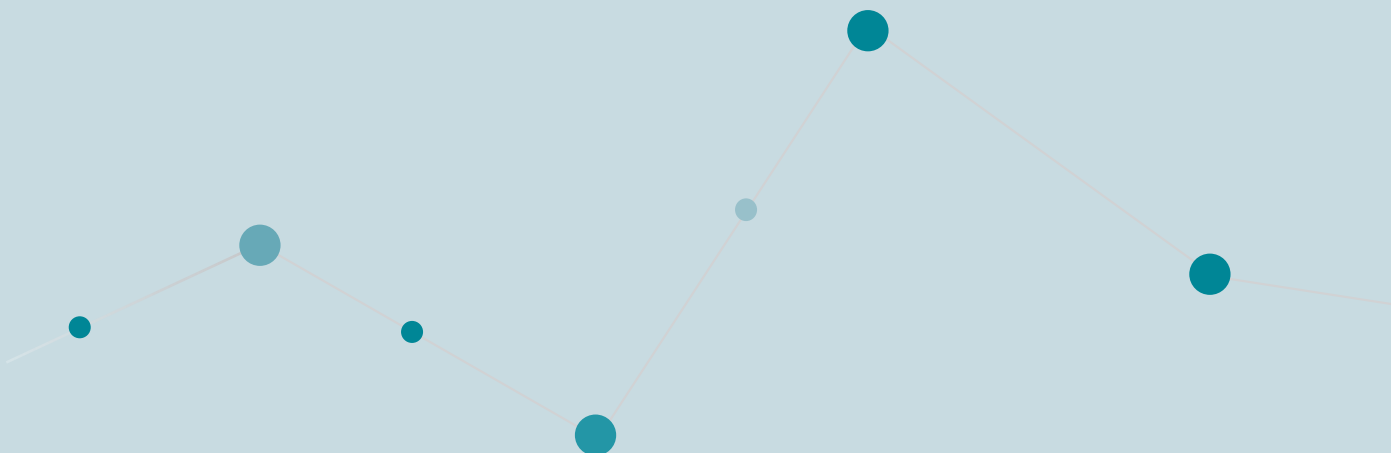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필수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유해성이 있는 무수한 화학물질들이 여전히 배출되거나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잇따른 화학물질 사고와 유해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언론 보도로 인해 국민의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보건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그 노력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피해는 비가역적인 특성이 강하여 일단 유해물질에 노출되면 건강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고 노출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이른바 ‘사전예방적 위해관리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 [ KOREAN SOCIAL TRENDS 2013

## 한국의 사회동향 2013






# STATISTICS KOREA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 안 전

Safety

- 01 안전 영역의 주요 변화 이재열 | 서울대학교 [268](#)
  - 02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추세 민수홍 | 경기대학교 [276](#)
  - 03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과 특성 김지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82](#)
- 

## 01

안전 영역의  
주요 변화

이재열(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요 약

- 자연재해 피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나 최근 들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피해가 불규칙한 패턴으로 일어나고 있다. 자연재해의 피해는 여름철, 특히 8월에 집중하며 태풍과 호우가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 화재,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의 기술적이고 인위적인 재난에 따른 피해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피해율을 보인다.
-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강력범죄에 따른 피해가 늘어났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완화되었다.
- 사람들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원인에 따라 자연재난, 인위적 재난, 사회적 위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자연현상에 의해 초래되는 재난을 자연재난이라고 칭하는데, 지진, 황사, 그리고 태풍과 호우에 따른 피해 등이 대표적이다.

인위적 재난은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과 기술체계의 오작동이나 인간적인 오류 혹은 두 가지의 결합에 의해 생겨나는 여러 재난들이다. 대표적인 것들로 화재, 산업재해, 그리고 교통사고가 있다.

사회적 위험은 집단 내 규범이나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체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범죄이다. 외환위기 이후 강력범죄가 크게 늘었으며, 장기간에 걸친 경기불황과 양극화로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자살도 늘었다.

이 글에서는 자연재해, 인위적 재난, 그리고 사회적 위험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집중하였다.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사회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사회위험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계층적으로 불평등하게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한 집단일수록 열악한 삶의 질을 드러내게 된다. 따라서 위험요소를 줄여나가는 것은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

## 자연재해

해마다 한국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는다. 특히 최근 들어서 봄부터 중국에서 오는 황사는 오염물질을 싣



고 빈번하게 한반도를 뒤덮고 있어서 환경문제에는 국경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

자연재해 중에 한국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태풍과 강풍, 그리고 폭우의 피해다. 특히 최근에 들어오면서 과거 장마철에 집중하였던 강수량이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바뀌고 또 지역적으로 집중하는 게릴라성-국지성 호우로 바뀌었다. 그래서 한국의 기후가 아시아의 몬순형 기후에서 아열대성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매년 최소한 한 번 이상 한반도를 지나가는 태풍은 큰 피해를 가져오는 주된 자연현상이다. 지난 2006년의 태풍 에위니아, 2003년의 매미, 2002년의 루사 등은 모두 재산피해액만 수조 원씩을 남긴 초대형 태풍이었다.

그동안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는 2002년 태풍 루사의 영향이 가장 컸다. 모두 6조 원 이상의 재산피해와 270명의 사망자, 그리고 7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다행히도 그 후에 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나 사망자와 이재민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2008년에는 637억 원의 재산피해에 11명의 사망실종자와 4,62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최근 들어 태풍피해는 다시 늘어나서 2011년에는 7,942억 원의 재산피해에 78명의 사망실종자, 그리고 70,09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표 X-1).

한국의 자연재해 피해는 거의 전적으로 태풍과 호우에 의한 피해이며, 일본이나 중국, 대만과는 달리 지진피해가 거의 없다. 지난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거의 대부분 태풍

표 X-1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액, 사망실종자수 및 이재민수, 1995-2011

연도	재산피해액 (100만 원)	사망 실종자수	이재민수
1995	601,152	158	30,408
1996	483,050	77	18,686
1997	190,914	38	6,296
1998	1,582,810	384	30,308
1999	1,219,674	89	26,656
2000	645,451	49	3,665
2001	1,256,168	82	4,165
2002	6,115,292	270	71,204
2003	4,408,241	148	63,133
2004	1,230,436	14	8,814
2005	1,049,839	52	9,914
2006	1,942,984	63	2,883
2007	251,804	17	675
2008	63,703	11	4,627
2009	298,808	13	11,931
2010	426,782	14	76,110
2011	794,200	78	70,099

출처: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각 년도.

과 호우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국지성 집중호우로 화강암 암반위에 얇게 덮여 있는 흙이 물을 머금어서 물이 더 많아지면 산비탈 아래로 흘러가는 토류(土流)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산사태가 빈번해지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최근 10년간의 월별 자연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38건으로 680명의 인명피해와 16조 5,82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중 8월에 총 307명(45.1%)의 인명피해와 7조 576억 원(42.6%)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연중 자연재난 피해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난다(표 X-2).

8월 자연재해는 25건으로 호우 20건, 태풍 5건이다.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52명, 재산피해



는 1조 4,362억 원인 반면,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255명, 재산피해는 5조 6,214억 원으로 발생횟수에 비해 피해규모는 태풍이 더 컸으며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된 사례도 4회로 나타난다.

**표 X-2** 최근 10년간 월별 자연재해 발생건수와 인명 및 재산 피해, 2002-2011

	자연재해 발생건수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1억 원)
1월	10	-	452
2월	11	-	539
3월	14	1	7,701
4월	8	-	176
5월	2	-	9
6월	9	8	2,457
7월	26	177	29,442
8월	25	307	70,576
9월	13	161	47,762
10월	7	12	940
11월	4	-	64
12월	9	14	5,705
계	138	680	165,823

출처: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각 년도.

## 기술적 재난

### 화재

화재는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인적 재난이다. 한국의 화재발생 추이를 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 1만 건 이내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980년대 후반에 1만 건을 넘기면서 급속히 증가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연간 3만 건을 넘어섰으며 등락은 있었지만 2007년에는 무려 4만 7천 건에 달하였다가 2010년에는 4만 1천여 건, 2012년에는 4만 3천여 건으로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X-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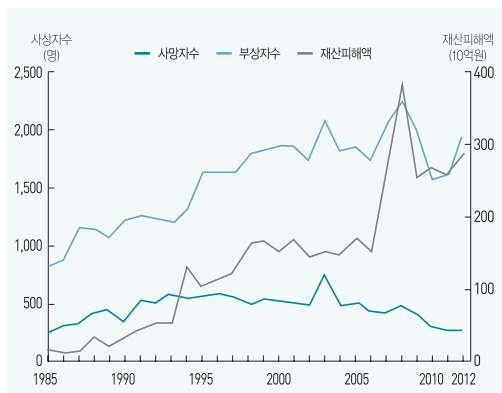
**그림 X-1** 화재 발생건수, 1985-2012



출처: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감」, 각 년도.

피해종류별로 보면 건축물 화재가 가장 빈번하고, 그 다음이 차량 화재이며 그 외 선박이나 항공기 화재가 있다. 지난 10년간 화재는 대부분 건축물에서 발생하였으며, 건축물 중에서도 일반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이 공동주택, 음식점 순이었다. 건축물 화재로 인한 피해는 1997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2년도부터 감소하고 있는 반면, 차량 화재는 일정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X-2** 화재 사상자수와 재산피해액, 1985-2012



출처: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감」,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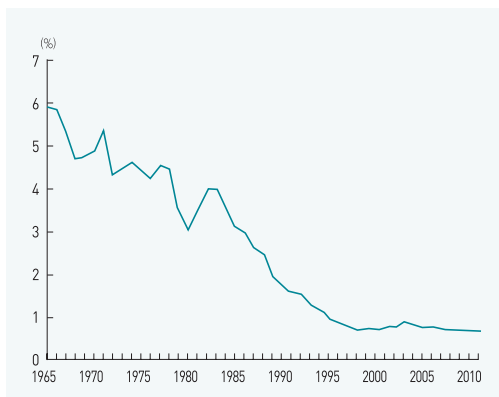
최근의 화재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수는 2000년 531명에서 2012년 267명으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에 부상자수는 1,853명에서 1,965명으로 증가하였다.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2000년 1,519억 원에서 2012년 2,895억 원으로 급증하였다(그림 X-2).

### 산업재해

한국사회가 눈부신 고도성장을 이룩한 이면에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산업전반에 걸쳐 발생한 산업재해의 아픔이 존재한다. 초고속 성장을 지탱해 온 힘 자체가 바로 대규모의 위험요인들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성장과 위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특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활발하게 시행된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에는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이에 비례하여 부상, 직업병 등을 얻은 재해자수도 늘어났다. 이러한 산업재해 건수 및 재해자수는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초기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시행착오적 사고들이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산업재해 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산업 현장에서 실수들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어진 반면에, 한 번 발생하게 되면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대형 사고는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산업재해자수는 1964년 1,489명에서 시작하여 1984년을 정점으로 157,800명까지 증가했다가 조금씩 줄어들어 1998년에 51,514명까지 줄어들었으나, 그 이후 다시 소폭 증가하여 2011년에는 93,292명에 이르고 있다. 근로자수 대비 재해자수의 비율을 따지는 재해율로 보면 1960년대 중반에는 6%에 가까웠으나 점차 줄어들어 2012년에는 0.59%로 낮아졌다(그림 X-3). 재해로 인한 부상자의 수는 1984년의 154,930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며, 사망자수도 2011년에 2,114명으로 사상 최저수준까지 떨어졌다. 2011년 기준으로 주된 사망원인은 추락(452명), 교통사고(231명), 협착(129명), 전도(104명), 낙하비레(86명), 충돌(60명) 등의 순이었고, 산업별로는 건설업(621명), 제조업(548명), 광업(375명), 운수·창고·통신업(134명) 등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

그림 X-3 산업재해율, 1965-2011



주: 1) 산업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100.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년도.





## 교통사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사고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 1990년에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2,325명에 이르러 세계 1위 수준의 교통사고국이라는 오명을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망자를 기준으로 할 때 1991년을 정점으로 교통사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2년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392명으로 최악의 시점에 비하면 사망자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로 보면, 한국의 경우 1990년 33.1명을 정점으로 2000년에는 21.8명, 그리고 2011년에는 10.5명으로 급속히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X-3 OECD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1970-2011

국가	1970	1980	1990	2000	2011
호주	30.4	22.3	13.7	9.5	5.6
오스트리아	34.5	26.5	20.3	12.2	6.2
벨기에	31.8	24.3	19.9	14.4	7.8
캐나다	23.8	22.3	14.3	9.5	6.5
체코	20.2	12.2	12.5	14.5	7.3
덴마크	24.6	13.5	12.4	9.3	4.0
핀란드	22.9	11.6	13.1	7.7	5.4
프랑스	32.6	25.4	19.8	13.7	6.1
독일	27.3	19.3	14.0	9.1	4.9
그리스	12.5	15.0	20.2	18.7	10.1
헝가리	15.8	15.2	23.4	11.8	6.4
아이슬란드	9.8	11.0	9.5	11.5	3.8
아일랜드	18.3	16.6	13.6	11.0	4.1
이탈리아	20.5	16.3	12.4	12.4	6.4
일본	21.0	9.7	11.8	8.2	4.3
<b>한국</b>	<b>11.0</b>	<b>16.9</b>	<b>33.1</b>	<b>21.8</b>	<b>10.5</b>
네덜란드	24.6	14.2	9.2	7.3	4.0
뉴질랜드	23.0	18.8	21.4	12.0	6.5
노르웨이	14.6	8.9	7.8	7.6	3.4
폴란드	10.6	16.8	19.2	16.3	11.0
포르투갈	20.6	30.6	31.2	20.0	8.4
스페인	16.2	17.7	23.2	14.5	4.5
스웨덴	16.3	10.2	9.1	6.7	3.4
영국	14.0	11.0	9.4	6.1	3.1
미국	25.7	22.5	17.9	14.9	10.4

출처: International Traffic Forum, Road Safety Annual Report 2013, 2013.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은 폴란드(11명), 미국(10.4명), 그리스(10.1명) 등과 더불어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표 X-3).

## 범죄

한국의 대도시는 야간에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치안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범죄통계는 범죄에 대한 정의가 여러 차례 변화했기 때문에 그 추세를 일관성 있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2002년 이후에는 비교적 일관성이 있는 기준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형법범죄는 통상 강력범죄라 할 수 있는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폭행, 강간 등을 포함하는데, 형법범죄 발생률은 완만하게나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별법과 도로교통법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특별법범죄율을 보면 같은 기간 동안에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X-4).

그림 X-4 형법 및 특별법 범죄율, 2002-2011



주: 1)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해당 범죄 발생건수임.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한편 2007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주요 형법범죄의 발생률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살인범죄 발생률은 2.3건으로 일본의 0.9건에 비해 높지만 영국(2.6건), 독일(2.9건), 프랑스(3.1건), 캐나다(4.2건), 미국(5.6건), 러시아(15.7건) 등에 비해 낮다. 강도사건의 경우에도 한국의 발생률은 9.2건으로 일본의 3.6건에 비해서는 높지만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반면에 폭력사건의 발생률은 매우 높은 편이어서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분쟁이 폭력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강한 사회임을 보여준다(표 X-4).

표 X-4 주요 국가의 형법범죄율,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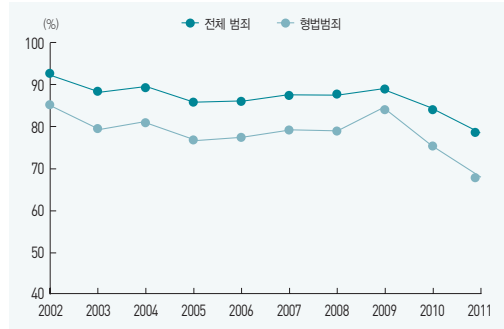
국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전체
한국	2.3	9.2	18.1	440.4	611.6	1,082.0
미국	5.6	147.6	30.0	3,264.0	283.8	3,730.0
일본	0.9	3.6	1.4	1,119.0	57.1	1,182.0
영국	2.6	156.7	21.5	4,367.0	413.4	4,961.0
프랑스	3.1	163.5	16.0	2,821.0	462.3	3,465.0
독일	2.9	64.4	9.1	3,116.0	636.5	3,829.0
캐나다	4.2	89.8	65.0	2,252.0	718.5	3,130.0
러시아	15.7	31.9	5.0	1,313.0	148.5	1,514.0
평균	4.7	83.3	20.8	2,336.0	416.4	2,862.0

주: 1)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해당 형법범죄 발생건수임.  
출처: 경찰청, 「2007년도 주요국 치안지표 비교」, 2008.

범죄 발생건수에 대한 검거건수의 비율인 검거율을 살펴보면, 2001년에 88.8%이다가 2002년에 92.4%로 증가하여 일시적으로 90%대를 넘어섰다가 2003년 88.6%, 2004년 89.5%, 2005년 85.8%, 2006년 85.8% 등으로 감소하였다. 검거율은 2007년 87.5%, 2008년 87.4%, 2009년 89.2%로 다소 높아졌으나 이후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84.5%와 78.6%로

감소하여 지난 10년간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X-5).

그림 X-5 범죄검거율, 2002-2011



주: 1) 검거율=(검거건수÷발생건수)×10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등의 특별법범죄를 제외한 형법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지난 10년간 검거율을 살펴보면, 2001년 71.3%에서 2002년 85.3%로 검거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03년 79.5%, 2004년 80.7%, 2005년 76.8%, 2006년 77.3%, 2007년 79.0%, 2008년 79.0% 등으로 큰 변화 없이 증감을 반복하였다. 2009년에는 84.2%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75.6%와 68.1%로 지난 10년 동안 최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X-5). 형법범죄의 검거율은 전체 범죄의 검거율보다 낮은 수준이며, 지난 10년에 걸쳐 대체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 들어서는 학교폭력이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잦아졌다. 공교육의 붕괴와 정보화로 인해 유해매체에 노출되는 청소년이 급증하면서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이 심각한 문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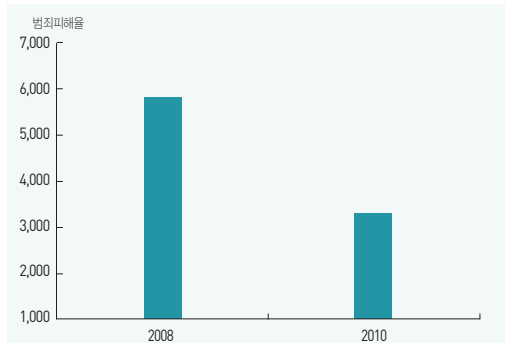
부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다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폭력(협박, 폭행, 집단 따돌림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009년 7.0%, 2010년 7.1%, 2011년 6.7%, 2012년 5.6%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초 폭력피해 연령은 2009년 13세에서 2010년 12.9세, 2011년 11.4세, 2012년 12세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범죄피해와 두려움

공식적인 범죄통계는 경찰과 검찰을 통해서 확인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범죄의 피해를 경험하는지 가늠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마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2009년부터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개인 대상 범죄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한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율은 2008년 5,819명에서 2010년 3,315명으로 감소하였다(그림 X-6). 범죄유형별로 보면, 절도피해자는 같은 기간에 2,876명에서 1,534명으로 감소했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강도피해자는 262명에서 247명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253명에 138명으로, 그리고 폭행과 상해피해자는 384명에서 223명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한편, 범죄피해의 감소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와도 연관되어 있다. 「전국범죄피해조

그림 X-6 범죄피해율, 2008, 2010



주: 1) 범죄피해율은 인구 10만 명당 지난 1년간 사기, 절도, 강도, 성폭행, 폭행·상해, 협박, 괴롭힘 등의 개인대상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수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 년도.

사」에서 ‘밤에 혼자서(동네) 골목길을 다니기가/걸을 때 두렵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은 결과, ‘매우 두렵다’는 응답이 2009년 7.4%에서 2011년 6.0%로 줄었으며, ‘두려운 편이다’는 응답도 30.6%에서 25.6%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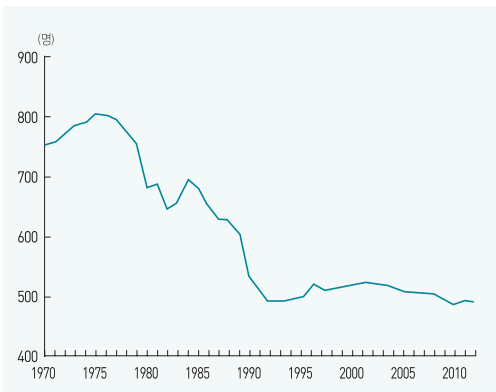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감소하고 있지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그리고 중장년보다는 청소년이나 젊은 층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젊은 여성층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9년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10대, 20대, 30대 여성들의 경우 범죄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68~70%에 달해 두려움의 정도가 아주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40대 이상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현저하게 낮아져서 40대 여성들의 58.1%, 50대 여성들의 50.3%, 60대 이상 여성들의 36.1%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유사한 경향이 2011년 조사에서도 발견된다.



## 범죄방지 및 경찰력

경찰관수는 1970년 총 43,003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102,386명으로 41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 기간에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750명에서 498명으로 감소하였다(그림 X-7). 1998년 225개였던 전국의 경찰서는 2011년 현재 249개가 되었고, 같은 기간에 예산은 3조 4,800억 원에서 7조 7,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림 X-7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1970-2012



주: 1)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추계인구÷경찰관 정원수.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청, 「장래인구통계」, 2011.

이처럼 경찰인력과 치안예산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죄는 증가하고 검거율은 낮아

지고 있는 현상은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이 증대하였음을 의미한다.

##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국민의 사회안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지난 2008년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격년으로 시행되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사회안전을 묻는 문항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거나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8년 8.2%, 2010년 11.3%, 2012년 13.5%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2010년에 처음 조사된 범죄·치안 분야에서도 '안전하다'는 응답이 늘어났다(표 X-5).

표 X-5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08-2012 (%)

	2008	2010	2012
전반적인 사회안전	8.2	11.3	13.5
자연재해	17.2	18.7	22.9
교통사고	5.7	8.0	9.2
화재	9.9	16.6	17.5
범죄위험(치안)	-	8.2	9.0

주: 1) 통계청은 1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해당 분야의 안전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02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추세

민수홍(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요 약

- 최근 7년여 사이에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이 특정업종에서 장기취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불법체류자수는 감소하였다.
- 2000~2010년 사이에 내국인 형법범죄자수가 소폭 증가했지만 외국인 형법범죄자수는 6.2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내 외국인 인구를 고려한 형법범죄자율은 내국인 형법범죄자율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 외국인 형법범죄자 중에서 살인범, 강도, 강간범, 절도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내국인보다 높다. 이는 외국인 범죄자가 내국인 범죄자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불법체류 외국인은 합법체류 외국인에 비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매우 낮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추방을 염려하여 불법 사건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6월에 국내 체류 외국인은 15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 100명 중 3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국내에 외국인 체류자들이 크게 증가한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유입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식당이나 공장 같이 한국인들이 외면하는 이른바 '3D산업'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여성들이 외면하는 농촌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안정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질적인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온 한국인들에게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가진 외국인과의 동거는 새로운 갈등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도 늘고 있다. 2008년에 필리핀 출신의 한 불법체류자가 경기도 양주에서 여중생을 살해한 사건과 2012년에 조선족 한 사람이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국인 사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여 기피하는 외국인 혐오현상마저 생겨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범죄문제의 척결을 요구하는 일부 언론기관과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외국인 범죄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를 공식 통계를 이용하여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외국인 체류자의 현황과 추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서는 외국인 체류자를 합법적 체류자와 불법적 체류자로 나누고 각각의 추세를 살펴보겠다. 둘째로, 외국인 범죄가 과연 늘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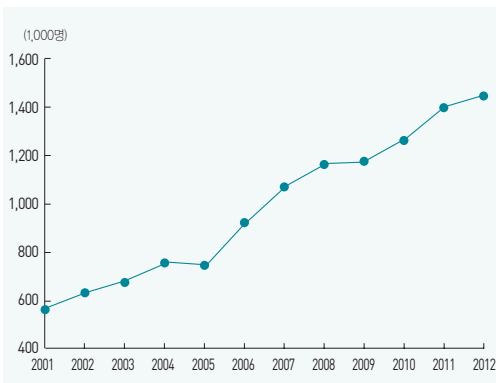


인 체류자 중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비율이 내국인 중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비율보다 더 높은지를 살펴볼 것이다. 외국인이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행을 포함하는 주요 범죄를 내국인보다 더 많이 저지르는지도 확인해보려고 한다. 또한 한국보다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자들의 범죄율이 특히 더 높은지도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체류자 중에서 불법적 체류자의 범죄율이 합법적 체류자보다 더 높은지 분석하고자 한다.

### 국내체류 외국인 현황

2001년에 약 57만 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144만 명을 넘어서 10년 만에 2.5배 증가했고(그림 X-8), 2013년 6월에는 체류 외국인수가 15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3%에 이르게 되었다.

그림 X-8 국내체류 외국인수, 2001-2012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각 년도.

체류 외국인의 증가를 외국인 범죄문제와 관련지어 볼 때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주로 젊은 남성들이어서 범죄율이 높은 인구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유입은 한국이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로 한국경제가 호황을 맞아 인력수요가 증가했지만 '3D업종'으로 불리는 중소기업 제조업체들이 인력난을 겪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1992년에 중국과 공식 수교가 맺어진 이후에는 중국 동포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1993년 산업기술연수생제도, 2004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을 실시하였고, 2007년에는 특례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를 실시하여 외국 국적의 동포들에게 자유로운 왕래와 단순노무 분야에서의 취업을 허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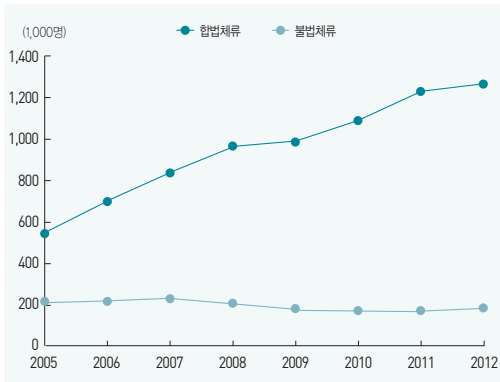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가 정해지는데 이것을 위반하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예컨대 관광비자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가운데 취업을 하거나 고용허가제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출국하지 않고 일을 하면 불법체류 외국인이 된다.

[그림 X-9]를 보면, 2005년도 이후로 합법체류 외국인은 빠르게 늘어나서 7년 만인 2012년에 2.3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불법체류 외국인은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감소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국가별 불법취업 외국인의 발생과 외국인력 도



입 규모와의 연계, 귀환 후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과 같은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이 거소신고를 통해서 국내 인력부족이 심각한 특정 업종에서 장기취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과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 등이 합법적으로 장기간 취업할 수 있게 되면서 불법체류자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X-9 합법 및 불법 체류 외국인수, 2005-2012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각 년도.

## 외국인 범죄의 추세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내국인과 외국인 형법범죄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내국인은 10년간 1.1배 소폭 증가한 반면에 외국인 형법범죄자는 6.2배 증가하여 외국인 범죄가 단기간에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표 X-6).

외국인 형법범죄자수가 증가한 것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수가 1.9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일 수 있어서 국내 외국인

표 X-6 내·외국인별 형법범죄자수, 200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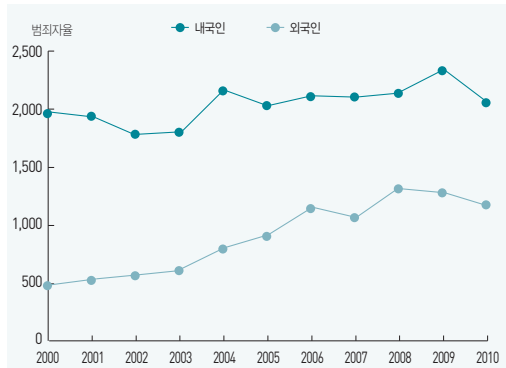
(명)

연도	내국인	외국인
2000	925,353	2,368
2001	918,145	2,965
2002	846,809	3,501
2003	862,733	4,140
2004	1,037,120	5,990
2005	973,796	6,743
2006	1,017,097	10,483
2007	1,020,065	11,286
2008	1,049,526	15,249
2009	1,149,776	15,024
2010	1,019,838	14,619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 각 년도.

인구수를 고려한 범죄율(10만 명당 범죄자수)을 살펴보았다. 2000년에 내국인 형법범죄자율은 1,989명으로 외국인 형법범죄자율 482명보다 4.1배 더 높았다. 2010년에도 내국인 형법범죄자율(2,118명)이 외국인 형법범죄자율(1,159명)

그림 X-10 내·외국인별 형법범죄자율, 2000-2010



주: 1) 내국인 형법범죄자율=(내국인 형법범죄자수÷(추계인구-체류외국인수))×100,000.

2) 외국인 형법범죄자율=(외국인 형법범죄자수÷체류외국인수)×100,000.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 각 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각 년도.





보다 1.8배 더 높아서 내국인이 국내 체류 외국인보다 형법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X-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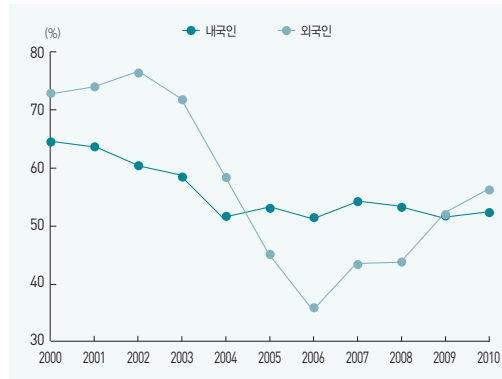
2000년 이후로 10년간 외국인 형법범죄자수가 내국인보다 더 빨리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인 형법범죄자율은 내국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범죄를 덜 저지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내·외국인 형법범죄자율의 차이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 내·외국인의 주요 범죄 범죄자 비율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저지른 살인사건 등 심각한 범죄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저지른 주요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를 비교해 보았다.

[그림 X-11]에는 내·외국인별 형법범죄자 중에서 주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외국인 형법범죄자 중에서 주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비율이 내국인보다 높게 나온다. 예컨대, 2004년에 내국인 형법범죄자 중에서 51.3%가 주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것에 비해 외국인의 주요 범죄자 비율은 59.0%로 더 높다. 외국인 범죄자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내

그림 X-11 내·외국인별 형법범죄자 중 주요 범죄자 비율, 2000-2010



주: 1) 주요 범죄자에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및 폭력범 등이 포함됨.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 각 년도.

국인 범죄자들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은 외국인의 주요 범죄자 비율이 내국인보다 오히려 낮고 2009년과 2010년에는 외국인의 비율이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도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와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요 범죄를 구성하는 5가지 범죄 각각이 형법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고 내·외국인 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표 X-7).

내국인이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저지른 살인은 형법범죄 중에서 0.11%에서 0.12% 사이의 범위를 나타내지만 외국인은 같은 기간 동안 0.48%에서 1.45%의 범위를 나타내서 외국인 형법범죄자 중에서 살인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내국인보다 더 높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비교해 보면, 외국인 형법범죄자 중에서 강도범, 강간범, 절도범이 각기 차지하는 비율이 내국인보다



높은 반면에 폭력범은 내국인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X-7 내·외국인별 형법범죄자 중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및 폭력범 비율, 2000-20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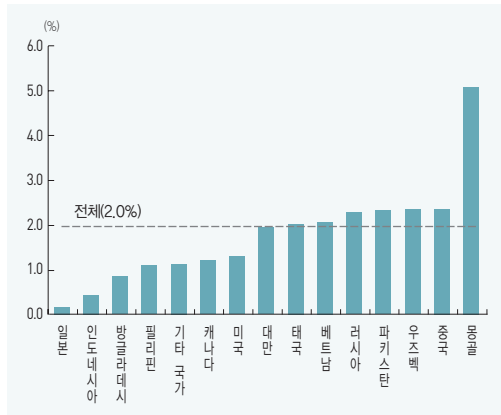
연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00	0.11	0.68	0.33	1.57	0.64	0.72	7.09	18.79	55.81	50.17
2001	0.12	1.45	0.28	2.42	0.60	1.15	6.41	19.93	55.82	47.32
2002	0.12	1.34	0.28	1.81	0.60	1.17	7.44	17.14	51.37	54.16
2003	0.12	0.80	0.36	2.29	0.62	1.18	7.07	15.46	50.25	50.77
2004	0.11	1.00	0.28	1.57	0.62	0.87	6.52	13.79	43.40	40.75
2005	0.12	0.67	0.25	1.24	0.68	0.92	7.32	12.38	44.55	29.08
2006	0.11	0.70	0.26	0.80	0.79	0.65	7.67	9.36	42.00	23.92
2007	0.12	0.48	0.26	0.77	0.81	1.01	9.02	10.89	43.85	29.99
2008	0.11	0.56	0.26	0.62	0.83	0.76	9.05	8.86	42.85	32.54
2009	0.12	0.69	0.36	1.10	0.79	0.84	10.79	13.37	38.74	35.55
2010	0.12	0.59	0.27	0.95	1.70	1.79	11.51	12.03	38.56	40.61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 각 년도.

### 국적별 외국인 범죄자율

한국보다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더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11년에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형법범죄자와 특별법범죄자의 합이 27,436명이고 이 수치는 총 외국인 체류자의 2.0%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일본 국적의 범죄자율은 0.2%로 평균보다 상당히 낮고 캐나다와 미국 국적의 범죄자율이 각각 1.2%와 1.3%로 평균보다 낮다. 반면에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중국, 몽골,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러시아 출신의 외국인 범죄자율은 평균보다 높다(그림 X-12).

그림 X-12 국적별 외국인 범죄자율, 2011



주: 1) 국적별 외국인 범죄자율=(해당 국적 외국인 범죄자수÷해당 국적 체류자수)×100.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 각 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각 년도.

그러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출신들의 범죄자율은 평균보다 낮아서 경제수준과 검거율의 관계가 일관성 있고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다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의 범죄자율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이 관찰된다.

### 합법 및 불법 체류 외국인 범죄자율

2008년에 한 필리핀인 불법체류자가 경기도 양주에서 여중생을 살해한 사건과 더불어 2012년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의 범인이 일부 언론에 의해 불법체류 조선족으로 보도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위험한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생겨났다.

〈표 X-8〉에는 2005년부터 2011년 동안의 합법 및 불법 체류 외국인 범죄자수와 범죄자율이



제시되어 있다. 합법체류 외국인 범죄자수는 2005년 7,043명에서 2011년 25,378명으로 6년 만에 3.6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자수는 1,999명에서 1,537명으로 23% 감소하였다.

이 같은 경향은 앞의 [그림 X-9]에서 살펴본 것처럼 합법 및 불법 체류 외국인수의 변화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 합법체류 외국인 범죄자수가 증가한 것은 합법체류 외국인수가 증가했기 때문일 수 있어서 합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 외국인 각각에서 발생한 범죄자율을 계산하여 비교해 보았다. 2011년도 합법체류 외국인의 범죄자율은 2.1%로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자율인 0.9% 보다 더 높았다. 또한 합법체류 외국인의 범죄자율은 2005년 1.3%에서 2011년 2.1%로 1.6배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자율은 1.0%에서 0.9%로 감소하였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합법체류 외국인 범죄자율이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자율보다 일관적으

표 X-8 합법 및 불법 체류 외국인 범죄자수와 범죄자율, 2005-2011

연도	외국인 범죄자수(명)		외국인 범죄자율(%)	
	합법체류	불법체류	합법체류	불법체류
2005	7,043	1,999	1.3	1.0
2006	9,182	3,475	1.3	1.6
2007	12,563	1,961	1.5	0.9
2008	18,001	2,622	1.9	1.3
2009	20,754	2,590	2.1	1.5
2010	20,636	1,907	1.9	1.1
2011	25,378	1,537	2.1	0.9

주: 1) 외국인 범죄자율=(합법(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자수÷합법(불법)체류 외국인수)×100.

2) 「경찰백서」의 외국인 범죄자수는 앞서 제시된 「범죄통계」의 외국인 범죄자수와 다소 차이가 나는데, 이는 두 자료 간 집계시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

출처: 경찰청, 「경찰백서」, 각 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각 년도.

로 높게 나타나 불법체류 외국인이 합법체류 외국인보다 범죄를 더 적게 저지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사소한 범죄라도 저질러 경찰에 단속되면 강제 추방이 되기 때문에 이들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03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과 특성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요 약

- 성폭력범죄는 2011년에 인구 10만 명당 43건이 발생하였고, 이는 2002년에 비해 1.8배 증가한 것이다. 2011년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전체 성폭력범죄의 4.8%에 불과하나 아동인구 10만 명당 16.3건에 이르고 2002년에 비해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 성폭력범죄의 83.2%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 질수록 '아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성폭력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은 50.5%로 살인, 강도, 방화와 같은 다른 강력범죄 전과자 비율에 비해 낮다. 동종 전과자비율은 18.5%로 2002년에 비해 35.5% 증가하였다.
-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은 최근에 와서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일부만이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되어 수사가 진행되며, 2011년의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된 성폭력범죄자의 23.4%만이 정식 형사재판절차에 회부되었고, 재판에 회부된 범죄자의 24.3%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국민의 공분과 동시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범죄이다. 흉악한 성폭력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이 공분할 때마다 엄벌주의 대책들이 그 실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과정 없이 도입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대책의 대표적인 것들로 성폭력범죄 법정형의 상향 조정,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감형 규정 적용의 배제, 성폭력범죄자의 취업제한, 인터넷과 우편고지를 통한 신상공개, 전자발찌, 성충동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DNA 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이 있다. 엄벌주의에 기초한 성폭력범죄 대책, 특히 과학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강성 통제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그 효과를 맹신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성폭력범죄 대책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의 현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공식 범죄통계인 「범죄분석」, 「전국 범죄피해조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 상담통계 등을 이용하여 한국의 성폭력범죄 발생현황과 추세, 성폭력범죄의 특성,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대응방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성폭력범죄 발생 추세: 실제적인 증가? 혹은 신고율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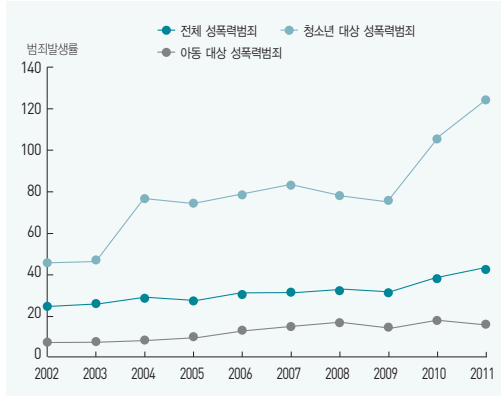
2002년과 2011년 사이에 형법범죄 발생건수는 797,395건에서 997,263건으로 25.1% 증가하였고, 범죄율은 2002년 인구 10만 명당 1,653.3건에서 2011년 1,966건으로 18.9% 증



가하였다. 반면에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는 2002년 11,688건에서 2011년 22,034건으로 지난 10년간 88.5%나 증가하였고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24.3건에서 43.0건으로 77%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중 성폭력범죄는 다른 형법범죄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형법범죄에서 성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1.5%에서 2011년 2.2%로 증가하였다.

성폭력범죄를 아동(12세 이하) 대상 성폭력과 청소년(13-20세)<sup>1)</sup> 대상 성폭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1년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1,053건으로 전체 성폭력범죄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6,743건으로 전체 성폭력범죄의 30.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2002년 595건에서 2011년 1,053건으로 77.0% 증가하였고, 아동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는 2002년 7.0건에서 2011년 16.3건으로 132.8% 증가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2002년 2,509건에서 2011년 6,743건으로 168.8%로 증가하였고, 청소년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는 2002년 46.0건에서 2011년 123.8건으로 169.1% 증가하였다(그림 X-13).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와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성폭력범죄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공식 범죄통계에서 나타난 성폭력범죄의 증가가 실제로 발생한 성

그림 X-13 청소년 및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발생률, 2002-2011



주: 1) 성폭력범죄는 강간범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을 위반 범죄를 포함함.  
2) 청소년 및 아동 피해자의 연령기준은 각각 13-20세 미만, 12세 이하임.  
3) 성폭력범죄 발생률=(성폭력범죄 발생건수÷추계인구)×100,00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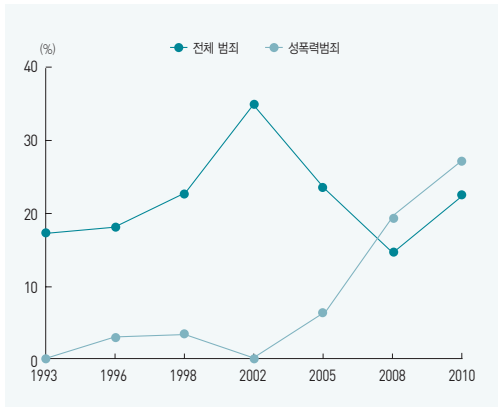
폭력범죄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유보적이다.

공식 범죄통계 상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피해자의 신고 등을 통해서 수사기관이 인지한 성폭력범죄만을 집계한 수치이다. 그런데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일부 성폭력범죄는 최근까지도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다른 범죄에 비해 숨겨진 범죄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공식 범죄통계에서 드러나는 성폭력범죄 발생건수의 증가가 실제로 성폭력사건이 예전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신고율이 높아진 데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을 13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분석」에서는 피해자의 연령을 13세 미만, 13-15세, 16-20세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이 글에서는 불가피하게 청소년을 13-20세로 규정하였다.



그림 X-14 성폭력범죄 신고율, 1993-2010



주: 1) 범죄 신고율은 지난 1년간 범죄피해를 경험한 인구 중 이를 경찰에 신고한 인구의 비율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 년도.

[그림 X-14]는 「전국범죄피해조사」에 의한 성폭력범죄와 전체 범죄의 신고율(범죄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한 사례 중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응답한 비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은 0-3.4%로 같은 시기 전체 범죄의 신고율 17.3-34.9%보다 훨씬 낮았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성폭력범죄 신고율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0년에는 27.0%로 높아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공식통계 상의 성폭력범죄 증가가 부분적으로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로 신고율이 높아진 데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위험한 낯선 사람?

최근 몇 년간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고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성폭력범죄자의 주된 특

성은 피해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낯선 사람(성인)'이며, 그는 이미 성폭력전과를 갖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형성된 이러한 이미지는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및 성폭력범죄자의 전과경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2012년 전체 성폭력범죄의 83.2%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학교·유치원·학원 등의 관계자, 친인척 등과 같은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였다(표 X-9).

표 X-9 성폭력 피해자의 가해자와의 관계별 구성비율, 2002-2012 (%)

가해자와의 관계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아는 사람	76.9	79.9	83.5	84.5	84.8	83.2
친/인척	12.8	11.3	15.5	14.3	12.3	17.3
직장	20.2	26.8	22.7	25.0	25.1	18.8
친밀한 관계	5.1	6.7	7.9	9.0	5.9	9.4
동네사람	7.4	5.2	5.2	3.8	5.7	7.0
학교/유치원/학원	11.9	9.5	10.1	12.0	14.6	15.1
기타	19.7	20.2	22.1	20.6	21.1	15.6
모르는 사람	19.3	16.5	13.2	10.9	11.5	10.2
미상	3.7	3.6	3.3	4.5	3.7	6.6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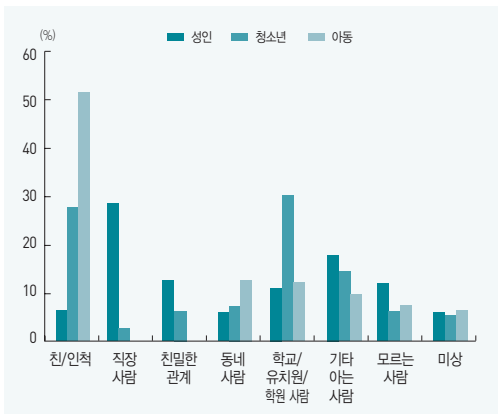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피해자의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2012년 기준 피해자의 주변에서 살고 있는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성폭력범죄가 성인 대상으로는 82.1%인 반면, 청소년과 아동 대상으로는 각각 88.3%와 86.3%인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은 청소년 및 아동의





경우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범죄 발생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아는 사람의 구체적인 유형도 달라져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가해자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28.5%)이거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12.7%)의 비율이 높으며,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가해자가 친인척(27.6%)이거나 학교·유치원·학원 등의 관계자(30.0%)의 비율이 높다. 마지막으로 아동 피해자의 경우에는 친인척의 비율이 51.5%로 매우 높으며, 그 다음은 동네사람(12.7%)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X-15).

**그림 X-15** 성인, 청소년 및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가해자와의 관계별 구성비율, 2012



주: 1) 성인, 청소년 및 아동 피해자의 연령기준은 각각 20세 이상, 14-19세, 13세 이하임.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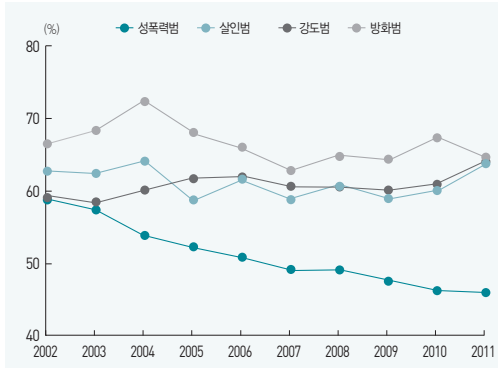
대부분의 성폭력범죄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가정이나 직장, 학교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되는 성폭력범

죄는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나타나 연약한 아동을 상대로 하여 흉악하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에 관한 것이다. 최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도입된 신상공개, 전자발찌, DNA 정보수집 등과 같은 대책들은 성폭력범죄자가 낯선 사람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가 낯선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잘못된 관념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대책들은 시민들에게 낯선 사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잘못된 안전감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신상공개, 전자발찌, 성충동약물치료 등과 같은 강성 형사정책들을 유독 성폭력범죄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용인되는 근거 중의 하나는 성폭력범죄자, 특히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다른 범죄에 비해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은 더 높은가? 한국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을 파악하기 위한 추적연구가 실시된 적이 없으므로, 제한적이거나 공식 범죄통계를 통해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을 다른 범죄자와 비교해 보았다. 공식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성폭력범죄의 평균적인 전과자 비율(본건 이외에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 비율)은 50.5%로 형법범죄에 비해 15.6%p 낮고, 같은 강력범죄인 살인범죄(61.2%), 강도범죄(60.8%), 방화범죄(66.5%)에 비해서도 낮다. 또한, 2002년 성폭력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이 58.9%에서 2011년 46.0%로 지난 10년간 오히려 감소하였다(그림 X-16).



그림 X-16 성폭력범죄자와 강력범죄자의 재범률, 2002-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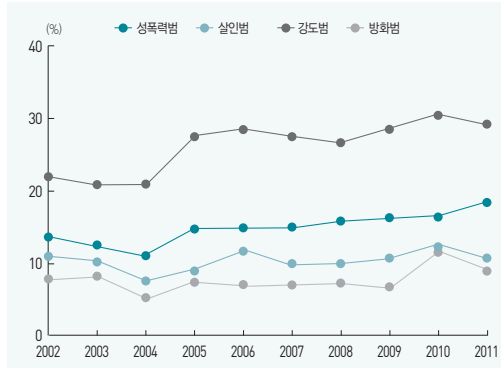


주: 1) 성폭력범죄자는 형법상 강간과 추행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을 위반 범죄를 포함함.

2) 재범률은 해당 범죄자 중 본건이외에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의 비율임.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그림 X-17 성폭력범죄자와 강력범죄자의 동종재범률, 2002-2011



주: 1) 성폭력범죄자는 강간과 추행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을 위반 범죄를 포함함.

2) 동종재범률은 해당 범죄의 재범자 중 이전에 해당 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처분을 받았던 범죄자의 비율임.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재범을 동종재범(이전 처분을 받았던 범죄가 성폭력범죄인 경우)과 이종재범(이전 처분을 받았던 범죄가 성폭력 이외의 범죄인 경우)으로 구분한 후 동종재범률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2002년에서 2011년까지 전과가 있는 성폭력범죄자 중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던 동종재범자 비율은 평균 15.0%였다. 같은 기간 동안 형법범죄의 동종재범자 비율이 평균 33.6%이며, 강도범죄는 26.0%, 살인범죄 10.4%, 방화범죄 7.9%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자비율이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특별히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그림 X-17).

다만 2002년 13.7%였던 성폭력범죄의 동종재범자비율이 2004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

다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18.5%로 2002년 대비 35.3%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할 만하다.

####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낮은 기소율과 실행선고율

지난 10여 년간 다른 범죄에 비해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엄벌주의 형사정책을 견지해왔다. 이러한 강력한 대책들이 범죄억제 효과가 있을까? 주지하다시피,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라는 처벌의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의 엄격성 강화만으로는 범죄억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점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 중 어느 정도가 강력한 중형주의 대책의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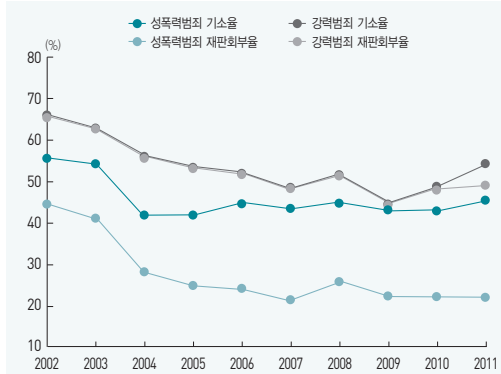


앞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은 매우 낮다. 여성가족부가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의 2010년 결과를 보면, 성폭력 범죄 피해율은 인구 10만 명당 2,887.3명으로 공식통계에 비해 약 90배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강간 및 강간미수와 같이 심각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12.3%에 불과하였다. 이는 실제로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일부만이 수사기관에 신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수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져야만 성폭력범죄자들은 강력한 엄벌주의 정책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일관된 엄벌주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성폭력범죄자 기소율은 2002년 55.8%에서 2011년 45.4%로 오히려 10.4%p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은 성폭력범죄를 제외한 다른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에 비해 일관되게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기소처분을 받은 범죄자 중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 대상자가 되는 비율을 제외하고 형사재판절차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게 된 범죄자의 비율은 2002년 44.6%에서 2011년 22.0%로 22.6%p 감소하였다(그림 X-18).

마지막으로 법원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판 현황을 살펴보면, 징역형 선고비율은 2002년 33.4%에서 2011년 24.3%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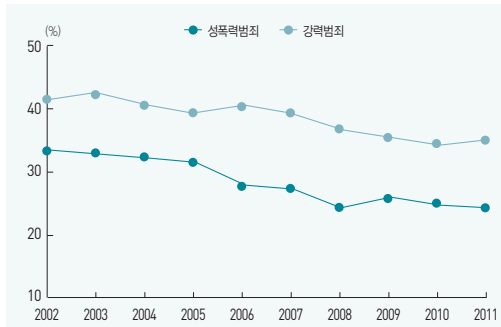
그림 X-18 성폭력범죄와 강력범죄의 기소율 및 재판 회부율, 2002-2011



주: 1) 성폭력범죄는 강간과 추행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을 위반 범죄를 포함함.  
2)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및 방화 등의 범죄를 포함함.  
3) 기소율은 해당 범죄자 중 기소자의 비율임.  
4) 재판회부율은 해당 범죄자 중 재판에 회부된 범죄자의 비율임.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다. 성폭력범죄를 제외한 다른 강력범죄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비율도 2002년 41.3%에서 2011년 35.0%로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성폭력범죄자에 비해 징역형 선고비율이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감소폭도 훨씬 적다(그림 X-19).

그림 X-19 성폭력범죄와 강력범죄의 징역형 선고 비율, 2002-2011



주: 1) 성폭력범죄는 형법 상 강간과 추행의 죄를 의미함.  
2) 강력범죄는 살인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및 방화와 실화의 죄 등을 포함함.  
3) 징역선고 비율은 해당 범죄의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무기 또는 유기형이 선고된 사건의 비율임.  
출처: 법무부, 「사법연감」, 각 년도.



###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심각한 성폭력범죄인 강간과 강간미수의 경우에도 여전히 12%대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성폭력범죄는 사건화되지 않은 채 묻혀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신고를 한 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 측의 합의종용으로 고소를 취하하거나 증거불충분, 성폭력범죄자 검거실패 등의 이유로 기소하지 못하여 신고된 사건의 약 22%만이 정식 형사재판절차에 회부되었고, 형사재판절차에 회부된 성폭력범죄자의 24.3%만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부의 성폭력범죄자만이 형사재판절차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다보니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신상

공개, 전자발찌, 성충동약물치료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검거된 성폭력범죄자에게 처벌과 통제를 강화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엄벌주의 형사정책이 성폭력범죄를 막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보다는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안전과 인권을 철저히 보호받으면서 의료 및 법률 지원 등의 여러 가지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줌으로써 피해자의 신고율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물증과 목격자 확보가 어려워 피해자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성폭력범죄의 특성 상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보강할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유죄판결을 이끌어 낼 형사사법실무자들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STATISTICS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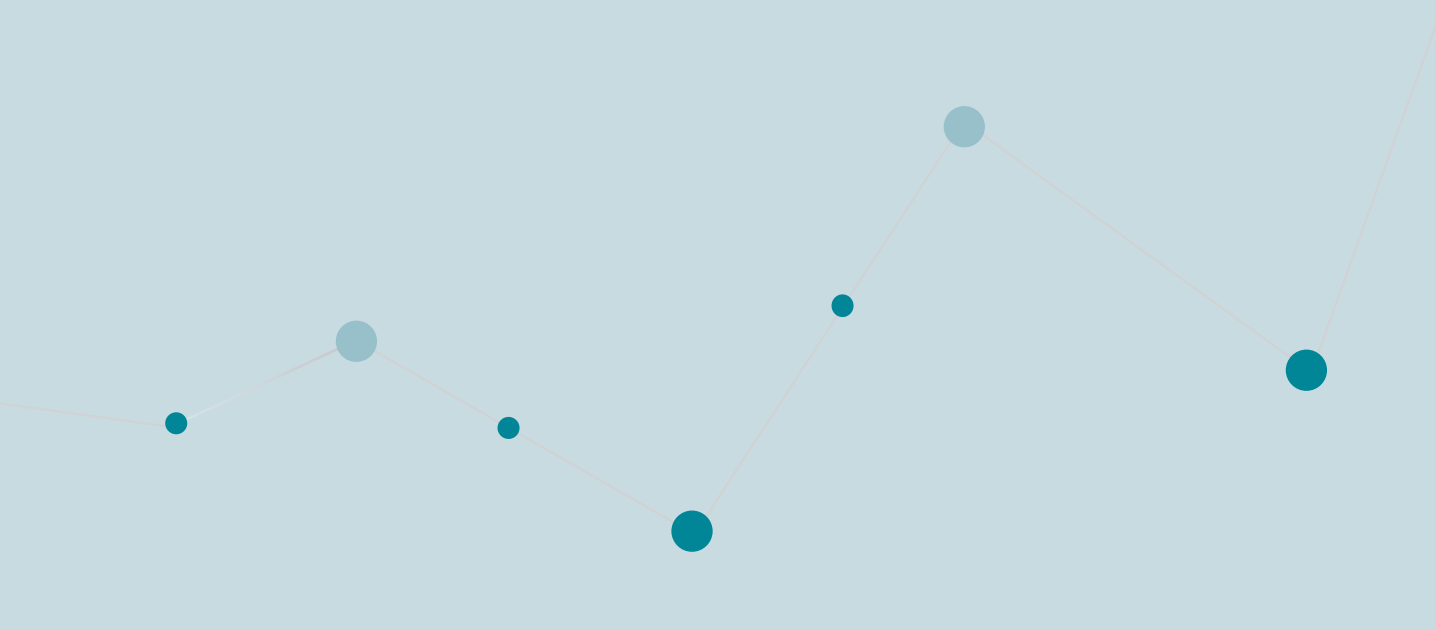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XI

## 사회통합

Social Cohesion

- |                     |              |                     |
|---------------------|--------------|---------------------|
| 01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변화   | 한 준   연세대학교  | <a href="#">290</a> |
| 02 주관적 삶에 대한 만족도 격차 | 한 준   연세대학교  | <a href="#">301</a> |
| 03 투표와 정치참여         | 김석호   성균관대학교 | <a href="#">308</a> |



## 01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변화

한 준(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요 약

- 1990년대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던 투표율은 201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젊은 층에서의 증가가 주도하고 있다.
- 공공질서 수준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불법시위가 크게 줄어 법질서에 대한 존중이 높아지고 있다.
- 대인신뢰는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며, 기관신뢰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 계층별 귀속감에 큰 변화는 없지만, 계층 간 이동기회의 인식 즉 역능감의 격차는 증가했다.
- 사회보장지출의 증가와 함께 사회보장 여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 사회, 정치적 참여의 변화

## 선거참여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정치과정에 얼마나 반영시키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적 의사결정과정에 시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치참여의 대표적 형태인 투표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지난 1992년 대선에서 81.9%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1997년에는 80.7%, 2002년에는 70.8%, 그리고 2007년에는 63.0%까지 떨어졌다. 또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1992년 71.9%, 1996년 63.9%, 2000년 57.2%, 2004년 60.6%, 2008년 46.1%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왔다. 투표율 하락은 시민들의 정치 무관심과 불신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투표율은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 54.5%로 2006년 대비 2.9%p 상승하였고, 2012년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75.8%로 2007년 대비 12.8%p나 상승하였다. 2012년 국회의원선거 역시 54.2%로 2008년 대비 8.1%p 높아졌다. 투표율 증가는 대부분 연령층에서 나타나지만 특히 20-30대 젊은 층 유권자의 투표참여가 두드러진다.



표 XI-1 대선, 총선 및 지방선거 투표율, 1992~2012 (%)

연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1992	81.9	71.9	-
1995	-	-	68.4
1996	-	63.9	-
1997	80.7	-	-
1998	-	-	52.7
2000	-	57.2	-
2002	70.8	-	48.8
2004	-	60.6	-
2006	-	-	51.6
2007	63.0	-	-
2008	-	46.1	-
2010	-	-	54.5
2012	75.8	54.2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 사회단체참여

사회단체참여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확인하고 공공의 이슈에 관여하여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또한 사회단체참여를 통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사회자본은 그 사회의 도덕적 용량을 키워나갈 뿐만 아니라 협동을 가능케 하고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한국의 사회단체참여율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까지 23.1%로 매우 저조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40% 전후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면 사회단체참여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40~50대, 교육수준별로는 대학교 이상,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 사무직, 농어업직의 사회단체참여율이 다른 인구집단보다 높아서 사회단체참여

를 통한 혜택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XI-2).

표 XI-2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사회단체참여율, 1999~2011 (%)

	1999	2003	2006	2009	2011
전체	23.1	44.8	38.8	39.8	46.6
성					
남자	28.3	48.2	41.0	42.0	47.8
여자	18.3	41.6	36.6	37.6	45.4
연령					
20대 미만	11.5	23.7	19.3	22.0	32.4
20대	22.6	41.4	32.7	35.6	44.1
30대	26.3	47.1	39.4	40.3	46.2
40대	31.0	53.7	47.2	48.8	54.7
50대	27.5	54.9	48.7	49.7	55.8
60대 이상	13.5	37.1	34.6	32.0	40.5
교육수준					
초졸 이하	10.5	34.5	29.9	27.1	33.5
중졸	16.3	38.5	32.3	30.7	41.4
고졸	26.2	45.8	39.6	39.1	47.1
대학교 이상	38.7	55.2	46.9	51.1	55.4
직업					
전문·관리직	45.0	59.0	51.6	55.5	59.7
사무직	32.0	52.8	44.2	51.3	55.5
서비스·판매직	22.6	46.0	40.2	42.8	50.4
농어업직	18.4	48.9	47.3	45.0	55.7
기능·노무직	21.6	46.4	38.8	39.0	45.1

주: 1) 사회단체참여율은 전국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임.

2) 2011년 자료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주로 참여하는 사회단체를 살펴보면, 친목 및 사고 단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여기에 종교단체와 취미, 스포츠 및 레저 단체를 합하면 대략 90% 정도를 차지하게 된다. 건강한 시민사회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시민사회단체나 공공의 이슈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이익단체, 혹은 정치단체에 대한 참여는 1% 혹은 그 이하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00년대 전



반에 걸쳐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전반적인 사회단체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사회단체참여의 질적 수준도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자원봉사와 기부

2007년 겨울 발생한 태안 앞바다 허베이스트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지역주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 연인원 140만여 명이 참여한 방재자원봉사활동은 전 세계에 큰 인상을 주었다. 피해 지역의 공동체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정상을 찾게 된 것은 이런 대규모의 자원봉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전국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 인구의 백분율인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은 1999년에서 2006년까지 13~14%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다가, 2009년 19.3%, 2011년 17.6%로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시기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복지 관련 시설 자원봉사가 58.2%로 가장 활발하였고, 그 다음이 환경보전과 범죄예방(20.6%),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16.0%), 자녀교육 관련 봉사(8.8%) 순이며, 국가 및 지역 행사에서의 자원봉사(7.7%)와 재해지역돕기(4.4%)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최근 이루어진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의 증가가 인구 전체에 의해 골고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림 XI-1]에서 잘 나타나듯이 연령대별로 보

면,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의 가파른 증가는 20대 미만 인구집단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대학입학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려는 현실적 필요성과 맞닿아 있을 것이다. 반면 고학력자나 전문·관리직 종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대학 이상 학력자와 고등학교 학력자의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은 각각 17.5%와 14.6%이고, 전문·관리직 종사자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의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은 각각 19.3%와 13.6%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림 XI-1 연령별 자원봉사활동참여율, 1999-2011



주: 1)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은 전국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임.

2) 2011년 자료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2006년에 최초로 후원(기부)항목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전체 인구의 31.6%가 기부를 했고, 2009년에는 약간 증가하여 32.3%가 기부를 했다.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후원방법은 사회복지단체(46.9%),



언론기관(21.8%), 종교단체(21.1%), 직장(13.8%),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12.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행스러운 것은 자원봉사활동과는 달리 후원 활동은 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입시생들의 활동에 크게 의존하는 자원봉사활동참여율과는 달리 경제활동을 가장 많이 할 시기인 40대를 중심으로 30대와 50대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목할 점은 2011년에 20대 미만의 후원과 기부 비율이 매우 크게 높아졌다는 점

이다. 이것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학생들의 대학입학을 위한 필요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후원활동참여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직업별로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의 후원활동참여율이 높게 나타난다(표 XI-3).

## 사회적 질서와 신뢰의 변화

### 법질서와 준법정신

준법정신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본인에 대한 평가와 타인에 대한 평가가 커다란 대조를 이룬다.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타인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평가는 26.4%에 이르는 반면 본인이 그렇다는 평가는 2.9%에 불과하다. 그러나 타인이 법을 잘 지킨다는 평가는 34.3%인 반면 본인이 그렇다는 평가는 65.3%에 이른다. 이러한 평가는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로 별 차이 없이 일관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과거(1997, 2001, 2005, 2008, 2010)의 조사들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본인에 대한 평가와 타인에 대한 평가 간의 차이를 전적으로 본인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모순적 태도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법을 어기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소수에 불과하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 것이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타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표 XI-3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후원활동참여율, 2006-2011 (%)

	2006	2009	2011
전체	31.6	32.3	36.4
성			
남자	34.3	34.2	38.7
여자	29.1	30.4	34.2
연령			
20대 미만	15.3	19.4	41.1
20대	19.2	23.2	25.5
30대	36.3	38.4	40.2
40대	42.2	42.9	45.7
50대	39.3	38.9	41.1
60대 이상	26.7	21.5	24.0
교육수준			
초졸 이하	21.7	16.5	24.2
중졸	25.6	23.7	35.7
고졸	30.7	29.1	30.6
대학교 이상	42.9	48.1	49.7
직업			
전문·관리직	48.5	54.8	56.6
사무직	43.0	51.0	55.2
서비스·판매직	33.0	33.9	38.1
농어업직	30.2	27.8	30.2
기능·노무직	31.3	29.0	34.4

주: 1) 후원활동참여율은 전국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후원금(기부금)을 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2011년 자료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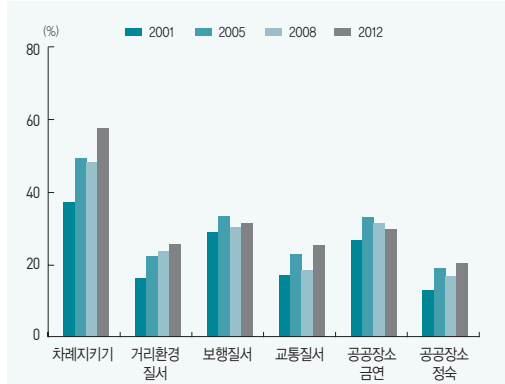
2011년 「사회조사」에서는 공정사회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문들을 질문한 결과 조세(27.8%)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이어서 취업(25.2%)과 경찰·사법(19.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법의 집행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죠”라는 2009년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의 46.2%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반면,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7.8%, ‘평등하다’는 응답은 26.0%에 불과하다.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학력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가장 불평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40대, 그리고 사회적 약자 집단일수록 법집행을 더 불평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 공공질서

통계청의 「사회조사」로 파악된 공공질서 수준에 대한 평가는 작은 폭으로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된 차례(순서)지키기의 경우를 보면 ‘비교적 잘 지킨다’와 ‘아주 잘 지킨다’를 합한 긍정응답의 비율이 가장 낮았던 2001년의 37.6%에 비해 2012년에는 58.0%로 20.4%p 상승하였다. 2012년을 기준으로 긍정응답 비율을 보면 보행질서(31.9%)와 공공장소 금연(30.6%)이 차례지키기의 뒤를 잇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거리환경질서(26.0%), 교통

질서(26.0%), 공공장소 정숙(21.0%)의 순서이다 (그림 XI-2).

그림 XI-2 공공질서 준수에 대한 평가, 2001-2012



주: 1) 공공질서 준수에 대한 평가는 전국 15세 이상 인구 중 해당 공공질서에 대한 국민의 준수 수준이 '아주 잘 지킨다' 또는 '비교적 잘 지킨다'고 평가한 인구의 비율임.

2) 2012년 자료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불법시위

집회와 결사는 활성화된 시민사회의 징표이고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사회자본이다. 그러나 불법시위는 사회 발전 내지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여기서는 불법폭력시위 현황을 발생률과 경찰부상자수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비하면 집회와 시위도 평화적인 기조로 안정화되고 있으나, 일부의 시위는 여전히 폭력을 수반하고 있다. 연평균 불법폭력시위는 1997년까지는 연간 500-800건 정도였는데, 1998년 이후에는 100건 내외로 줄었고, 2004년 이후로는 100건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부상 경찰관수도 1990년대 초반 1,000

명이 넘는 수치를 오르내리다가 2010년 이후에는 100명 남짓으로 크게 감소하였다(표 XI-4).

**표 XI-4** 불법폭력시위 발생건수와 부상 경찰관수, 1993-2011

연도	전체집회 발생건수	불법폭력시위 발생건수	부상 경찰관수
1993	6,390	267	1,080
1994	8,753	588	2,128
1995	6,857	809	1,203
1996	6,510	811	1,882
1997	6,179	664	1,016
1998	7,684	67	166
1999	11,750	129	484
2000	13,012	105	582
2001	13,083	215	673
2002	10,165	118	287
2003	11,837	134	749
2004	11,338	91	621
2005	11,036	77	893
2006	10,368	62	817
2007	11,904	64	202
2008	13,406	89	577
2009	14,384	45	510
2010	8,811	33	18
2011	7,762	45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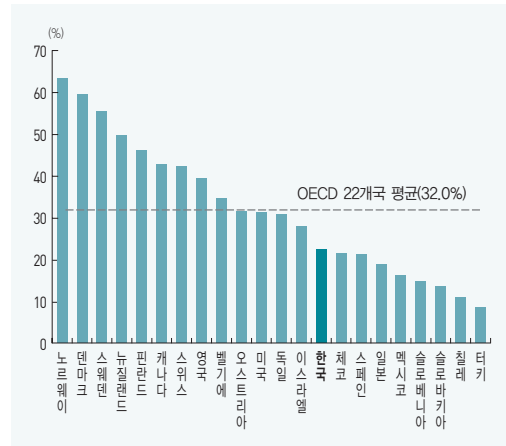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경찰백서, 각 년도.

## 대인신뢰

삶의 질이 높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일반화된 신뢰라고도 하는 대인신뢰는 나와 특수한 관계가 아닌 낯선 사람이 얼마나 나를 이용하거나 해치지 않고 선의로 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를 의미한다. 2010년의 「국제사회조사 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에서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한국 사람들의 비율은 22.3%인데, 이는 비교대상이 된 OECD 22개국 중에서 순위로는 14번째이며 전체 평균인 32.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그림 XI-3).

**그림 XI-3** OECD 국가의 대인신뢰도, 2010



주: 1) 대인신뢰도는 각국 조사대상자 중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또는 '항상 신뢰할 수 있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10: Environment III,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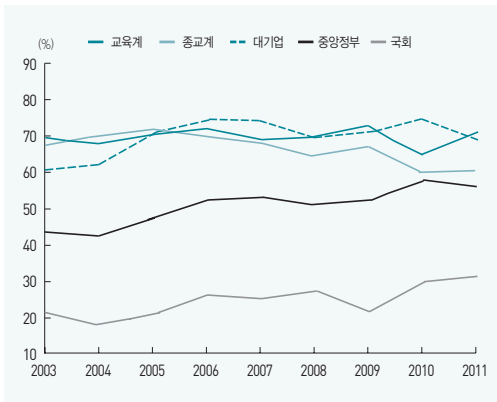
## 기관신뢰

한국의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는 대인신뢰보다도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XI-4]는 「한국종합사회조사」의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가 보여주고 있는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 정도의 변화이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관에 대한 신뢰는 최근으로 올수록 매우 완만하지만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이다. 가장 낮은 신뢰를 받는 기관인 국회도 2003년에



21.3%였다가 2011년에는 31.0%까지 높아졌고, 그 다음의 낮은 신뢰를 받는 중앙정부 역시 2003년 43.4%에서 2011년 56.1%까지 올라갔다. 2011년 현재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기관은 교육계와 대기업으로 각각 70.9%와 69.0%의 신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교계는 신뢰가 완만하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데 2003년 67.5%에서 2011년 60.4%로 낮아졌다.

그림 XI-4 기관신뢰도, 2003-2011



주: 1) 기관신뢰도는 전체 조사대상자(만 19세 이상) 중 해당 기관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매우 신뢰한다' 또는 '다소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각 년도.

신뢰는 사회의 도덕적 용량을 재는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는 신뢰가 사회적 제재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합행동의 논리에 따르면, 규범이 강한 사회에서 신뢰는 공공의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제재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시민적 규범이 강력한 사회에서 신뢰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하는 사회구

성원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규칙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사회자본이 풍부한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 대의제로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 사회이동 및 차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

개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감과 역동성, 즉 사회심리적 역능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 첫 번째로 주관적인 계층귀속감과 계층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보기로 하겠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의하면 계층귀속감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가구주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주관적 계층귀속감은 2011년에 상층 1.9%, 중간층 52.8%, 하층 45.3%로 나타났는데, 1999년과 비교해 보면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0.8%p 증가하였고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1%p 감소하였

표 XI-5 주관적 계층귀속감, 1999-2011

연도	상층	중층	하층
1999	1.1	54.9	44.0
2003	1.4	56.2	42.4
2006	1.5	53.4	45.2
2009	2.7	54.9	42.4
2011	1.9	52.8	45.3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으며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3%p 증가하였다(표 XI-5).

본인과 자식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물어본 결과는 ‘희망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격차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일생 동안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면, 본인세대에 비해 자식세대의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이어서 자신의 성취에 대한 기대는 낮은 반면, 자식세대의 성취에 대한 기대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상층으로 갈수록 본인과 자식세대의 이동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하층으로 갈수록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계층에 따른 역능감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2006년과 2011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들을 발견한다.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과 관련하여 상층은 2006년에는 58.0%가 ‘높다’고 응답한 반면, 2011년에는 65.3%가 ‘높다’고 응답하여 7.3%p 증가하였다. 중간층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34.6%에서 35.9%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하층 역시 18.2%에서 18.9%로 거의 비슷했다. 계층 간 희망의 격차가 유지될 뿐 아니라 다소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자식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는 비관적 인식이 전 계층에서 늘어나지만 특히 중층과 하층에서 비관적 인식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XI-6, 표 XI-7).

**표 XI-6** 주관적 계층별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2006-2011 (%)

주관적 계층	2006			2009			2011		
	높음	낮음	잘 모름	높음	낮음	잘 모름	높음	낮음	잘 모름
전체	27.5	46.7	25.7	35.7	48.1	16.2	28.8	58.8	12.5
상층	58.0	30.1	11.9	74.2	20.2	5.6	65.3	30.0	4.7
중층	34.6	43.7	21.6	45.1	43.3	11.5	35.9	56.3	7.8
하층	18.2	50.8	31.1	21.0	56.0	23.0	18.9	62.8	18.3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표 XI-7** 주관적 계층별 자식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2006-2011 (%)

주관적 계층	2006			2009			2011		
	높음	낮음	잘 모름	높음	낮음	잘 모름	높음	낮음	잘 모름
전체	39.9	29.0	31.2	48.4	30.8	20.9	41.7	42.9	15.4
상층	60.0	22.7	17.3	74.5	18.9	6.6	59.3	32.4	8.2
중층	46.0	28.0	26.0	56.7	27.3	16.0	48.8	41.2	10.1
하층	32.0	30.3	37.7	35.9	36.0	28.0	32.8	45.4	21.9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차별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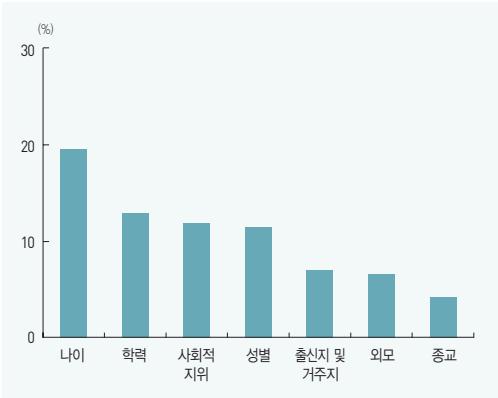
성, 연령, 인종, 교육수준 등에서 구분되는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대우 또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중요 요인이다.

2011년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본인이나 주위에서 차별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다양한 측면들에 걸쳐 질문하였다. 나이에 따른 차별의 경험(19.5%)이 가장 많았고, 그밖에 학력(13.0%)이나 사회적 지위(11.9%), 성별(11.5%)에 따른 차별도 꽤 높은 빈도를 보였다. 나이에 따른 차별은 연령이 많거나 적기 때문에 경험한 차별을 모두 포함한다. 반면 종교(4.2%)나 외모



(6.6%), 지역(7.0%)에 따른 차별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지 않았다(그림 XI-5).

그림 XI-5 사회적 차별 경험률, 2011



주: 1) 사회적 차별 경험률은 전체 조사대상자(만 19세 이상) 중 지난 1년간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해당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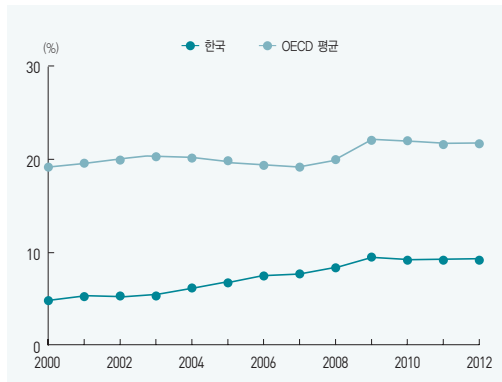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은 교육, 고용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2011년 조사결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합쳐 72.3%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등급이 높은 장애인일수록 차별이 더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소 자신이 장애인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것에 대한 응답에서는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3.9%에 불과해서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평가와 응답자 스스로의 인식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 사회보장의 변화

###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

[그림 XI-6]은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의 추이를 OECD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한 것이다. GDP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과 계산값들이 존재하지만, 이 글에서는 OECD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값을 사용하였다.

그림 XI-6 한국과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비율, 2000-2012



출처: OECD,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database),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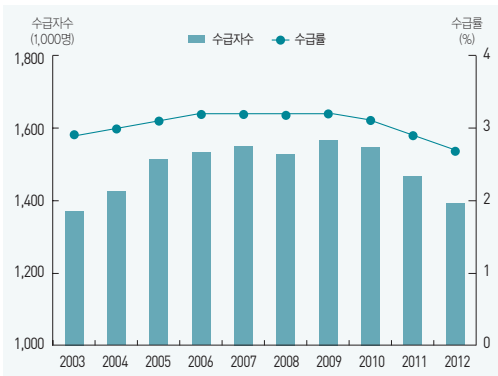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전반적으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지 않다. OECD 국가들의 평균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2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비해 한국은 전반적으로 10% 미만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복지지출은 2000년대 들어 조금 주춤하기는 했지만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와 함께 국민의 복지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복지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그림 XI-7]은 공공부조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2000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와 수급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업이나 재해 등과 같은 사회보험의 급여대상이 아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최저 수준의 인간다운 생활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지원을 받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는 수급자의 수와 수급률은 2000년대 후반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대 들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XI-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와 수급률, 2003-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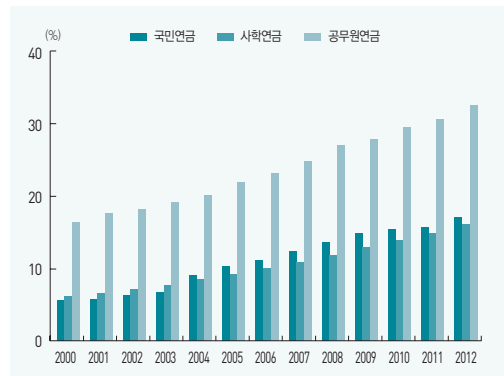
주: 1) 수급률=(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주민등록인구)×100.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 년도.

연금제도는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기 힘든 노후 생활을 위해 경제활동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이다. 연금제도는 그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제도와 국가

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나뉜다. 공적연금에는 일반국민 대상의 국민연금과 특수직 종사자 대상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이 있다.

[그림 XI-8]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수급률의 추이를 보여준다. 2000년대 들어 공적연금 수급률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수급대상자들의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공적연금의 부담이 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림 XI-8 공적연금 수급률, 2000-2012



주: 1) 수급률은 가입자 대비 수급자의 비율임.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년도;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각 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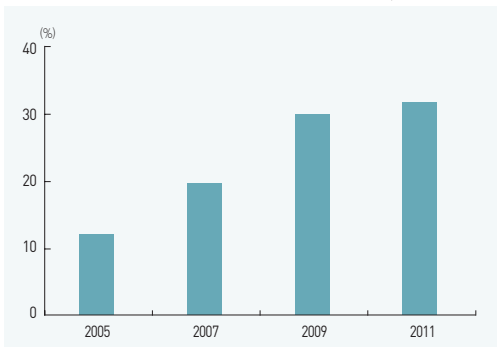
##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 인식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여건이 지난 3년간 좋아졌는지 혹은 나빠졌는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한다. [그림 XI-9]는 사회보장제도의 여건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



율의 추이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보여준다. 사회보장제도의 여건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2005년 11.9%에서 2011년 31.7%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국민의 사회보장 여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XI-9 사회보장제도 여건 개선에 대한 인식, 2005-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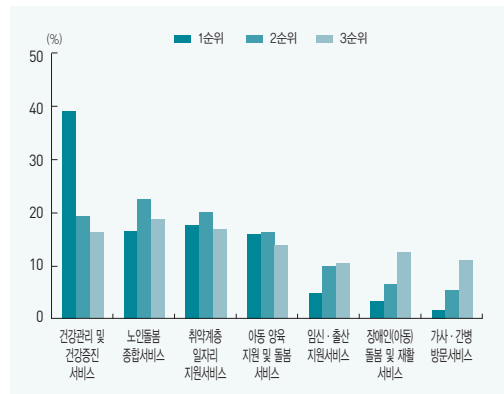


주: 1) 사회보장제도 여건 개선에 대한 인식은 전국 15세 이상 인구(2011년은 19세 이상 인구) 중 지난 3년 전과 대비하여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제도가 '많이 좋아졌다' 또는 '약간 좋아졌다'라고 인식하는 인구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그림 XI-10]은 2011년 「사회조사」에서 향후 늘어나기를 바라는 복지서비스의 종류를 선택하

도록 한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세 가지를 응답한 결과이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복지서비스는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노인돌봄과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서비스, 그리고 아동양육지원 및 돌봄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과 돌봄,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 서비스가 늘어나야 한다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XI-10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2011



주: 1)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1.

# 02

## 주관적 삶에 대한 만족도 격차

한 준(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요약

-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중간 정도 수준에서 2000년대에 걸쳐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남녀 간의 주관적 만족도 차이는 거의 없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특히 50대 이후 만족도가 떨어진다.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만족도가 높지만, 경제적 수준에 따른 만족도의 격차는 그보다 더 크다.
-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느낄수록,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을수록, 그리고 건강이 나쁠수록 만족도는 떨어진다.
- 여가 및 소비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수준이며,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한국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21세기 들어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국민 행복의 증진이라는 문제가 큰 관심사가 되었다. 20세기말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을 계속해 왔지만 그만큼 삶의 질이 높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사회지표와 경제지표가 있다. 사회지표는 사람들의 삶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환경을 측정하고 평가한다면, 경제지표는 경제적 활동의 구조와 추세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한다. 이러한 객관적 지표들이 삶의 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좋은 삶'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지표들의 합으로만 요약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조건들의 합이 개인이 느끼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관점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의뢰를 받아 작성된 스티글리츠 보고서는 물론 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에 반영되어 둘 모두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핵심적 요소로 포함시켰다.

삶의 질 측정에 주관적 측정치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무리 전문가일지라도 타인의 눈으로 관찰되고 평가된 객관적 지표만으로는 삶의 질적 수준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것은 삶의 부분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지는 모르지만 삶을 바라보는 개인의 포괄적인 관점은 반영하지 못한다. 삶의 질에 대한 대표적 주관적 측정치인 주관적 안녕감은 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으로 나뉘는데, 그 중



인지적 요소는 삶에 대한 만족도이다.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은 개인 스스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잣대를 사용해서 자신의 삶 전체 혹은 영역별(사회적 관계, 일 등) 만족감을 평가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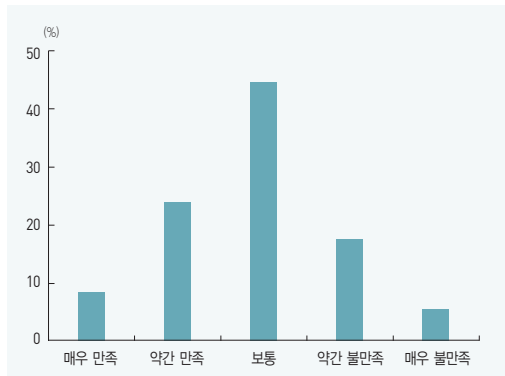
이 글은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2003년부터 포함되었고 또한 2009년부터 매년 조사되는 주관적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최근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응답의 분포 및 연도별 만족도의 추이를 살펴본다. 이어서 연령, 학력, 소득, 건강, 고용안정, 사회적 관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가족관계, 여가생활, 일자리, 소비생활 등 중요한 생활영역별로 만족도의 분포를 살펴보고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의 국제비교 자료를 통해 한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파악한다.

### 삶에 대한 만족도 분포와 추이

[그림 XI-11]은 2012년 「사회조사」에서 질문된 삶에 대한 만족도 문항의 응답 분포를 보여준다. 중간 범주인 '보통'이라는 응답이 44.8%로 가장 많고, '매우 만족' (8.4%)과 '약간 만족' (23.9%)을 합쳐서 '만족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32.3%로 '불만족한다'는 응답 22.8%보다 9.5%p 더 높다.

그러면 「사회조사」에 삶에 대한 만족도 문항이 포함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근까지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져 왔는가 아니면 낮아져 왔는가?

그림 XI-11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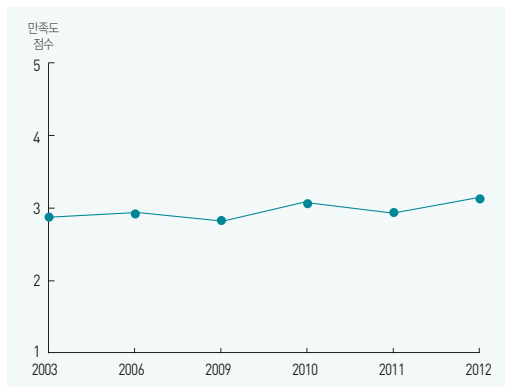


주: 1)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전국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2.

'매우 불만족'을 1점, '약간 불만족'을 2점, '보통'을 3점, '약간 만족'을 4점, '매우 만족'을 5점으로 환산한 5점 척도의 평균값 추이를 2003년부터 최근까지 보여주는 [그림 XI-12]를 살펴보자. 대체로 2000년대에 들어 삶에 대한 만족

그림 XI-12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 2003-2012



주: 1) 만족도 점수는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1-5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2) 전국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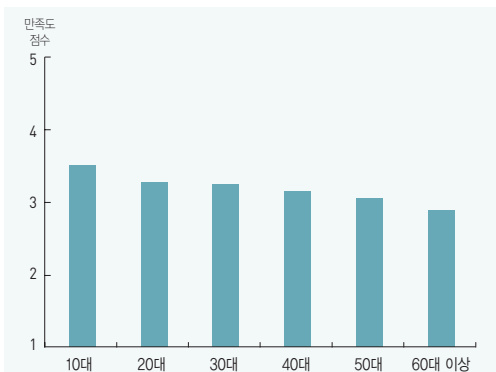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도 수준은 만족과 불만족의 중간 정도를 유지하며 커다란 변화는 눈에 띄지 않는다.

### 인구학적 배경별 삶에 대한 만족도

인구학적 배경별로 삶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자. 성별로는 5점 척도 평균으로 남성이 3.16, 여성이 3.13으로 나타나 남녀 간에 유의미한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연령별로는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연령대별로 삶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한 [그림 XI-13]을 보면 10대가 평균 3.52로 만족에 가까운 반면, 60대 이상은 2.89로 보통보다 조금 낮게 나타난다. 연령대별로 일관되게 나이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XI-13 연령별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 2012



주: 1) 만족도 점수는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1-5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2) 전국 15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2.

비교적 눈에 띄게 만족도가 낮아지는 구간은 10대와 20대 사이, 그리고 50대와 60대 사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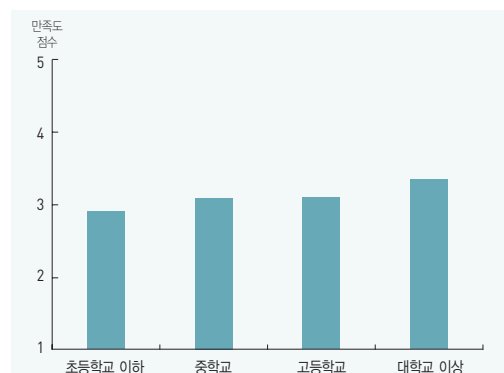
다. 20대의 만족도 저하는 청년층의 취업에 대한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50대 이후 만족도의 저하는 대체로 은퇴 및 노후와 관련된 삶의 어려움과 불안정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은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사회경제적 배경별 삶에 대한 만족도

사회경제적인 능력과 분배의 격차는 삶에 대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표적인 배경 변수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교육수준별로 삶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한 [그림 XI-14]를 보면,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일관되게 삶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의 평균이 3.36인 반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은 보통보다 낮은 2.92이다. 특히 초등학교

그림 XI-14 교육수준별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 2012



주: 1) 만족도 점수는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1-5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2) 전국 15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2.

이하와 중학교 학력,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상 학력 사이에 격차가 존재한다.

고등교육은 현대 사회에서 직업적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인적 자본인 동시에 다양한 관심과 취향을 갖게 하는 등 삶에 대한 태도와 의식을 고양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삶의 질에 대한 연구 문헌들에서도 교육을 통한 능력의 획득이 삶의 질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소득수준별 삶에 대한 만족도의 비교는 [그림 XI-15]에 제시되어 있다. 이때 소득은 월 가구 소득으로 측정하였다. 가구의 소득수준과 가구원의 삶에 대한 만족도 간에는 거의 비례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이 100만원씩 증가할 때마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0.1 정도씩 증가하며,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사이에는 5점 척도의 한 계단만큼의 차이가 존재한다. 가구소득은 가구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 예컨대 건강이나 여가, 주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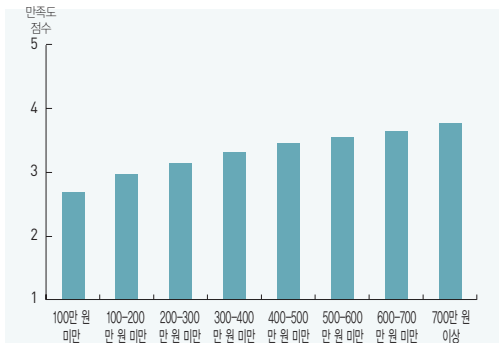
에서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 격차는 주목할 현상이다. 또한 이것은 상대적 소득 증가에 따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비례해서 높아진다는 이스털린의 주장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 사회경제적 안정성과 삶에 대한 만족도

현대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한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자연재해나 기술적 위험 외에도 사회경제체계의 변동에 따른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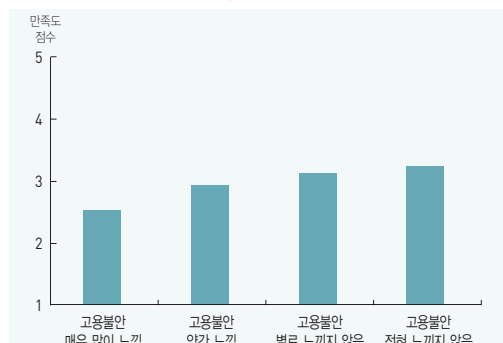
사회경제체계의 불안정의 대표적인 예가 노동시장에서 느끼는 고용의 불안정이다. 고용의 불안정을 얼마나 느끼는가에 따라 삶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림 XI-16]이다. 고용 불안정을 '매우 많이 느낀다'는 집

그림 XI-15 소득수준별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 2012



주: 1) 만족도 점수는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1-5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2) 전국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  
3) 소득은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2.

그림 XI-16 고용불안감에 따른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 2011



주: 1) 만족도 점수는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1-5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2) 전국 19세 이상 가구원 중 지난 1주일동안 경제활동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1.

단의 삶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2.54로 낮은 것에 비해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집단의 평균은 3.25로 상대적으로 높다. 만족도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은 고용의 불안정을 매우 많이 느끼는 집단과 약간 느끼는 집단이며, 다음으로 차이가 큰 것은 약간 느끼는 집단과 별로 못 느끼는 집단이다.

삶의 불안정이나 불확실성을 완화시켜 주는 것은 사회적 차원에서는 정부의 복지와 민간의 보험이지만,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이다. 어려운 일이나 급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존재는 삶의 불안정에 따른 만족도 저하를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혹은 급하게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이야기를 함께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삶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본 것이 [그림 XI-17]이다. 이 그림을 보면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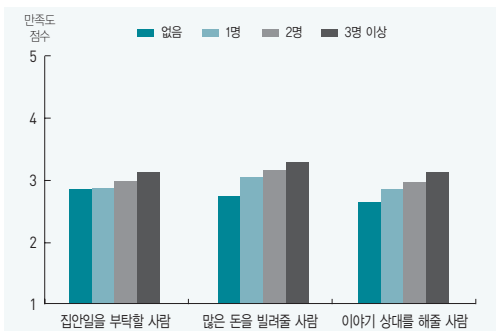
늘어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에 가장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많은 돈이 필요할 때 빌려줄 사람이 있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큰 경우는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할 때 상대해 줄 사람이 많은 경우이다.

### 건강상태와 삶에 대한 만족도

삶의 질에 대한 연구문헌들에서는 개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을 뿐 아니라 여가생활, 사회생활 등 다양한 활동 면에서 적극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삶의 질 연구에서 능력 혹은 역량(capability)이 중요하다고 할 때 정신적 혹은 지적 역량을 높이는 교육과 함께 신체적 역량을 높이는 건강과 보건의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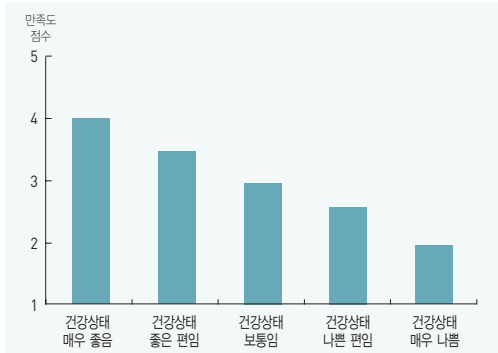
주관적으로 평가한 건강상태별로 삶에 대한 만족도 평균을 비교한 [그림 XI-18]을 보면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그 관계는 거의 직선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은 약간 만족에 가까운 3.99인 반면, 건강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은 보통에 가까운 2.95이고, 건강이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은 약간 불만족에 가까운 1.94이다. 이 분석 결과는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에 대한 질문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건강을 꼽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그림 XI-17** 사회적지지 연결망 정도에 따른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 2011



주: 1) 만족도 점수는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1-5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2) 전국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은 19세 이상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1.

그림 XI-18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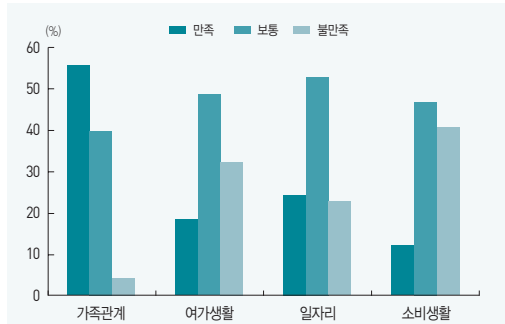
주: 1) 만족도 점수는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1-5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2) 전국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1.

### 삶의 주요 영역별 만족도

이제까지 우리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면 삶의 중요 영역별로 만족도의 분포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자.

영역별로 비교해 보면 가족관계에 대해 55.6%가 '만족한다'고 응답해서, '불만족한다'(4.4%)와 '보통이다'(40%)는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여가생활이나 소비생활에 대해서는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더 우세했다. 여가생활의 경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32.5%인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18.7%에 불과했으며, 소비생활의 경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40.9%인 데 비해 '만족한다' 응답은 12.3%에 그쳤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24.4%로 '불만족한다'는 응답 22.7%에 비해 약간 우세하게 나타났다(그림 XI-19).

그림 XI-19 삶의 주요 영역별 만족도,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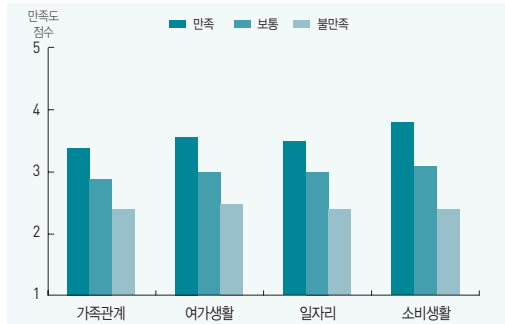


주: 1) 삶의 주요 영역별 만족도는 전국 15세 이상 가구원(소비생활은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가족관계, 평소 여가생활, 현재 일자리, 현재 전반적인 소비생활 등 각각에 대하여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2) 가족관계 만족도는 2012년 자료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1, 2012.

이들 영역별 만족도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어떤 관계를 보일까? [그림 XI-20]은 영역별 만족도에 따라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 평균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XI-20 삶의 주요 영역별 만족도에 따른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 2011



주: 1) 만족도 점수는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1-5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2) 전국 15세 이상 가구원(소비생활은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3) 가족관계 만족도에 따른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2012년 자료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1, 2012.

이 그림을 보면 모든 영역에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함께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역별 만족도에 따라 삶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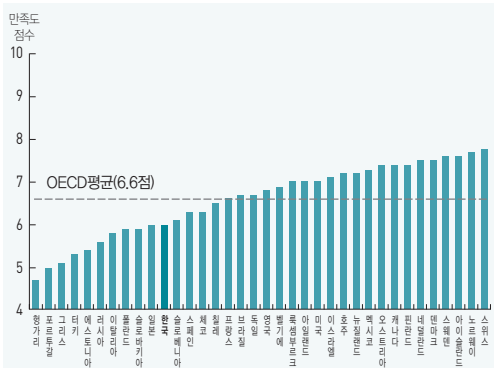
만족도에 가장 큰 차이를 낳는 것이 소비생활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삶에 대한 만족도 국제비교

한국 사회 삶에 대한 만족도의 수준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국제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최근 자료로는 갤럽인터내셔널에서 실시한 2010년도 조사(Gallup World Poll) 자료가 있다. 이 자료는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 산정에도 사용된 자료이다. 이 조사에서는 국가별로 주관적 삶에 대한 만족도를 0점에서 10점까지의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림 XI-21]은 조사에 포함된 국가별 삶에 대한 만족도 평균을 비교한 것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스위스인 반면, 만족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헝가리와 포르투갈이다.

그림 XI-21 OECD 국가의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 2012



주: 1) 만족도 점수는 Gallup World Poll에서 11점 척도(0-10점)로 측정된 주관적 삶에 대한 만족도 문항의 응답 평균 점수로서, 값이 클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2) 칠레는 2011년 자료임.  
출처: OECD,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2013.

한국은 36개 국가들 중에서 26위로 낮은 편에 속하며, 전체 평균 6.6보다 낮은 6.0수준이다. 중간값인 5.5보다는 높지만 전체적으로는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과 같은 수준에 속하는 나라가 일본이며, 한국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 폴란드, 이탈리아, 러시아, 에스토니아, 터키, 그리스, 포르투갈, 헝가리 등이다. 반면 서구와 남미 및 오세아니아 국가들은 모두 한국보다 높은 삶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 맺음말

한국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경제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주관적 안녕감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한국인이 보다 많은 경쟁에 노출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사회경제적 경쟁에서 보다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 즉 불평등은 경제적 소득과 육체적 건강, 그리고 사회적 관계 등의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현실을 한국인은 각 생활영역에서의 만족도의 차이로서 내면화 할뿐 아니라 전반적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의 차이로도 느끼고 있다. 한국인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비슷한 불평등 정도의 사회 간에도 주관적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객관적 현실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 또한 필요할 것이다.

## 03

## 투표와 정치참여

김석호(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요약

- 한국인의 선거참여는 하락하는 추세이다. 투표율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가장 높았다가 2000년대 이후 급락하였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율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선거 외 정치참여 비율은 2004년과 비교해 2009년에 현저히 낮다.
- 한국인의 선거 외 정치참여는 이명박정부 시기(2008-2012년)보다 노무현정부 시기(2003-2007년)에 활발하였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참여한 선거 외 정치참여 유형은 진정서 서명, 불매운동, 기부이다.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영남과 호남의 높은 투표율과 수도권 지역의 낮은 투표율 추세가 발견된다.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선거 외 정치참여가 높다. 연령이 높을수록 선거참여는 높아지지만 선거 외 정치참여는 낮아진다.

정치참여는 급격한 세계화와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인한 인종적, 문화적, 계층적 다양성의 확대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토대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 해결책으로 주목받은 현상이다. 정치참여는 시민들이 정부에서 일할 사람을 선택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Verba 외, 1995)으로 크게 선거참여(선거운동 포함)와 선거 외 정치참여로 나뉜다. 선거참여는 투표와 선거기간 중 기부, 자원봉사, 정당행사 참가 등을 말하고, 선거 외 정치참여는 서명, 불매운동 등 선거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정치 관련 활동들을 일컫는다.

한국에서도 1987년 이후 권위주의 정권이 물러나고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지속적으로 넓어져 왔다. 정부와 시민사회 간 대화와 협력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 공유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서 정치참여는 더 이상 권위와 기득권에 대항하는 투쟁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일반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신, 가족, 공동체를 위해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정치행위가 되었다(박찬욱, 2005; Kim, 2011). 더욱이 정보화의 급속한 진행은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이로 인해 정치참여가 증가하고 그 내용도 다양해 졌으며 파급효과 또한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일반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참여는 한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이에 여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율 자료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정치참여를 선거참여와 선거 외 정치참여로 구분해 살펴보기

로 한다. 먼저, 한국인의 선거참여를 1987년 이후 실시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의 선거 유형별로 살펴본다. 선거 외 정치참여는 2004년과 2009년 KGSS에 포함된 다양한 항목들을 분석해 파악해 보기로 한다. 2004년과 2009년은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이었다. 따라서 두 시점에 대한 비교는 두 정권이 시민사회와 맺었던 관계의 일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음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교육수준별 선거참여 및 선거 외 정치참여 수준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드러난 세대, 계층, 지역 간 갈등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거참여와 선거 외 정치참여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인의 정치참여 수준과 한국 시민사회 성숙도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해 본다.

### 한국인의 정치참여 수준

선거참여, 즉 투표는 가장 일반적인 정치참여의 유형이다. 투표는 약간의 노력으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정치참여의 한 유형이다(Wolfinger and Rosenstone, 1980). 그러나 투표는 지극히 일반적인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투표가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는 국가와 지역의 지도자들을 뽑고, 뽑힌 사람들은 전체 사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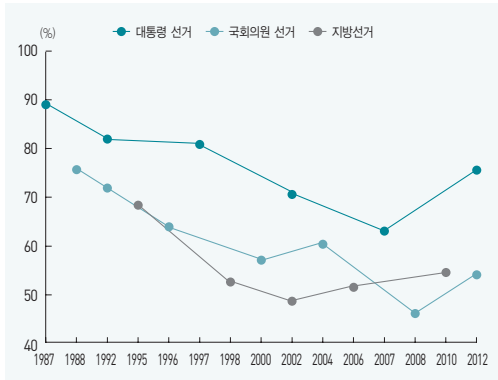
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정치참여 행위 중에서 가장 크다.

[그림 XI-22]은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한국인의 선거참여 수준의 변화를 보여준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순으로 투표율이 높다. 먼저 대통령선거부터 살펴보면,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강렬했던 1987년 13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율이 89.2%로 가장 높았다.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최초로 집권한 1992년 14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율은 81.9%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비교적 높은 편이며, 이 수준의 투표율이 1997년 15대 대통령선거까지 유지된다. 그러나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에서 70.8%,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에서 63.0%로 대폭 하락하였다가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75.8%로 다시 상승하였다.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투표율 수준도 대통령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1988년 13대 선거에서 75.8%로 정점을 찍었다가, 그 후 하락을 거듭해 2008년 18대 선거에서 46.1%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다. 낮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2012년 선거에서 약간 회복된다. 지방선거는 1995년에 처음 실시되었는데, 1회와 2회인 1995년과 1998년의 투표율은 각각 68.4%와 52.7%로 2000년대에 실시된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투표율은 2002년에 48.8%로 최저점을 찍었으며, 이후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2006년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51.6%였으며 2010년에는 54.5%였다.



그림 XI-22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 투표율, 1987-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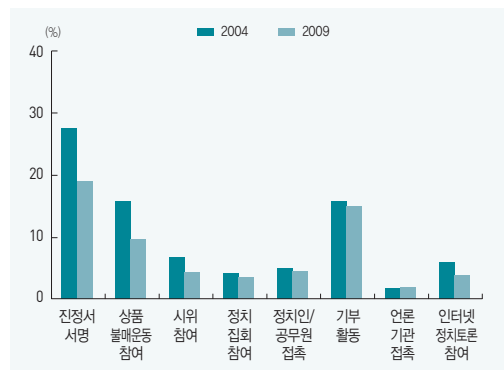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선거 외 정치참여는 선거참여와는 달리 그 목표가 구체적이고 결과 또한 어느 정도 직접적이다. 선거 외 정치참여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들은 대부분 선거참여보다 높은 수준의 관여와 자원의 투입을 요구한다. 개인이나 집단은 선거 외 정치참여에 투입한 자원 이상의 보상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해당 행위의 정치적 파급효과도 상대적으로 직접적이다. 즉, 선거 외 정치참여는 선거참여에 비해 시간, 돈, 노력이 많이 들어감에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거시적인 수준에서, 한 국가의 선거 외 정치참여 수준은 민주주의가 공고해져 일상의 영역에 뿌리내린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림 XI-23]은 2004년과 2009년의 한국인의 선거 외 정치참여 수준을 유형별로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이명박정부 2년차인 2009년의 정치참

여 수준이 노무현정부 2년차인 2004년에 비해 현저히 낮다. 2004년에 진정서에 서명한 한국인은 27.7%에 달했으나, 2009년에는 그 비율이 19.1%로 떨어졌다. 정치적, 윤리적, 환경적 이유로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한 비율도 2004년 15.9%에서 2009년 9.7%로 하락했다. 지난 1년간 시위에 참여한 비율은 6.8%에서 4.4%로 떨어졌으며,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율도 5.9%에서 3.8%로 하락했다.

그림 XI-23 선거 외 정치참여율, 2004,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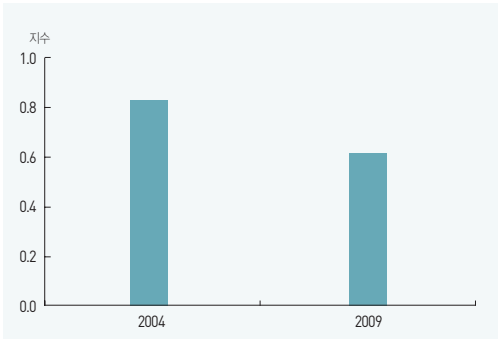


주: 1) 참여율은 전체 조사대상자(전국 만 18세 이상) 중 지난 1년 동안 해당 정치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각 년도.

선거 외 정치참여의 하락은 [그림 XI-24]에서 잘 드러난다. [그림 XI-24]는 8개 유형 각각에 대하여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를 세어 0-8점의 정치참여 지수를 산출해 그 평균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인의 선거 외 정치참여 평균 건수는 2004년에 0.83건이었다가 2009년에 0.62건으로 떨어졌다.

그림 XI-24 선거 외 정치참여 지수, 2004, 2009



주: 1) 이 지수는 1인당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선거 외 정치활동의 종수로서 최소 0점에서 최대 8점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더 다양한 종류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각년도.

[그림 XI-23]에서 또 하나 주목해볼 만한 현상은 2004년과 2009년 두 시기 모두에서 진정서 서명, 상품 불매 또는 구매, 사회적·정치적 활동을 위한 기부 또는 모금과 같이 노력, 시간, 돈 등 자원이 덜 투입되고 덜 위험한, 즉 쉬운(easy) 참여의 경우가 시위참여, 정치모임 또는 집회 참여, 언론인 접촉, 공무원 접촉과 같은 정치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고 더 복잡하며 위험한, 즉 어려운(difficult) 참여의 경우보다 참여율이 높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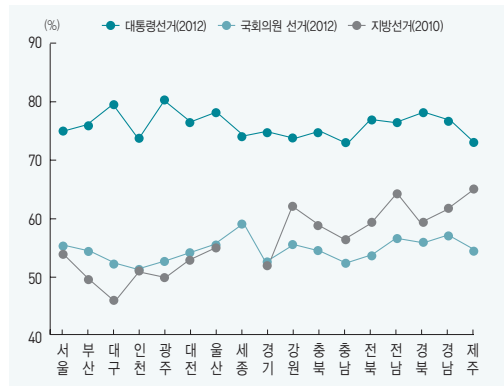
### 사회경제적 특성별 정치참여 수준

시민의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논의에서 핵심적인 주제 중의 하나는 참여의 질, 즉 대표성의 문제이다.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목소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가가 민주주의의 관건이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자원이 많을수록 정치참여가 증가한다면 참여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수준, 소득수준, 연령, 지역 등의 특성별로 정치참여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림 XI-25]는 한국에서 최근에 실시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각각의 16개 광역시도별 투표율을 보여준다. 대통령선거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와 대구로 각각 80.4%와 79.7%이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72.9%), 제주(73.3%), 강원(73.8%) 등이다. 서울(75.1%), 인천(74.0%), 경기(75.0%) 등 수도권 지역의 투표율도 낮은 편이다.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영남과 호남의 높은 투표율과 수도권의 낮은 투표율 추세가 발견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강원, 충남, 충북이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집단에 속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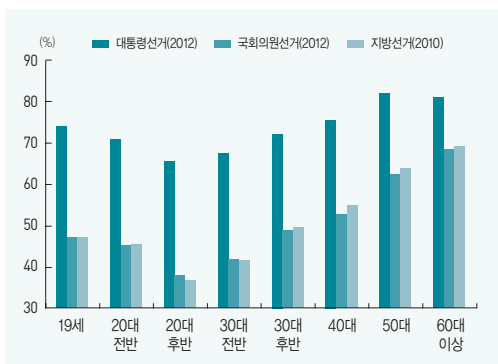
그림 XI-25 시도별 투표율: 2012년 대선 및 총선, 2010년 지선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그림 XI-26]은 가장 최근 실시된 2012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연령별 투표율을 보여준다.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20대 후반에서 가장 낮으며, 30대 전반부터 서서히 높아져 50대에서 82.0%로 가장 높고, 60대부터 80% 이상 수준이 유지된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연령별 투표율 분포는 매우 유사하다. 이 두 선거에서 투표율은 20대 후반에서 가장 낮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꾸준히 높아진다. 국회의원선거에서 20대 후반의 투표율은 37.9%이며,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68.6%이다. 지방선거에서 20대 후반의 투표율은 37.1%이며,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69.3%이다. 그림을 통해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성별 투표율의 경우 남성과 여성 간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대통령선거에서는 여성의 투표율이 약간 더 높은 반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남성의 투표율이 약간 더 높았다.

그림 XI-26 연령집단별 투표율: 2012년 대선 및 총선, 2010년 지선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201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2010.

선거 외 정치참여는 정책의 실행과 결정에 있어 투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민적 관여를 요구한다. 즉 선거 외 정치참여는 사회 구성원들이 확고한 시민적 규범으로 무장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의 필요가 있을 때 더 많이 이루어진다. 사회진보의 지속과 구성원들 간 통합을 위해서는 엘리트의 참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민적 관여의 문화가 강할수록 효과적인 서비스의 전달 및 부패 감소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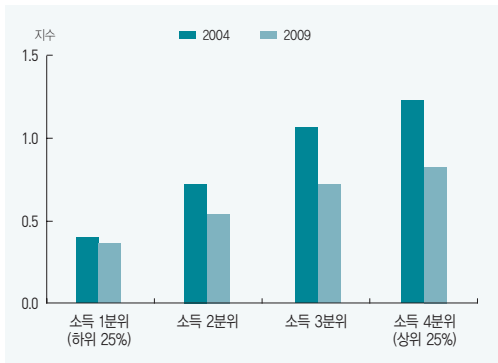
선거 외 정치참여는 선거참여에 비해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에 따른 참여의 횟수와 강도가 더 많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소득과 교육수준은 선거 외 정치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정치참여 기회에 노출될 수 있는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 또한 정치현상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고 관련 지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정치참여에 필요한 교양과 기술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림 XI-27]은 한국인의 가구소득수준별 지난 1년간 참여한 선거 외 정치참여의 평균 건수를 보여준다. 두 시기 모두에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난 1년간 참여했던 선거 외 참여의 종류도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2004년을 살펴보면, 가구소득 상위 25%에 속하는 사람들의 선거 외 정치참여 건수는 평균 1.23건으로 가



구소득 하위 25%에 속하는 사람들의 0.4건보다 월등히 많다. 2009년에도 2004년에 비해 소득 수준별 선거 외 참여 건수의 차이가 덜하기는 하지만, 상위 25%에 속하는 사람들의 평균 참여건수는 0.83건으로 하위 25%의 0.37건보다 높다.

**그림 XI-27** 소득수준별 선거 외 정치참여 지수, 2004,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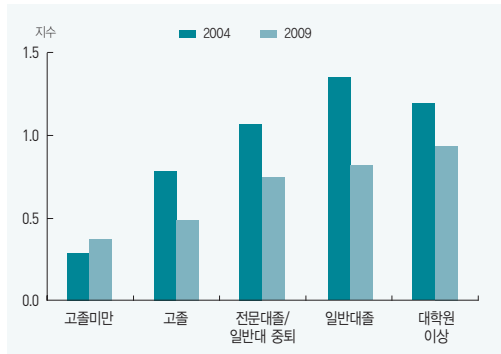


주: 1) 이 지수는 1인당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선거 외 정치활동의 총수로서 최소 0점에서 최대 8점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더 다양한 종류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각 년도.

[그림 XI-28]은 교육수준별 지난 1년간 참여한 선거 외 정치참여의 평균 건수를 보여준다. 두 시기 모두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선거 외 정치참여도 많아진다. 2004년의 경우, 대학졸업 이상의 사람들이 그보다 낮은 교육수준의 사람들보다 더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2009년에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참여가 증가한다. 그러나 2009년에는 교육수준에 따른 정치참여의 차이가 2004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XI-29]는 연령별 선거 외 정치참여의 수준을 보여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선거 외 정치

**그림 XI-28** 교육수준별 선거 외 정치참여 지수, 2004,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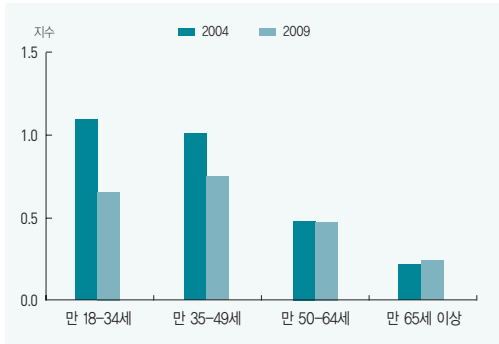
주: 1) 이 지수는 1인당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선거 외 정치활동의 총수로서 최소 0점에서 최대 8점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더 다양한 종류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각 년도.

참여가 낮아진다. 이는 위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선거참여가 증가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이다. 또한 연령과 선거 외 정치참여의 부적 관계는 미국, 유럽, 일본의 사례와도 상이하다. 민주주의와 시민사회가 성숙한 국가에서는 선거참여와 선거 외 정치참여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Wolfiner and Rosenstone, 1980). 그러나 한국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선거참여는 증가하지만 선거 외 정치참여는 감소한다. 이 결과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선거 외 정치참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정치행위들(진정서 서명, 상품 불매 또는 구매, 사회적·정치적 활동을 위한 기부 또는 모금, 시위참여, 정치모임 또는 집회 참여, 언론인 접촉, 공무원 접촉)이 노년층이 접근하기에 부담스럽거나 불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림 XI-29 연령집단별 선거 외 정치참여 지수, 2004,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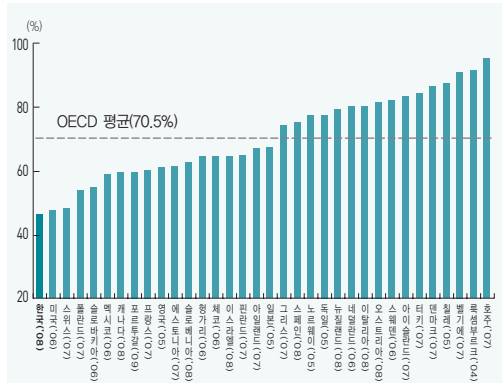
주: 1) 이 지수는 1인당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선거 외 정치활동의 종수로서 최소 0점에서 최대 8점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더 다양한 종류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각 년도.

## 정치참여 국제비교

국가마다 선거 제도와 시기가 달라 여기에서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중심으로 주요국 투표율의 변화 추이를 관찰해 보려고 한다. [그림 XI-30]은 OECD 국가들의 최근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을 보여준다. 최근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투표율은 호주(2007년)가 가장 높으며, 룩셈부르크(2004년), 벨기에(2007년), 칠레(2005년), 덴마크(2007년) 등의 순이다. 한국(2008년)의 국회의원 투표율은 OECD 34개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으며, OECD 평균인 70.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이 투표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2006년)보다도 낮다는 사실은 한국의 시민사회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저조한 관심과 참여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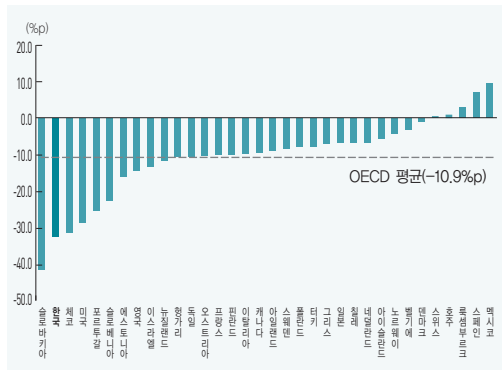
그림 XI-30 OECD 국가의 최근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출처: OECD, *Society at a glance 2011: OECD Social Indicators*, 2011.

어느 정도 성장한 국가들에서 시민들의 낮은 참여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그림 XI-31]은 1980년과 비교해 최근 OECD 국가의 투표율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여준다.

그림 XI-31 OECD 국가의 투표율 변화, 1980년-최근 선거



주: 1)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기준임.

출처: OECD, *Society at a glance 2011: OECD Social Indicators*,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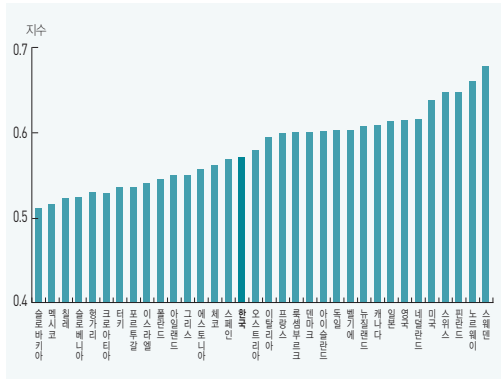
1980년의 투표율과 비교했을 때, OECD 국가들의 투표율은 평균 10.9%p 하락했으며, 최근의 투표율이 증가한 국가는 멕시코, 스페인, 룩셈부르크, 호주, 스위스 뿐이다. 슬로바키아, 한국,

체코는 1980년에 비해 최근의 투표율이 30%p 이상 하락하였다. 이 밖에도 OECD 평균보다 더 높은 투표율의 하락을 경험한 국가들로는 미국,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선거 외 정치참여 수준에 대한 국제비교 결과를 살펴보자. OECD 국가의 선거 외 정치참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SS(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에서 구축한 사회발전지수(Indicators of Social Development) DB에 포함된 시민참여(civic activism) 지표를 이용하였다. 이 지수의 값은 클수록 선거 외 정치참여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OECD 국가들 중에서 비선거적 정치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미국 등이다. 선거 외 정치참여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국가들로는 슬로바키아, 멕시코, 칠레, 슬로베니아, 헝가리 등이 있다(그림 XI-32).

한국은 1995년에 정치참여 정도가 0.634였다가 2000년에는 0.563으로 낮아졌으며, 2005년

그림 XI-32 OECD 국가의 시민참여 지수, 2010



주: 1) 시민참여 지수는 각국의 미디어 이용수준, 시민적 결사체 참여수준, 비폭력 시위 또는 청원활동 참여수준 등을 토대로 산출한 지수로서, 값이 높아질수록 공공 정책 및 의사결정에서 시민참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출처: Indices of Social Development (<http://www.IndSocDev.org/>).

과 2010년에는 각각 0.573과 0.572로 2000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2000년에 떨어진 후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선거 외 정치참여 순위는 1995년에 19위였으며 2000년에는 26위로 급락했다가 2005년과 2010년에 각각 20위와 19위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선거 외 정치참여 수준은 여전히 중하위권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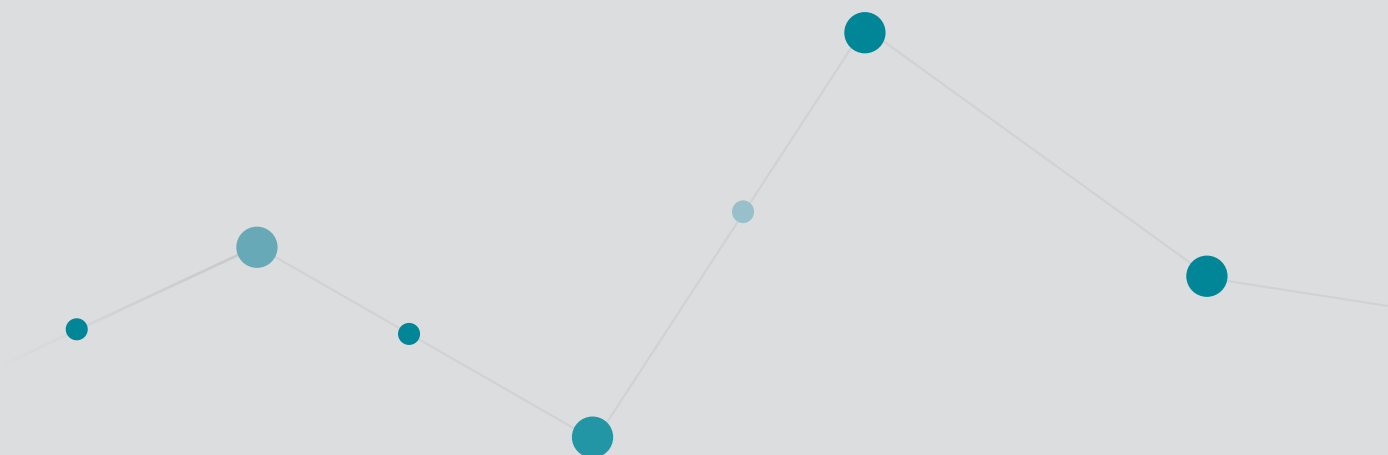
### 참고문헌

- 박찬욱. 2005. “한국인 정치참여의 특징과 결정요인: 2004년 조사결과 분석.” 『한국정치연구』 14(1): 147-193.
- 통계청. 2012. 「한국의 사회지표」.
- Kim, Seokho. 2011. “Voluntary Associations, Social Inequalit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5(3): 125-154.
- OECD. 2011. *Society at a glance 2011: OECD Social Indicators*.
- Verba, Sidney, Kay L. Schlozman, and Henry E. Brady.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 Wolfinger, Raymond E. and Steven J. Rosenstone. 1980. *Who Votes?*.



# [ KOREAN SOCIAL TRENDS 2013

## 한국의 사회동향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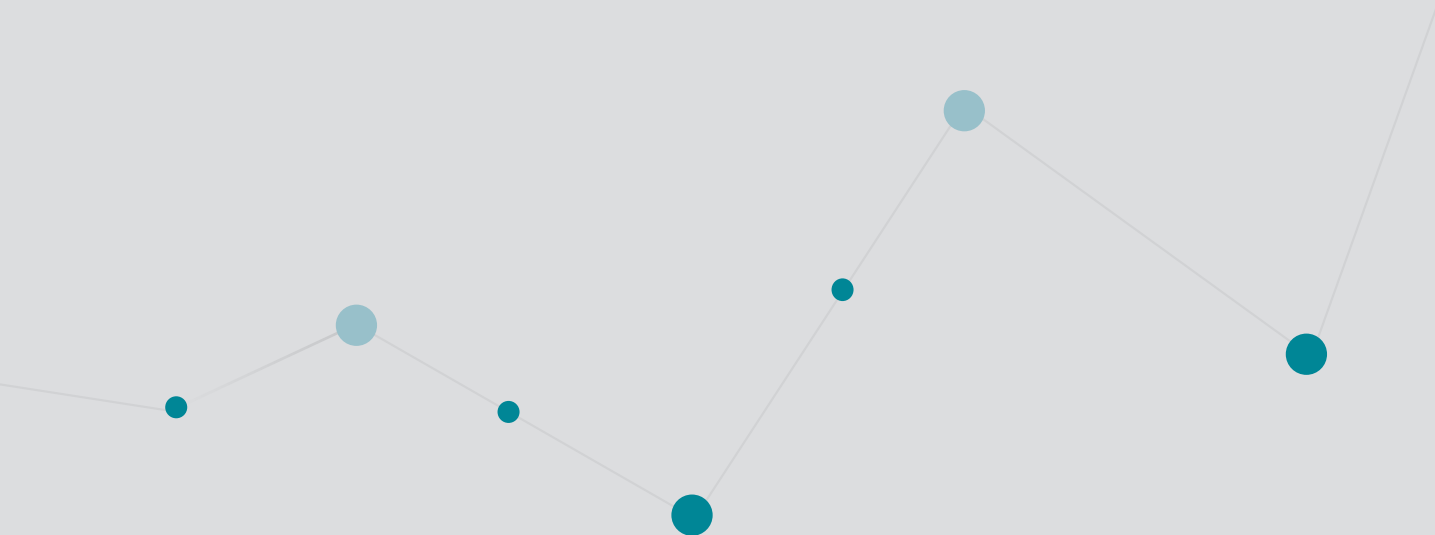
STATISTICS  
KOREA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부록

# 용어해설

Glossary



## I 인구

**고령화지수:** 유소년(0-14세) 인구 100명당 고령(65세 이상) 인구수임.

**기대수명:**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임.

**노년구성비:**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임.

**노년부양인구비:** 부양연령(15-64세) 인구 100명당 피부양 노인(65세 이상) 인구수임.

**대체출산율:**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 수준으로서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2.1명임. 이 수치는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임 여성 1인당 2.1명의 자녀는 낳아야 한다는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보고서에 따른 것임.

**사망력:** 건강, 경제사정, 보건의료혜택 등을 고려한 사람들의 사망수준을 의미함.

**영아사망률:** 연간 출생아 1,000명당 1세 미만 사망아수임.

**유배우이혼율:** 연간 이혼건수를 해당연도 유배우 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낸 것임.

$$\text{유배우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이혼건수}}{\text{유배우인구}} \times 1,000$$

**이상자녀수:**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의 규모(수)'를 의미하며, 특정 사회 구성원들의 자녀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임.

**일반이혼율:** 연간 이혼건수를 해당연도의 이혼 가능 연령 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1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조사망률:**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임.

$$\text{조사망률}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사망자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조이혼율:** 연간 이혼건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text{조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이혼건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조출생률:** 연간 출생아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임.

$$\text{조출생률}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출생아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조혼인율:** 연간 혼인건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임.

$$\text{조혼인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혼인건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중위연령:** 인구를 연령별로 나열했을 때 정 중앙에 위치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연령임.

**출산력:** 결혼, 피임, 건강,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들이 아이를 실제로 출산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들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임신능력, 즉 가임력(fecundity 또는 natality)과는 다름.

**합계출산율:** 여자 1인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으로 산출함.

$$\text{합계출산율(TFR)} = \frac{\sum_{i=15}^{49} (ASFR)_i}{1,000}$$

## II 가족과 가구

**1세대 가구:** 가구주와 동일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② 형제자매, ③ 부부 + 기타친척)임.

**1인 가구:** 1인으로 구성된 가구임.

**2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 자녀, ② 한부모 + 자녀, ③ 부부 + 양친, ④ 부부 + 한부모, ⑤ 부부 + 자녀 + 부부의 형제자매 등)임.



**3세대 이상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 이상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 자녀 + 양친(또는 한부모), ② 양친(또는 한부모) + 부부 + 자녀 등)임.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를 말하며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됨.

**가구주:**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비혈연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 중 한 사람(대표자)이 가구주가 됨. 성별 가구주 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출함.

$$\text{여자(남자)가구주 비율(\%)} = \frac{\text{여자(남자)가구주 가구수}}{\text{일반가구수}} \times 100$$

**국제결혼:** 국적이 서로 다른 남녀 간의 결혼.

**기러기가족:** 자녀를 외국에서 교육하기 위하여 아내와 자녀 또는 남편과 자녀는 외국에서, 남편이나 아내는 국내에서 따로 생활하는 가족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임.

**노인가구:**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일반가구임.

**노인단독가구:** 65세 이상 노인이 혼자 살고 있는 가구임.

**다문화가족:**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이룬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가족을 의미함.

**분거가족:** 학업, 직장 등으로 인해 구성원의 일부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가족임.

**비혈연 가구:** 친족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한 집에서 기거하며 자취하는 가구임.

**유배우 이혼율:** 연간 이혼건수를 해당연도 유배우 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낸 것임.

$$\text{유배우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이혼건수}}{\text{유배우인구}} \times 1,000$$

**이혼숙려제도:** 협의이혼 신청 후 얼마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유예기간은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자녀 양육 합의를 위해 자녀가 있을 시 3개월, 자녀가 없을 시 1개월을 두도록 하고 있음.

**조손가족:**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평균 가구원수:** 일반가구 총가구원수를 총일반가구수로 나누어 계산함.

$$\text{평균 가구원수} = \frac{\text{일반가구 총가구원수}}{\text{총일반가구수}}$$

**핵가족:** 부부만의 가족, 부부와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족,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임.

**혈연가구:** 가족 또는 친족 관계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가구임.

### III 건강

**2주간 유병률:** 0세 이상 인구 중 조사시점 이전 2주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적이 있었던 인구의 비율임.

**건강수명:** 평균수명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걷기실천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인구의 비율임.

**공복혈당:** 식사 전에 측정한 혈당수치임.

**뇌졸중:** 상당 기간 지속되는 뇌기능 장애로서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 파열로 인해 뇌의 조직 내부로 혈액이 유출되어 발생하는 뇌출혈(출혈성 뇌졸중)을 포함함.

**비감염성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 흡연, 잘못된 식습관, 운동부족 등 대부분 생활행태와 관련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심혈관질환, 암, 당뇨, 만성호흡기질환 등이 포함됨.

**비만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BMI) 25kg/m<sup>2</sup> 이상인 인구의 비율임.

**성인 음주율:** 20세 이상 인구 중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 동안 술을 한 잔 이상 마신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임.

**성인 흡연율:** 20세 이상 인구 중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인구의 비율임.

**스트레스 인지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신체활동실천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하거나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인구의 비율임.

**유병률(prevalence rate):** 전체 인구 중 특정 시점에 조사된 이환자수의 비율임.

**주관적 건강상태:**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자신의 건강 상태.

**중등도신체활동:** 평소보다 몸이 조금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쁜 신체활동.

**질병발생률(incidence rate):** 전체 인구 중 특정 기간 동안에 새로 발생한 환자수의 비율임.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 지표로서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임.

**평균수명:**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로서 '0세의 기대여명'을 말함.

**AUDIT(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 도구로 지난 1년 간 개인이 경험한 음주의 빈도와 양, 알코올 의존 증세, 음주와 관련된 문제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함.

**CT 스캐너(Computerized Tomography Scanner):** 컴퓨터를 이용한 인체 횡단면 촬영장비임.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 방식으로 신체 내 장기구조를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촬영장비임.

## IV 교육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이 포함됨.

**교원 1인당 학생수:** 조교와 비전임교원을 제외한 전임교원 1인당 재적학생수임.

**대학설립준칙주의:** 기존의 대학설립 인가제를 폐지하고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대학설립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조치로 1995년에 도입되어 1996년부터 시행됨. 이 제도의 도입으로 대학의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됨.

**비형식교육:** 형식교육과 동일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교수과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며 국가의 학력 또는 학위 인증을 받지 않는 교육임.

**방과후학교:** 2006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교육체제를 말함.

**유아교육:** 종전에는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1~2년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일컬어 유아교육이라고 하였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의 확장으로 영아교육 및 유아(乳幼兒)교육을 통틀어 유아교육이라고 지칭하는 경향이 있음.

**자기주도적 학습:** 학습자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과정 및 학습자원을 결정하여 학습을 수행함과 동시에 스스로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학습과정을 말함.

**자기주도적 학습시간:** 학교와 학원 및 과외 수업을 제외하고 숙제나 공부에 소요하는 시간.

**졸업정원제:** 정부가 1980년에 도입한 대학입시제도로써 신입생을 정원보다 30% 늘려서 뽑았다가 이후 원래의 정원으로 졸업시키는 제도임.





**진학률:**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text{진학률(\%)} = \frac{\text{상급학교 진학자수}}{\text{졸업자수}} \times 100$$

**취학률:** 취학적령인구(추계연앙인구) 대비 취학자의 비율임. 취학적령은 초등학교 만 6~11세, 중학교 만 12~14세, 고등학교 만 15~17세임.

**특수목적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근거한 정규학교로서 공업·농업·수산·해양·과학·외국어·예술·체육·국제 계열에 해당하는 학교 중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임.

**평생학습 참여율:** 만 25~64세 이상 성인인구 중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인구의 비율임.

**형식교육:** 평생학습 중에서 학력인정체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졸업장이나 학위의 취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교육임.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15~34세 사이의 취업인구 가운데 미혼으로 정규 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또는 취업교육기관에 다니지 않고 일하고 있지도 않으며 가사도 하지 않는 자를 말함.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OECD가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의 일환으로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글 이해력), 수학, 과학 능력을 평가하고자 3년마다 시행하는 프로그램임.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가 만 9세와 만 13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4년마다 실시하는 수학 및 과학 과목 학업성취도 평가임.

## V 노동

**간접고용:** 근로계약 상의 사용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의 고용형태로 실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

지 않고 파견, 용역, 하청 등을 통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형태임.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를 포함한 인구임.

**경제활동참가율:**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text{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고용률:**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수}}{\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근로손실일수:**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조업중단 된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1일 단위로 파악하여 산출함.

$$\text{근로손실일수} = \text{파업참가자수} \times \frac{\text{파업시간}}{\text{1일근로시간(8시간)}}$$

**근로장려세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라고도 함. 기존 사회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됨.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2008년에 시행되어 2009년에 첫 근로장려금이 지급됨. 4가지 요건(소득·부양가족·주택·재산)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 가구에게 직전 연도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 1회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120만 원임.

**노동조합조직률:**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수를 노동조합에 가입한 전체 조합원수로 나누어 산출함. 산업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유효한 지표임.

**무급가족종사자:** 자기에게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 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18시간 이상 도와준 자임.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됨.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됨.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등을 포함함.

**비정규직 근로자:** 각각의 개별적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 국제적 기준과 아울러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기준에 의거 파악됨. 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 단시간 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상용근로자:** 고용계약설정자의 경우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고 고용계약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임.

**시간제 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실업률:**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수}}{\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또는 매 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임.

**임금근로자:** 취업자 중 임금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됨.

**임시근로자:** 고용계약설정자의 경우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고 고용계약미설정자의 경우는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임.

**저임금 근로자:** 중위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말함.

**종사상 지위:** 취업자의 취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분류기준 중 하나로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함.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하는데 임금근로자는 상용직·임시직·일용직으로,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됨.

**중위임금:** 근로자를 임금수준에 따라 나열했을 때 최저임금 근로자와 최고임금 근로자의 정 중앙에 위치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금임.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임.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임.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을 의결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함.

**특수고용:** 사용자와의 관계가 직접고용에 비해 느슨하며 시간간적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고용형태임.

**한시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함.

## VI 소득과 소비

**가계수지:** 각 가정에서 일정 기간에 벌어들인 돈(명목소득)과 쓴 돈(지출)을 비교해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나타낸 것임.



**가처분소득:**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 이전, 타가구로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을 말함. 즉,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지출할 수 있는 소득임.

**근로소득:**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특정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로서 봉급, 상여금과 제수당을 포함하며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공제하기 전의 총액을 말함.

**비소비지출:**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비영리단체로 이전, 가구간이전 등 소비지출 및 자산구입이 아닌 금액임.

**사업소득:**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자영자나 고용주의 지위에서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총수입에서 재료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비용을 차감한 순이익 중 가계에 들어온 금액임.

**소득분위:**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한 다음, 최하위 가구부터 최상위 가구까지 특정 구간으로 등분한 것을 말함.

**소비지출:** 생계 및 생활을 위해 소비하는 내구재, 비내구재, 준내구재의 상품 및 서비스의 구입에 대한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임.

**이전소득:**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경상적 수입으로서 공적보조금(연금 등)과 사적보조금을 모두 합한 금액임.

**재산소득:** 가구소유의 자산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예·적금이자, 주식배당, 부동산임대료 등이 해당됨.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이라 부르며 국가 영역 내에서 가구,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의 결과로 창출된 부가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합계하여 산출함.

**실질소득:**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조정한 소득으로 일정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명목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것임.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은 떨어지게 됨.

**명목소득:** 측정 당시 화폐액으로 표시된 소득으로 화폐소득이라고도 함. 명목소득은 물가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물가수준이 서로 다른 연도 내지 지역 간 소득 비교에는 적합하지 않음.

**소득 5분위 배율:**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임. 즉, 도시근로자가구를 소득별로 20%씩 5개 분위로 나누었을 때 가장 높은 5분위 소득을 가장 낮은 1분위로 나눈 값임. 소득배율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함.

**경상소득:** 소득의 종류는 그 원천에 따라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뉜다. 일정한 소득은 경상소득이고, 일시적인 소득은 비경상소득이다. 경상소득에는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 및 부업 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된다.

**비경상소득:** 소득의 종류는 그 원천에 따라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뉜다. 일정한 소득은 경상소득이고, 일시적인 소득은 비경상소득이다. 비경상소득에는 경조소득, 폐품매각대금, 퇴직금, 유산, 장학금 등이 포함된다.

**지니계수:**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로 이용됨.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0.4가 넘으면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함.

**GDP 디플레이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반영하는 물가지수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임.

$$\text{GDP 디플레이터} = \frac{\text{명목 GDP}}{\text{실질 GDP}} \times 100$$

이때 명목 GDP는 당해연도의 총생산물을 당해연도의 가격(경상가격)으로 계산한 GDP이고, 실질 GDP는 당해연도의 총생산물을 기준연도의 가격(불변가격)으로 계산한 GDP를 말함. 소비자 물가변동을 측정할 때에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국가의 총체적인 물가변동을 측정할 때에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게 됨.

## VII 문화와 여가

**문화예술관람률:**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회를 1년에 1번 이상 관람한 사람들의 비율임.

**문화예술시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시설은 공연시설(공연장, 영화관, 야외음악당),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관(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기타문화시설로 구분됨.

**생활체육:** 개인 또는 단체가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체육 및 스포츠 활동을 말함.

**스포츠 관람률:** 각종 스포츠를 1년에 1군데 이상 관람한 사람들의 비율임.

**오락문화비:** 문화생활비의 하나로서 신문구독료, 영화관람료, 도서관입비, 휴가비 등을 포함함.

**한류:** 1990년대 말부터 아시아에서 일기 시작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 현상을 말함.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로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일반 텔레비전 서비스와 다른 점임.

## VIII 주거와 교통

**공공임대주택:**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모든 주택을 말함.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 전체 층수가 3층 이하이고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이 200평(660㎡)이하인 주택임. 통계 조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춰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음.

**단독주택:**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

택을 모두 포함함.

**도농복합도시:** 도시(동) 지역과 농촌(읍, 면) 지역이 하나의 시로 통합된 곳을 말함.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시(市)와 주변 군(郡)을 통합하면서 많은 도농복합도시가 만들어짐.

**도로교통 혼잡비용:** 도로에서 교통 혼잡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금전적 단위로 환산한 값임.

**벽지명령노선:** 벽지 및 오지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수익성이 없어 버스운행을 기피하는 지역에 관한 관청이 개선을 명령한 노선임. 명령노선 운행에 따라 발생하는 운송수지 결손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함.

**보증부월세:** 보증금을 건 후 추가로 월세를 지불하는 임대방식을 말함.

**소득대비주택가격비(Price to Income Ratio, PIR):** 대출 없이 소득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자가주택의 중위가격을 자가가구의 중위 가구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함.

**신주택보급률:** 기존의 주택보급률을 보완하기 위해 1인가구와 다가구주택의 개별 가구 모두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산정한 보급률임.

**연립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지칭함.

**월소득대비임대료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 월 평균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임차가구의 주택임대료 부담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임.

**전세가격지수:** 주택 전세가격의 변동 폭을 나타내기 위해 특정 시점의 전세가격을 100으로 하여 산출된 상대적 전세가격이며, 국민은행이 집계하여 발표함.

**주택가격지수:** 주택가격의 변동 폭을 나타내기 위해 특정 시점의 주택가격을 100으로 하여 산출된 상대적 주택가격이며, 국민은행이 집계하여 발표함.



**주택보급률:** 보통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비율임.

$$\text{주택보급률(\%)} = \frac{\text{주택수}}{\text{보통가구수}} \times 100$$

\* 보통가구수: 일반가구수에서 비친족가구와 1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수임.

\* 주택수: 다가구주택을 1호로 간주함.

**최저주거기준:** 정부가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 화장실 설비기준,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 놓은 주택의 구조와 성능 및 환경 기준임.

**통근인구:** 12세 이상 인구 중 매일 정기적으로 직장에 근무하러 다니는 인구를 말함.

**통학인구:** 12세 이상 인구 중 정규학교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 및 훈련 기관에 다니는 인구를 말함.

**하우스푸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임.

## IX 환경

**과불화탄소(PFCs):** 냉매, 소화기 및 폭발방지물, 분무액, 솔벤트용제, 발포제 등으로 쓰이는 가스임.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소(CFC)를 대체하여 쓰이고 있으나 이산화탄소(CO<sub>2</sub>) 및 메탄(CH<sub>4</sub>)과 더불어 지구온난화 현상을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하나로 알려져 있음.

**기후변화:**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변화하는 기후현상을 말함. 기후변화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변화 등 지구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조성의 변화나 지구 표면상태의 변화 등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함.

**녹색성장:**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압력 감소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용량 유지와 함께 경제와 사회의 성장도 꾸준히 이루어 간다는 개념임. 2005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UN아시아태평양 환경과 개발장관회의'에서는 환경의 지속가능성 제고, 환경성과 증진,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환경역할 강화의 세 가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함.

**메탄(CH<sub>4</sub>):** 상온에서는 무색의 기체로서 가연성, 공기와 폭발성 혼합가스를 만들어 냄. 천연가스의 주성분으로서 연료용으로 사용됨.

**미나마타병:** 어패류에 축적된 유기수소에 중독되어 발생하는 신경질환으로 시야협착, 운동실조, 언어장애, 지각장애 등의 증상을 나타냄.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지름 10 μm 이하의 먼지 입자를 말함. 사람의 폐로 침투하여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됨.

**불산:** 수소와 불소(F)가 합쳐진 불화수소(HF)를 물에 녹인 휘발성 액체로 반도체산업에 필수적인 화학물질임.

**새집증후군:** 새 집이나 건물에 사용된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해 거주자들이 겪게 되는 건강문제를 이르는 말임. 유해물질에 짧은 기간 노출되면 두통, 눈·코·목의 자극, 기침, 가려움증, 현기증,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오랜 기간 노출되면 호흡기질환, 심장병, 암 등의 질병이 생길 수도 있음.

**수소불화탄소(HFCs):**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 즉 염화불화탄소(CFC)의 대체물질로 개발되었으며 대기권내에서의 수명이 짧고 염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성층권에서의 오존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체물로 여겨지고 있음.

**수질오염:** 인간의 활동이 호수, 강, 해양, 지하수 등의 수질에 끼치는 악영향을 의미함. 수질오염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용존산소량(DO) 등이 있음. BOD 기준에 따라 수질오염도는 1~5급수와 급수 외로 나누어짐.

**신재생에너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키거나 햇빛, 물, 지열,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사용하는 에너지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지사업자에게 총 공급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임.

**아산화질소( $\text{N}_2\text{O}$ ):** 상쾌하고 달콤한 냄새와 맛을 가진 무색의 기체로서 수술 시 흡입마취제로 사용됨. 지구온난화에 아산화탄소( $\text{CO}_2$ )의 230배에 달하는 영향을 미침.

**아황산가스( $\text{SO}_2$ ):** 석탄과 석유 등에 포함되어 있는 황분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기체로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된 물질임.

**오존:** 산화력과 살균력이 강하고 특히 표백 살균력이 강한 특이한 냄새를 지닌 푸른 기체임. 성층권에서 태양 자외선의 광화학작용에 의해 생성되며 지상 20km 지점에 가장 많음. 최근 냉매제로 사용되어 온 CFC가 오존층의 오존을 급격히 파괴시켜 남극과 북극 상공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오존층이 파괴되면 지상에 도달하는 태양의 자외선 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피부암 발생 증가, 피부노화 촉진, 농작물 생산 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됨.

**온실가스:** 지구의 대기 속에 존재하며 땅에서 복사되는 에너지를 일부 흡수함으로써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의미함.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증기, 아산화탄소( $\text{CO}_2$ ), 메탄( $\text{CH}_4$ ) 등이 있음. 자연적인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데에는 수증기가 가장 큰 역할을 맡고 있지만,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기체로는 아산화탄소가 가장 대표적임.

**육불화황( $\text{SF}_6$ ):** 플루오린과 황의 화합물로 1960년대부터 절연체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인체에 무해하나 아산화탄소( $\text{CO}_2$ ),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등과 함께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임.

**이따이이따이병:** 일본에서 농토에 축적된 카드뮴 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공해병.

**질소산화물:**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총칭하는 용어임. 공기 중에 있는 질소산화물 중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는 대류권에 있는 오존의 형성과 파괴에 중요한 역할을 함.

**최종에너지소비량:** 유효에너지로 전환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된 에너지 양으로 전환 손실 및 에너지 사업체의 자체 소비는 제외함.

**환경보호지출:** 정부, 기업, 가계가 환경악화를 예방하고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는 데 지출한 금액임.

**환경성질병부담(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s):** 환경위험인자로부터 발생하는 질병부담을 의미하며, '장애보정손실년수' 즉 질병에 따른 조기사망과 이환기간으로 인해 손실되는 수명년수를 지표로 사용함.

**황산화물:** 황(S)과 산소와의 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산화황, 황산, 황산염 등이 이에 속함.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로서 식물의 엽록소를 파괴하여 말라죽게 함.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 중에 휘발되어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자일렌, 에틸렌, 스티렌,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이에 속함.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임. 정유·도로·도장 공장의 제조와 저장 과정, 자동차 배기가스, 페인트나 접착제와 같은 건축자재, 주유소의 저장탱크 등에서 주로 발생함.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각종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로서 1TOE는 원유 1톤의 발열량 1,000만kcal임.

## X 안전

**고용허가제:** 고용주가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신청하고 정부가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선별해서 연결해주는 것으로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 정부는 1995년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여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몬순형 기후:** 겨울에는 대륙에서 대양으로, 여름에는 대양에서 대륙을 향하여 약 반년의 주기로 변화하여 부는 계절풍에 의한 기후로 인도, 동남 아시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남.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열대해양기단의 내습에 의하여 기후가 고온다습하고 비가 많으며, 겨울철에는 저온건조한 대륙기단의 내습으로 날씨가 춥고 맑은 날이 많음.

**방문취업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임.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 거주동포들에 대해 5년 유효, 1회 최장3년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국내 무연고동포들의 입국을 허용하며 이들의 취업범위 확대와 절차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산업연수생제도:**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기업 연수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1993년 11월에 도입된 제도로 국내 3D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역할을 함. 연수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되나 다수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불법체류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인권유린이라는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인력수급에 있어서 관련 기관의 비리도 발생함.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200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됨.

**산업재해:** 직장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을 말함.

**직업병:** 한 가지 직업에 오래 종사함으로써 그 직업의 특수한 조건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

## XI 사회통합

**계층귀속감:** 사회조사에서 상의 상, 상의 하, 중의 상, 중의 하, 하의 상, 하의 하 등의 범주로 구분하여 측정한 응답자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말함.

**공적연금:** 연금제도는 그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과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으로 구분됨. 공적연금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이 포함됨.

**기관신뢰:** 사회신뢰의 한 유형으로서 개인이 정부, 의회, 공적 및 사적 기관 등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를 말함.

**대인신뢰:** 사회신뢰의 한 유형으로서 개인이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를 말함.

**복지지출:** 국가가 복지제도를 실현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 지출.

**사적연금:** 연금제도는 그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과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으로 구분됨. 사적연금에는 직장인 운영주체인 기업연금과 개인이 운영주체인 개인연금이 포함됨.

**사회이동:** 한 사회에서 개인 또는 집단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하며, 수평적 이동과 수직적 이동을 모두 포함함.

**사회자본:** 사회구성원들 간의 이익을 위해 조정 및 협동을 촉진하는 사회적 규범이나 신뢰 또는 네트워크를 의미함. 물리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활동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며,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된 행동 규범 및 공통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함.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개인이 가족, 친구, 동료 등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형태(정서적, 신체적, 금전적)의 도움을 말함.



##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의 영역별 논문 주제

영역	주제	연도	집필자
인구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박경숙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김두섭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김두섭
	출산력의 급격한 하락	2008	전광희
	국제이주인구의 증가 :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2008	윤인진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	2009	이상림
	사망률의 감소와 집단 간 차이	2009	김두섭
	혼인 양상의 변화	2010	김정석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와 출산력 저하의 주요 원인	2010	김두섭
	지역별 인구분포와 수도권 인구집중	2012	최슬기
	가족의 분산과 가구구성의 변화	2012	이민아
	체류 외국인의 증가	2012	정기선
가족과 가구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박경숙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한경혜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한경혜
	초혼연령과 미혼율의 상승	2008	이선이
	가구 구성의 변화와 노인가구의 급증	2008	이성용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2009	정기선
	이혼율의 변화와 사회적 결과	2009	한경혜
	일-가족 양립방식의 변화	2009	홍승아
	아동 돌봄 실태와 지원망	2010	진미정
	국제결혼 부부와 가족의 특성	2010	이혜경
	1인가구의 추세와 특성	2012	이윤석
	한국의 연령과 부부관계만족도	2012	이윤석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변화	2012	송유진
	맞벌이 부부는 무엇이 다른가	2012	송유진
교육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강상진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강상진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강상진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와 특성	2011	김태현
	교육수준의 비약적 상승	2008	김경근
	최근 학교교육 성취도의 변화	2008	강상진
	사교육비의 지출 실태와 추이	2009	김경근
	상급학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	2009	김경근
	노동시장과 대학 배출인력 간의 전공 불일치	2009	채창균
	교육의 경제적 성과	2009	강상진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2010	김경근
	학교급별 학습시간 실태와 문제점	2010	강상진
	교육격차의 실태와 추이	2010	김경근

영역	주제	연도	집필자
교육	취학전 아동 보육 및 교육	2011	서문희
	학교급별 학업중단의 실태와 추이	2011	김경근
	대학 등록금 추이와 장학금 수혜학생의 비율	2011	김경근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동향	2011	김한별
노동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장지연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장지연
	고용의 안정성과 비정규직	2008	장지연
	중고령자 노동시장과 근로생애	2008	장지연
	청년층 노동시장	2009	방하남
	노사관계의 변화	2009	방하남
	장기실업과 사회보장	2009	방하남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과 근로조건	2010	박시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2010	이규용
	직업선택 기준의 변화와 계층 간 차이	2010	방하남
	여성의 취업변화와 근로환경	2011	홍승아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노동시장 은퇴	2011	박시내
	근로자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임금수준 비교	2011	박영실/한승훈
소득과 소비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박찬임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이현송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이현송
	교육비 지출수준과 구성의 실태와 변화 추이	2008	박찬임
	소득분배와 빈곤율의 추이	2008	박찬임
	자산의 분포와 구성	2009	강석훈
	소득원천별 구성	2009	강석훈
	생애 소득의 구조변화와 중산층 맞벌이 가구의 부상	2009	이현송
	한국 국민의 구매력 국제비교	2010	정규승
	중고령 은퇴자의 소득과 소비	2010	이현송
	가계부채와 부채원인	2010	유경원
	지난 20년간 소득수준별 소비지출의 추이 및 구조변화	2011	김신호
	가계 저축률 감소와 그 원인	2011	김순미
	가구주 연령별 소득 및 소비 변화	2011	강석훈
문화와 여가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최섯별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서우석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서우석
	문화예술 향유실태	2008	최섯별
	관광산업의 성장과 입출국 여행객수의 증가	2008	최석호
	여가생활과 만족도	2009	서우석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	2009	이호영

영역	주제	연도	집필자
문화와 여가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변화	2010	심수진
	인터넷 중독 실태	2010	전종수
	소득수준에 따른 여가활동의 변화	2011	윤소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용의 부상과 확산	2011	최항섭
	문화산업의 정책과 성장	2011	서우석
주거와 교통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최진호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최진호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최진호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2008	김재익
	대도시권 통근통학의 광역화	2008	최진호
	주거 빈곤 가구 실태	2009	최진호
	교통의 고속화와 대도시권의 광역화	2009	김호정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의 변화 추이	2010	이창무
	주거이동과 거주지 선택요인	2010	최진호
	수도권 거주자의 출근전쟁	2012	이재훈
	주거안정성	2012	신인철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빈곤가구의 실태	2012	장세훈
	도로의 지역간 불균형	2012	양광식
건강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조병희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조병희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조병희
	나아지지 않는 주관적 건강상태	2008	정진주
	과다한 의료비 부담	2008	권순만
	공공의료 서비스의 실태	2009	조병희
	자살의 급증과 원인	2009	김명희
	만성질환 추세와 관리	2010	김홍수
	건강불평등	2010	조병희
	건강과 질병의 사회적 분포	2012	김중백
	의료기관별 만족도 격차	2012	김중백
	우리시대의 병 아토피 질환	2012	권호장
	서구형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2012	박재현
복지	복지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조병희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문제	2008	정무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빈곤문제	2008	정무권
	빈곤층의 분포와 특성	2011	강신욱
	노후준비 방법의 변화	2011	정순돌
	사회복지 인력 및 시설의 동향	2011	고경환

영역	주제	연도	집필자
환경	환경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김선희
	대기오염 수준의 변화	2008	공성용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	2008	공성용
	친환경 소비성향	2009	윤순진
	친환경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	2010	강성진
	기후변화 문제와 대응 추이	2011	김해동
	개선된 체감환경, 정제된 친환경 행동	2011	박희제
	에너지 소비를 통해 본 한국사회	2011	박진희
안전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이재열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이재열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이재열
	안전 영역의 주요 변화	2012	이재열
	자연재난, 어떻게 변했나	2008	이재열
	증가하는 '흉악범죄'	2008	윤옥경
	사회안전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2009	박순진
	청소년 비행 실태와 변화	2009	민수홍
	산업재해의 변화	2010	이경용
	아동학대의 실태와 변화	2010	민수홍
	청소년 범죄의 발생과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2012	민수홍
	사이버 세계의 그림자	2012	민수홍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2012	박순진
	높아지는 재난재해 위험과 응급안전시스템	2012	박순진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유해요인노출	2012	이경용
사회통합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이재열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이재열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장덕진
	가치관과 일상생활에서의 세대격차	2008	배영
	투표참여의 감소와 세대 간 차이	2008	김욱
	가치와 이념 갈등	2009	강원택
	공직부패의 현황과 국제비교	2009	장지원
	정치와 사회 참여	2009	장덕진
	사회적 신뢰의 수준	2010	장덕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사회통합 정도	2010	김병로
	이타적 행위: 기부와 자원봉사	2010	이희길
	한국의 노인자살	2012	이민아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2012	김석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2012	김석호
	1인가구의 사회적 지원	2012	정재기
	한국의 공정성	2012	정재기



## 한국의 사회동향 2013 연구진

연구책임자	석현호 (한국사회과학자료원 명예이사장)
영역담당 공동연구자	
인구	김두섭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가족과 가구	한경혜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건강	조병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교육	김경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노동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소득과 소비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문화와 여가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주거와 교통	손경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환경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안전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통합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편집담당 공동연구자	
	김석호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희길 (통계개발원 사무관)
	심수진 (통계개발원 주무관)
	김대훈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개발실장)
연구보조원	
	이상운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통계자료팀장)
	김효정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인턴연구원)

